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 모음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에 참여한 각 정당의 중앙당이 제출한 10대 정책을 정책공약마당(<http://policy.nec.go.kr>)를 통해 공개하였으며, 정당들의 지속적인 정책개별 활동을 촉진하여 정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당 정책 모음집을 별간하게 되었습니다.

CONTENTS

더불어민주당	1	노동당	271
국민의힘	21	노인복지당	291
더불어민주연합	37	대한국민당	315
국민의미래	51	대한민국당	329
녹색정의당	65	대한상공인당	357
새로운미래	89	미래당	371
개혁신당	101	새누리당	383
자유통일당	121	새진보연합	395
진보당	135	여성의당	415
조국혁신당	153	우리공화당	437
가가국민참여신당	173	케이정치혁신연합당	455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	185	통일한국당	467
반공정당코리아	199	한국농어민당	479
가자환경당	221	한류연합당	493
공화당	235	한반도미래당	507
국가혁명당	247	홍익당	523
국민주권당	259		



더불어민주당

No.	정 책
1	민생을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2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3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4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으로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5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준비하겠습니다.
6	국민 안전을 최우선 챙기겠습니다.
7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8	전쟁위기를 막고 평화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9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10	정치개혁과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책순위

1

민생을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정책분야 | 건설교통, 과학기술정보통신, 노동경제재정, 보건복지, 교육, 여성, 농림해양수산

□ 목 표

- 전 국민의 기본주거를 국가가 책임
- 사회초년생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 청년·국민 어르신 패스로 교통비 절감,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
- 모든 경로당에서 주5일 어르신 점심밥상을 제공
- 근로소득자 세 부담 완화, 전국민 자산증식 지원프로그램 마련
- 주4일(4.5일) 도입지원 등으로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평균 이하로 단축
- 비정규직·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차별을 해소
-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취업단계별 지원을 대폭 강화
- 여성청년의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 관행을 근절
-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가격·재해·인력 걱정 없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
- 국민 모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
- 양육비 안주는 나쁜 부모 제재를 강화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 이행방법

-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 조성, 정권에 흔들림 없는 공공임대 공급로드맵 법정화, 2040세대·4050세대·6080세대 맞춤형 주거정책 시행
-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선보상 방식의 피해자 일상회복 추진

- 철도, GTX, 도시철도 도심구간 예외없는 지하화, 지하화한 상부는 주변지역과 통합개발하여 지역내 랜드마크화하는 한편 시민을 위한 공간 확충
- 월3만원청년패스, 월5만원국민패스, 무상어르신패스 도입
-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병사에 대한 통신요금 할인을 20%에서 50%로 인상, '내돈내산 데이터 내 맘대로' 서비스 도입
- 가계대출 이자에 법적비용 등 불필요한 가산금리항목 제외,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추진, 금리인하요구권 주기적 고지 의무화
- 중앙정부의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주5일 점심밥상 제공
-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 공제기준 및 한도를 물가연동하여 상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서 발생한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한도 없는 비과세
- 주 4(4.5)일제를 도입기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포괄임금제 금지 등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처우 법제화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정규직'고용 및 채용 원칙 명시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전환 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 대폭 강화로 양질의 일자리준비 지원, 윤석열 정부서 중단된 청년내일채움 공제 재도입, 대학미진학 청년에게 '청년역량개발카드' 지급
- 채용절차법 개정을 통해 면접심사 공정성 강화, 현행 500만원에 불과한 채용 성차별 처벌규정 강화
-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체계 개편으로 지원금액 및 대상 대폭 확대
-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으로 가격폭락시 농가손실보전, 생산비가 급등한 필수 농자재 국가 지원제도 도입, 이상기후 따른 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 먹거리 기본법 제정 및 먹거리 돌봄체계 구축 및 강화, 천원의 아침밥 확대 및 취업전 청년 취약계층에 먹거리바우처 지원
-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 도입, 양육비 이행관리원 독립기관화 및 권한 강화, 양육비 불이행·감치명령 집행회피 위한 주소 허위신고 제재 방안 마련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사항은 2024년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제도개선과 함께 재정사업 등은 2025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은 주택도시기금, 지방비 등을 활용
- 철도지하화 비용은 민간투자 및 상부 및 인접지역 개발이익 재원으로 조달
- 그 외 소요비용은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경직성경비 제외한 재량지출의 10%인 18조원 수준),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 증가분(2023~2027년 연평균 증가율 3.7%, 2025년 49조원 증가) 등으로 충당

정책순위

2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정책분야 | 보건복지, 건설교통, 노동, 여성, 교육

□ 목 표

- ◎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결혼-출생-양육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구조 실현

□ 이행방법

- ◎ 우리아이 보듬주택 마련
 - 2자녀 가구에 24평형, 3자녀 가구에 33평형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공
 -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까지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
- ◎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출생기본소득)
 - 결혼·출산지원금 :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 첫 자녀 출생시 무이자전환, 둘째 출생시 무이자+원금50% 감면, 셋째 출생시 무이자+원금전액 감면
 - 우리아이 키움카드 : 18세까지 월 20만원 아동바우처 지급
 - 우리아이 자립펀드 : 18세까지 월 10만원 자녀 펀드계좌에 입금(부모 월 최대 10만원 입금가능, 성인되기 전까지 인출 불가)
- ◎ 아이돌봄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기준 전면 폐지(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가능)' 및 본인부담금 20% 이하로 대폭 축소
 - 아이돌보미 돌봄수당 확대 및 미혼모.부와 비혼 출산 가정 아이돌봄 특별(무상)바우처 지원
- ◎ 여성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육아휴직 강화
 - “중소기업 노동자 출산·육아 워라벨 프리미엄”지원 도입
 - 아이를 가진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보장 추진
 - 부모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배우자출산휴가 ‘사용권’ 제도화
 - 출산 및 육아 관련 휴직기간 및 급여보장 확대
- ◎ 여성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육아휴직 강화
- ◎ 지자체 협력형 온동네 초등돌봄재능학교 도입
- ◎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 개선

이행기간

- ◎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재원조달방안 등

- ◎ 연간 최소 10조원에서 최대 23조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출생 대책 재원은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경직성경비를 제외한 재량지출의 10%인 18조원 수준)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 증가분(2023~2027년 연평균 증가율 3.7%, 2025년 49조원 증가) 등으로 충당

정책순위

3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정책분야 | 산업자원, 환경, 농림해양수산

□ 목 표

- ◎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 구현
- ◎ 탄소중립형 산업전환 추진으로 산업 경쟁력 향상
- ◎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실현
- ◎ 脫플라스틱 대책으로 탄소중립 실현 기여
- ◎ 농림축산업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
- ◎ 농촌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

□ 이행방법

- ◎ 국제사회(COP28)와의 약속 이행(2030년 재생에너지 3배 확대)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강화
- ◎ 기업의 RE100 이행 적극 지원을 위해 RE100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업구조 대전환 지속 추진
- ◎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 제정으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
- ◎ 송배전 설비의 적기 건설과 신규 전력망 인프라 확충 및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접속 보장 등으로 재생에너지 계통연계의 안정성 강화
- ◎ 脫플라스틱 대책을 추진할 컨트롤타워 설치 및 플라스틱 원료를 일정량 이상 사용 및 생산하는 사업자는 재생플라스틱 사용을 확대하도록 제도 개선
- ◎ 친환경유기농업 비중 확대 및 친환경직불제 인상, 한우 등 축산업이 환경 친화적이고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전환되도록 촉진하는 제도 마련 및 지원
- ◎ 마을공동체 주도 태양광, 농림어업 부산물 활용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 및 확대, 농업인·주민에게 햇빛·바람·바이오 연금 지급 및 농촌 난방 문제 해결로 농촌지역 주민의 참여 확대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사항은 2024년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제도개선과 함께 재정사업 등은 2025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 소요재원(연평균 5조원 예상)은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재원 및 연간 총수입 증가분(2023~2027년 연평균 증가율 3.7%, 2025년 49조원 증가)으로 마련

정책순위

4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으로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정책분야 | 과학기술정보통신, 교육, 건설교통, 산업자원, 행정자치, 농림해양수산, 문화관광

□ 목 표

〈혁신성장〉

- 국가연구개발(R&D)예산 국가예산의 5% 수준 확보로 지속적 R&D 투자
- 과학기술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젊은 과학기술 인력 양성
- 글로벌 5대 산업강국 도약을 위해 혁신선도형 산업구조 구축 및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 인공지능(AI), IT·SW, 미래 모빌리티 新강국으로 도약
- 중소·벤처스타트업, 콘텐츠 산업, 스마트 미래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균형발전〉

- 5권3특 구현 및 광역행정청 설립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달성
- 대학서열화 완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 지역대표 전략산업, 지역혁신을 주도한 스타트업 육성
- 서울 보다 살기 좋은 지방,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신도시 조성
- 5060세대 웨라벨 지원 및 소멸위기 농산어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전환, 청년의 어촌정착 촉진

□ 이행방법

〈혁신성장〉

- 국가연구개발(R&D) 예산 지출한도를 재정당국과 협의로 설정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 예산대비 5% 수준으로 안정적 확보
- 범부처 국가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추진하는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국가 과학기술 연구·산업 현장의 인적 수요에 적극 대응한 과학기술 인재 육성
- 반도체, 미래형 모빌리티, 이차전지, 재생에너지, 디스플레이, AI, 바이오, 지능형 로봇, 수소 등 첨단전략산업을 집중 지원

- 종합 반도체생태계허브 구축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및 첨단패키징 지원 확대
- AI 기술 중심의 전문 벤처·스타트업 등 활성화 및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 국내·외 IT·SW 인재 역량 강화 기반 조성, 규제 혁신
- 무선급전트램 상용화·자율협력주행·UAM 조기상용화 등 미래 모빌리티 육성
- 콘텐츠 R&D와 제작비, 콘텐츠 생태계 조성 및 저작권 보호 등 집중 지원
- 중소·벤처스타트업 전용 R&D 예산 대폭 확대, 스마트 데이터농업 확산으로 생산·유통·소비 디지털 혁신 등

〈균형발전〉

- 5대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특별지자체 구성, 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광역행정청 설치
- 9개 거점 국립대 집중 투자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 및 발전기반 구축,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국가·지방 산업단지 등을 연계한 경쟁력 있는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 스타트업 지방 비중 대폭 확대
- 이전 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 및 제2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자족기능을 갖춘 지방 성장거점 육성
- 1기 신도시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교통이 편리한 2기 신도시 및 자족기능을 갖춘 3기 신도시 건설
- 소멸지역 농어촌주민수당(기본소득) 단계적 지급, 찾아가는 마을주치의 단계적 확대 및 공공형 버스·맞춤형 택시 확대, 5도(都)2촌(村) 세컨하우스 및 귀농귀촌 지원 강화, 연안어선 청년임대사업 및 청년어촌정착자금 지원 확대

▣ 이행기간

- 관련법 제·개정 사항은 2024년부터 준비하여 지속 추진
- 재정사업의 경우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투자 확대

▣ 자원조달방안 등

- 소요재원(연평균 6조원 예상)은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재원과 재정지출 구조조정 및 연간 총수입 증가분(2023~2027년 연평균 증가율 3.7%, 2025년 49조원 증가)으로 마련

정책순위

5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준비하겠습니다.

정책분야 | 보건복지, 노동, 문화관광, 농림해양수산

□ 목 표

-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으로 어르신 간병 부담 경감 및 간병 서비스 질 개선
- 합리적인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 윤석열 정부가 중단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재추진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
- 최후의 생활안전망 대폭 강화, 생애주기별 외로움고독 정책으로 삶의 질 개선
- 장애인 권리보장으로 지역사회 자립 기반 확립
-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실현으로 고용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
- '전국민 산재보험제', '산재보험 국가책임제' 실현으로 산재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직장 복귀 지원
- 국민휴가지원 3종 세트로 국민의 관광 지원 및 국내 관광수요 촉진
- 문화예술인의 창의적 창작권을 보장하고, 국민을 위한 문화예술 국가 구현
- 국민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문화권 확대
-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

□ 이행방법

-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간병인 양성체계 마련하여 간병 질 관리 제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 확장을 통한 공적 돌봄 대상 어르신 확대
-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신설로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합리적 의료인 증원계획 마련,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전공의 수련환경 및 간호인력 처우 획기적 개선
-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인하 및 급여 확대, 특정 질환에 대한 첨단 로봇수술 건강보험 급여화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자격기준 및 보장수준을 중위소득 32%에서 50%로 단계적 상향,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의 대상 및 지급액을 확대
- 외로움 정책을 담당하는 차관급 직제 신설 및 정부 전담조직 설치, 청(소)년, 중장년, 노인, 1인가구 등 주요 외로움 경험 집단별 대응 정책 마련
- 조속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한 체계적 장애인 권리 보장 기반 마련,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적 생활 여건 개선
-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 고용안전망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실업급여(구직급여) 보장성 확대 등 고용안전망 강화, 고용보험 사각지대 단계적 해소
-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전국민 산재보험제도' 단계적 추진, '산재 보험급여의 선 보장'으로 "산업재해 국가책임제" 실현
- 지역사랑 휴가지원제(가칭) 신설, '1박2일 쏠쏠여행(가칭)'지원,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확대
- 정부의 창작권리 개입 금지.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의 원칙 준수, 문화예술 인력양성 지원법 제정, 보편적 문화향유 실현을 위해 문화재정을 국가예산 대비 2.5% 단계적 확대, 통합문화이용권 이용 확대
- 생활밀착형·장애인형·여성형 등 체육시설 지속 확보 및 시설 개량 지원, 생활체육 종목·장소별 체육지도자 교육 지원, 근로소득자 본인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료 세제혜택 신설
-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민법」 개정을 위해 노력,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및 사육권 제한, '강아지·고양이 생산공장' 및 '가짜 동물보호소' 금지, 유기동물보호센터의 동물복지 개선으로 반려동물 입양 문화 확산

■ 이행기간

- 관련 법 제·개정 사항은 2024년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관련 재정사업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투자

■ 재원조달방안 등

- 연평균 10조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소요 비용은 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경직성경비를 제외한 재량지출의 10%인 18조원 수준)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 증가분(2023~2027년 연평균 증가율 3.7%, 2025년 49조원 증가) 등으로 충당

정책순위

6

국민 안전을 최우선 챙기겠습니다.

정책분야 | 환경, 사법윤리, 행정자치, 노동, 여성

□ 목 표

- 오송 지하차도 같은 ‘도시침수 예방’으로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을 사전 차단
- 통합기상재난예보 실현으로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
- 범죄대응체계를 선진화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
- 데이트폭력, 가정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엄중히 대응
-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안심 대한민국을 만들고, 교통법칙금과 과태료를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사용
-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
- 사이버 보안 강국 구축

□ 이행방법

- ‘도시침수(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추가지정하고, 기존 중점관리지역의 규모를 확대·재설정, ‘대심도 하류 저류시설(빗물터널 및 방수로)’ 대폭 확충, 도시지역 불투수 면적 줄이기 사업추진
- AI 홍수예측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산사태 사전예측 시스템 강화 및 서비스 제공, 지진관측 후 통보시간 획기적으로 단축
- 문지마 범죄를 포함한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경력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예방체계 강화, 범죄예방특별법 제정
- 데이트 폭력 범죄 법제화 및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스토킹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대처 및 보호 강화, 스토킹 범죄행위 범위를 포괄적 규정으로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 실효성 강화
- 가정폭력범죄 반의사불벌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폐지 추진, 가정폭력 현장 대응조치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휴가신청권 보장
- 보행자 안전 우선의 교통체계 구축으로 어린이, 장애인, 어르신 등 보호의무 확대, 사람이 우

선인 교통약자 보호 강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신설을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 교육 확대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확충

-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체계’로 개편,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후진적 산재예방시스템 전면 개편,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등 산업재해 예방 지원 대폭 확대
- 신유형 사이버 공격 대응 보안기술 고도화,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확대, 정보보호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 이행기간

- 관련 법 제·개정 사항은 2024년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안전관련 재정사업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투자

■ 재원조달방안 등

- 연간 3조원 소요되는 재정사업 재원은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재원과 연간 총수입 증가분(23~27년 연평균 증가율 3.7%, 2025년 49조원 증가)으로 마련

정책순위

7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분야 | 기타(중소벤처), 산업자원, 재정경제

□ 목 표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대폭 경감, 매출 회복 지원, 폐업 및 재도전 지원 확대
- 온라인 플랫폼 시장 개선 및 대리점주·가맹점주가 대기업본사와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공정 시장 조성
- 격차해소와 상생으로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환경 확립, 중소기업 부담경감, 기술보호 강화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및 활로지원과 수출증대 지원
- 모태펀드 등 벤처투자 대폭 확대로 제3의 벤처붐 조성

□ 이행방법

- 간편결제 합리적 수수료율 마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이자 부담 경감,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신설, 소상공인·자영업자 상가 임대차 보호 강화 등
-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대폭 확대, 골목상권 도·소매업 킷커머스 서비스 지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상권르네상스 2.0'추진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원활한 폐업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도전 금융 지원 확대, 고용 보험 및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공제혜택(복지) 확대
-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시장 규율 법제 구축, 온라인상 눈속임 상술(다크패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
-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의 단체 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로 합리적인 거래계약 유도
-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예산 확대, 중소기업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재추진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업무에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 팩토링 도입,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 확대 위한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 추진

-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요금을 포함하여 수탁기업 부담 완화,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 중소기업 에너지 저소비 및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 사업 확대
- 중소기업의 공동교섭권 보장, 불공정거래 피해구제지원 제도 강화로 중소기업 공정 안전망 구축,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을 통한 중소벤처 기업 기술보호 강화
- 모태펀드 예산 확대를 통해 벤처투자 20조원 달성

■ 이행기간

- 재정사업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 관련 법 제·개정 사항은 2024년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소요재원(연평균 2조원 예상)은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재원과 재정 지출 구조조정 및 연간 총수입 증가분(23~27년 연평균 증가율 3.7%, 2025년 49조원 증가)으로 마련

정책순위

8

전쟁위기를 막고 평화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정책분야 | 통일외교통상, 국방

□ 목 표

- 평화와 경제적 국익을 확보하는 외교,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당당한 대일 외교 실현
- 전쟁위기를 예방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 장병복지여건 개선, 신속한 무기체계 획득, 방위사업비리 근절

□ 이행방법

<외교>

- 주변 4강외교의 재편과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외교 구현
- 초당적 대북정책의 틀을 마련해 비핵화와 평화구축의 실질적 성과 도출
- 역사를 직시하는 당당한 대일외교 추진

<통일>

- 군사적 긴장 조성 중단, 평화 분위기 조성 촉구
- 남북 보건의료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협력을 통해 남북 신뢰 조성
- 남북 문화, 체육, 역사 과학기술 등 다방면의 교류협력 재개 추진

<국방>

- 당직근무비를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인상, 장기근속자 종합검진비 지원, 군장병 복무 중 교육 여건 개선, 군 사병 통신비 할인율 20% -> 50% 상향 등
- 청렴서약서 대상 확대 및 구체화, 방산 비리 업체 입찰 참여제한 기간 확대
- 무기체계 도입 과정에서 중복된 시험평가 간소화 및 분산된 무기체계 획득 절차의 통합시험 평가 조직 일원화

이행기간

- 외교, 통일분야 : 202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 국방분야 :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 통일 분야 소요재원은 남북협력기금 활용
- 국방 분야 소요재원(25~28년간 970억원 예상)은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 증가분(23~27년 연평균 증가율 3.7%, 2025년 49조원 증가)으로 마련

정책순위

9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정책분야 | 사법윤리, 과학기술정보통신, 행정자치

□ 목표

- 검찰 개혁 완성 및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 주요 과거사의 진정한 명예회복
-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 보장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 이행방법

- 수사·기소권을 분리,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수사절차법 제정,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실질화 등 검찰개혁 추진
-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 경찰국 폐지를 통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 노근리사건, 여수·순천사건 등 주요 과거사에 대한 배·보상 적극추진
- 시청자 중심의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선임제도 도입,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의 자격요건 엄격 법정화, 보도·제작·편성권과 경영의 분리·독립과 위반 시 처벌 강화 등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선, 심의 기능의 개선, 심의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사항은 2024년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주요 과거사 배·보상은 피해자 및 유족 인정범위 및 보상수준에 따라 변동, 재정 지출구조 조정 및 세입증가분 등으로 재원 충당

정책순위

10

정치개혁과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책분야 | 사법윤리, 정치, 행정자치

□ 목 표

- 87년 헌법, 새로운 대한민국에 걸맞게 개헌 추진
-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고 민의는 올곧게 반영
- 청년들의 국회 진출 확대
-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제도 강화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 조성
- 과도한 행정조사로 인한 국가기관의 권력남용 방지

□ 이행방법

-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대통령 재의요구권과 사면권의 헌법적 한계 명문화,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 등 개헌 추진
- 국회의원에 대해 성과급제 도입,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및 기능 강화, 국회의원 징계시 벌금제 신설, 국민입법청원 요건 완화 및 상임위 내 지원 조직 신설 추진 등
- 청년후보의 국회의원 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 조정
- 지방의회 사무 인사 권한 독립 및 인사청문회, 감사청구 등을 제도화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의무 이행 강화, 공직자의 부패 등에 대한 처벌 강화
- 행정조사시 조사대상자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 이행기간

- 개헌 추진 및 법률 제·개정사항은 2024년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개헌 등에 소요되는 재원은 총수입 증가분(23~27년 연평균 증가율 3.7%, 2025년 49조원 증가)으로 충당



국민의힘

No.	정 책
1	일·가족 모두 행복
2	촘촘한 돌봄·양육환경 구축
3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
4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 제고
5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6	건강하고 활력넘치는 지역만들기
7	교통·주거격차 해소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8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9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
10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

정책순위

1

일·가족 모두 행복

정책분야 | 재정경제, 보건복지, 노동, 여성

□ 목 표

- 국가 차원의 저출생 문제 대응
-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①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인구부로 통합하여 국가 차원의 저출생 문제 대응
 - 안정적인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 위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 신설
- 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 아빠휴가(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 엄마·아빠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만으로 자동개시
 -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150만원→210만원) 및 사후지급금 즉각 폐지
 - 초3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 배우자에게도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허용
- ③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
 - 육아기 유연근무 취업규칙 등 정기적 공지 의무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인상
 -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하는 육아 동료수당 활용 활성화
 -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 재원조달방안

- 고용부의 고용보험기금 재원 활용
(2024년 현재 고용보험기금 현금성자산 보유액 7조원 규모, 이 중 모성보호급여가 포함된 실업급여계정의 현금성자산은 4조원)

정책순위

2

촘촘한 돌봄 · 양육환경 구축

정책분야 | 보건복지, 교육

□ 목 표

- 신뢰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비용부담 경감
- 늘봄학교 혁신하여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 해소
- 돌봄 격차 해소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
 - 수요가 몰리는 특정 시간대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원을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학부모, 조부모 등으로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한 정부 안심 보증 추진
 -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포함
- ② 늘봄학교 혁신하여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 해소
 - 늘봄학교 단계적 무상 시행
 - 방학 중 늘봄학교 상시 운영으로 방학 중 초등돌봄 및 급식문제 해결
 - 고퀄리티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늘봄학교 시설 대폭 확충
- ③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
 - 산업단지 및 지역기업 밀집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 의무
 - 보육인프라 취약 지역의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수당 지급

□ 자원조달방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과 일반회계 재원 활용
(2024년 예산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 68.9조원)

3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

정책분야 | 재정경제, 산업자원

□ 목 표

- 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회복 지원
-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혁신 지원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① 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
 -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하는 재형저축 재도입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
 -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 취약계층 상대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의 대부계약 무효화
 -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 개선
 - 원스탑 대환대출시스템 활성화와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추진
- ②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및 활력회복 지원
 -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목표 2배 상향
 - 다단계 형태의 PG를 단순화하여 소상공인 결제대행 수수료 부담 경감
 - 온누리상품권 활용 골목상권 확대 및 발행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 -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50% 신설 추진
 - 소상공인에 대한 산재보험 지원
- ③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혁신 지원
 -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확충
 - 전통시장·상점가 경영혁신지원 대상 확대 및 상품권 환급 등 판매촉진행사 매년 추진
 - 100년 전통시장 브랜드화
 - 지역상권별 특성에 맞는 역량강화 사업 지원

재원조달방안

-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에 따른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
(매년 재량지출 예산증가 평균 6조원 규모)
- 불요불급 사업의 지속적인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2023년·2024년 예산안 편성시 각각 20조원대 구조절감 실시)

정책순위

4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 제고

정책분야 | 재정경제, 산업자원

□ 목 표

- 대기업-중소기업 근로환경 격차 해소 및 지속성장 지원
- 규제개혁으로 신산업 육성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① 중소기업 현장 애로사항 해결
 -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여 원자재와 같이 가격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
 - 비수도권, 뿌리산업, 인력 수요 등 감안하여 외국인 고용한도에 대한 탄력성 강화
 - 중소기업 대체인력 채용 근로자에게 '채움인재' 인센티브 지급
 - 수출중소기업도 이용가능한 수출팩토링 서비스 개편
 - 경쟁력·생산성제고 위한 R&D 및 스마트화·디지털화 지원 확대
- ②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 전세계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할 수 있는 「스페이스-K」를글로벌 창업허브로 조성
 -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 투자를 받은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정부가매칭 지원
- ③ 산업단지 규제개혁 통한 규제 대못 뽑기
 - 신산업분야 규제제로박스 신설
 - 지역 토지구제 전면 재검토

□ 자원조달방안

-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에 따른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
(매년 재량지출 예산증가 평균 6조원 규모)

정책순위

5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정책분야 | 안전, 사법윤리, 여성

□ 목 표

-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
-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① 흉악범죄·민생침해범죄 무관용원칙
 -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도입
 -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등 흉악범죄 처벌 강화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
 -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자 대상 사기범죄 가중처벌 및 범죄수익 박탈
- ② 1인가구 등 위한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
 -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 지원
 - 범죄 예방 위한 안심 물품 세트 지원 및 안심 무인 택배함 확대 설치
 - 노후화된 CCTV 교체 및 CCTV 연계 귀갓길 동행벨 설치·운영
 - AI기반 맞춤형 CCTV 확대 설치
- ③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 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인력 대폭 증원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제한된 위장 수사를 성인여성까지 확대
 - 불법 사이버 사이트 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재원조달방안

-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에 따른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
(매년 재량지출 예산증가 평균 6조원 규모)

정책순위

6

건강하고 활력넘치는 지역만들기

정책분야 | 보건복지, 산업자원, 문화관광

□ 목 표

- 지역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 대폭 개선
- 지역경제 활력 기반 구축
- 함께 누리는 문화 생활 기반 마련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① 지역의료격차 해소
 -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수요와 여건 고려하여 지역의대 신설 추진
 - 지역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
 - 지역 공공병원 육성하여 스마트 병실, 대학병원과 원격협진 체계 등 갖춘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육성
 - 이동식 스마트 병원,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국 확대
 - 소아응급환자의 야간·휴일 진료 사각지대 해소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 ② 지역경제 활력 기반 구축
 -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을 비수도권 모든 비도심 지역으로 단계적 확대
 -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대폭 확대
- ③ 만족도 높은 지역 문화·스포츠시설과 프로그램 구축
 - 노후화된 공공 체육시설을 문화·스포츠 복합시설로 업그레이드
 - 국립문화예술기관·시설의 지역 분관 확대 및 순회 전시·공연 확대
 - 전국 문화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 **재원조달방안**

- ◎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에 따른 예산증가분(평균 3.6%)과 지속적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일반회계 사업 실시 및 응급의료기금 등에 지원
 - * 매년 재량지출 예산증가 평균 6조원 규모
 - ** 2023년·2024년 예산안 편성시 각각 20조원대 구조절감 실시

정책순위

7

교통·주거격차 해소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정책분야 | 건설교통, 기타(주거복지)

□ 목 표

- 교통·인프라 격차 해소
- 노후화된 구도심 개발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① 전국 철도 및 주요 고속(간선)도로 지하화
 - 경부선 철도 지하화 추진 및 상부 공간 적극 활용·개발
 - 경인전철(인천역~구로역) 지하화 추진
 - 서울 강변북로 등 전국 주요 고속(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 ② 전국 주요권역 광역급행열차 도입, 1시간 생활권 조성
 - GTX A, 운정~서울~삼성~동탄~평택
 - GTX B, 인천~부천~서울~청량리~춘천
 - GTX C, 동두천~양주~수원~천안~아산
 - GTX D, 김포, 인천공항 ~부천~광명~삼성~ 하남, 일주
 - GTX E, 인천공항~연신내~남양주
 - CTX, 대전정부청사~세종정부청사~충북도청~청주공항
 - 대구경북신공항철도 GTX 급행철도차량 투입
 -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BuTX) 구축
- ③ 노후화된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창조
 - 철도 상부공간과 주변 부지 통합개발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거·상업·녹지 등 복합공간 조성

□ 재원조달방안

- 철도 상부 민간개발로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지하화 사업비용 충당 (필요시 설계비 등에 국고보조금 지원)
- 신규 철도 도입 등은 교통시설특별회계 완료사업에 따른 재원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으로 충당

정책순위

8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정책분야 | 재정경제, 건설교통, 문화관광

□ 목 표

- 청년 주거마련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청년 문화생활 지원
- 청년 근로환경 개선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① 청년·신혼·출산가구 위한 주택마련 등 지원 강화
 - ‘청년 내 집 마련 1·2·3’의 가입 대상 및 지원요건 확대
 - 예비부부·혼인 1년 내 부부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 마련 지원
 - GTX노선 주요 거점 역세권 민관도심복합개발 과정에서 상향된 용적률 일부를 공공분양(뉴:홈) 주택 등으로 공공기여
 -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발생한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민간분양·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등으로 환수하여공급
 -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표준약관 도입,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증보험제도 추진
- ② 미래세대의 문화 생활을 촘촘하게 지원
 -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대상을 만19세 → 24세까지 단계적 확대
- ③ 청년이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청년들이 피해를 입는 허위 채용광고 사례별로 법 질서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하여 채용갑질 근절
 - 인턴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져 채용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근무기간 명기 및 무분별한 인턴기간 연장 등 금지
- ④ 청년·대학생의 학자금, 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 경감
 -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수혜 범위 확대
 -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 범위 확대
 - 대학 기숙사 지속적 확충 및 기숙사비 현금분할 납부·카드납부 활성화 -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 대폭 확대

- 단말기유통법 폐지로 휴대폰 구입부담 경감 및 청년요금제 적용 확대

▣ **재원조달방안**

- 국토부의 주택도시기금 재원 활용
(2024년 예산상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예탁규모 10.3조원)

정책순위

9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

정책분야 | 보건복지, 문화관광, 기타(주거복지)

□ 목 표

- 신뢰할 수 있는 간병 환경 구축 및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
- 어르신들 위한 식사와 일상생활 지원 확대
- 어르신들의 주거 지원 확대
-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지원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①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 강화
 -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 간병인 등록 및 자격관리제 및 간병비용 연말정산 세액 공제
 - 재택의료센터 및 서비스 적용 확대
- ②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와 일상생활 지원을 확대
 - 경로당·노인복지관 통한 점심 제공을 주7일까지 단계적 확대
 -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절감분은 부식비에 사용토록 유연한 집행체계 구축
 - 중점돌봄군(약 6만명) 대상으로 어르신 생활지원서비스(이동·세탁·가사·청소·취사 등) 제공량 확대
 - 재택의료서비스 확대 통한 재가 요양 서비스 개선
 - 희망하는 모든 치매 어르신에게 '위치 감지기' 보급 추진
- ③ 어르신들의 주거 지원 확대
 - 서민·중산층 실버타운 확대 위한 특별법 제정
 - 주택연금 연계한 실버타운 공급 확대
- ④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지원
 - 공원 등 유휴부지 활용해 도심 인접 녹지에 파크골프장 설치 확대
 - 파크골프 등 시니어 친화 종목 시설과 건강증진시설 접목한 체육시설 설치 확대
 - 노년기 특화 국가 검진 체계 개선 및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 도입

▣ **재원조달방안**

-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에 따른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
(매년 재량지출 예산증가 평균 6조원 규모)

정책순위

10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

정책분야 | 재정경제, 환경, 산업자원

□ 목 표

-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
- 생활속 탄소감축 실천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①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 및 컨트롤타워 강화
 - 기후위기대응기금 규모 두배로 확대
 - 확충 재원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산업 육성, 기술개발 등에 중점 투자
- ② 저탄소 전환 촉진
 - 원전·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 상향 및 유상할당 확대
 - 수출 증소·중견기업의 국제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 ③ 기후산업 및 녹색금융 성장 지원
 - 지역기반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디지털 탄소중립 솔루션 전문기업 육성
 -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산업 활성화 제도 및 지원방안 마련
- ④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 녹색생활분야 인센티브를 연간 50만원으로 상향
 - 플라스틱 제품 경량화, 재생원료 사용으로 플라스틱 사용 감량
 - 무더위·한파로부터 기후취약계층 보호

□ 재원조달방안

- 불요불급 사업의 지속적인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으로 기후위기 대응기금에 전입금 확대(2023년·2024년 예산안 편성시 각각 20조원대 구조절감 실시)
- * 2024년 예산 기준 기후위기대응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1.1조원 규모



더불어민주연합

No.	정 책
1	'거부권'에 가로막힌 개혁 법안,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2	정치개혁을 완성하고, 권력기관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3	출산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4	녹색전환·탄소중립 달성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5	재난과 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6	경제적 약자인 '을'의 기본권을 튼튼히 보호하겠습니다.
7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8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9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
10	윤석열 정부가 망친 경제, 회복하겠습니다.

정책순위

1

‘거부권’에 가로막힌 개혁 법안,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정책분야 | 정치

□ 목 표

- ◎ 대통령 거부권에 막힌 민생입법의 재추진
 -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 확립-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노동자 권리보호
 - 방송3법 개정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민주성 확보
 -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으로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
 - 김건희특검법 제정으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
 -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제정으로 화천대유 50억클럽 사건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규명 및 국민 의혹 해소

□ 이행방법

- ◎ 각 개별 입법

□ 이행기간

- ◎ 22대 임기내

□ 자원조달방안 등

- ◎ 불필요

정책순위

2

정치개혁을 완성하고, 권력기관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정책분야 | 정치

□ 목 표

- 사표방지과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 예결특위 상설화로 국가재정의 민주적 통제 강화
-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통해 비대화한 검찰권력 정상화
-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 강화 등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제고

□ 이행방법

- 공직선거법 개정
- 국회법 개정
-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수사절차법 제정
- 감사원법 개정

□ 이행기간

- 22대 임기내

□ 자원조달방안 등

- 불필요

정책순위

3

출산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정책분야 | 보건복지

□ 목표

- ◎ 불안함 없이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
- ◎ 질 낮은 일자리와 높은 주거비 부담,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문제, 일-가정 양립 불균형 문제 등 획기적 개선

□ 이행방법

- ◎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종합적 저출생 대책 수립 및 체계적 추진체계 마련
- ◎ 과도한 주거비 부담 해소. 주거 불안으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 ◎ 출산의 주체인 여성과 남성의 건강에 대한 종합 지원 및 계획 수립. 난임지원 확대 등 생애주기별 대책 강화
- ◎ 지역에서도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마련. 양질의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 확충
- ◎ 혼인·출산 비용의 국가 지원 강화. 주거 마련 비용, 자녀 양육 비용 등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
- ◎ 누구나 육아휴직 권리를 사용하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환경 조성, 권리 보장.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간 확대 등 추진
- ◎ 신혼부부 자산형성 지원, 아동과 청년을 위한 기본소득 도입. 아동수당 수급연령 확대 및 수당액 인상, 자산형성 프로그램 대상 및 지원 확대 등 추진

□ 이행기간

- ◎ 2024~2025년 : 법률 제·개정 등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 2025년 ~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한 단계적 정책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 정부지출 구조조정 및 부자감세 철회 통한 확보

정책순위

4

녹색전환 · 탄소중립 달성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정책분야 | 산업자원 조세, 농림 해수

산업자원 분야

□ 목표

-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 구현

□ 이행방법

- 한국판 IRA법 제정으로 재생에너지 확충과 산업전환 지원

□ 이행기간

- 법률 제정은 2024년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자원조달방안 등

- 법률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 후 국비 등 예산 반영

조세 분야

□ 목표

-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세제 개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전환 추진

□ 이행방법

-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세제 개편)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나뉘어 있는 에너지 관련 세제를 탄소세법 체계로 전환하되, 국제동향과 국내 산업현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전환. 탄소세로 마련된 재원은 장기적으로 기후취약계층 에너지전환 지원

■ 이행기간

-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세제 개편) 22대 국회 말까지

■ 자원조달방안 등

-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세제 개편) 탄소세는 세입사항이므로 자원조달이 문제되지 않고, 탄소세 세수로 마련된 재원에 대한 지출 문제는 탄소세체계로 전환이 완료된 뒤에 탄소세 세입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지출하게 되므로 별도의 자원조달 불요

농림해양수산 분야

■ 목표

- 전국민 햇빛 바람 연금 도입

■ 이행방법

- 재생에너지 공공투자 확대, 발생한 수익은 국민에게 돌려주는 발전이익공유제로 주민연금 지급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 : 22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 : 2025년 예산 심사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자원조달방안 등

- 신재생에너지 기금 활용(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정책순위

5

재난과 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정책분야 | 행안, 해수 법사, 노동

□ 목표

- ◎ 생명안전을 위한 국가 시스템 마련 및 재난 발생 시 안전 프로세스가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체계구축
-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어업인 등에 대한 피해 지원과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입농수산물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기로 국민안전 제고
- ◎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 이행방법

-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 10.29 이태원 참사특별법 제정안
- ◎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인한 피해 지원 관련 법안 제·개정,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 및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 법안 제정
- ◎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정적 집행 유도 및 정부조직법 개정

□ 이행기간

- ◎ 22대 국회 상반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 없음

정책순위

6

경제적 약자인 '을'의 기본권을 튼튼히 보호하겠습니다.

정책분야 | 경제

□ 목표

- ◎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 및 단체협상권 강화
- ◎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 제도 개선
- ◎ 플랫폼 특성이 반영된 시장 규율로 전체 시장의 불평등도 개선

□ 이행방법

- ◎ (을의 단체협상권 및 교섭권 보장)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가맹·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임차인 등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
- ◎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 대출, 채무 등 금융 업무를 전담하는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실효성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 거래조건 협의 등 공동행위시 공정거래법 적용 완화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강화 및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 조성
- ◎ (디지털플랫폼 독과점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
국내외 온라인플랫폼 불공정거래 행위 및 독과점 폐해 방지 법적 근거 마련

□ 이행기간

- ◎ 을의 단체협상권 및 교섭권 보장 : 2024년~2027년까지
- ◎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 2024년~2027년까지
-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실효성 강화 : 2024년~2027년까지
- ◎ 디지털플랫폼 독과점방지법 : 2024년~2027년까지

□ 재원조달방안 등

- ◎ 소상공인 전문은행은 소진기금 등 정책자금 활용 및 개별 법률 개정 추진

정책순위

7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정책분야 | 노동

□ 목표

-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고용 및 노동권 보호에서 차별을 금지

□ 이행방법

-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법 제정 :
 -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보수, 보편적 휴식권 보장,
 - 노동안전 등 최소한의 노동조건 보장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수혜 대상자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 및 일하는 사람으로 변경하여 사각지대 없이 일하는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고용 및 노동권 보호에서 차별을 금지
 - 직장내 괴롭힘 방지 법안 마련
 - 고용, 승진에 있어 지역·경제상황·성별·병역여부 등에 따른 차별 금지 방안 마련
 - 성별 임금차별 완화를 위한 임금공시제 법제화 및 단계적 의무화 추진
 - 임금공시 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 원·하청에 따른 차별을 막고 산업안전에서 원청 책임의 강화

□ 이행기간

- 제22대 국회 임기 내 입법 추진 및 예산 확보

□ 재원조달방안 등

- 해당 없음

정책순위

8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정책분야 | 농림, 해수

□ 목표

- 농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
- 소멸위기 농어촌에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 농업을 식량안보산업으로 육성

□ 이행방법

- 쌀 및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산물 생산비 안정제 도입, 농어업재해보상제 도입, 농업 노동력 확보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농림분야 정부 예산 대폭 확대, 농촌 재생뉴딜프로젝트로 행복한 농촌 실현, 농어촌 교통 및 의료 인프라 지원 확대
- 주요 곡물 및 발작물 자급률 제고, 공익형직불제 대폭 확대, 친환경유기농업의 비중 확대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 : 22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 : 2025년 예산 심사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정부 예산 확대분으로 충당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및 지방비 활용

정책순위

9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

정책분야 | 복지, 금융, 국토

□ 목 표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

□ 이행방법

-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등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 기본법 제정 이후 개별 법 규정 개정

□ 이행기간

- 2024년 기본소득 도입과 기본사회 보장을 위한 공론화 및 제도 정비 후 추진.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민간투자 자금 활용.

정책순위

10

윤석열 정부가 망친 경제, 회복하겠습니다.

정책분야 | 산업자원 농림, 해양 수산, 외교

산업자원 분야

□ 목 표

- 글로벌 5대 산업강국 도약을 위해 혁신선도형 산업구조 구축

□ 이행방법

- 녹색·디지털전환, 신산업 육성,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
 -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유상할당 확대 및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 확대 추진
 - * 빅데이터·AI 등 디지털 기술의 활용 제고로 산업의 체질 개선
 - * 신산업·성장동력 발굴·육성을 위한 건전한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 이행기간

- 제도개선, 재정사업 등은 202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 자원조달방안 등

- 국비 등 예산 반영

농림해양수산 분야

□ 목 표

- 농축수산업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

□ 이행방법

- 식량자급 확대, 농산물 가격안정제 및 생산비 안정제·농어업재해보상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축수산업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 강화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 및 재정 투입 관련하여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외교 분야

한반도 긴장을 완화해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 윤석열 정부의 이념 편향적 '가치외교'노선의 수정
- 실리 추구적 균형외교 노선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

목 표

- 윤석열정부의 이념편향적 가치외교 수정하여 실용 균형 외교 추진을 통해 경제적 안보적 국익 확보

이행방법

- 지속적으로 정부에 정책수정 요구

이행기간

- 윤석열 정부 기간내

재원조달방안 등

- 없음



국민의미래

No.	정 책
1	희망차고 안전한 교육·돌봄 환경 구축
2	자립준비 청년의 사회 첫걸음 지원
3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아이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4	장애인의 사회적 격차 해소
5	따뜻한 동행, 북한이탈주민 두텁게 지원
6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모두가 잘사는 동행사회 만들기
7	안심하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군 장병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
8	제복공무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9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10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순위

1

희망차고 안전한 교육 · 돌봄 환경 구축

정책분야 | 교육/보건복지/과학기술정보통신/안전/사법윤리

□ 목 표

-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과 공교육 역할 강화
-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 유치원 · 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없는 교육 지원

□ 이행방법 및 기간

- 1)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과 공교육 역할 강화
 -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전면 확대
 -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교원 역량 강화
 - EBS 우수 강사진 확보 및 맞춤형 고품질 프로그램 개발
 - 교육사다리 복원을 위한 개인별 멘토링 전국 확대
 -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으로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정주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교육발전특구 추진
- 2)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
 - 학교폭력 제로센터 전국 확대
 - 가해학생에 대한 엄벌 조치
 - 학교내 마음건강 진단 및 전담병원 연계 등 전문적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 3) 유치원 · 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없는 교육 지원
 -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 우선 추진
 - 단계별 유보통합 추진
 -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시·도, 시·군·구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관리체제 일원화 추진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입학시스템을 통합하여 학부모에게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재원조달 방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일반회계 재원 활용,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운용기한 연장 추진 (2024년 예산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 68.9조원)

정책순위

2

자립준비 청년의 사회 첫걸음 지원

정책분야 | 보건복지/재정경제/건설교통/기타(청년)

□ 목 표

- 실생활 적응을 위한 제도 개선
-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생활 지원
- 자립준비 청년의 마음 성장 지원

□ 이행방법 및 기간

- 1) 퇴소 전 실생활 적응을 위한 청년자립준비 학교 도입
- 2) 언제나 함께하는 사회적 가족제도(멘토-멘티) 운영
- 3) 주거지원 확대
 - (LH) 전세임대 지원한도 상향 및 지역별 차등 추진, 자기부담금 저리대출지원
 - (LH) 주택물색 시 계약서 작성 등 주거분야 교육 강화 및 도우미 지원
 - 자립지원 커뮤니티하우스 등 특화주택 공급확대 및 자립준비 청년 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모기준 개선
 - 자립준비 청년 임시거처 지원 근거 마련
- 4) 자립준비 청년 개인상담사 지원제도 활성화(1:10명)
- 5)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취업·심리지원 등 원스톱 지원
- 6) 17개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지자체, 보호시설 간 정보시스템 구축
- 7) 시설 퇴소 5년 후 상황·욕구에 따른 자립지원 차등화 방안 마련

□ 재원조달 방안

-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에 따른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
(매년 재량지출 예산증가 평균 6조원 규모)

정책순위

3

한부모가정 · 위기임산부 아이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정책분야 | 보건복지/여성/사법윤리/안전

□ 목 표

- 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
-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 이행방법 및 기간

- 1) 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단계적 인상
 -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한 증명서 발급기준과 양육비 복지급여 대상 기준 완화
 - 청소년 (한)부모 1세 이하(24개월 미만) 자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 2)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
 - 양육비 미지급 건에 대해 정부가 양육자에게 선지급하고, 이후 악질적인 양육비 채무자에게 추징
 - 법적 양육비를 악질적으로 미지급하는 채무자의 신상공개 추진
 - 양육비이행관리원 역할 강화를 통한 양육비 이행지원 사업 실효성 확보
- 3)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 위기임산부 조기발견 및 맞춤형 지원
 -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산후도우미 파견 서비스 제공 소득기준 폐지
 - 청소년 임신부 의료비 지원금 상향 및 24세까지 단계적 확대
 - 보호출산을 선택한 산모가 원하는 경우에 미혼모시설을 이용토록 관련 제도 정비
 - 보호출산 아동(신생아) 위탁보호기관 설치·지정 및 보호비용 지원

□ 재원조달 방안

- 불요불급 사업의 지속적인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2023년·2024년 예산안 편성시 각각 20조원대 구조절감 실시)

정책순위

4

장애인의 사회적 격차 해소

정책분야 | 보건복지/과학기술정보통신/건설교통/문화관광

□ 목 표

-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
- 발달지연 아동 지원 강화
- 장애인이동권 및 접근권 확대
- 장애인 디지털 격차 해소

□ 이행방법 및 기간

- 1)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
 - 최종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1:1 맞춤형 돌봄체계 추가 확대
 - 가족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24시간 긴급돌봄 지원 확대
- 2) 발달지연 아동 지원 강화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대상 소득기준 확대 등을 통해 확대 및 소득기준 지원 단가 인상 추진
 - 비 언어치료 등의 의료행위는 안전성·유효성,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급여로 결정하고, 자격제도 정비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 추진
- 3) 장애인 보조견 및 도우미견 제도 확대
 - 장애인복지법개정을 통해 보조견 종류를 구분하고 지원체계 정립
 - 사회 전반의 장애에 대한 도우미견 지원제도 확대
 - 은퇴견 사후지원제도
- 4) 장애인의 관람 환경 개선
 - 지체 장애인이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환경 강화
 -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가치봄(배리어프리)' 영화 상영 확대
 -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기술센터 등과 연계한 지도·감독 강화

5) 디지털 격차 해소

- 디지털 촉각·접자 디스플레이, 장애물이 없는 보행정보를 제공하는 내비게이션 등 전용 제품 출시 지원
-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 보급 대폭 확대
- 방송사와 OTT의 프로그램에 대해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 **재원조달 방안**

- ◎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에 따른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
(매년 재량지출 예산증가 평균 6조원 규모)

정책순위

5

따뜻한 동행, 북한이탈주민 두텁게 지원

정책분야 | 통일외교통상/보건복지

□ 목 표

- 북한이탈주민 정착 단계별·생애주기별 서비스 강화
- 북한이탈주민의 일상적 마음돌봄 지원 강화
- 핵실험장 인근지역 출신 북한이탈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피폭검사 추진

□ 이행방법 및 기간

- 1) 북한이탈주민 정착 단계별·생애주기별 서비스 강화
 - 개인의 적성을 반영하여 구직 준비과정 등 맞춤형으로 지원
 - 북한이탈주민 수요맞춤형 멘티-멘토 사업 지원
 - 주거지원금 및 지방거주장려금 인상·현실화 및 영농정착성공패키지 적극 실시
 -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 지원 확대 및 취업 지원
- 2) 북한이탈주민의 일상적 마음돌봄 지원 강화
 - 전국 광역시·도에 북한이탈주민 전담 전문심리치료기관 확대
- 3) 핵실험장 인근지역 출신 북한이탈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피폭검사 추진

□ 재원조달 방안

-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의 여유자금 상황을 감안하여 현재 매년 평균 일반회계전입금으로 1,000억원 규모를 지급하고 있는 것을 북한이탈주민 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6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모두가 잘사는 동행사회 만들기

정책분야 | 보건복지/재정경제/사법윤리/안전/기타

□ 목 표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문화다양성 이해 확대 지원
- 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 위기 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보호자·입양자 책임 강화

□ 이행방법 및 기간

- 1)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문화다양성 이해 확대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추가 지원 대상에 다문화가족 추가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확대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확대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능력 및 스포츠 신체적 적합성 등을 개발하여 미래·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2) 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 ‘여성’ 피해자 지원 기능을 ‘모든 피해자’ 지원으로 확대
 - 공공부문 성폭력사건 대응체계 강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 확대
 - 성범죄자 신상정보 정확성 제고 및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개선
- 3) 위기 청소년의 자립 지원 확대
 - 고교과정 중단 청소년에 대한 정보연계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위기 청소년 파악
 - 학교밖 청소년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 고립·은둔청년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재적응을 위해 실태조사 매년 실시
 - 청년미래센터 전국으로 확대
 - 가정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확대 및 상담·멘토 프로그램 확대

4)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보호자·입양자 책임 강화

- 반려동물 생체정보 확대 및 등록, 진료부 공개 의무화, 진료항목 표준화 등 추진
-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추진
-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광견병 등 필수 예방접종 무료화 등 진료비 부담 완화
- 반려동물 입양자, 보호자 교육센터 설치 추진
- 공공 차원의 장례시설 신설 추진

재원조달 방안

- ◎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에 따른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
(매년 재량지출 예산증가 평균 6조원 규모)

정책순위

7

안심하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군 장병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

정책분야 | 국방/보건복지/재정경제

□ 목 표

- 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
- 생활 밀착형 복지지원 확대

□ 이행방법 및 기간

- 1) 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
 - 군 안전관련 총괄센터 설립 추진
 - 군 장병들의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체계, 정신건강센터 인력보강 및 인프라 확대
 - 군인 상해보험제도 전면시행 추진
- 2) 생활 밀착형 복지지원 확대
 - 군 장병 급식비 지속 인상
 - 군 급식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급식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
 - 군 장병의 이사화물비 현실화
 - 군인부부 자녀 방과후 늘봄학교 우선대상으로 지원
 - 군무원 근무 수당 인상 및 격오지 근무 군무원에게 주거시설(관사 또는 간부숙소) 지원

□ 재원조달 방안

-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에 따른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
(매년 재량지출 예산증가 평균 6조원 규모)

정책순위

8

제복공무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정책분야 | 안전/사법윤리제정경제/노동/보건복지/기타

□ 목 표

- 제복공무원 처우 개선
- 제복공무원 복지지원 확대

□ 이행방법 및 기간

- 1) 소방, 경찰, 교정공무원 「직무집행법」 제·개정으로 공권력 바로 세우기
- 2) 장기재직자 국립묘지 안장 자격 확대
- 3) 제복공무원 부부 및 다자녀 가정 늘봄학교 우선 대상 지원
- 4) 제복공무원 수당 등 처우 현실화
 - 소방공무원 : 특수성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화재진화수당, 출동수당 현실화
 - 경찰공무원 : 스토킹 전담 경찰관 수당 신설, 성과상여급 지급 현실화 등
 - 해양경찰공무원 : 사기진작 위한 수당 인상 및 처우개선 등
- 5) 제복공무원 인력 증원과 임무수행 시 필요 장비에 투자 확대
- 6) 제복공무원들의 건강 의료지원 확대
 - 소방공무원 :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 도입, 소방심신수련원 확대
 - 경찰공무원 : 비수도권 경찰병원 분원 건립

□ 재원조달 방안

- 불요불급 사업의 지속적인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2023년·2024년 예산안 편성시 각각 20조원대 구조절감 실시)

정책순위

9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정책분야 | 산업자원/노동/안전/재정경제

□ 목 표

- 안정적 자금 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
- 근로환경 격차해소

□ 이행방법 및 기간

- 1) 안정적 자금 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
 - 신보, 기보, 중진공을 통해 중소기업에 연간 100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속 공급함으로써, 고금리 부담과 자금 애로를 완화
 -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여 원자재와 같이 가격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
- 2) 근로환경 격차해소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시행기간 연장 및 요건 완화
 - 중소기업 재직 중장년(35세~60세) 근로자 세액공제 확대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공휴일 적용방안에 대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추진
 - 중소·중견기업의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연장 등) 도입 활성화
 - 중·장년층 대상 맞춤형 교육·훈련과 채용서비스 제공 등 직무전환을 지원하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확대

□ 자원조달 방안

- 불요불급 사업의 지속적인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2023년·2024년 예산안 편성시 각각 20조원대 구조절감 실시)

정책순위

10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분야 | 환경/재정경제

□ 목 표

- 탄소리워드 확대를 통한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
-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
-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

□ 이행방법 및 기간

- 1) 탄소리워드 확대를 통한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
 - 녹색생활 분야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연간 최대 50만원으로 상향
 - 탄소중립포인트 전용통합 앱 기반으로 전환
- 2)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
 - 플라스틱 제품 경량화, 재생원료 사용으로 플라스틱 사용 감량 추진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사용량을 단계적으로 확대
 - 폐자원 순환경제망 구축
- 3)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
 -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적응 인프라 설치 확대
 - 강한 호우 등 위험기상 예상 시 재해현장 주민에게 재난문자로 긴급 기상정보 전달
 - 살얼음, 안개 등 국민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기상서비스 강화
 - 국립 기후변화홍보체험관 건립을 추진하여 국민참여형 탄소중립 실천프로그램 개발하고 탄소중립 체험 확산

□ 자원조달 방안

- 기후위기대응기금에 전입금을 확대 하고, 기존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신규 사업 추진재원 확보



녹색정의당

No.	정 책
1	〈기후〉 탄소중립경제로 전환, 22대 국회 제1과제로
2	〈저출생〉 주거, 교육, 돌봄, 시간 불평등 극복으로 저출생 해결
3	〈돌봄〉 돌봄복지국가 -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통합돌봄
4	〈노동〉 노동시간 불평등 해소, 일하는 시민들을 지키는 노동 중심 사회
5	〈성평등〉 성별임금격차 해소, 성폭력 처벌 강화로 거침없이 성평등 사회
6	〈지역소멸, 민생〉 지방대무상교육, 부채탕감으로 지역소멸-민생위기 대응
7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청년, 청소년〉 다시, 차별금지법, 이주사회기본법, 탈시설로 모두가 공존하는 인권 사회
8	〈생태, 농어업, 먹거리〉 사람과 농어업, 동물, 자연 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사회
9	〈주거〉 영끌 시대 끝내고 시작하는 녹색공공주거 시대
10	〈개헌, 사법, 언론, 남북, 외교〉 개헌을 통한 강한 시민공유민주주의 실현

정책순위

1

〈기후〉 탄소중립경제로 전환, 22대 국회 제1과제로

정책분야 | 산업자원, 건설교통, 환경, 재정경제

□ 목 표

- 기후위기 대응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설정, 탄소중립경제와 정의로운 전환 실현
- '1만 원 기후패스'로 시작하는 2030년 무상교통

□ 이행방법

〈탄소중립경제와 정의로운 전환〉

- 기후위기 국가 최우선 과제 수립
 - 행정부처에 기후위기 대응 총괄 지휘하는 기후경제부 신설
 - 입법권과 예산심사권을 가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
-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
 - 탄소세 부과하여 탄소배출 감소, 기후배당으로 저소득층 불평등 해소
 - 국토와 생태계를 무분별하게 파괴하는 각종 지역 개발 중단
 - 소형모듈원전(SMR) 사업과 공항 항만 등 좌초 인프라 예산 기후대응기금으로 전환
 - 교통시설특별회계(교특회계) 도로 건설 비중 대폭 축소로 도로변 태양광 사업으로 전환
- 재생에너지 2030년 50%, 2050년 100% 추진, 탄소중립경제 실현
 - 탄소중립산업전환지원법 제정,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및 산업 촉진
 - 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으로 전환, 녹색 금융 지원 및 활성화 특별법 제정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비한 국가 전략 수립과 대응 체계 구축
 -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신규 건설 중단
- 기후위기 대응 지역공동체와 지역일자리 100만 개 조성
 - 공유지에 재생에너지 확대 법제화, 1가구 1태양광 설치 지원하는 녹색일자리
 - 집수리, 단열 등 에너지 효율 그린 리모델링 100만 호 지원 녹색일자리
 - 공공교통·녹색교통 활성화로 녹색일자리 조성
- 녹색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여 기후재난에 취약한 주거지 개선
 - 건물에너지 효율 등급제 도입

- 난방 연료 탈탄소화 로드맵을 구상
- 폭우와 장마 대비 반지하, 폭염과 한파 대비 옥탑방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 ◎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정의로운 전환 이행
 - 국가 정의로운전환위원회 출범
 - 중앙, 지역별 주민참여 탈석탄준비위원회 구성, 탈석탄지역지원 특별법 제정
 - 친환경 농어업을 위한 기후생태직불제로 전면 개편, 기후재난 대응 농어업재해보상법 제정
 - 내연 자동차 연관산업(주유소, 자동차정비 등) 지원, 지역 기후재난 인프라 구축, 예산 투입<1만원 기후패스로 시작하는 2030년 무상교통>
- ◎ 2030년 무상교통으로 가는 '1만 원 기후패스' 도입
 - 수송 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30년 무상교통 국가계획 수립
 - 노인, 청소년, 장애인, 소규모 지자체 무상교통 우선 도입 및 월 '1만 원 기후패스'
- ◎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기본법 제정
 - 교통기본법 제정. 교통약자 등 보편적 이동권 보장, 공공교통 수송분담률 목표 및 이행 의무화 조항(2030년까지 30%에서 60%로 2배 확대), 자가용 수송분담률 감축 목표 조항(2030년까지 현재의 50% 감축) 명시
 - 정책 수립 과정에 시민, 노동자 등이 참여하여 민주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숙의형 통합 교통 행정기구(가칭 시민교통정책위원회)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확대·개편
- ◎ 온실가스 '배출 제로', 안전한 '비전 제로'
 - 대자보(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교통 체계 중심의 도시기본계획 편성
 - 신규 공항 건설 금지 및 이용률 하위권 공항 통폐합 추진, 태양광 발전 및 숲 부지 조성
 - 광역 철도를 확대하고 철도-지역 공영버스 연계로 광역-지역 교통 인프라 구축
 - 신규버스 100% 전기버스, 2030년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중단, 영업용 화물차 전기차 전환 지원
- ◎ 버스·지하철 통합형 대중교통 완전공영제 추진
 - 버스 노선 운영을 통한 사기업의 약탈적 운영 방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개선
- ◎ "자전거면 충분하다" 자전거 생태교통 활성화
 - 탄소중립 기본계획 등에 자전거 정책 포함, 자전거기본법 수송분담률 목표 10% 명시
 - 정부 내 자전거 전담 총괄부서를 통해 자전거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추진
 - 자전거 전용도로·태양광 발전 연계 '태양광 자전거 도로' 대폭 확대
 - 자전거 주차장을 공공교통과 환승이 편한 거점 터미널로 확대하는 등 인프라 개선
- ◎ 사회연대 재정원칙과 기업교통세로 재정 마련
 - 고용 규모에 따라 기업에 부과하는 기업교통세 신설, 전부를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전입

-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 공공교통 확충에 투입(도로, 공항, 항만 계정 비율 30%)

▣ 이행기간

- 22대 국회 임기 내

▣ 자원조달방안 등

- 법·제도 개선, 일반회계 등으로 조달

정책순위

2

〈저출생〉 주거, 교육, 돌봄, 시간 불평등 극복으로 저출생 해결

정책분야 | 보건복지, 교육, 여성, 노동

□ 목 표

- 저출생 5대 요인인 ‘고용불안, 주거부담, 출산 및 육아부담, 교육경쟁 심화, 일·생활 조화 어려움’ 해소에 중점을 두고 삶의 질 개선

□ 이행방법

〈저출산 5대 핵심 정책〉

- 10년+10년 집 걱정 해소
 - 함께 살면 10년, 아이가 태어나면 10살이 될 때까지 공공주택과 주거지원비 제공
 - 대상: 혼인 및 동거 이후 10년 이내 가구, 만10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 기간: 아동이 없는 경우 입주 후 10년까지, 아동이 있는 경우 만10세까지
 - 지원: 공공임대주택 제공(신도시 재건축시 공공주택비율 20% 의무,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만 적용) 및 주거지원비(월 60만원)
 - 3자녀가구 무상주택: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중 3자녀 가구에 무상매입임대주택 제공
- 임신·출생 사회책임제로 무상 임신·출생 실현
 - 임신,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전액 지원, 원스톱 상담창구 및 지원체계 마련
 - 청소년, 미혼부모, 외국인, 노숙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특화서비스 마련
 - 공공병원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설치, 재가 산후조리 시 출산가정 전문간호사 방문
- 눈치 안보고 사용가능한 육아휴직, 성평등 돌봄
 -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아빠 육아휴직 3개월 할당,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 분할 사용
 -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제 확대, 육아휴직 급여 상한제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 중소기업 등 대체인력 지원 위한 〈대체인력지원센터〉 설립·운영, ‘대체인력’ 소득 보장
-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생활 조화
 - 주4일제 도입과 하루 노동시간 상한제로 몰아쓰기 노동 없는 온전한 주4일제 실시
 - 근로시간단축 청구제 사유·기간 폐지, 전일제 복귀 청구권 부여. 연간 30일 유급 돌봄휴직으로 일과돌봄시간자유선택제 도입

- 연차휴가 5일 추가, 1년 중 최소 1개월 휴가 부가. 연차휴가 발생기준 6개월로 축소

◎ 사교육비 경감

- 국가책임 돌봄과 제대로 된 유보통합으로 돌봄 부담 경감
- 대학 상향평준화 및 학벌 차별금지법으로 입시경쟁 완화
- 한반 20명과 중층 기본학력 보장 시스템으로 맞춤형교육

〈안심 보육, 아동 기본권 보장〉

- 18세까지 아동수당, 어린이·청소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아동치과주치의제 실시
-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50%, 보육교사 확대와 처우개선, 아동전문상담가가 찾아가는 ‘금쪽 이보육’ 실시, 아동학대 전담인력 확대 및 처우개선
- 아이돌봄 3종 세트 - 키움센터, 아이돌보미, 장난감 도서관 확대
- 대규모 양육시설 일몰 선언, 해외입양 일몰 선언, 지역사회 아동보호인프라 확대
- 다문화, 외국인아동, 가족 돌보는 아동 지원 강화, 기후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보장
- 아동기본법 제정, 아동·가족예산 2배 확대

〈국가책임 돌봄, 대학평준화로 사교육비 경감〉

◎ 맞춤형 미래교육 / 아동돌봄 국가책임

- 초1부터 한반 20명, 수업 바꾸는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 서울대 10개 및 지방 강소대학 육성 등 대학 상향평준화, 지방대부터 무상
- 제대로 된 유보통합 및 영유아학교, 국공립유치원 확충,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국가책임 돌봄 시스템, 돌봄전담사 확충 및 노동권 보장

◎ 입시 사교육비 경감 / 모두의 배움 책임지는 학교

-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대학 상향평준화, 대입 절대평가, 사교육 선행학습 조치
- 핀란드식 중층 기본학력 보장 시스템, 학생 맞춤지원 확대, 코로나 결손 지원, 생태교육 등 미래 녹색교육,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또는 추첨제

◎ 노동 주도 직업교육 / 교육재정 확충

- 노조 참여 산업별 직업교육위원회, 정부부터 고졸채용,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확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격차 해소, 전문대 일반재정지원 확대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고른 대학지원, 총액인건비제 개선

◎ 학교구성원 권리 증진 / 서민 위한 평생교육

- 학생인권법 마련, 교원 교육활동 보호, 학교 행정직원 충원, 학부모회 법제화, 교육공무직 법적 투명인간 해소, 성과급제 폐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 평생교육 바우처 확대, 시민학습공동체 지원, 지역 밀착 고등평생직업교육

■ 이행기간

- 22대 국회 임기 내 실현

■ 자원조달방안 등

-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조달

정책순위

3

〈돌봄〉 돌봄복지국가 -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통합돌봄

정책분야 | 보건복지, 문화관광, 농림해양수산

□ 목 표

- 전생애 통합돌봄으로 전국민 모두가 존엄한 삶 보장

□ 이행방법

- 전생애 통합돌봄으로 전국민 존엄한 삶 보장
 - GDP 대신 '국민 삶의 질 지표' 예산 편성 의무화
 - 돌봄부총리제 도입으로 중장기 돌봄 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예산편성권 보장
 - 돌봄이 필요한 모든 주민에게 돌봄 기본권 전면 보장
 - 시도 시군구까지 사회서비스원 확대. 요양, 돌봄, 보건의료, 주거 등 종합지원체계 마련
 - 어르신, 장애인, 정신장애인, 노숙인 등 특화 지원 맞춤형 체계 구축
 - 시군구마다 돌봄플래너 도입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읍면동마다 '공공돌봄센터' 설치. 24시간 돌봄, 긴급돌봄, 요양,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통합 제공, 서비스 종사자는 센터가 직접 고용
 - 아동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상담서비스 제공. 시군구마다 마음건강상담센터 설치
 - 전국민 보편적 상병수당 도입으로 아파도 쉴 권리 보장
- 건강하고 존중받는 노후 보장
 - 노인최저소득보장제(보충급여, 월 최대 30만원)로 후기고령층의 노인빈곤(54%, 22년) 해소
 - 노인맞춤형 사회적경제 지원, 정년 연장, 다양한 어르신 일자리 확대
 - 편의시설과 의료·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실버아파트, 원룸형 실버주택 확대
 - 국공립 장기요양 30% 확대, 방문재활급여 등 급여 다양화, 장기요양보호사 종합대책 마련
 - 시군구마다 공공병원 착한 장례식장 운영, 장례서비스 표준비용 발표로 반값 장례비 실현
-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로 지역소멸 방지, 건강도시 실현
 - 지역인재 60% 선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지역 공공의대 설치
 - 70개 중진료권마다 500병상 이상의 현대식 공공병원 설립
 - 100병상 규모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으로 국가표준 선도, 국립대 의대 증원
 - 전국민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실시. 건강보험 보장률 80% 확대, 혼합진료 금지 및 적정수가로 비급여 해소

- 상급종합병원, 공공병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문병원, 재활병원 모든 병동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실시로 보호자없는 병원 실현
- 모든 병원 산재보험 당연지정제, 의료기관이 산재보험 청구권 대행 등 전국민 산재보험
- 나와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 지역 격차 없는 건강복지도시 실현.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대 강화

◎ 예술노동의 권리 보장, 지역마다 ‘문화마을’

- 예술인 산재보험 전면 적용,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 동의 없는 창작품 인공지능(AI) 학습 금지, 창작자의 저작권 강화
- OTT 콘텐츠쿼터제 도입, 콘텐츠 발전기금 징수
-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표현의 자유 보장
- 기초자치단체마다 문화재생 통한 기반시설, 예술인 창작공간, 예술인 공공 임대주택 조성
- 완전도서정가제 시행, 동네서점·도서관 지원 확대, 사서 인력확충 및 처우개선

▣ 이행기간

- ◎ 22대 임기 내 실현

▣ 재원조달방안 등

- ◎ 법 제도 개선사항, 일반회계, 사회보장기금 등으로 조달

4

<노동> 노동시간 불평등 해소, 일하는 시민들을 지키는 노동 중심 사회

정책분야 | 노동

□ 목 표

- 노동시장 격차해소, 플랫폼 및 초단시간 N잡러 소득보장
- 노동시간 획기적 단축, 돌봄시간 보장, 노동자 고용보장과 정의로운 전환

□ 이행방법

- 노동시장 격차해소
 - 국가임금격차해소위원회 설립, 22대 국회 내 공공기관부터 임금격차 30%이내로 해소. 저불격차 해소를 위해 적정납품단가 개선, 공정거래법 개정
 -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명문화 및 근로기준법 6조의 차별처우 금지 대상 및 비교대상집단 업종 내 유사동종의 업무까지 확대
 - 노조법 2, 3조 개정 재추진을 통해 하청 및 특수고용노동자와 원청의 직접교섭제도 활성화
 - 산별교섭 법제화를 통한 사회적 임금체계 확립
- 플랫폼 및 초단시간 N잡러 소득보장
 -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시장 계약형태 다원화를 반영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최저소득 보장 등 명문화
 - 재능마켓 등에서 일하는 플랫폼 프리랜서, 지역배당대행업 등 일자리 중계거래 수수료 5% 상하제
 - 초단시간 노동자 주휴 등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통해 주 15시간 이상으로 유도
- 노동시간 획기적 단축, 돌봄시간 보장
 - 일하는 생애 전체에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및 전일제 복귀 청구권 부여. 일과 돌봄시간 자유선택제 도입 / 돌봄휴직 연간 90일 중 30일 유급화
 - 주4일제 및 하루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 심야노동의 단계적 폐지
- 노동자 고용보장, 정의로운 전환
 - 정의로운 일자리전환 특별법 제정,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신재생에너지 등 신규에너지 사업으로 우선재고용 명문화/ 원거리 고용시 5년간 주거, 교통비용 지원

- 우선재고용 어려운 경우 전환수당 지급. 지역공동화 막기 위해 발전소 폐쇄시 지역경제영향평가 실시. 영향받는 자영업자 등에게도 전환수당 지급
- 노정교섭 활성화

◎ 최저임금 정상화, 노동시장 약자보호

- 최저임금 산입범위 원상회복. 장애인, 수습기간 최저임금 전면적용. 최저임금 연대책임 프랜차이즈 대기업까지 확대
-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2024년까지 해고의 제한, 연차휴가, 유급공휴일,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적용/2027년까지 전체 적용
- 초단시간 계약금지(갱신기대권 법제화)

◎ 직업훈련제도 개편

- 현행 공급자 중심의 직업훈련제도(내일배움카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 19세 이상 은퇴 전까지 연간 120만원/총 1,000만원 한도 개인직업훈련계좌 제공

▣ 이행기간

- ◎ 22대 국회 임기 내

▣ 자원조달방안 등

- ◎ 일반회계, 고용보험, 기금설치 및 기존사업 변경

정책순위

5

〈성평등〉 성별임금격차 해소, 성폭력 처벌 강화로 거침없이 성평등 사회

정책분야 | 여성

목 표

- 여성의 기본권 보호, 성차별·폭력 없는 성평등 대한민국 실현

이행방법

-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확대, 강력한 성평등 추진체계 구축
 - 성평등한 관점에서의 헌법 개정. 헌법에 남녀동등권의 명문화
 - 여성가족부의 성평등부 전환, 정부 지자체의 성주류화 정책의 전담 추진 기능 강화
 - 성별영향분석 평가 업무 전담 인력 확보 및 모든 부처 및 기관에 성평등 담당관 채용
 - 동수제 실현을 위한 로드맵 마련, 정당명부 비례제 확대를 통해 여성의 대표성 강화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로 공공부문 고위직 여성 확대 및 민간기업의 관리직 여성할당제 도입
- 차별없는 성평등 일터,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
 -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여성고용기준 미달기업 패널티 강화
 - 채용 성차별 기업 벌칙 강화, 성평등 담당관 선출, 성차별 의심기관 불시 감독 제재 강화
 - 직장내 괴롭힘에 성차별적 괴롭힘을 포괄하여 피해자 구제, 직장내 성폭력의 사용자 벌칙 조항 확대, 이차피해방지법 마련, 피해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 부처 협업 통한 고용단절여성 맞춤형 통합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 성평등 돌봄, 일·생활 균형 실현
 - 돌봄휴가 확대, 출산전후휴가(현행 90일 → 120일), 배우자 출산휴가제 기간 확대(현행 10일 → 30일),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 육아휴직 3개월 할당, 유연한 육아근로시간 단축제·분할 확대
 - 직장 복귀 후 지원하는 사후지급금 25% 규정 폐지,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상한 인상)
 - 중소기업 등 대체인력 지원 위한 <대체인력지원센터> 설립·운영, '대체인력' 소득 보장
 - 육아휴직 등 법 준수 여부 감독 강화 및 위반, 반복시 가중처벌 등 관련 법 감독 강화
 - 특수고용, 플랫폼, 자영업자 등 육아휴직 대상 확대,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일반 회계 분담비율 확대로 국가 책임 강화
- 젠더 폭력 법·제도 전면 정비, 여성 안전 사회 구축
 - 비동의 강간죄 도입부터 젠더폭력 관련 법제 전면 제·개정(성적괴롭힘도 성폭력으로 포괄,

스토킹 교제폭력 규제 강화,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전면개정, 성착취·성매매·인신매매 근절 위한 법률 등 제·개정)

- 성폭력 범죄 처벌 규정 및 수사 지침 재정비, 피해자 인권에 기반한 안전망 마련
- 디지털 성차별·성폭력 대응 강화(적극적 국제공조 체제 마련, 수사기관부터 불법 촬영물 신속 삭제, 디지털성범죄 삭제전담반 확대, 신고부터 사후관리까지 종합서비스지원 확대)
-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성매매 성산업 확산 방지(온라인 그루밍 현장점검 강화, 디지털기술제공자 강력처벌, 채팅앱 규제 등)
- 소형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범죄예방환경 설계시설 신설 시 보조금 지원 및 세제 혜택 부여, 최저 주거기준에 '안전 기준' 포함, 여성 홍보서비스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 위기 상황시 즉시 연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 여성건강과 성·재생산 권리 보장

- 임신중단 상담 서비스 표준화,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의료기관 접근성 보장
- 임신중단 약물 도입을 통한 선택권 확대, 임신중단 시술 방법과 지침 마련, 응급 피임을 포함한 피임 건강보험 적용, 비용 장벽 제거
-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원, 안전한 월경권 보장, 건강정책 우선순위 및 예산배분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적용, 여성 건강 종합프로그램 구축 및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
- 여성의 몸과 성을 상품화 하는 여성인권 침해성 광고 및 방송 규제 등 몸 다양성 보장
- 성적 동의 및 성적 의사소통 등 성적 권리에 대한 생애 전반에서의 정보 제공과 교육

◎ 한부모 가족, 이주여성 등 맞춤형 지원 강화, 모두의 기본권 보장

- '건강가정' 용어를 삭제하는 건강가정 기본법 전면 개정,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 확대
- 한부모 임신-출산-산후조리-육아-구직 종합지원체계 마련, 양육비 이행 강제 강화, 대지급제 개선
- 장애 여성 자립생활 기반 마련, 장애여성의 모성권과 건강권 보장 등 의료체계 확립
- 폭력·인신매매·성매매 피해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 수용, 이주여성 체류권 보장,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취업 교육 지원 강화, 취업이주여성의 노동권 보장,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 등

▣ 이행기간

- ◎ 22대 국회 임기중

▣ 재원조달방안 등

- ◎ 법·제도 개선 사항, 일반회계 등으로 조달

정책순위

6

〈지역소멸, 민생〉
지방대무상교육, 부채탕감으로 지역소멸-민생위기 대응

정책분야 | 행정자치, 재정경제

□ 목 표

-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지역의료 공공성 확보로 지역인구유출 방지
- 지역순환경제 5법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촉진
- 지자체 재원이전, 납세지 이전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부 유출 방지
- 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100조 탕감

□ 이행방법

-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지역의료 공공성 확보로 지역인구유출 방지
 -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중진료권에 500병상 이상 공공병원 설립 등 지역 공공의료 강화, 2028년 30만원, 2030년 50만원 농어민 기본소득 통한 청년, 노인 등 지역 인구유출 방지
- 지역순환경제 5법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촉진
 - ‘지역공공은행 설립 특별법’, ‘한국형 지역재투자 및 지역재투자 평가법’ 제정,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 ‘조달사업법’ 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해 지역공공은행 설립, 지역사랑상품권 2차사용 확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지자체 재원이전, 납세지 이전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부 유출 방지
 - 지방교부세율 내국세의 22%까지 상향해 재정분권 강화
 -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금, 지역상생발전기금 통합해 ‘지역균형발전교부금’ 설치·운영하고 배분내역 및 성과분석 공개
 -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법인사업소득의 납세지를 발생지로 변경하는 ‘지방세법’ 개정
- 「긴급금융회생기금」 30조 원을 기반으로 채무조정 대상 부채 100조 원 매입
 - 금융기관 출연금 15조 + 정부 국채 발행을 통한 출연금 15조로 30조 조성
 - 채무조정 대상
 - (1단계) 코로나19 영업 금지 및 영업 제한 업종
 - (2단계) 제2금융권·대부업체 이용 다중채무자, 채무상환비율 고위험군 차주

- ◎ 「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지원과 현행 채무조정 제도개선
 - 3개월 이상 연체, 협약채권회사에 대부회사 제외 등 까다로운 신청조건 완화
 - 한계 상황 몰린 차주 원금·이자 감면 및 10년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 대환대출 자격 기준 금리 7% 이상에서 중저금리로 인하
 - 채무자 맞춤형 워크아웃을 도입하고, 패스트트랙 제도 활성화
- ◎ 「부채탕감 통합조정기구」 설치
 - 정부(중기청, 금융위 등), 소상공인, 금융 전문가, 시민사회, 정당 등으로 구성
 - 저소득 소상공인 부채탕감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시행관리, 재생 프로그램 개발
- ◎ 폐업 및 파산·재생 지원 프로그램 도입
 - 대출자 폐업 시 일시상환 중단·유예, 노동 시장 편입 프로그램 참여 강화
 - 전국 지자체 채무조정 담당 부서 신설 및 회생전문법원 추가신설
 - 노동시장 편입이 어려운 경우, 재창업 전환프로그램 참여 지원
- ◎ 서민정책금융 확대
 - 빈곤층을 위해서 2천만 원 한도에서 압류금지 통장 개설(행복지킴이 통장)
 - 파산절차에 중지명령제 도입
 - 파산 후 당면 면책, 파산 후 당면복권 기간 5년으로 단축, 조세도 면책대상 채권에 포함
 - 약탈적인 대출 관행 규제
 -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 이행기간

- ◎ 22대 국회 내, 농어민 기본소득은 22대 국회 내 입법완료

▣ 재원조달방안 등

- ◎ (지역소멸) 국고, 일반회계, 기금설치 및 기존사업 변경
- ◎ (부채탕감) 금융회사 출연금, 국채 발행 등으로 기금 조성

정책순위

7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청년, 청소년〉 다시, 차별금지법, 이주사회기본법, 탈시설로 모두가 공존하는 인권 사회

정책분야 | 행정자치, 보건복지, 사법윤리, 노동, 재정경제

□ 목 표

- 공존을 위한 이주사회 기반구축
- 탈시설, 이동권, 노동권으로 장애인 권리보장
- 성소수자 인권 선진국 실현
- 청년, 청소년이 내일을 상상할 수 있는 사회

□ 이행방법

- 공존을 위한 이주사회 기반구축
 - 이주배경시민청(이민청) 설치, 이민사회기본법 제정
 - 노동비자영주제도 도입과 인권친화적 고용허가제
 - 인권을 존중하는 난민법 개정
 -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의 인권 증진
 - 문화 다양성 증진
 -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보장
- 장애인 권리 보장
 - 친환경 저상버스 100% 도입과 무장애 시내버스 정류장 설치
 - 장애인콜택시 2배 확대 및 지자체 직접 운영
 - 탈시설 및 비리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유형·성별에 따른 장애인정책 마련
 - 발달·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보장, 활동지원서비스 중증장애인 2인 1조제 도입, 신체활동보조 추가 가산금 인상, 활동지원사 월급제 도입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장애인고용장려금 인상,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확대
 -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동료지원센터 설치, 보호의무자에 의한 사실상의 강제 입원 제도 폐지 등 정신장애인 탈시설·탈원화와 인권 기반 지역사회 실현
 - 농학교 수어교육 및 교사 수어자격증 의무화, 지상파 및 종편, 영화관, 공연장 화면해설 확대 및 지원 등 시청각 장애인 정보 접근권 보장

- 성소수자 인권 선진국 실현
 - 차별금지법 제정
 - 다양한 가족 구성을 위한 동성혼과 생활동반자관계 제도화
 - HIV 감염인 인권보호
 - 성별 변경 성소수자 인권보호
 - 공공기관 인권교육 및 국가인권위원회 강화
- 함께 사는 사회, 함께 사는 청소년
 - 학생인권법 제정, 인권·노동·민주시민·경제·성·환경 교육 활성화 등 청소년 인권 보장
 - 청소년 승차권 발급, 버스·고속열차·고속버스비 지원 등 아동·청소년 대중교통 무상화
 - 노동인권조사 정기 실시, 지자체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특성화고 현장실습 안전 강화
 - 선거권 16세로 연령 하향,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등 청소년 정치참여 확대
 - 청소년부부 지원 확대, '모두를 위한 화장실' 확대 등 소수자 청소년도 함께 사는 사회
 - 청소년 쉼터 확대, 꿈드림센터 예산 확대 등 학교 밖, 탈가정 청소년의 인권 보장
- 청년, 내일을 상상할 수 있는 나라
 - 청년 부채 해결. 중위소득 100% 이하 학자금 대출 전액 탕감 및 구간별 대상 확대 검토, 소득 상관 없이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청년신용회복기금 조성, 청년 맞춤형 금융복지상담센터 전국 설치
 - 월 20만 원 청년 주거수당 지급(최대 3년), 지방대부터 무상기숙사 실시, 청년 보증부월세대출 기준과 지원 한도 상향, 청년 1인 가구 맞춤형 사회주택 공급 확대
 -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20대 청년에게 연 10만 원 문화이용권 지급
 - 청년의회 설치 및 시범 운영, 지자체별 청년자율예산제 실시 의무화

▣ 이행기간

- 22대 국회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법·제도 개선 사항, 일반회계 등으로 조달

정책순위

8

〈생태, 농어업, 먹거리〉 사람과 농어업, 동물, 자연 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사회

정책분야 |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 목 표

- 생태계 복원 국가책임, 생태학살범죄 처벌 강화
- 기후위기 대응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농어업 먹거리
- 동물권 보장과 동물 공존 사회

□ 이행방법

-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제도 개선
 - 그린벨트 해제 반대 및 보전, 자연복원 법제화
 - 2030년까지 육상 및 해상 보호 지역 각각 30% 이상 확대 추진
 - 난개발 방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 플라스틱 생산·소비 감축 및 공공기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 모든 공공기관 및 매장의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과 종이컵 사용 금지
 - 공공기관, 공공장소에 식수대 회복, 설치 확대
 - 국내 석유화학업계 화석연료 사용 규제 및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강화
- 후쿠시마 원전 폐수 해양 투기 금지를 위한 국제법상 요구 및 모니터링 실시
- 자연의 권리 법률 제도와 환경범죄 및 생태학살(Ecocide) 처벌·예방
 - 제주남방큰돌고래 등 비인간 존재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
 - ‘생태학살 처벌 특별법’ 제정 및 로마규정 개정을 통한 에코사이드 처벌 찬성
 - ‘환경범죄 합동수사단’ 확대·개편 및 환경범죄 관련 총리실 산하 범부처 TF 신설
 - 새만금(수라갯벌), 가덕도와 제주 신공항, 설악산 케이블카 등 생태학살에 준하는 개발 사업 중단 및 재야생화하며, 4대강 복원
 - 환경공익소송, 환경범죄소송에서 자연의 대리인 참여 보장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농어업먹거리
 - 기후생태직불금, 농작물재해보상제도로 기후위기 대응
 - 220만 농어민기본소득으로 소득안정화, 1인당 월 30만 원 지급만원 확대

- 농지확보, 식량자급률 60% 달성, 먹거리기본권과 농민권리 보장하는 식량주권법 제정
- 친환경쌀 100% 생산으로 친환경농업 50% 달성
- 190만 지방대학 학생들부터 대학생 ‘반값 밥상’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
- 직거래 공공도매시장으로 농민, 소비자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 보장
- 산재보험 받는 농어민, 산업폐기물 없는 농어촌
- 농어업 예산 비율 6%, 기후생태정책실 및 여성농민정책관 신설

◎ 동물권을 보장하고, 동물들과 공존하는 첫걸음

- 동물 번식업의 금지 및 새로운 동물등록제 도입
- 자치구별 동물종합돌봄센터 및 동물보건소 설치
- 동물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 동물청 신설
- 야생동물 살해 방지와 샤프터 존중 정책 실시
-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 축제 폐지와 동물학대 예방
- 동물실험 단계적 폐지, ‘동물실험 폐지 및 대체시험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학교에서의 동물실험 금지 및 민관협력기금 조성하여 대체 실험 기술 활성화

▣ 이행기간

- ◎ 22대 국회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 법·제도 개선사항, 일반회계 등으로 조달

9

<주거> 영끌 시대 끝내고 시작하는 녹색공공주거 시대

정책분야 | 건설교통

□ 목 표

- ◎ 1가구 3주택 보유 금지, 녹색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 ◎ 종합부동산세, 개발이익환수제 강화로 녹색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보
- ◎ 기후재난에 안전한 그린리모델링 실시
- ◎ 정부 재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깡통주택 공공임대 전환

□ 이행방법

- ◎ 1가구 3주택 보유 금지, 녹색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 수도권에서부터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 금지 법제화. 세 번째 주택부터 국가수용 실시하여 10년 이내에 공공임대주택 물량 100만 호 이상 확보
 - 공공주택에 단열공사, 재생에너지 냉난방 시스템 시공 등을 포함한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공공임대주택으로 탈바꿈시키고, 대규모 건설 사업 없이 10년 내에 무주택 서민들에게 녹색공공임대주택 100만 호를 저렴하게 공급
- ◎ 종합부동산세, 개발이익환수제 강화로 녹색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보
 - 다주택자에 대해 기본공제 폐지 및 특례조항 축소하여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 평균 3% 수준으로 강화하고 1.2~6% 누진적 중과세 실시
 - 모든 부동산 개발 사업에 누진적 개발이익환수제 전면 실시하고, 개발이익 최대 80%까지 환수
 - 종합부동산세와 개발이익환수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10년 이내에 녹색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예산 300조원 확보
- ◎ 기후재난에 안전한 그린리모델링 실시
 - 공공부문부터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실시해 탄소배출 감축과 주거 안전 확보
 - 주거기본법상 최저주거기준을 1인 기준 10평, 1.5룸 기준으로 상향하고, 적정온습도 및 적정 크기 창문 규정 등을 추가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은 임대 금지
 - 건물주의 그린리모델링에 대해 임대료 5년 동결 조건부로 리모델링 비용 지원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과 옥탑방, 고시원, 반지하, 비닐하우스 등 비적정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시민들이 거주기간에 관계 없이 공공임대주택에 즉시 입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 저소득층 세입자 주거 임차료 지원, 임대료 인상 제한 강화
 - 월 주거 임차료가 월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저소득층 세입자에게 30만 원 한도 내에서 월 소득의 30% 초과분에 해당하는 임차료 지원
 - 임대료 5% 인상 제한을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여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임대차보호법 개정
- ◎ 정부 재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깡통주택 공공임대 전환
 -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정부 재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 구제 후 건물주에 대한 구상권 행사
 - 구상권 행사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해당 건물 몰수하여 단계적으로 그린리모델링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 이른바 깡통주택 전수 조사 후 적합한 건물에 대해 공공선매를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그린리모델링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 이행기간

- ◎ 22대 국회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 법·제도 개선 등으로 추가 세수 확보

정책순위

10

〈개헌, 사법, 언론, 남북, 외교〉 개헌을 통한 강한 시민공유민주주의 실현

정책분야 | 정치, 행정자치, 사법윤리, 통일, 외교, 과학기술정보통신

목 표

- 개헌을 통한 대의민주주의와 시민공유민주주의를 융합하여 강한 국민주권 시대 실현

이행방법

- 제7시민공화국을 여는 개헌,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융합
 -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를 융합하는 제7시민공화국 개헌
 - 국민이 개헌, 법률안 제정과 개정의 최고 입법권자가 되는 국민법안발의권 도입
 - 국가의 중요 정책 및 조약의 체결·비준, 대통령 및 국회의 의결, 부결, 재의 법률안에 대한 최종적으로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국민투표발의권 도입
 - 국민이 대통령, 국회의원에 대해 정치적으로 소환할 권리를 가지는 국민소환권 도입
 - 범국민참여예산협의회를 신설하여 예산에 국민이 개입할 수 있는 국민참여예산제 도입
- 제7시민공화국 정치개혁
 - 국회가 국무총리를 결정하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 대통령 비서실 축소, 내각 중심 정부 운영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
 - 2인 이상 시민이 모이면 누구나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정당 설립 자유화, 지역정당 허용
 - 100% 연동형비례대표제, 완전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
 - 교섭단체 5~10석 요건 완화로 국회운영 다원화, 민주화
- 법 앞의 평등, 사법정의 실현
 -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정년제 도입과 법원민주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다양성 보장
 - 국가수사체계 개편 완성
 - 민주적 군사법제도 실현과 군인권리 보호
 - 전관예우 근절과 법조비리 척결
 - 피의사실 공표 제한적 허용 등 인권존중 수사과정 정착
 - 재벌 총수 사면, 황제노역, 유전무죄 특혜 근절
- 국회의원 기득권 타파로 정치신뢰 회복부터
 - 국회의원 세비 및 고위공직자 급여 최저임금 3배 연동

- 개헌 및 국회법 개정을 통한 국회의원의 면책 및 불체포 특권 제한
-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현금, 1주택 제외 전 재산 백지신탁 의무화, 직계가족 재산변동 신고 의무화
- 선거법 등 국회의원 신상에 관한 결정은 모두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평의원 제도 결정
- 국회 윤리위 구성에서 국회의원을 배제하여 실질적인 국회의원들의 부패와 비리 엄단
- 국회의원이 회기 중 결근하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급여 삭감
- 국회의원 후원회 추가 모금은 총선에만 한정,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 추가 모금 금지

◎ 언론의 독립성, 미디어의 공공성 강화

- 방송보도 심의 전면 폐지, '언론 자율규제기구' 통한 자율규제 전환
- 공영방송 이사 국민이 추천, 공영방송 사장 및 보도·제작·편성 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 미디어 정책기구 재구성과 통합 미디어법 제정을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로 '미디어개혁 위원회' 설치
- 방송산업, 출판산업에 만연한 '무늬만 프리랜서' 관행 근절,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 지속 확대,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으로 미디어 노동자 노동권 강화
- 지역언론 지원을 위한 미디어바우처 도입, 언론진흥기금 등 활용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 재원 확대
- '마을공동체미디어 기본법' 제정, 기초자치단체마다 '마을공동체미디어지원센터' 설립으로 마을공동체미디어 진흥

◎ 녹색 평화를 위한 한반도-동아시아-세계의 다차원 협력, 남북평화공생

- 전쟁 방지-기후협력을 위한 '녹색 평화 6자회담' 추진
- 평화·공생·기후협력 '국제기후평화연대회의'와 '진보정당 인터내셔널' 추진
- 남북기본협정 체결로 평화 공존 제도화
- 군비증강 등 남북 군사적 대결 정책 중지-상호군축 선도
- 서해 평화수역 조성 및 재생에너지·생태 협력 추진

▣ 이행기간

- ◎ 22대 국회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 법 제도 개선 사항, 일반회계 등



새로운미래

No.	정 책
1	정치 · 사법 · 언론개혁
2	경제 금융
3	노동
4	과학 · 기술 · 미래 먹거리
5	생명과 안전
6	기후 위기
7	포용 복지 · 포용 · 돌봄
8	미래 · 저출생 · 청년
9	인구소멸 · 균형발전
10	외교 · 국방

1

정치 · 사법 · 언론개혁

정책분야 | 정치/사법윤리

□ 목 표

- 양당 독과점 체제 개혁
- 포용과 상생의 정치 실현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①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편,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편을 위한 개헌 추진
- ②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 헌법 제44조, 제45조(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개정
 - 국회의원의 구속 기소 시 세비 지급 중단
- ③ 경쟁적 정당 민주주의 구현
 - 「공직선거법」 제150조의 ‘기호순번제’ 규정을 ‘추첨제’ 방식으로 개정
 -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 비중을 장기적으로 2:1 비율까지 확대- 정당 국고보조금제 전면개편
 -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지급
- ④ 판·검사 국회의원 환승금지법 추진
 - 「공직자윤리법」, 「공직선거법」에 판사, 검사의 경우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선출직에 도전할 수 없도록 규제
 - 전관예우 및 법조비리 변호사를 형사 처벌하도록 「변호사법」개정
- ⑤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
 - 수신료 결정·운용에 시민참여제도 도입

□ 재원조달방안

- 법률 제도 개선

정책순위

2

경제 금융

정책분야 | 재정경제/산업자원

□ 목 표

- 경제 주체들의 권리 보호
- 건전한 경제 질서 확립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 금융정책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게 6개월 단위 정책숙려제도 도입
 - 상장사의 이사 선출 시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
 - M&A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100%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 ② IPO 제도의 투명성 강화
 - IPO때 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시 배상을 의무화
 - IPO를 형식심사 후 처벌이 아닌 사전실질심사로 전환
- ③ 상장사 주식 관련사채 공모발행 우선제도 도입
 - 상장사가 주식관련사채 발행 시 먼저 공모로 발행하도록 하고, 이를 실패한 경우에만 사모로 발행을 허용
- ④ 유니콘기업·아기유니콘 기업 발굴 및 지원
 - 아기유니콘 육성사업 강화
 - 신규산업간 상생 방안 모색을 포함한 '갈등조정 컨트롤타워' 구축
- ⑤ 기업 혁신을 위한 '특허박스제도' 도입
 - 특허박스제도의 적용대상 지식재산권을 특허권, 실용의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에 우선 적용 추후 확대

□ 재원조달방안

-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에 따른 불요불급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 목 표

- 모든 노동자들의 존엄한 가치 수호
- 안전하게 일할 권리·임금·처우 등을 보장하는 사회 구축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① 노동관계법 정비
 -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
 -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범위 확대
 -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재추진
- ② 임금 하락 없는 주35시간 노동
 - 법정노동시간 기존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
 - 법정 연차휴가 15일에서 25일로 연장
- ③ 중소기업사업장 노동자의 돌봄권 보장
 -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가 있음에도 3년 연속 사용자가 없을 경우 특별근로감독 감시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사용신청을 노동자가 사업장과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신청
- ④ 보편 육아휴직제 도입 및 대체인력지원
 - 예술인,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까지 포괄
 -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로 확대
 - 인재채움뱅크(대체인력지원센터) 전국 확대 운영

□ 재원조달방안

-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 재원 활용
-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에 따른 불요불급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정책순위

4

과학 · 기술 · 미래 먹거리

정책분야 | 과학기술정보통신/농림해양수산/환경

□ 목 표

- 튼튼한 연구 생태계 조성
- 과감한 연구지원 및 인재양성 지원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① 친환경선박 전환에 정부 지원 확대
 - 대규모 조선소 중심에서 중소 조선소 지원으로 지원 방향 전환
 - 조선업 재도약 생산인력양성사업 확대
 - 정규직 고용 확대, 하청노동자 기본급 인상과 불합리한 임금 고용구조 개선
- ② 분산에너지 활성화
 -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에 맞춰 17개 광역 지자체의 탄소중립실현과 에너지 전환 역량 강화
 - 통합발전소 사업 지원
- ③ 기후위기 시대 신산업 분야 R&D 지원
 - 2025년 R&D 예산 30조 원 수준으로 회복. 매년 10%씩 증액시켜서 8년 안에는 50조 원까지 증액
 - 공정한 경쟁과 중소기업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징벌배상·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 ④ 도전적 연구 가능 생태계 조성
 - R&D 실패율을 20% 이상으로 상향
 - 성실실패 R&D 적극적 자산화 및 후속지원

□ 재원조달방안

-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에 따른 불요불급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정책순위

5

생명과 안전

정책분야 | 보건복지/건설교통/안전

□ 목 표

- 국민의 생명 안전 최우선
-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현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①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 아동·청소년,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
 - 적정수가 및 지불보상체계 개편
 - 의료기관 전달체계 개선
- ② 소방의 완전한 국가직화
 - 인사·예산권을 소방처에 부여
 - 일사불란한 재난현장지휘체계 확립
- ③ 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다양화
 -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5.6%에서 20%(450만호)로 확충
 -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 지원 (지방채에 대해 정부가 지급 보증, 발행 금리를 국채 금리 수준으로 유도)
 - 사회주택 지원 강화
- ④ 국민 교통권 확대
 - 대중교통 월6만원 무제한 이용권 전국 확대
 - 노인무상교통 바우처
 - 버스 완전공영제 단계적 추진

□ 자원조달방안

-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활용
-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에 따른 불요불급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자원 마련

정책순위

6

기후 위기

정책분야 | 환경

□ 목 표

- 기후위기 시대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한 환경 구현
- 모든 생명체의 위기에 적극적 대응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① 탄소중립 주무부처의 현실화
 - 탄소중립 주무부처를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전환
 - 기획재정부를 '경제기후부'로 개편
- ②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 40%로 상향
- ③ 탄소세 도입, 기후배당 실시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에 탄소세 부과
 - 가계부담을 덜기 위해 기후배당 실시
- ④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기후위기 시대의 주거권 보장
 -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예산 및 민간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 복구
 - 전월세 거주자를 위한 리모델링 지원금 제도 도입
 -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하는 연간 20만 호 리모델링 계획 현실화

□ 재원조달방안

-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에 따른 불요불급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 목 표

- 존엄이 보장되는 인간적인 삶
- 보편적 복지체계 수립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① 돌봄청 신설
 - 돌봄청 설치
 - 생애주기 · 생활양식 · 연령별 돌봄체계 구축
- ② 복지 공공성 강화
 -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
 - 아동수당 확대
 - 국가책임장례제 도입
- ③ 어르신 건강 증진
 - 장기요양보험 개편
 - 치매가족 산정 특례 적용
 - 어르신 돌봄노동자 확대
 -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2개에서 4개
- ④ 장애인 복지 강화
 - 장애인 소득 보장 및 자립생활 강화
 - 연령별 · 유형별 복지 확대(발달 · 정신 · 느린학습자 · 고령장애 등)
 - 이동편의법 · 편의증진법 개선
- ⑤ 여성 권익 향상 및 안전 사회 구현
 - 여성가족부 유지 · 강화
 - 성차별 없는 노동 사회 구현
 - 여성 폭력 예방 및 안전사회 구현

□ 자원조달방안

-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에 따른 불요불급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정책순위

8

미래 · 저출생 · 청년

정책분야 | 기타(미래)/기타(청년)

□ 목 표

- 미래세대를 위한 더 나은 대한민국
- 저출생 및 초고령사회 대비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①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 보험요율 상향 12~15%, 수급율 40% 유지
 - 장기연체 및 납부예외자 두루누리 사업 적용
 - 출산·양육 크레딧 개선한 '부모연금' 도입,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 확대
- ② 생활동반자법 및 1인가구 지원제도 도입
 - 돌봄 중심 생활동반자법 제정
 - 1인가구 컨트롤 타워 설치
- ③ 청년 생활·주거 안전망 구축
 - 청년 생애첫든든통장(이자 5~6%, 2년 만기시 저축장려금 4%)
 - 청년 기회금융통장(300만원 상당 소액대출·저축이 가능한 통장으로 금융안전망 구축)
 - 생애첫주택 대출 지원(디딤돌·버팀목대출 소득기준 확대)
- ④ 청년 노동·건강 안전망 구축
 - 일하는 청년 목돈마련 지원
 - 일하는 청년 출퇴근 교통비 지원
 - 저소득 남성·청소년·청년 HPV 무료 백신
- ⑤ 위기 청년 안전망 구축
 -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확대(하한 1,000만원->1,200만원)
 - 장기요양·장애인활동지원 내 가족돌봄청년 가산 도입
 - 이주배경 청년 지원 체계 구축

□ 재원조달방안

- 국민연금 연기금 조정 및 국고 지원
- 불요불급 사업의 지속적인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 목 표

- 교육 · 문화 · 복지 · 경제, 전국민 기본권 보장
- 전 국가의 균형발전 목표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①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 개헌을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명시
 - 대통령실, 국회 세종시 이전 조기 완성
- ② 선진교육체계 도입
 - EBS기반 전국민 온라인 무상교육
 - IB 커리큘럼 공교육 도입 확대
 - 초·중·고 금융교육 의무화
 - 지방대학교 계약학과(채용조건형) 설치 및 운영 확대
- ③ 농업 · 농업인을 위한 지원
 - 농어민수당 월30만원
 - 직불제 전면개편
 - 농업 유통구조 개혁
 - 먹거리기본법 제정
 - 권역별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 재원조달방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 및 일반회계 재원 활용
- 불요불급 사업의 지속적인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정책순위

10

외교 · 국방

정책분야 | 통일외교통상/국방

□ 목 표

-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실리 중심 외교 추진
- 선진국형 이주민 권리 보호 및 군 처우개선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① 새로운 공존공생의 외교전략 추진
 - 한미: 글로벌 동맹 기반 주변국 협력 모색
 - 한중: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프로세스와 경제번영 프로세스 병행
 - 한일: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부터 시작
 - 한국형 M5(Middle Power 5) 외교 추진
- ② 이주민 권리 보호
 - 행정안전부 산하 이민청 설립 추진
 - 이주 아동 양육수당 지원
- ③ 한·중·일 녹색기후회담 추진
 - 한·중·일 정상회의 주제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일 은하수 복원 프로젝트’ 추진
 -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일 공동연구소 설립
 -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깨끗한 바다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 ④ ‘한국형 모병제’ (징·모 혼합제) 도입
 - ‘장기 복무 전문 병사’ 모병제와 현행 징집형 일반병제 병행
- ⑤ 군인 및 군인 가족 처우 개선
 - 군 숙소 대단지화
 - 군인 자녀 기숙 중·고등학교 추가 설립

□ 재원조달방안

-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에 따른 불요불급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개혁신당

No.	정 책
1	과학기술 패권국가를 향한 도전
2	국민들의 삶을 뒷받침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사법개혁
3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경제 체력 강화
4	넓은 규제 및 복지 개혁으로 국민들의 든든한 미래 버팀목
5	동맹 강화와 병역제도 개혁으로 미래 안보 환경 대비
6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개혁
7	규제개혁을 통한 공정한 언론환경 조성
8	지방소멸 시대, 규제개혁으로 국가 균형 발전 도모
9	국민 교통편의 도모 및 재난 안전 대비 강화
10	탄소제로 및 미래 자원 소요에 대비하는 에너지정책

정책순위

1

과학기술 패권국가를 향한 도전

정책분야 | 과학기술 · 정보통신

□ 목 표

- 첨단산업벨트 ‘K-네움시티’건설 일자리 창출
- ‘뉴 히어로 프로젝트’를 통한 전주기 첨단산업 인재 양성
-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 R&D 사업 계속비 제도 의무화를 통한 안정적인 R&D 사업 유지 지원
- 국민 인권을 심대하게 침해 중인 시대착오적 HTTPS 차단 정책 등 위헌성 인터넷 검열 정보 통제 정책 폐지를 통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 이행방법

- 첨단산업벨트 ‘K-네움시티’건설 일자리 창출
 - * 첨단 특화단지(7개) : 용인평택 · 천안아산 · 청주 · 새만금 · 구미 · 포항 · 울산
 - * 소부장 특화단지(10개) : 용인평택 · 천안아산 · 청주 · 오송 · 전주 · 광주 · 안성 · 대구 · 창원 · 부산
 - 1) K-첨단벨트 광역 거점 도시에 6대 정주여건(일자리 · 교통 · 의료 · 문화 · 교통 · 교육) 갖춰진 미래형 정주 도시 ‘K-네움시티’ 건설
 - 2)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은 국가가, 기업은 사용료만’
 - 내년부터 매년 1조 원 이상 인프라 국비 편성
 - 총 인프라 12조9106억원, 2024년 1조3762억원 필요(현재 392억(2.8%) 편성)
- ‘뉴 히어로 프로젝트’를 통한 전주기 첨단산업 인재 양성
 - 1) 각‘K-네움시티’주력 첨단산업군 인력 양성 교육기관 설립
 - 계약형 거점 마이스터 교육기관 설립
 - 거점 국립대학 해당 첨단산업 학과 국내 1위 수준으로 전폭 지원
 - 퇴직 인력 활용해 거점별 첨단산업 아카데미 · 창업센터 설립
 - 2) 기초 교육의 과학기술 비중 확대
 - 초 · 중 · 고 교육 과목에서 과학 교과목 비중 확대

- 심화 수학, 인공지능, 물리2 등의 이공계 입시 반영
- 기초연구 R&D 예산 비중 50% 확대

◎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1)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 과학기술 정책 결정 프로세스에서 전문가 상시적 참여 제도화
- 과학기술인에 대한 명예 고취 및 인식 전환 캠페인 추진

2) R&D 예산 삭감 원상복구 + R&D 예산 GDP 대비 6%로 확대(선진국의 2배)

- 25개 출연연 연구자 처우 개선 + 연구 성과별 포상금 제도 도입
- 대학 기초과학 연구개발비 OECD 평균 수준 확대

3) 연구과제 중심 제도를 임무 추동형으로 전환

- 대규모 임무 중심 R&D 예산 배정(예 : 차세대 SMR, 초전도체 등)
- 연구 자율성 최우선 보장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 대학과 출연연 R&D 사업부터 계속비 제도 적용 의무화

- R&D 투자 및 연구 환경 안정화를 통해 인재 유출 최소화

◎ HTTPS 차단 정책 등 위헌성 인터넷 검열 정보통제 정책 폐지 위한 법안 발의 추진

- 현행 HTTP 차단의 근거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호와 제4호, 동법 시행령 제8조 개정

▣ 재원조달방안 등

◎ 법안 발의를 통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 국가재정운용계획(23~27년) 상의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

2

국민들의 삶을 뒷받침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사법개혁

정책분야 | 사법윤리

□ 목 표

- 대통령의 부인 및 가족으로 인한 국론분열과 갈등 최소화
-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입법부 본연의 역할 회복
- 헌법 개정을 통한 선진국형 정치 시스템 도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의무 법제화
- 검찰 수사지휘권 복구, 특수부 축소
- 특수부(반부패수사부)의 숫자와 직무 범위를 법으로 통제
- 민법 개정을 통한 파탄주의 규정 및 징벌적 위자료 제도 도입

□ 이행방법

- 헌법 개정을 통한 대통령의 권한 축소 및 국회의 견제 기능 강화
 -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법부 고위 인사의 범위에 헌법재판관을 포함
 - 대법원장 등 사법부 고위 인사에 대한 국회 동의 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개정
 - 형해화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실질화
 -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관련 대상과 기간에 일정한 제한을 둘 수 있도록 추진
 -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의 결선 투표제 도입
 -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책임성과 연속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4년 중임제로 개헌
-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설
 - 영부인의 법적 지위 규정, 공직자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 지원 근거 마련
 - 대통령의 직계존비속 및 광역단체장 배우자에 관해서도 추가 반영 추진
 - 관련법 개정으로 영부인의 활동자료 국가기록물로 보존

- 입법개혁을 통한 입법부 본연의 기능 회복
 - 국회의원 임기 동안 총 50건의 입법총량제 도입으로 입법권 남발 방지
 - 위헌법률 발의자에게 법사위 및 법안소위 보임 금지 페널티 부여
 - 비용추계 보고 의무화 등 국회의 입법 심사 절차 강화
 - 특별법 발의 및 심사 요건을 강화하여 포퓰리즘 입법 제한
- 고위공직자 및 사정기관 직위자의 사퇴 시기 조정
 -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자 기준, 현행 90일 전에서 1년 전 사퇴로 조정
 - 현직 근무 중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을 실시하는 모순을 제거
 -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직위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 예방
 - 입법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대상 기관과 직위 범위 확정
-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비례대표 후보자 필수 등록제 도입
 - 지역구에 후보자를 내는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를 필수적으로 등록하게 하여 거대양당의 꼼수 비례 위성정당 난립 제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 설치 후 3년간 예산과 인력, 정치적 에너지 낭비하고도 실적 없음
 - 수사 대상 8, 000여 명 중 2/3가량이 판사와 검사
 - 실패에 대해 무책임. 세금 낭비 공수처 폐지 필요
-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의무 법제화
 - 법무부는 행정수반이 임명하는 정무직이라도, 정치적 중립 필요
 - 최근 대통령의 측근 등 정치적인 인물들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수준의 품격을 갖춘 사람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토록 '정부조직법' 개정
- 검찰 수사지휘권 복구, 특수부 축소
 -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 경찰의 수사 지연 및 수사 기피 문제 발생
 - 축적된 사법 지식을 통해 고도화된 범죄 수사 및 단죄
- 특수부(반부패수사부)의 숫자와 직무 범위를 법으로 통제
 - 특수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전 정부 적폐청산에 이용
 -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호위대처럼 이용
 - 검찰개혁을 통한 중립성 확보 시까지 특수부 축소 및 통제 필요
- 「책임있게 헤어질 자유법(가칭)」도입
 - 민법 개정을 통해 파탄주의 규정 도입으로 새로운 삶의 출발 기회 부여
 - 징벌적 위자료 제도 도입을 통해 파탄의 책임이 없는 배우자의 안전한 삶 보장

■ **재원조달방안 등**

- 법안 발의를 통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 세출 구조조정, 고용보험 기금 확충
- 국가재정운용계획(23~27년) 상의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
- 대통령실 영부인 관련 예산집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재원의 투명성 확보

정책순위

3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경제 체력 강화

정책분야 | 재정경제

□ 목 표

- ◎ 자본시장 선진화로 코스피 5,000 & 코스닥 2,000 시대 기반 마련
- ◎ 소액주주들의 정당한 자기 권리 보장 방안 마련
- ◎ 주주 보호와 기업의 적정가치 인정으로 증시 부양
- ◎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일자리 진입 토대 마련
- ◎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국가 경제시스템 안정적 운영
- ◎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국가 경제 기초체력 유지

□ 이행방법

- ◎ 이사의 모든 주주를 위한 충실의무 규정
 - 「상법」개정으로 이사의 법적 책임에 소액주주 손해 반영
- ◎ 경영권 인수 시 주식 100%의 공개매수 의무화
 - 회사 인수 시 적용되는 ‘경영권 프리미엄’ 배제로 주주평등 구현
- ◎ 물적 분할 통한 쪼개기 상장 금지
 - 예외로 매출의 10% 이상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는 경우 지배주주 지분의 투표권 불인정, 물적 분할 후 10년 이내 상장 금지
- ◎ 자사주 소각 의무화
 - 현재 25% 수준에 머물고 있는 주주환원을 상향
- ◎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제·전자위임장 도입을 의무화
 - 「상법」개정을 통해 주주의 권리행사 보장
- ◎ 집단소송제도 개혁
 - 잘못된 경영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 요구절차 간소화 및 일반적, 전면적 집단소송제 도입

- 증거개시제도(DISCOVERY) 도입
 - 회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시 소액주주 등이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출 의무화
- 거버넌스(GOVERNANCE) 개선 기구의 국회 설치
 - '증권선물투자자보호센터'(가칭) 설치로 소액주주 피해에 대한 법률상 자문 및 중재, 집단 소송의 법률대리 기능 수행
- 기업 중심의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 지원
 - 로봇 및 인공지능 분야 확대에 따른 관련 일자리 육성
 - 스타트업 등 초기 기업 세제 및 자금지원, 연구개발 기술지원
 - 글로벌 기업의 국내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 참여 유도
 -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경제체제 기반 강화
 - 국민개세주의 적용으로 모든 국민이 적은 액수라도 소득세 부담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포퓰리즘 정책 남발 보완
 - 예타면제 금지를 위한 입법 논의 착수
 - 예타 종합평가(AHP)의 가점 요소로 지역균형발전 등 보강

▣ 재원조달방안 등

- 법안 발의를 통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 세출 구조조정 및 국가재정운용계획(23~27년) 상의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

정책순위

4

넓은 규제 및 복지 개혁으로 국민들의 든든한 미래 버팀목

정책분야 | 보건복지 · 청년 · 여성

□ 목 표

- 대도시에 수혜자가 한정된 교통복지 정책을 전 국민으로 확대
- 폐교에 공공요양원 설립을 통한 초고령사회 대비
- 빈집활용 플랫폼 구축으로 임대-주거 희망자 간 미스매치 해소
- 한부모가정 재정적 지원 확대로 자립기반 마련
- 국민들이 기금고갈 걱정 없도록 국민연금 기금운용 시스템 개선
- 진로 및 사회진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청년의 미래설계 지원
- 최저임금제도 개편 등 고용 문턱을 낮춰 청년 일자리 확대
- 청년의 도전을 장려하고 성공을 지원하는 청년 벤처생태계 강화
- 국가표준 경력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공신력있는 경력관리 시스템 구축
-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 도입으로 저출산 문제 개선 대책 마련
- 우리 아이 공모주 우선 배정 펀드 도입으로 심화되는 저출산 및 자산 양극화 대책 마련

□ 이행방법

- 만 65세 이상 전 국민에게 연간 12만원 교통바우처 지급
 - 무임승차로 인한 지하철 적자 부담 완화 및 교통복지 형평성 확보
 - 바우처 지원액 소진 시 청소년 요금제 적용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 무임승차비용 국가 부담 근거 마련
- 폐교 공간을 이용한 공공요양원 설립으로 초고령사회 대비
 - 폐교 인근 고령층 지역주민 대상 입주 수요조사를 통한 시범사업 지역 선정
 - 수도권에 거주하는 고령자 중 지방에 있는 공공요양원 입소 시 추가 혜택 부여로 지역으로 인구 분산 유도

- '빈집뱅크'운영으로 빈집 소유주와 입주희망자 연결
 - 2년 이상 빈집의 경우 리모델링 비용 자금 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
 - 빈집뱅크 입주 청년층, 고령층, 3인 이상 다자녀의 경우 임대료 지원
 - 임차인 희망에 따라 공동거주 형식 임대 허용
- 한부모가정 '양육비 국가보증제 도입'
 - 정부가 한부모가정에 양육비를 최대 100만원 선지급
 - 비양육자의 각종 수입원 등을 파악해 자동으로 원천징수 되도록 양육비 지급 시스템 선진화
- 국민연금 재원 고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한국연금투자위원회'(가칭)를 설립 추진
 - 기금운용본부를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 형태로 독립화
 - 독립된 자산운용 주체로 국민연금공단과 연간 운영수익률 목표 계약을 맺고, 자율적으로 기금을 집행해서 수익을 내는 전문기관 기능을 수행
 - 기금운용 전문인력 확충에 전권을 부여해 국내외 인재 영입
- 입시 및 취업에 있어서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 확대
 - 국공립대 정시 100% 반영으로 투명한 평가제도 운영
 - 공기업 또는 정부 관계기관 채용 시 전형 간소화 및 공정경쟁 확보
- 최저임금제도 전면 개편 등 유연근로 확대로 청년 일자리 확대
 - 최저임금제도 지역별·산업별 차등 적용
 - 탄력근로제, 선택 근로제 및 주 52시간 예외 사례 현실적 반영
- 청년 벤처 생태계 강화로 도전하는 청년의 경제기여 지원
 - 전 부처에 분산된 스타트업 지원사업 통합 및 접근성 개선
 - 청년 스타트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소통창구 설치 및 전문가 집단 구성
- 고용노동부 산하에 '국가표준경력관리원'을 설립 후 '국가표준 경력관리 시스템 도입'
 - 모든 개인사업자나 법인으로 하여금 고용이나 해고하는 인력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
 -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당사자 동의 시 과거 경력을 열람 가능하도록 제도 도입
-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 도입
 - 일하는 모든 출산 여성에게 3개월간 통상 월 수입금의 100%, 최대 210만 원, 즉 최대 630만 원 지급 (유산, 사산 포함)
 - 현행 고용보험 가입 기간 제한을 삭제하여 여성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고 노동자, 파트타임 등 근로계약 형태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확대 보장

- ◎ 0세부터 20세까지 가입자에게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는 ‘우리 아이 공모주 우선 배정 펀드’ 설립
 -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이하(4인가족 기준, 월 5,729,913)
 - 액수는 월 최대 20만원, 연 240만원.
 - 월20만원 x 12개월 x 230,000(신생아 수, 2023기준) / 2 (기준 중위소득 이하) = 연 2,760억 가량 펀드 조성

▣ 재원조달방안 등

- ◎ 법안 발의를 통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 ◎ 세출 구조조정, 고용보험 기금 확충
- ◎ 국가재정운용계획(23~27년) 상의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

정책순위

5

동맹 강화와 병역제도 개혁으로 미래 안보 환경 대비

정책분야 | 통일외교통상 · 국방

□ 목 표

- ◎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동북아 안정 유지
- ◎ 군 기지 메가캠프화를 통한 기동성 강화 및 북한의 위협에 대응
- ◎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
- ◎ 한민고등학교 추가설치 및 군인 자녀 대상 기숙형 중학교 설립
- ◎ 군 계급 정년제도 폐지로 안정적인 장기 복무가 가능하도록 개선

□ 이행방법

- ◎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 안보를 비롯한 경제, 문화, 기술 분야로 포괄적 동맹으로 확장
 - 한미 연합훈련의 실질적 이행 및 연합 기동훈련 확대
- ◎ 군 기지 메가캠프화
 - 북위 36도 선상 동해안 인근 1곳을 지정해 '캠프 험프리스'와 유사한 한국군 전용 메가 캠프 시범 운용
 - 향후 전국 5곳을 메가 캠프로 구성하고 기동성 확보 및 북한의 위협에 대응
- ◎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 신규 공무원(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 임용 시 병역필 의무화
 - 남/여 구분 없이 군 복무 이력은 공무원 임용 시 호봉에 반영
 - 여성 희망 복무제를 통해 일반병으로 복무 후 해당 직렬 공무원 지원
- ◎ 한민고등학교 추가 설치 및 군인 자녀 대상 기숙형 중학교 설립
 - 파주 이외 춘천, 용인, 창원에 추가 군 자녀 대상 기숙형 중/고교 설립
- ◎ 군 계급 정년제도 폐지
 - 현재 운영 중인 계급 정년제도 폐지를 통해 군의 안정적인 장기 복무를 보장하여 군 복 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재원조달방안 등**

- 세출구조조정, 남북협력기금 활용
- 국가재정운용계획(23~27년) 상의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

6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개혁

정책분야 | 교육

□ 목 표

- 과학기술패권국가를 위한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구축
- 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교사가 만족하는 교육시스템 구축
- 학부모의 교육 부담은 낮추고 학생의 교육환경은 개선
- 지방 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 이행방법

- 초/중학생 대상 수학과목 수업 강화 및 수포자 방지법 추진
 - 초/중 대상 수학 성취도 평가 의무화 및 수학과목 개별화 수업 실시
 - 수학포기자(수포자)방지법 추진
 - 초/중/고 수학 시수 확충 및 심화 수학 과정(기하학, 미적분 등) 강화
- 부모의 교육부담 완화 및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
 - 수행평가제도 폐지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 부담 완화
 - 폐교 위기 학교 적극 통합, 교육환경의 질 제고 및 스쿨버스 적극 활용
- 대학의 자율성은 확대하고 학생에게는 공정한 경쟁 보장
 - 사립대는 입시전형 자율성 보장
 - 사립대는 대학별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입시제도 운영 보장
-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문제 해소
 - 국립대학 간 학점교환제 도입, 4년 중 1년은 타지역 국립대에서 공부
 - 9개 지방거점국립대학 100% 정시선발
 - 지방 기숙형 특수목적 공립중·고등학교, '책임교육학교' 확대
 - 지방거점국립대 '예산 폭탄' 투입, 지역인재를 육성 및 수도권 유출 방지

□ 자원조달방안 등

- 국립대학육성 사업 확대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신규 편성
- 국가재정운용계획(23~27년) 상의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

정책순위

7

규제개혁을 통한 공정한 언론환경 조성

정책분야 | 정치·문화·기타

□ 목 표

- 공영방송에 대한 정권 차원의 낙하산 인사 방지
- 방송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로 시청자의 만족도 제고
- 언론의 중립성 확보로 방송산업 현장의 정치적 갈등 타파

□ 이행방법

-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전 임명동의제 시행
 - 공영방송 사장 요건으로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 의무 반영
 - 직무경험이 전무한 낙하산 사장 임명 원천 봉쇄
- KBS수신료 폐지 후 대체 재원 확보
 - 수신료 총액에 상응하는 적극적 조세지원과 재송신료 조정
- 방송사업자에 부과된 불합리한 규제 해소
 - OTT와 방송사에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광고, 편성, 심의 불일치 해소
 - 각종 심의를 통해 방송사 광고에만 적용되는 규제 철폐
-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험에 노출된 방송심의위원회 폐지, 자율규제 강화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송신료 조정으로 수신료 대체 재원 확보
- 법안 발의를 통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 세출구조조정, 국비와 지방비 및 기금 매칭
- 국가재정운용계획(23~27년) 상의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

8

지방소멸 시대, 규제개혁으로 국가 균형 발전 도모

정책분야 | 행정자치·기타

□ 목 표

- ◎ 지방주택 보유 관련 규제 완화로 지방 부동산시장 숨통 확보
- ◎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통한 의료 서비스 질 향상
- ◎ ‘온동네 스타트업’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 스타트업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유도

□ 이행방법

- ◎ 수도권 시민의 지방주택 보유를 촉진하는 정책 보완 대책 마련
 -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액을 현 3억원에서 수도권과 같은 6억원으로 상향
 - 복수주소제 도입 검토
- ◎ 의료 소외 지역에 대한 의료복지 기반 마련
 - 2·3차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 확대
 - 의료진의 분원 근무 시 인센티브 제공 의무화
 - 분원에 대한 의료서비스 품질평가 제도 도입
- ◎ ‘온동네 스타트업’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스타트업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유도
 - 최장 10년까지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 지역별 구도심 빈집, 지식산업센터 장기 공실 등을 이용

□ 재원조달방안 등

- ◎ 건강보험기금 여유 재원 활용
- ◎ 세출구조조정, 국비와 지방비 및 기금 매칭
- ◎ 국가재정운용계획(23~27년) 상의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

정책순위

9

국민 교통편의 도모 및 재난 안전 대비 강화

정책분야 | 건설교통 · 안전

□ 목 표

- ◎ KTX와 SRT보다 40% 싼 LCC고속철을 도입
- ◎ 코레일과 SR로 분리된 고속철도운영사를 코레일, 한국철도공사로 통합
- ◎ 제3의 우수 민간사업자가 LCC고속철을 운영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
- ◎ 112·119 긴급 신고 번호 통합으로 각종 재난 신속 대처
-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재난관리청 신설

□ 이행방법

- ◎ KTX와 SRT보다 40% 싼 LCC고속철 도입
 - '서울-부산' KTX 가격 59,800원을 LCC고속철로 3만 원대로 가격 인하
 - '서울-대구', '용산-광주송정' KTX 가격 4만 원대도 2만 원대로 가격 인하
- ◎ KTX-SRT 통합
 - KTX 운영사인 코레일과 SRT 운영사인 SR(에스알)을 '코레일', '한국철도공사'로 통합
- ◎ 제3의 민간사업자 면허 발급 정책 추진
 - 김포-제주 노선 저가항공사 및 이동통신서비스 시장 알뜰폰 공급 정책 벤치마킹
 - 제3의 우수 민간사업자 경쟁을 통한 40% 저렴한 고속철 가격 서비스 도입
- ◎ 112·119 긴급신고 번호 통합을 위한 신고 전화 회선과 인력 규모 등 기본 인프라 대대적 확대
- ◎ 주요 선진국처럼 재난 전문 관제요원 육성 및 채용
 - 전문 관제요원 교육프로그램 개설 추진
 - 전문 관제요원에게 직접 해당 지역 경찰과 소방에 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권한 부여
- ◎ 상설 조직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재난안전상황실」, 비상설 조직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통합
 - 재해·재난의 예방부터 발생 시 대응까지 전담하는 기관으로 육성 및 지원

■ **재원조달방안 등**

- 세출구조조정, 국비와 지방비 및 기금 매칭
- 국가재정운용계획(23~27년) 상의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

정책순위

10

탄소제로 및 미래 자원 소요에 대비하는 에너지정책

정책분야 | 환경

□ 목 표

- CF100(무탄소에너지) 구현을 위한 국가 차원 기반 마련
- 민간 주도의 RE100(재생에너지 100%) 확산 및 투자 유도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립을 통한 친환경 원전 생태계 구축
- 디지털 전환 등 미래 전력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
- 대규모 해수담수화 플랜트 건설로 미래 물 부족 대책 마련

□ 이행방법

- 기후위기 대응
 - CF100 / RE100 기반 구축 및 민간 주도 확산 지원
 - 기후위기 대응 국제협력 확대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한중 협력 강화
 - 미래차(수소, 전기)와 2차전지 분야 산업육성 지원
- 성장잠재력을 고려한 전력소요 산출 및 에너지 기반 확보
 - 국가에너지정책 재정립 및 현실성 있는 에너지 수급 계획 반영
 - 디지털 전환, 전기차 보급 등 전력소요 확대에 선제적 대응
 - 블랙아웃 제로 기반 마련 및 노후 전력 설비 교체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립
 - EU텍소노미 원자력발전소 친환경 분류 기본조건 확립
 - 친환경 원전 수출 도모
- 대규모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건설
 - 현재 물 부족 사태가 심각한 서남부권을 중심으로 호남권과 영남권 모두에 공급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여 플랜트 건설 추진

□ 자원조달방안 등

- 세출구조조정, 국비와 지방비 및 기금 매칭
- 국가재정운용계획(23~27년) 상의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



자유통일당

No.	정 책
1	전국민 선진국 여행 견학
2	아파트 원가 공급 정책
3	전군 대학화
4	동성애 법제화 반대 및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
5	낙태법 개정 및 생명보호법 제정
6	종교사학의 자율성 보장
7	탈북민 인권보호 및 통일인재 육성
8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헌법수호청 설립
9	젠더평등이 아닌 양성평등 실현
10	월남 파병 유공자 보상특별법 제정

정책순위

1

전국민 선진국 여행 견학

정책분야 | 문화관광

□ 목표

- ◎ 선진국 견학을 통하여 G2국가의 글로벌 인재로서 활동할 통찰력 배양

□ 이행방법

- ◎ 담당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 20-30대들이 여행하여야 할 국가를 국내 30대 여행사에 신청하면 2주일 내에 여행경비 1인당 오백 만원을 여행사로 지급
- ◎ 국내 30대 여행사 여행 가이드를 교육하여, 선진대국 여행을 통하여 공부함으로 대한민국이 G2국가로 갈 수 있는 교육 여행을 실행
- ◎ 전국민 여행 후 감상문 제출
- ◎ G2국가로 가기 위한 앙케이트 설문조사

□ 이행기간

- ◎ 22대 국회 임기 중

□ 재원조달방안

- ◎ 500만원 x 100만명 = 5조원
-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연간 예산 5조를 집행

정책순위

2

아파트 원가 공급 정책

정책분야 | 보건복지

□ 목표

- ◎ 집값과 서민 경제 안정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결혼을 유도하여 저출산 문제까지 해결

□ 이행방법

- ◎ 중산·서민·청년층에 25평 아파트 평당 700 만원 이하 원가로 국가가 건설·판매
- ◎ 건설사가 25 평 아파트를 지을 때 원가는 평당 500 만원 수준
- ◎ 정부가 아파트를 지어 공급한다면 25 평 아파트를 2 억원도 안되는 가격에 공급 가능
- ◎ 정부대출제도와 함께 이용한다면 자기 돈 5, 000 만원도 들이지 않고 자기 명의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음. 대출원금 및 이자를 합해 한달 30 만원 정도면 충분
- ◎ 실제 거제도에서 반값아파트 공급을 한 예가 있음
- ◎ 거제시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 2013 년부터 거제시 양정동·문동동 일대 2 만 4193 ㎡에서 당시 분양가의 절반수준인 평(3.3 ㎡)당 300 만원대 아파트를 지어 서민들에게 분양하는 이른바 ‘반값아파트 사업’을 추진
- ◎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농림지역을 용도변경해주면, 민간사업자는 이 땅을 매입해서 택지로 개발한 뒤 반값아파트 건립 예정터를 거제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땅에 일반아파트를 지어 이익을 챙기는 방식
- ◎ 거제시와 민간사업자인 평산산업(주)은 전체 사업비(3730 억원)의 10% 이상 개발이익금은 시에 기부하기로 약정
- ◎ 세부사항
 - 자녀 수에 따른 우선 배정
 - 1인 가구 전용 주택 국가 판매
 - LH 해체하고 국가주택청을 신설하여 주택 공급 및 시행 대행
- ◎ 보금자리주택, 신혼희망타운 등 그동안 비슷한 정책들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예시들이 있음.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업체에게 위탁하여서 중간 비리가 발생하였고, 가격만 낮췄지 기존

과 같은 분양방식을 채택하였기 때문. 특정계층에게만 혜택이 집중되었고,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처음 저렴한 가격에 공급된 아파트가 결국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한 것. 하지만 LH 를 해체하고 국가주택청을 신설하여 국가주도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과거 사례들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

▣ 이행기간

- ◎ 22대 국회 임기 중

▣ 자원조달방안

- ◎ 국가주택청 신설 후 자원조달

정책순위

3

전군 대학화

정책분야 | 국방

□ 목표

- 군부대 자살률을 줄이고, 전역자들이 사회에 나와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

□ 이행방법

- 담당 부처: 국방부, 교육부
- 각 군부대별로 강의실을 지어서 병력 기간 중 4 년제 학점을 취득 후 제대한다.
- 각 부대는 오전 6 시에 기상, 조식 후 8 시부터 12 시까지 군사훈련을 시행하고 12 시부터 점심 식사 후 오후 1 시부터 저녁 9 시까지 학과별 강의를 수강한다.
- 현 군 내무반과 생활관의 형편을 볼 때 각 대학에서 교수 및 강사만 파송하면 4 년 (8 학기) 학점을 취득하여 제대할 수 있음.
- 병력 생활 기간을 원하는 대로 1 년에서 4 년을 선택할 수 있음.
- 부대별 전공과목을 선택하여 실시함
- 입대자들 중에 현 제도 18 개월을 선택하는 자들은 전방부대에 투입하여 선택 할 수 있도록 함
- 부대 선택은 컴퓨터가 추첨을 실행함으로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음
- 여자와 장애인도 얼마든지 전군 대학화에 지망할 수 있음
- 특수부대는 징집제가 아닌 유급 지망제로 전환함
- 이스라엘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이행기간

- 22대 국회 임기 중

□ 재원조달방안

- 교육부 대학에 관한 예산을 전군 대학화로 지원
- 병사들에게 지급하는 월급을 일부 교육비로 대체

4

동성애 법제화 반대 및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

정책분야 | 정치

□ 목표

- 동성애를 옹호하는 각종 법률, 조례, 정책 폐지를 통한 동성애 법제화 저지
- 이단을 옹호하고 양심·표현·학문·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반헌법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로 신앙의 자유 수호

□ 이행방법

- 동성애 법제화 반대
 - 동성애(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 폐지
 -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하는 각종 인권조례 및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저지하고
- 이미 제정된 조례들을 폐지하는 법률 제정
 - 성(Gender)주류화, 성인지예산(31조, 2020년) 포함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상의 성평등(Gender Equality) 정책 폐기
 - 각종 법률 및 조례상에 기재된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회복
- 군복무 중인 자녀를 동성애(항문성교)로부터 보호하는 균형법 제92조의6(추행) 유지
- 「차별금지법」의 위헌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입법기관을 포함한 전문가 포럼 등을 개최하여 「차별금지법」 시행 중인 국가들이 겪는 양심·표현·학문·종교의 자유 침해 실제사례 교육 및 홍보
 - Trayhorn v. The Secretary of State for Justice 사건
(2014년 5월 영국 교도소에서 동성애가 죄라는 성경구절 인용한 목사님에게 동성애 혐오발언이라는 사유로 징계위원회가 경고 조치한 사건)
 - 캐나다의 Saskatchewan Human Rights Commission v Whatcott 사건
(2002년 캐나다의 공립학교 앞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구절(고전6:9)이 적힌 유인물을 배포한 남성이 인권위원회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캐나다 대법원이 동성애 반대하는 성경을 표현한 것은 증오범죄라고 판결한 사건)
 -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v. Cathy's Creations, Inc. 사건
(2017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한 동성커플이 결혼식을 앞두고 제과점에 웨딩

케이크를 주문하였으나, 제과점 주인이 신앙을 이유로 주문을 거부하자 동성커플이 차별금지법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소송을 진행한 사건

- ◎ 「차별금지법」 입법저지 활동
 - 「차별금지법」정부안, 국회의안이 발의되지 않도록 입법감시 활동
 - 발의시에는 모든 기독 국회의원 및 한국교회와 연합하여 입법저지

▣ 이행기간

- ◎ 22대 국회 임기 중

▣ 재원조달방안

- ◎ 재원 필요 없음

정책순위

5

낙태법 개정 및 생명보호법 제정

정책분야 | 보건복지

□ 목표

- ◎ 생명을 지키는 낙태법(형법)으로 개정하고, 임신부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특별법 제정하여 생명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확립

□ 이행방법

- ◎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개정
 -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이자, 가장 약한 존재인 태아를 살인으로부터 보호하여 생명을 살리는 개정안 마련
- ◎ 임신부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특별법(약칭:생명보험법) 제정
 - 임신부가 임신갈등상황, 태아생명보호, 비밀출산 지원을 상담할 상담기관 설치·운영 규정
 - 비밀출산 보호시설의 설치 및 지원 규정
 - 낙태가능 의료기관의 지정·관리 규정
 - 의사에게 낙태수술 거부권 인정 규정

□ 이행기간

- ◎ 22대 국회 임기 중

□ 재원조달방안

- ◎ 재원 필요 없음

정책순위

6

종교사학의 자율성 보장

정책분야 | 교육

□ 목표

- ◎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른 자율성 보장

□ 이행방법

- ◎ 「사립학교법」개정
 - 종립학교의 설립과 종교교육의 자유 보호규정 신설
 - 「국가공무원법」제59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제51조의2에도 불구하고 종립학교의 종교교육 가능한 예외규정 신설

□ 이행기간

- ◎ 22대 국회 임기 중

□ 재원조달방안 등

- ◎ 재원 필요 없음

정책순위

7

탈북민 인권보호 및 통일인재 육성

정책분야 | 통일외교통상

□ 목표

- ◎ 생명을 걸고 자유를 찾은 탈북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통일인재를 육성하여 통일의 일꾼 양성

□ 이행방법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 법률」 전면 개정
 - 자활능력이 결여된 사각지대 탈북민인 노인·장애인·한부모 가정에 대한 실효적 복지지원대책인 한성옥 모자법 신설
 - 탈북민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 신설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탈북자 위주로 조직 구성
- ◎ 통일인재 육성방안
 -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통일법제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통일법 전문가 양성
 - 탈북민 기업인을 통하여 통일에 대비한 기업 및 시장경제를 이해한 통일경제 지도자들을 양성
 - 통일된 북한의 행정구역 200개 시군에 자유주의를 전파할 탈북인사들 양성
- ◎ 남북하나재단의 개편
 - 남북하나재단을 정치적 영향력이 덜 미치는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탈북민 정착 및 자활지원 재단으로 명칭을 개칭
 - 탈북민 정착 및 자활지원재단의 이사장, 사무총장을 비롯한 운영진은 물론이고 인력구성을 80%이상 탈북민 인사들로 구성하도록 추진함.
- ◎ 북한 인권법을 부활시키고 북한 인권재단을 설립해 북한 자유화 및 민주화를 촉진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민간활동을 적극 지원

□ 이행기간

- ◎ 22대 국회 임기 중

□ 재원조달방안

-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재정 지원으로 조달 가능

정책순위

8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헌법수호청 설립

정책분야 | 안전

□ 목표

- ◎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한 국가기관으로 '헌법수호청' 설립
- ◎ 헌법수호청을 통한 헌법질서 교란세력에 대한 감시 및 정보수집과 분석

□ 이행방법

- ◎ (가칭) 「헌법수호청법」 제정
 - 헌법수호청 조직 및 직무범위 규정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내용제시
 - 대내정보활동은 '헌법수호청' 담당
- ◎ 헌법수호청의 대표적인 임무
 - 정보수집 및 분석과 평가
 - 국가방첩 및 극단주의 세력에 의한 국가안보 위해 방지
 - 보안감사를 통한 인적·물적 기밀보호 및 사회기간시설 보호(사보타주 방지)

□ 이행기간

- ◎ 22대 국회 임기 중

□ 재원조달방안 등

- ◎ 국가인권위원회 폐지 후 예산 재원조달
- ◎ 국가정보원과의 직무조정으로 국가정보원예산 재배정

9

젠더평등이 아닌 양성평등 실현

정책분야 | 교육

□ 목표

- ◎ 성해방 사상을 가르치는 젠더평등 또는 성평등교육이 아닌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남녀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여 가정, 출산, 생명의 가치 수호

□ 이행방법

- ◎ 「양성평등기본법」에 ‘성별’에 관한 정의 규정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의 요건 신설
- ◎ 「양성평등기본법」개정으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정책을 폐기하고, ‘출산주류화’ 또는 ‘출산영향평가’ 실시
- ◎ 성경적 가치관을 담은 성교육 교재편찬 및 성교육 교사 양성
 - 유치중등학교 단계별 성교육 교재 전수조사 및 전면 재개편
 - 교육부 주도 성경적 가치관 성교육 교사 양성과정 개설
- ◎ 여성가족부 사업 중 일부를 ‘생명존중 성교육 사업’으로 재편성
 - 각종 문화센터, 청소년센터에서 시행되는 성교육 교재 전수조사 및 전면 재개편
 - 성경적 가치관 성교육 교사 양성과정 이수한 교사를 통한 성교육 실시

□ 이행기간

- ◎ 22대 국회 임기 중

□ 재원조달방안

- ◎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여성정책국 예산 등 불필요한 사업 예산들을 삭감하여 재원 조달

정책순위

10

월남 파병 유공자 보상특별법 제정

정책분야 | 국방

□ 목표

- ◎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을 영원히 기억

□ 이행방법

- ◎ 월남참전의 희생과 위훈을 기리고 후대에 이를 전승하기 위해 월남 참전 기념일을 지정
- ◎ 월남전쟁 군인으로 참전하였으나 정부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전투근무수당 등의 지급을 위한 (가칭) 「월남 참전유공자 보상특별법」 제정
 - 2020년 2월 현재 월남 참전유공자의 수는 196, 372명이며, 당시 정부는 파월 장병들에 대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10분의 1을 지급
 -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의 산정이 필요. 이를 위한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 월남전쟁 참전 군인 및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있던 자를 포함), 자녀, 손자녀, 부모 등 유족에게도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지급

□ 이행기간

- ◎ 22대 국회 임기 중

□ 재원조달방안

- ◎ 6.25 참전유공자에게 지급이 중단되는 재정을 재배정



No.	정 책
1	검찰개혁 정치개혁
2	가계부채 해결
3	초자산가 부자증세, 자산재분배로 불평등해소
4	기후, 생태, 민생을 위한 사회
5	누구나 안정된 노후를 전국민 4대보험
6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국가책임제
7	집 걱정 없는 나라
8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
9	일과 삶의 균형, 임금삭감없는 주4일제
10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심장

정책순위

1

검찰개혁 정치개혁

정책분야 | 정치

□ 목 표

- 검찰개혁, 정치개혁

□ 이행방법

- ① 검찰청 해체, 기소청 전환, 수사청 신설
 - 검찰청 해체, 기소청 전환 및 수사청 신설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 검찰청 해체하고 기소청 전환 관련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 독립적 '수사청' 신설. 현재 검찰의 2대 중요범죄 수사업무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행하는 수사업무를 이관받아 담당
- ② 검사장 직선제
 -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
 - 검사장 직선제 도입 관련 법 개정 : 18명의 지방검사장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검사동일체를 만들었던 대검-고검-지검이라는 피라미드 구조 해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며, 지방분권도 강화.
 - 지방선거와 동시에 현행 교육감 선거에 준하여 시행하고 임기는 4년
- ③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 공직선거법 개정 :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 후보가 없는 경우, 상위 2명의 후보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 진행(신설)
 - 헌법 개정 : 헌법해석의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헌법에 결선투표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 ④ 국회의원 3대 특권 폐지
 - '최저임금 3배 이하'로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제2조) : 국회의원 수당은 '최저임금 3배 이하'로 명시하여, 국민의 눈으로 국민의 생활 감각으로 의정활동을 하도록 함.
 -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 공직선거법 개정 :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으로 공직사회 개혁
 -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공직자윤리법 개정 :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원칙 확립 및 투기 방지

□ 이행기간

- 임기시작 상반기

정책순위

2

가계부채 해결

정책분야 | 재정경제

□ 목 표

-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가계부채 해결

□ 이행방법

- ① 은행 횡재세(초과이윤세)로 서민부채탕감기금 조성하여 서민 부채탕감
 - 법인세 과세특례 형태로 은행 횡재세(초과이윤세) 신설, 금융회사 5년 평균 순이자수의 대비 120% 초과이익시, 초과이익의 50%를 부과징수
 - ‘서민부채탕감기금’을 조성하여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에 대한 과감한 채무재조정(원금·이자 조정 및 탕감) 실행
 - 1단계 시행 대상으로 DTA(자산대비부채비율) 100% 이상, DSR(소득대비원리금상환비율)70% 이상 가구 중 저소득(소득1~3분위) 위험가구로 기준을 마련하고, 특히 영세 소상공인, 비정규직 등에 집중 지원
 - ※ 법인세법 및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개정
- ② 법정 최고금리 연 15%로 낮춰 대출금리 인하
 -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의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0%에서 15% 이내로 제한하여 서민들의 고금리 고통 해결
 - *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
- ③ 대출금리 원가 공개로 금리부담 완화
 - 은행법 개정으로 △가산금리 별도 공시 △가산금리 산정 세부항목 공시 △예대금리차 증가시 개선을 명문화하여 대출금리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 합리성과 적정성을 확인- 은행 횡재세 산출의 근거를 마련하고, 예대금리차가 벌어지는 경우 대출금리를 인하를 강제함
 - ※ 은행법 개정
- ④ 불법 대부계약 및 불법사금융 원천 무효화
 - 현행 대부업법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계약을 체결하면 최고금리 초과금만 무효로 규정함.
 - 대부업법을 개정, 불법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이자는 물론 원금계약까지 무효화

- 불법사금융의 불법채권추심 근절
 - ※ 대부업법 개정

▣ 이행기간

- ◎ 임기시작 상반기

▣ 자원조달방안 등

- ◎ 법인세 과세특례 형태로 은행 횡재세(초과이익세) 신설, 금융회사 5년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 초과이익시, 초과이익의 50%를 부과징수
- ◎ '서민부채탕감기금'을 조성하여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에 대한 과감한 채무재조정(원금·이자 조정 및 탕감) 실행

정책순위

3

초자산가 부자증세, 자산재분배로 불평등해소

정책분야 | 재정경제

□ 목 표

- 초자산가 부자증세, 자산재분배로 불평등 해소

□ 이행방법

1. 초자산가 부자 증세

- ① 자산 100억 상위 0.1% 초자산가 부유세 도입
 - 자산 100억 이상 2%, 자산 300억 이상 3% 부유세 부과
 - 2023년 금융자산 100억 이상은 3만 2천명 총자산 558조, 300억 이상은 9천명 총자산 1, 128조
 - 자산 100억 이상 2% 300억 이상 3% 부과 시, 연간 44조 이상 재원 확보
- ②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
 - 은행 및 에너지 기업의 초과이윤에 횡재세 부과
 - 은행(금융회사) 5년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20% 초과분, 초과이익에 단일세율 50% 적용
 - 석유·가스 등 에너지 기업 5년 평균 수익 대비 20% 초과분, 초과이익에 단일세율 50% 적용
- ③ 상속세 강화
 - 상속세 최고구간 세율 인상
 - 현행 상속세 세율 ▽과표구간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를 적용. 이 중 최고구간은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 90%의 세율 적용
 -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60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하향

2. 자산재분배 공약

- ① 0세에서 18세까지 아동수당 월 30만원 지급
 - 아동수당 0세 18세까지 월 30만원 지급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7세→18세 확대, 학생이나 직업훈련 중이면 20세까지 지급
- 아동수당 지급 금액을 현행 10만원 → 30만원 상향, 저소득층은 '아동수당 보조금' 추가 지급

② 청년, 신혼부부 주거 보장

-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만원 주택' 공급 : 보증금 0원, 월 임대료 1만원 공공임대
- 신혼부부 특화 공공임대 공급 : 보증금 및 임대료 시세 30% 수준 공공임대
- 신혼부부 특화 공공자가 공급 : 토지는 공공소유 건물만 분양하는 20평 1억대 건설원가 아파트
- 첫아이 가족주택 공급 : 첫째 아이부터 24평형 공공임대

③ 1주일에 3일을 잘 놀고 쉬자

- 주4일제로 일과 삶의 균형 실현
 - 임금삭감 없는 주4일제 시행
- 내일배움카드(500만원) + 내일휴식카드(500만원) 지급
 - 내일배움카드 : 직업 훈련 간 연계, 계좌 발급 후 5년 간 500만원까지 사용 가능
 - 내일휴식카드 : 문화 예술 여행 간 연계, 계좌 발급 후 5년 간 500만원까지 사용 가능

④ 노인에게 월 50만원 지급

- 65세 이상 기초연금 월 50만원까지 지급
 - 소득 70% 이하 노인 40만원, 소득 40% 이하 50만원 지급

▣ 이행기간

- 임기시작 시

▣ 재원조달방안 등

- 초자산가 부자증세(고자산가 부유세·상속세)
- 은행 및 에너지 기업 초과이윤 횡재세 부과로 재원마련

정책순위

4

기후, 생태, 민생을 위한 사회

정책분야 | 환경·산업자원

□ 목 표

- 공공성 강화로 기후위기 대응 및 민중이 주도하는 기후정치 대전환

□ 이행방법

- ① 물·전기·가스 필수에너지 이용권
 - 에너지법 개정
 -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 에너지기본권 보장, 재생에너지 전환 위한 지원 명시
 - 필수에너지량 무상공급 위한 필수량 산정
 - 에너지위원회에 이용자 및 노동자, 공급시설 주변주민, 지자체 참여
 - 전기사업법 개정
 - 전기사업 공공성 확보 방향 명시
 - 산안부장관이 필수전기량 산정, 전기사업자에 필수량 무상공급 의무 부과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 산안부장관이 필수가스량 산정, 도시가스사업자에 필수량 무상공급 의무 부과
 - 수도법 개정
 - 수도 민간위탁 요건 강화
 - 환경부장관이 필수수도량 산정, 일반수도사업자에 필수량 무상공급 의무 부과
 - 주거기본법 개정
 - 최저주거기준에 한파·폭염 등으로부터 안전 확보 수준 명시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을 최저주거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할 의무 부과
 - 임차주택 최저주거기준 미달을 계약시 알리지 않으면 차임 1/2 감액청구
- ② 화석연료·핵발전 퇴출,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
 - 2029년 석탄발전소 퇴출
 - 노동중심 산업전환 실현
 - 탈탄소 전환 과정의 모든 노동자 '기후일자리'보장

- 노사 공동결정제도 도입, 노조법 개정을 통한 산업별·업종별 협약 실현 등
 - 탈핵기본법 제정, 원자력 진흥법 폐지, 핵발전소 조기 폐로
 -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2050년 재생에너지 100% 전환 실현
 - 발전공사법 제정, 5개 발전공기업 통합 및 민간협력업체 재공영화 추진
- ③ 청소년 무상교통 실현, 대중교통의 단계적 공영화 추진
- 청소년 무상교통 전국적 실현
 - 교통기본법 제정, 교통체계 통합, 공공교통 대전환
- ④ 신공항 건설 반대, 공공철도 강화
- 신공항 건설 추진 중단, KTX-SRT철도 통합 공영화 실현
 - 전국 모든 신공항 건설 전면 재검토 및 건설 중단.
 - KTX-SRT 통합, 수서발 KTX 도입, 철도민영화 시도 중단
- ⑤ 탄소세가 아닌, 조세개혁과 공공성 강화
- 온실가스 주범인 기업에 법인세 추가 부과하여 책임을 강화
 - 세수의 활용이 '보편적 복지'와 '민중으로부터의 전환'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도 록함.
- ⑥ 동아시아 평화구축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 ⑦ 2030년 폐기물 50% 감축, 발생지 처리원칙 강화
- ⑧ 난개발 저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개선

■ 이행기간

- 임기시작시부터~

정책순위

5

누구나 안정된 노후를 전국민 4대보험

정책분야 | 보건복지

□ 목 표

- 전국민이 안정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전국민 4대보험 실현

□ 이행방법

- ① 국민연금 : 누구나 노후 보장 1인1연금
 - 전 국민 국민연금 당연 가입 추진
 - 18세가 되면 누구나 국민연금 당연 가입 : 일용 또는 초단시간, 노무제공자, 예술인, 프리랜서 등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 가입, 기본 가입기간 10년 보장
 - 노무제공자, 예술인, 프리랜서도 4.5%만 부담
 - 모든 노동과 사회적 기여에 가치 인정, 크레딧 소급 인정
 - 양육크레딧 : 현 출산크레딧을 양육크레딧으로 전환, 자녀당 최소 3년 크레딧 인정- 돌봄크레딧 : 가족 돌봄자는 돌봄 책임으로 인해 불안정한 일자리와 무급 돌봄의 불이익을 겪고 있어, 이들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돌봄 트레딧 신설(최대 10년 가족중 1인/평균 소득월액 기준 보험료 국가 지원)
 - 국민연금법 시행 이후 군복무, 양육 등 크레딧 소급 적용
 - 혼인 중에도 분할연금 수습, 유족연금수급자 재혼시에도 수급권유지
 - 적정 수준이 보장되는 수급액으로 지원
 - 기초연금 인상 및 저소득층 추가 지급, 생계급여 산정시 기초연금 전액공제
 - 유족연금 지급률 인상, 장애연금 확대, 외국인도 반환일시금 지급
 - 국민연금 예상 보험료 수입의 50%, 기초연금의 70% 이상 국고 투입
 - 사업장 가입 지원,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 지원
- ② 건강보험으로 상병수당, 간병비 지원
 - 직장가입 사각지대 해소
 - 노무제공자, 예술인, 프리랜서 등을 모두 직장가입으로 포괄하는 근거 조항 신설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의무, 불이행시 제재 규정 마련
 - 피부양자 자격범위에 사실혼 배우자, 생활동반자 관계 포함
 - 상병수당 실시

- 가입자에 대해 최대 12개월까지 지급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제외
 - 사업장에서 상병휴가를 쓸 수 있는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유급 상병휴가 기간 종료 후부터 지급
 - 직장가입자는 평균임금(보수월액)의 60%, 지역가입자는 소득월액의 60% 지급
 - 위 금액이 최저임금 이하면 최저임금의 80% 지급
 - 돌봄지원 제공 : 미성년 자녀, 장애인, 중증환자, 노인 등을 돌보고 있는 사람이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돌봄지원제공, 돌봄서비스 또는 돌봄대체수당 지급
 -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추가: 요양급여에 간병비 항목 추가
- ③ 일하는 모든 사람의 고용보험
- 사각지대 해소 : 노무제공자, 예술인등 자영업자도 동등 보장
 - 구직급여 수급자 확대
 - 일반 근로자, 36개월 동안 120일 보험료 납입으로 요건 완화
 - 초단시간 노동자,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 비례적 보장 취지에 맞게 조정
 - 자영업은 기준기간만 현재 24개월에서 48개월로 연장
 - 가족돌봄휴직 등 급여 신설
 - 이직과 충전을 보장하는 신설
 - 부분실업급여 도입, 자발적 이직에 대한 실업급여(이직준비급여) 허용, 사용빈도 제한-청년 이직준비급여 보장(수급기간 연장, 횟수제한 없는 이직준비급여)
 - 재충전 급여 신설(8년마다 90일씩, 기초일액 90% 고용보험에서 지급)
 -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 발생시, 소득지원급여 지급
- ④ 일하는 모든 사람 적용받는 산재보험
- 노무제공자, 예술인 프리랜서 산재보험 포괄 : 직종 구별없이 적용대상으로 포함
 - 피보험자격에 관한 확인청구절차와 불이행시 제재규정 마련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부담 제외, 휴업급여 최저임금액만큼 보장
 - 적용제외 대상은 없애고 적용대상은 확대
 - 가구내 고용 제외 조항의 삭제, 농어업, 산림업 등 개인 고용 5인 미만 사업자 제외 규정 삭제, 사업주의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당연 가입대상으로, 자원봉사자 특례조항 신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 중 재혼 또는 사실혼의 경우도 포함
 - 요양 후에도 온전히 일터에 복귀

이행기간

- 임기시작시부터 단계별 추진

정책순위

6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국가책임제

정책분야 | 보건복지, 노동, 교육

□ 목 표

- ◎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돌봄국가책임제 시행

□ 이행방법

- ① 돌봄정책기본법 제정으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규정
 - 공공성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 의무 규정
 - 돌봄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과 돌봄휴가 보장
 - 가정 내 돌봄책임 분담을 유도하며 돌봄차별 금지
 - 돌봄민주주의 실현
- ② 돌봄자지원법·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
 - 돌봄을 받을 권리, 돌봄을 할 권리에 대한 인정과 지원체계 마련
 - 돌봄자(공식, 비공식)를 구분하여 상황에 맞는 경제적·정서적 지원체계 마련
 - 돌봄수요자 지원 및 권리 : 어르신 이동지원 확대, 치매가족지원센터 확대 등
 - 돌봄노동자 지원 및 권리 : 돌봄노동 적정임금 보장 규정, 돌봄노동의 경력 인정, 최소 근로시간 보장, 유급휴가와 퇴직급여 보장, 야간근로 제한과 휴게시간 보장, 노정교섭 법 제화, 업무상 재해 및 인권보호
 - 비공식돌봄자 지원 및 권리 : 비공돌봄자수당 현금 지급 및 비공식돌봄자 연금, 휴가지원
- ③ 생애주기 맞춤형 지역통합돌봄
 - ㉠ 전국 모든 지역에 공공병원 건립
 -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 법률 개정 : 중진료권별 지방의료원 설립 의무화
 - 대통령령 개정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공공병원 추가
 - 광역·기초 공공병원 설립·운영 조례 제정
 - 광역 시·도별 공공요양병원, 공공재활병원, 공공어린이병원, 감염병전담병원 건립 추진
 - ㉡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으로 산후조리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전국의 시군구에 한 개 이상씩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 산부인과와 연계하여 산모 건강을 전문적으로 관리
 - 임신과 출산에 대한 상담과 준비

-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전문인력 및 감염예방 교육 강화
- 젠더관점을 가진 운영이 가능하도록 특별위원회 설치
- ㉔ 국공립보육시설 50%확충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 국공립보육시설 단계적으로 50%까지 확충, 신축 및 지역 유휴 시설 활용, 지역별 편차 해소 위해 신축시 지원되는 비율을 차등 지원
 - 보육교사 처우 개선
- ㉕ 온종일 돌봄체계 확대로 초등돌봄사각지대해소
 - 방과후돌봄서비스 수요 증가와 열악한 아동복지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 아침돌봄, 방과후돌봄, 저녁돌봄, 방학 중 전일제 돌봄체계 구축,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 ㉖ 아동수당 만18세까지 확대 및 월 30만원으로 증액
- ㉗ 20~40대 1인가구 맞춤형 돌봄 체계
 - 사회보장체계 개선으로 1인 가구 사회보장제도 강화
 - 긴급호출서비스 확대: 긴급상황(안전, 건강위기) 시 호출기 누름으로 주민센터와 연결 경찰, 구급대 동시 출동
 - 주거지 중심 공동생활 서비스 확대 : 지역주치의제도 도입으로 주거지 가정의학과 연계 육체뿐 아니라 정신건강 수시로 상담, 주민센터와 연계 함께 쓰는 부엌, 반찬 나눔, 공동세탁소 등 1인 가구 공유 서비스 활성화
- ㉘ 사회서비스원직영 국공립사회복지시설 설립 및 확충
 - 사회서비스원 직영 노인, 장애인, 아동 돌봄시설을 전 시설 대비 30% 확충
 - 민간위탁 종료 시설 우선적으로 직영 전환
- ㉙ 노인돌봄체계 강화
 - 생계급여 수급 노인 전체에게 기초연금액 30만원 지급
 - 수요자 기준 30%의 공공요양시설 설치 및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충
 - 요양 돌봄 서비스, 일상 생활지원 서비스, 거주지원 서비스 확충
 - 지역사회 거주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
- ㉚ 장제비 지원과 지자체가 관할하는 공공상조회 설립

이행기간

- 임기시작시 상반기

정책순위

7

집 걱정 없는 나라

정책분야 | 행정자치 건설교통 보건복지

□ 목 표

-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 주거 불안 해결

□ 이행방법

- ①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주거권 보장
 -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하고 건설원가아파트와 장기공공임대 100%
 - 현재 공공주택특별법은 공공택지의 50% 이상을 민간에 매각.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중단으로 원천적으로 토건세력과 부동산투기카르텔 근절
 -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만원주택' 공급 : 보증금 0원, 월 임대료 1만원 공공임대
 - 신혼부부 특화 공공임대 공급 : 보증금 및 임대료 시세 30% 수준 공공임대
 - 신혼부부 특화 공공자가 공급 : 토지는 공공소유 건물만 분양하는 20평 1억원대 건설원가 아파트
 - 첫아이 가족주택 공급: 첫 아이부터 24평형 공공임대 제공, 생활동반자에게도 공급
 -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비율 지정(20%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보 의무화)
 - 서울, 경기도, 광역시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20%이상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함
 - 미분양 아파트 및 전세사기 주택 국가매입 후 공공임대로 제공
- ② 완전한 민간임대주택 세입자 보호 3법
 - 공정임대료 제도(최초 공정임대료 산정, 매년 도시별 인상률 상한제 실시)
 - 직접 거주하지 않는 모든 임대용 주택에 대해 등록과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개별주택 공시가격제도처럼 전월세 가격도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산정하고, 건물주가 마음대로 전월세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함.
 - 지역별 공정임대료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임대료를 결정 고시함.
 - 전월세 평생계약갱신청구권제
 - 모든 주거용 건물의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 모든 임대주택은 (재)계약시 해당기간 전월세 인상률 범위내에서만 전월세 가격을 정하도록 함.
 - 임대료 인상률은 전월세가격, 물가인상률, 소득증가 등 지역별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임대료산정위원회에서 결정함(시도 의회에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③ 주택거래허가제_다주택자 주택취득제한

● 주택거래허가제

- 주택거래허가제를 통해 다주택자 주택 취득제한, 공공기관 주택선매권 행사
- 깎투기 금지 ; 주택구입자금중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비중 50% 이상인 경우 거래 제한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화, 토지취득자금 조달.이용계획 신고

● 다주택자 주택취득제한

- 주택거래허가제를 통해 수도권과 대도시 주택에 한해 다주택자, 법인의 주택취득 제한
- 1가구 1주택인 경우 이사, 세대분리를 위한 증여 목적으로 신규주택 취득은 주택거래 허가제를 통해 구입

● 다주택자, 미성년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 다주택자 담보대출 금지 특별법 제정

● 다주택가구 조세감면 제도 전면 폐지

- 모든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정비

■ 이행기간

- 임기시작시 ~

■ 재원조달방안

- 토지임대부 방식이기 때문에 정부가 임대료 받음. 이 경우 임대료 책정은 이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특별법'의 '해당 공공택지 조성원가에 은행의 3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할 금액'을 준용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출
- 신도시는 공영개발로 상업용지, 업무용지만 일부를 매각한 후 조성 비용을 조달하되, 주거용지는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과 국가가 참여하는 방식.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되 건물만 분양(토지임대부 건설원가아파트)하거나 건물도 임대(장기공공임대), 즉 '건설원가아파트+장기공공임대=100%공공주택'공급
- 필요한 부지 연 100만 평, 2010년 이후 LH공사가 매각한 공공택지 총1, 270만평으로 연간 140만 평 수준.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으로 공공보유 토지에서 중심으로 공급.
- 현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계획 중에서 공공분양주택 및 민간분양 주택 용지와 부지가 확보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등을 전환하면 연간 10만호 공급 가능
-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정부의 재정지원, 및 금융지원제도 마련
- 장기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에 충족한 지자체나 공공임대주택 공가가 많은 지역에서는 의무비율을 완화할 수 있으나 장기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에 미달하는 지역에서는 각종 재개발, 개건축사업 인허가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상향 조정하도록 제도화함.
- 지자체 등 공공기관 주택선매지역 지정을 통한 공공주택확보

정책순위

8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

정책분야 | 안전, 여성, 노동, 과학기술정보통신

□ 목 표

- 모든 국민의 인권, 평등권을 보호·확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이행방법

- ① 성평등노동기본법으로 첫 노동에서 퇴직까지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 ㉠ 채용성차별 금지
 - ㉡ 배제없는 육아휴직제와 남성육아휴직할당제 도입
 - ㉢ 출산과 육아휴직 후 '바로복직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하여 '바로복직제' 실현
 - ㉣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 100인 이상 기업부터 '성평등지표' 평가 시행, 기준 점수 미달 시 총급여액의 1% 벌금 징수
- ②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및 여성폭력방지법 개정
 - 젠더 기반 폭력(권력에 의해 신체적·성적·심리적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폭력)에 대한 국가책임 원스탑 시스템
 - 위계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 가해자 분리 및 피해자 지원을 종합적으로·체계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정
 - 여성폭력방지법 개정
 - 가정폭력·성폭력·성희롱·성매매 법률 개정
 - 혐오표현방지법 제정
 - n번방 방지법 개정
 - 디지털성폭력 범죄 인식 교육의무화 및 디지털성폭력피해지원 체계 개선
 - 사이버성폭력 산업화 문제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책임 강화
 - 그루밍 성범죄(성인) 신설
- ③ 차별금지법, 평등법, 생활동반자법 제정
 -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하여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

- 생활동반자법 제정 : 민법.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등 ‘가족’을 언급하고 있는 240여개 현행 법 정비, 특정인 1명과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성인을 ‘생활동반자’로 규정, 법률혼과 같은 관계로 인정하고 지원정책 대상에 포함, 주택지원 정책에서 법률혼과 같은 지위 부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해 가구당 지원기준 적용하여 지원

- 파트너 인증서 발급 : 동일한 주소지 내에서 거주하는 성인 2인의 결합 관계 대상, 주택, 의료 혜택 등에 활용, 성별 표기를 하지 않도록 해 아우팅으로부터 보호

- 성소수자 인권보장, 공공기관 인권교육 의무시행 강화, 민주유공자법, 노동허가제, 동물권·채식권 보장 등

④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 재난과 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법안 마련.

- 생명안전기본법 등 안전 패키지 법안 제정

- 평상시 재난·참사를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 구축

- 사회적 참사가 일어난 경우, 조사·진상규명 등 프로세스가 신속히 작동하는 안전체계 구축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

- 오염수 방류로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 및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 등

- 산업안전청 설립

- 노동자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청 설립 추진

■ 이행기간

- 임기시작 즉시

정책순위

9

일과 삶의 균형, 임금삭감없는 주4일제

정책분야 | 노동

□ 목 표

- 임금 삭감없고, 차별없는 주 4일제 전면적 도입

□ 이행방법

- 노동시간 단축 특별법 제정
 - 노사정 동수로 노동시간 단축위원회(+산업별 위원회) 구성, 종합적 수립·집행
 - 법정근로시간 주 32시간, 연장근로 5시간 제한, 연 1700시간 초과 금지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 교대제, 야간노동 최소화 및 일자리 확대와 연결(100만 일자리 창출)
 - 근로기준법 59조(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의 특례) 폐지
- 포괄임금제 폐지, 특별연장 근로 인가 규제
- 5인 미만, 민간 중소기업에 임금보전 지원
 - 300대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30%로 인상하는 등 재원 마련
 - 근로시간 단축이 절박한 5인 미만 사업장 및 민간 중소기업에 임금보전을 지원하여 임금 삭감없는 주4일제 우선 도입
- 5시 퇴근법으로 점심시간, 휴게시간 유급화
- 내일배움카드(500만원) + 내일휴식카드(500만원) 지급
 - 내일배움카드 : 직업 훈련 간 연계, 계좌 발급 후 5년간 500만원까지 사용 가능
 - 내일휴식카드 : 문화 예술 여행 간 연계, 계좌 발급 후 5년간 500만원까지 사용 가능

□ 이행기간

- 임기시작시 ~

정책순위

10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심장

정책분야 | 행정자치, 재정경제

□ 목 표

- ◎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내 순환경제 구축

□ 이행방법

①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

-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공은행 설립
- 지자체금고 역할을 기반으로 지역 내 신용창출을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에 주력하고, 사회적기업 등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재투자 확대
- 제2~3의 금융중심지인 부산과 전북에서부터 지역공공은행 설립 추진
 - ※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이후 지방자치단체별 지역공공은행 설치 및 운영

② 지역재투자법 신설로 지역내 순환경제 구축

- 지역예금을 수취하는 금융기관, 지역 저소득층 및 소기업 대출수요 적극 대응하도록 의무화한 지역재투자법 제정
-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은 개별 금융기관의 지역내 대출, 투자, 금융서비스 정도 평가반영하여 국내지점 설치, 본점, 지점 이전 합병 통합 인허가 기준제시

③ 재생에너지 '지역공영화' 촉진법

-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방향이 이용, 보급의 촉진에서 공동체, 생태계 공존의 방향으로 공영화 원칙 수립.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함을 목적으로 분명히 한다.
- 재생에너지 '지역공영화' 실현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기본법 마련.

□ 이행기간

- ◎ 임기시작 상반기



조국혁신당

No.	정 책
1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2	헌법 개정으로 “사회권 선진국”인 7공화국 비전을 세우겠습니다.
3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체계전환을 이루겠습니다.
4	담대한 저출생 대책과 성평등·돌봄 정책 추진으로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5	교육혁신을 통해 “계층이동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6	과학기술정책의 과감한 개혁으로 “과학기술입국 시즌2”를 완성하겠습니다.
7	중앙-지방간 불균형을 바로 잡아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8	지속가능한 성장과 민생경제를 회복하겠습니다.
9	기획재정부 개혁으로 시민참여형 민주적 예산편성과 사용을 이루겠습니다.
10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를 확립하여 분단극복과 평화번영을 열어하겠습니다.

정책순위

1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정책분야 | 정치

□ 목 표

-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막강한 검찰 권한 분산
- 검찰·경찰·언론에 의한 인권 유린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 개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로 검찰 권력 분산과 견제
- 검사장 직선제·기소배심제도 도입으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이행방법

-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추진
 -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
 - 검찰은 기소권 담당 및 경찰의 수사적법성 통제 기관으로 역할 조정
 - 검사 직접 수사 개시권 완전 폐지
-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이선군법 제정
 - 인권보호 수사준칙, 형사사건 공보 규정 등 관련 훈령을 입법으로 격상
 - 불법적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마련
 -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 확대로 국가권력의 과도한 인권침해 견제·감시
- 공수처 실질화 및 특정 수사를 전담하는 전문수사청 설치
 - 공수처의 기능, 역할 등을 제한한 공수처법 개정 추진
 - 중대범죄수사청, 마약수사청, 금융범죄수사청, 경제범죄수사청 등 설치
- 검사장 직선제 도입·기소배심제도 도입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통제 강화
 - 검찰의 중앙집권적 피라미드 권력 구조 해체
 - 검찰권의 분권화 및 개혁 경쟁구조 마련
 - 기소 여부 결정에 있어서 국민의 눈높이에 의한 통제 제도 도입
 - 검사 탄핵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당내 상설조직 신설

▣ 이행기간

- 수사기소권 분리 및 전문수사청 도입: 2024년부터~2026년까지 단계적 추진
- 이선균법 제정: 2024년 발의 및 입법 추진
- 공수처 실질화, 전문수사청 설치, 검사장직선제 도입: 2026년까지 단계적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 지출 구조 조정과 부자 감세 철회 등 세입 확대 통해 마련

헌법 개정으로 “사회권 선진국”인 7공화국 비전을 세우겠습니다.

정책분야 | 기타

□ 목 표

-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만들어진 6공화국 헌법을 시대정신에 맞게 새로운 7공화국 헌법 개정
- 독재회귀 방지, 민주국가 확립 등 정신 계승, 정치교체, 기본권과 사회권 확대, 환경, 평화 등 시대적 과제를 반영
- 행복한 일상적 국민의 삶을 사회권 선진국으로의 도약 촉진

□ 이행방법

- 참여와 자치를 바탕으로 민의가 최대한 반영되는 국가권력구조 개편
 - 국민주권과 민주적 참여, 분권과 자치의 중요성을 전문에 명시
 - 직접민주적 권리(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 저항권 명시
 - 검찰권 축소와 사법권에 대한 통제 강화, 사법의 민주화 명시
 -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 축소 명시
 - 국회 구성의 비례성 강조 및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할 국회 권한 강화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
- 환경파괴 방지 및 기후위기 극복을 국가적 핵심과제로 부각
 -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가치,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전문에 명시
 - 지속가능한 개발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전환적 노력을 헌법적 책무로 명시
 -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의 노력을 강조
- 민생과 복지가 보장되는 선진복지국가, “사회권 공화국” 건설을 국가적 목표로 강조
 - 기존 헌법에 명시된 권리외에도 생명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정보기본권, 소비자권리 등을 명시하여 사회권이 폭넓게 보장되는 헌법 근거 마련
 - 사회권 보장, 사회복지 및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는 국가의 역할과 책무를 명시

▣ 이행기간

- ◎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 22대 국회 임기 개원 직후 헌법 개정을 위한 국회특별위원회 신설
 - 중장기 추진 계획 내 목표 및 성과 관리체계 제시

▣ 재원조달방안 등

- ◎ 재원이 소요되는 정책공약은 아니나, 정부지출 구조 조정을 통한 부수적인 재정 조달

정책순위

3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체계전환을 이루겠습니다.

정책분야 | 환경

□ 목 표

- ◎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한 기후 에너지정책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
- ◎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탈탄소 시대의 글로벌 산업통상 리더로 부상

□ 이행방법

- ◎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기반 및 법·제도 정비
 -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 태양광 및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 ◎ 투자자와 개발자의 에너지 전환프로젝트 참여 합리화
 - 인허가 과정 간소화를 위한 원스톱샵 시스템 구축
 - 관련 기술 개발에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매칭펀드 확대
- ◎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는 정부 부처 조직
 -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 신설
 - 기후관계장관회의 신설, 효율적 안건 협의를 위한 실무조정회의 조직
 -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와의 역할 조정 합리화

□ 이행기간

- ◎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 22대 국회 임기 내 중장기 추진 전략 및 계획 수립
 - 중장기 추진 계획 내 목표 및 성과 관리체계 제시

▣ **재원조달방안 등**

- 부처별로 분산되어있는 재생에너지정책 예산 합리적 조정
- 탄소세 등 도입을 통한 외부 재원 조달
- 정부지출의 구조 조정을 통한 재정 마련
- 재정 수입 혁신과 재정지출 개혁을 통한 재정 마련
- 비과세 조정 등에 따른 세입확대 전략을 통한 재정 마련

정책순위

4

담대한 저출생 대책과 성평등·돌봄 정책 추진으로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정책분야 | 보건복지

□ 목 표

- ◎ 만성적 초저출생 상황 반전을 위한 과감한 행정·재정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
- ◎ 높은 수준의 아동 보육·교육 보장과 평등한 출발 지원
- ◎ 여성·청년세대 고용, 주거, 양육, 부양 부담 감소를 통한 육아친화사회 구축
- ◎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및 돌봄 걱정 없는 전국민통합돌봄 보장

□ 이행방법

- ◎ 저출생 대응 책임부처 설치와 저출산 재정지출 전면 재검토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할 재정립과 저출생 대응부처 신설 검토
 - 정부부처별 저출생 대응정책 전면 재검토와 정책협력망 구축
 - 부처별 저출생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저출생대응 예산 도입
- ◎ 높은 수준의 아동 보육·교육서비스 제공과 평등한 생애 출발 지원
 - 국공립보육·교육시설 확충과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 확대
 - 긴급 육아공백 지원을 위한 아이돌봄바우처 보편 지급과 시간제보육 확대
 - 육아취약가구 특별지원을 통한 모든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 보장
- ◎ 여성·청년세대의 삶과 육아를 지원하는 육아친화사회 구축
 - 공공부문-민간기업의 청년 일자리 제공과 육아기 여성경력단절 대책 수립
 - 남녀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와 유연근무 등 워라밸 직장문화 확산
 - 모든 신혼부부 대상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 제공 또는 주거마련 지원
 - 육아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지원과 육아공동체 활성화 지원
 - 가족돌봄 등 부양 부담 청년들의 생애주기 이행 지원
- ◎ 어르신·장애인 통합돌봄보장 시스템 구축
 - 공공 주야간보호센터 설치, 기존 어르신·장애인 돌봄기관 서비스 질 획기적 향상
 - 어르신 고독사 예방을 위한 행정전산시스템 구축 및 공동주거모델 연구
 -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노노케어 기반 통합돌봄모델 입법

- 간병비 건강보험 편입

◎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젠더폭력 근절

- 30여년째 OECD 1위인 성별임금격차 및 유리천장 해소를 위한 입법
- 젠더폭력 피해자 중심 맞춤형 지원 확대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 활성화

■ 이행기간

◎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 22대 국회 임기 내 중장기 추진 전략 및 계획 수립
- 중장기 추진 계획 내 목표 및 성과 관리체계 제시

■ 재원조달방안 등

- ◎ 부처별로 분산되어있는 저출생·돌봄 예산 합리적 조정 및 지출
- ◎ 재정 수입 혁신과 재정지출 개혁을 통한 재정 마련

정책순위

5

교육혁신을 통해 “계층이동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정책분야 | 교육

□ 목 표

- ◎ 포용성, 다양성, 지역성을 고려한 사회계층 이동성 강화로 사회의 역동성 복원
- ◎ 교육혁신을 통한 개인의 잠재적 성장 의지 고취 및 사회 전반의 활력 제고
-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 확보

□ 이행방법

- ◎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 제고
 - 일반고, 특성화고의 교육과정 특화 및 지원 강화
 - 자사고, 외고, 과학고, 영재고, 예술고 등 사회통합형 입학전형 추진
 - 학급 규모 중심의 교사 배치가 아닌 교육과정 실행수준에 적합한 교사 배치로 전환
 - 특성화고 ‘직업교육 르네상스’를 통해 산업체 요구에 적합한 인재 육성
- ◎ ‘사회배려선발’, ‘지역균형선발’ 가치를 반영한 대입전형 설계
 - 학교 내신만으로 평가받는 대학 입시 전형 확대
 - 의대, 로스쿨의 경우 사회배려선발과 지역균형선발 비율 최소 30%로 확대
 - 대기업 및 로스쿨 적성검사에 대한 합리적 개선
- ◎ 돌봄전담기구신설 및 지역·마을 돌봄 기능 강화
 - 국가돌봄청 신설로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부처별로 나뉜 돌봄 제도 일원화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협력을 통한 학교 내 돌봄기능 강화
 - 놀이, 휴식, 안전, 학습, 체험이 있는 양질의 돌봄체계 구축
 - 지역 맞춤형 다양한 돌봄 모델 운영(학교운영형, 지역거점형, 사회적경제형, 시민단체위탁형, 마을교육공동체형, 공동육아형 등)
 - 학교 돌봄과 마을돌봄을 통한 진로, 학습멘토, 개별 과외 등 지원
- ◎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 개발, 관리, 적용
 - 사회이동성 관련 데이터 생성, 현황 모니터링, 정책기획 및 관리

- 대학 및 주요공공기관의 계층이동성 지수 및 지표 항목을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사회적 책무성 강화
-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를 기초로 제도 개혁 추진에 필요한 정부 조직 신설

▣ 이행기간

- ◎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 22대 국회 임기 개원 직후 당내 '한국형계층이동성지수개발위원회' 조직
 - 중장기 추진 계획 내 목표 및 성과 관리체계 제시

▣ 재원조달방안 등

- ◎ 정부지출의 구조 조정을 통한 재정 마련
- ◎ 재정 수입 혁신과 재정지출 개혁을 통한 재정 마련
- ◎ 비과세 조정 등에 따른 세입확대 전략을 통한 재정 마련

정책순위

6

과학기술정책의 과감한 개혁으로 “과학기술입국 시즌2”를 완성하겠습니다.

정책분야 | 과학기술

□ 목 표

- 과학기술자 중심 과학기술정책 수립, R&D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과학기술자가 정하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기초과학 연구 체계 확보
- 자문과 행정 중심의 연구 관리체계 혁신으로 연구자 중심 체계로 전면 개편

□ 이행방법

- 국가 R&D 예산의 연동 비율 체계화
 - 윤석열 정부에 의해 삭감된 국가 R&D 예산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복원 및 획기적 증액
 - 정부 예산의 7% 이상을 R&D 분야에 배정하기 위한 순차적 증액
 - 정부 예산의 0.65% 이상을 청년과학자 육성 예산 단계적 배정
- 국가 R&D 거버넌스 정립
 - 과학기술자가 직접 참여·논의하는 과학기술혁신 조직 신설
 - 국가 R&D 관리체계 혁신적 정비
- 국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 임명
 - 정보·기술 관리를 주관하는 정부 차원의 최고정보관리책임 조직 신설 추진
 - 정부, 지자체, 공공, 민간 IT서비스의 정보 관리 및 책임 역할 배분

□ 이행기간

-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 22대 국회 임기 내 중장기 추진 전략 및 계획 수립
 - 중장기 추진 계획 내 목표 및 성과 관리체계 제시

□ 자원조달방안 등

- 정부지출 구조 조정을 통한 재정 마련
- R&D 예산의 최근 5년간 집행 및 불용 현황 분석을 통한 재원현황 분석

정책순위

7

중양-지방간 불균형을 바로 잡아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정책분야 | 행정자치

□ 목 표

- 중앙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구조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경쟁력 강화
-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 균형발전펀드와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으로 지역벤처와 지역신산업을 육성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4대 메가시티 공론화

□ 이행방법

-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 등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차별적 매칭 비율 지정
 - 지역 연구개발(R&D) 예산의 지역할당제 도입
 - 지역산업활력펀드의 지역투자 할당을 통한 지방투자 예산 대폭 확대
- 공공기관 이전 논의 및 4대 메가시티 전략 공론화 추진
 -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 공공기관 이전과 메가시티 추진을 논의하는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 거버넌스’ 구축
 -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을 논의하는 ‘시민공론위원회’ 구성
 - 공공기관 이전 논의와 메가시티 공론에 대한 시민 공개 시스템 및 시민 의견 개선 플랫폼 구축
-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획기적 확대와 및 합리적 개선
 - 2009년 이후 GDP와 통합재정의 증가 추세를 고려해,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의 전환기적 확대 추진
 - 균형발전펀드 조성과 획기적 투자로 지역벤처와 지역신산업 육성 본격화
 -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재원 배분 정보 공개

■ 이행기간

- ◎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 22대 국회 임기 내 중장기 추진 전략 및 계획 수립
 - 중장기 추진 계획 내 목표 및 성과 관리체계 제시

■ 재원조달방안 등

- ◎ 현행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정부지출의 구조 조정을 통한 재정 마련
- ◎ 재정 수입 혁신과 재정지출 개혁을 통한 재정 마련

정책순위

8

지속가능한 성장과 민생경제를 회복하겠습니다.

정책분야 | 경제

□ 목 표

- 전지구적 탄소 중립 경제체제 구축
- 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 중소기업 및 자영업 경쟁력 강화
- 여성, 어르신, 청년, 장애인 등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 이행방법

- 산업구조와 에너지 체계 전환
 - 탄소 중립 관련 규제 및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 저탄소 기술 도입 지원 및 친환경 산업 육성·투자 확대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 추진
 -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개발 및 적극적 상용화 지원
-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 및 자영업의 경쟁력 강화
 - 소셜벤처 등 사회적 가치기반 창업의 발굴 및 육성
 - 혁신기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확대 및 운영 효율화
 - 중소기업과 자영업 대상 정부 지원금 및 용자 확대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프로그램 대폭 확대
- 여성, 어르신, 청년, 장애인 등 생애주기별, 계층별 다양한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민생경제의 안정적인 회복
 - 사회적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인상 및 안정화
 - 노동시장 안정화 및 강력한 청년일자리 촉진 사업 추진
 -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
 -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소득층 주거지원 강화 등 사회 안전망 확대

이행기간

- 산업구조와 에너지체계 전환: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 중소기업 지원 및 민생경제 회복: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

정책순위

9

기획재정부 개혁으로 시민참여형 민주적 예산편성과 사용을 이루겠습니다.

정책분야 | 재정

□ 목 표

- ◎ 기획재정부 기능 분할을 통해 정책책임성 및 효율성 강화
- ◎ 각 부처 예산자율성과 국회의 예산편성 심의권 강화
- ◎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의 세제와 예산 편성

□ 이행방법

- ◎ 예산처 독립을 위한 기획재정부 기능 분할
 -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강화한 예산처 신설
 - 정책평가 전문성 강화 및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조직 신설
 - 기획재정부로 집중된 권한을 정부 부처간 협력과 연계구조로 재편
- ◎ 각 부처 예산 편성 권한 확대 및 예산편성과정에서의 국회 기능 강화
 - 각 부처의 예산 자율성 및 전문성 강화
 - 정부 예산편성과정에서의 국회의 역할 증대
 - 국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예산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강화
- ◎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의 세제와 예산 편성 구조 정착
 - 중소기업 지원 세제와 누진세 강화 및 소득 재분배 정책 확대
 - 저소득층 지원 정책 대폭 확대
 - 예산 편성·집행 과정 정보 공개 및 시민참여 확대 제도 마련

□ 이행기간

- ◎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 기능 분할은 부처간 기능과 역할 조정으로 비재정 정책
- ◎ 재정 수입 혁신과 재정지출 개혁을 통한 재정 마련

정책순위

10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를 확립하여 분단극복과 평화번영을 열어가겠습니다.

정책분야 | 통일외교

□ 목 표

- 협력과 연대에 기반으로 한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로 전환
-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 창구 조성
- 한반도 전쟁 위협을 막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주도하는 외교·안보정책 구현

□ 이행방법

- 외교질서 정상화를 통한 평화번영 토대 마련
 -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추진
 -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 역사문제 해결과 실질협력 도모를 통한 성숙한 한일 관계 구축
 -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계승을 통한 외교다변화 복원
- 남북합의 사안에 대한 완전한 법제화 이행 및 남북 대화 창구 복원
 - 4.27 판문점 선언, 9.19 남북군사합의 등 남북합의 사안에 대한 국회 비준
 - 남북직통전화 복원 및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건
- 한반도 단일경제권 형성을 통한 경제공동체 본격 구성
 - 동해북부선, 동해중부선, 동해남부선 연결
 - 남북 보건의료협력,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한반도 산림 생태계 복원 등 남북 협력 확대
-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남북간 외교관계 수립
 - 남북기본조약 체결
 - 남북 외교관계를 뒷받침하는 ‘대표부’, ‘협력부’ 형태의 서울·평양 동시 설치
 - 기존 통일부의 역할 및 기능 확대개편
-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반환 공론화
 -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및 평가 이행을 통한 환수연도 구체화

■ 이행기간

- ◎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 22대 국회 임기 내 중장기 추진 전략 및 계획 수립
 - 중장기 추진 계획 내 목표 및 성과 관리체계 제시

■ 자원조달방안 등

- ◎ 정부지출의 구조 조정을 통한 재정 마련
- ◎ 재정 수입 혁신과 재정지출 개혁을 통한 재정 마련



가가국민참여신당

No.	정 책
1	국무총리를 국민투표로 선출하고 국회의원의 200여 가지나 되는 특권 전부를 폐지한다.
2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정당공천을 폐지한다.
3	서민생활보장 및 식료품 가공을 위법한 범죄자 엄벌에 처한다.
4	75세 어르신들에게 월150만원 포상을 지급한다.
5	농, 어민 가구당 월 50만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한다.
6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에게 월급여 300만원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
7	사기범죄 연루자를 원천 봉쇄 하기위해 전화번호가입 명의자를 엄벌에 처하도록 한다.
8	부정부패 공직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공직퇴출을 가하며 정치인의 재판절차를 초고속으로 추진한다.
9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기본적 도덕의식과 인성교육을 의무화 한다,
1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세금으로 지방 또는 국가정책을 정할시 반듯이 시민사회단체 또는 여, 야. 및 군소정당의 대표자들과 함께 생방송으로 공청회를 열도록 의무화 한다.

정책순위

1

국무총리를 국민투표로 선출하고 국회의원의 200여 가지나 되는 특권 전부를 폐지한다.

정책분야 | 정치, 경제, 사회

□ 목 표

- ◎ 대한민국 정당이 추구하는 정의로운 사회

□ 이행방법

- ◎ 대한민국 국회로부터~

□ 이행기간

- ◎ 2024년 03월 14일

□ 재원조달방안 등

- ◎ 정부

정책순위

2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정당공천을 폐지한다.

정책분야 | 정치, 경제, 사회

□ 목 표

- ◎ 대한민국 정당이 추구하는 정의로운 사회

□ 이행방법

- ◎ 대한민국 국회로부터~

□ 이행기간

- ◎ 2024년 03월 14일

□ 자원조달방안 등

- ◎ 정부

정책순위

3

서민생활보장 및 식료품 가공을 위법한 범죄자 엄벌에 처한다.

정책분야 | 정치, 경제, 사회

□ 목 표

- ◎ 대한민국 정당이 추구하는 정의로운 사회

□ 이행방법

- ◎ 대한민국 국회로부터~

□ 이행기간

- ◎ 2024년 03월 14일

□ 재원조달방안 등

- ◎ 정부

정책순위

4

75세 어르신들에게 월150만원 포상을 지급한다.

정책분야 | 정치, 경제, 사회

□ 목 표

- ◎ 대한민국 정당이 추구하는 정의로운 사회

□ 이행방법

- ◎ 대한민국 국회로부터~

□ 이행기간

- ◎ 2024년 03월 14일

□ 재원조달방안 등

- ◎ 정부

정책순위

5

농, 어민 가구당 월 50만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한다.

정책분야 | 정치, 경제, 사회

□ 목 표

- ◎ 대한민국 정당이 추구하는 정의로운 사회

□ 이행방법

- ◎ 대한민국 국회로부터~

□ 이행기간

- ◎ 2024년 03월 14일

□ 재원조달방안 등

- ◎ 정부

정책순위

6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에게 월급여 300만원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

정책분야 | 정치, 경제, 사회

□ 목 표

- ◎ 대한민국 정당이 추구하는 정의로운 사회

□ 이행방법

- ◎ 대한민국 국회로부터~

□ 이행기간

- ◎ 2024년 03월 14일

□ 자원조달방안 등

- ◎ 정부

정책순위

7

사기범죄 연루자를 원천 봉쇄 하기위해 전화번호가입 명의자를 엄벌에 처하도록 한다.

정책분야 | 정치, 경제, 사회

☐ 목 표

- ◎ 대한민국 정당이 추구하는 정의로운 사회

☐ 이행방법

- ◎ 대한민국 국회로부터~

☐ 이행기간

- ◎ 2024년 03월 14일

☐ 자원조달방안 등

- ◎ 정부

정책순위

8

부정부패 공직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공직퇴출을 가하며 정치인의 재판절차를 초고속으로 추진한다.

정책분야 | 정치, 경제, 사회

□ 목 표

- ◎ 대한민국 정당이 추구하는 정의로운 사회

□ 이행방법

- ◎ 대한민국 국회로부터~

□ 이행기간

- ◎ 2024년 03월 14일

□ 자원조달방안 등

- ◎ 정부

정책순위

9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기본적 도덕의식과 인성교육을 의무화 한다,

정책분야 | 정치, 경제, 사회

■ 목 표

- ◎ 대한민국 정당이 추구하는 정의로운 사회

■ 이행방법

- ◎ 대한민국 국회로부터~

■ 이행기간

- ◎ 2024년 03월 14일

■ 자원조달방안 등

- ◎ 정부

정책순위

1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세금으로 지방 또는 국가정책을 정할시 반듯이 시민사회단체 또는 여, 야. 및 군소정당의 대표자들과 함께 생방송으로 공청회를 열도록 의무화 한다.

정책분야 | 정치 경제 사회

□ 목 표

- ◎ 대한민국 정당이 추구하는 정의로운 사회

□ 이행방법

- ◎ 대한민국 국회로부터~

□ 이행기간

- ◎ 2024년 03월 14일

□ 자원조달방안 등

- ◎ 정부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

No.	정 책
1	정치혁명
2	종교혁명
3	과학 기술의 첨단화, 세계화 등
4	국민건강, 영토권확장, 국토개발, 복지대책
5	한민족의 정신문화 계승과 강국 육성
6	국가 안보의 실질적인 선진화
7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
8	외교 안보 및 세계화
9	소득평균화와 근로(서민)정책
10	국민단합과 세계주도

정책순위

1

정치혁명

정책분야 | 정치

- 국회의원의 명예직화와 국회의원 수를 120명 수준으로 만들어 국회의원의 개인 영달과 유익을 구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목숨 바쳐 헌신할 수 있는 애국자들로 국회를 구성하는 노력을 경주한다.
곧 입법기관으로서 청렴결백하게 국가와 민족의 번영과 발전에 상응하는 입안 상정이 모든 국민들이 의롭게 사는 방향 제시로 국민단결과 국력을 키워가는 상향적이며 자발적인 국민 동기유발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부정과 악을 척결하기 위한 강력한 필벌을 기하는 법안으로 악은 아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은 인권 유린하는 북한 공산당 핵심부를 멸하거나 회개시켜 자유평화통일하여 세계 중심적인 통일 대한민국을 건설한다.
- 사법부 판검사의 임준에 있어서 그저 암기식의 시험을 탈피하고 초등학교부터 사법고시 등 전 과정의 철저한 개인 신상을 제시하여 판검사의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판검사의 기소·재판의 책임은 영존하는 책임으로 명시하여 의로운 재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변호사 선임비용도 저가로 통제되어야 한다. 국선변호사의 자격 강화와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제도로 개선하여 가난한 자들의 변호를 위한다. 이미 국민간에 소문이 남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례들을 고치기 위하여 돈, 금품을 받고 부정하게 사법권을 행사하는 자들은 엄벌하며 사형에도 처할 수 있는 법 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중앙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도행정이 직능을 구별하여 유대 협의 관계 및 중앙통제체제로 재조정하여 강력한 행정부 시·도행정체제를 구축하여 상호 하나가 되는 행정체제를 구축한다. 또한 행정이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행정부서인 것이다. 따라서 행정직의 모든 관리들은 급여외에 사취를 하는 행위를 근절하여 국가를 위하지 않는 부정 부패한 자들에게 처벌할 수 있는 공의가 전국 행정관서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백성들도 공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정책순위

2

종교혁명

정책분야 | 종교

-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는 인정하나 이단, 기타 등으로 인한 개인재산침해와 국익에 저해가 되는 경우는 이의 단체들을 즉각 철폐할 법령을 제정한다.
- 기독교 불교 유교 천주교 등의 종교에 종교청을 두어 각 종단의 성경, 법령 등을 기준하여 종교재판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개인의 재산침해, 불법 등의 문제를 재판할 수 있게 하여 종교계 내의 불법이 자행되지 않게 한다.
- 각 종단들 중에 신도들로부터 받은 헌물, 기부금의 경우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여 행정부에서 서민들의 복지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특별재원과 안식처로 제공되어야 한다.
- 기독교(천주교 불교 포함) 내의 성직자라 함은 세상을 초월하여 영생하는 나라 천국과 세상의 법을 초월하여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자신들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야 할 복음의 말씀을 받고도 부정하게 사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부자가 되고 교인들을 자신들의 종을 만들어 국가와 민족까지를 혼드는 경우가 자칭 크다는 교회들로 만연할 때에 성경 말씀의 법 밖에서 이와 같이 악을 행하는 목사들을 먼저 종교 재판할 방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 해가지지 않던 나라 대영제국,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던 로마제국, 유럽의 악한 교회들로부터 도망친 기독교(청교도)인들이 미국 대륙을 개척하여 강대국인 미국을 건설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었던 나라들은 세계를 지배하였다. 따라서 지금 대한민국이 초대 제헌국회처럼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다면 조국 통일이 되고 세계를 지배·주도하게 될 것이다. 지금의 정치 판도는 표를 얻기 위하여 대형교회, 단체들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형식적인 야합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진정한 애국자들과 성직자들은 가난한 가운데 있으면서 작은 자 가운데서 이순신, 유관순, 주기철, 손양원 같은 순교적인 애국지사들이 있었던 것을 상기하고 기존의 정치가들과 종교계의 모든 자들은 회개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로 대한당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이 위대한 대한민국에 세울 것이다.

정책순위

3

과학 기술의 첨단화, 세계화 등

정책분야 | 경제

- 자원과 재원개발의 증대에서부터 동네 주변 청소까지 전 국민이 이웃과 국가를 위하여 일하는 풍토를 조성한다. 가난할 때의 새마을운동은 전 국민이 힘써 일하여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듯이 모든 국민 남녀노소가 일하는 풍토로 조성될 때에 최대의 경제력이 확보되는 것이다. 또한 주간 6일 근무제로 전환하여 모든 국민은 나라와 민족과 가정을 위하여 일을 하여야 한다.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할 정책수립)
- 중소기업의 육성책을 펴서 대기업화 또는 이윤창출 극대화하고 대기업들은 개인 영달이 아닌 국익과 국민복지 증대적인 기업화와 항상 국가를 대신하여 국민들의 사회 및 생활복지 등에 그 이윤을 돌려야 할 책임을 준다.
- 과학기술 첨단화 및 세계화를 위하여 특수학교 개설 운영과 육성책을 구체화하고 영재 교육을 실시하여 4차원적인 기업을 육성화한다.
- 외교정치는 경제정책을 수반하여 정치와 경제는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해외 주재 대사관 내에 국가 경제부서를 두어 수출입 증대화, 시장개척 등을 겸한다. 또한 해외의 노동시장을 개발하여 한국의 두뇌 인력, 첨단과학기술을 수출하고 1차 산업생산 요원들의 생산성을 후진국의 인력으로 보충하는 방안도 활성화한다.
- 일자리 창출의 문제는 위의 1차 산업생산의 요원으로 노동을 할 생각을 지닌다면 일자리는 얼마든지 있다. 가난했던 1960-1990년대에는 어떤 일들이고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여 오늘날과 같은 풍요를 누리는 경제성장보다 더 행복하였고 이웃간에 사랑이 있었듯이 국회의원이나 행정부의 관리들도 최소 생계비로 생활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최대의 행복지수는 돈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과 이웃을 위하여 자원하여 봉사하는 것이며 비록 자신이 배고파 먹지 못하여도 더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사회풍토와 근로풍토를 조성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경제정책은 저소득정책으로서 반드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경제법안을 제정한다.

정책순위

4

국민건강, 영토권확장, 국토개발, 복지대책

정책분야 | 사회

- 국민간에 불신과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풍토가 있는데 이는 첫째 의로운 교육의 부재요 정치인들의 기만에서 유래하였으므로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선도하는 사회정책과 바른 정치인들과 단체가 국민의 선행을 지속적으로 증대 홍보한다.
- 마약, 도박, 매춘, 음란, 불법, 중북세력,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강력한 대처법안 등과 각 국민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공공 시설물들과 풀 한 포기라도 아끼는 애국애족하는 마음과 국민생활의 안정과 정서를 아름답게 하며 대중교통, 건강운동, 스포츠, 문화행사 등을 육성하여 안락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친다.
- 삼강오륜 윤리 도덕의 강령을 되살려 국가와 국민, 남과 여, 아내와 남편, 어른과 청소년, 친구간의 사랑, 노사가 하나됨, 이웃간의 사랑, 애국애족 등으로 전 국민이 국가와 민족의 번영과 개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사회정책을 펼쳐간다.
- 삼면이 바다인 동·서·남해의 개발과 섬들을 개발하여 관광 자원화 내지는 수산자원을 극대화할 정책과 해양과학을 개발하고 우주를 개발하여 과학화한다.
- 통일국가 형성을 위한 대책과 더불어 통일 후의 중국·러시아를 향한 영토권 확장을 물리적 영적인 지배를 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한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충심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악과 거짓을 행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할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 제헌국회, 이승만 초대정부,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세운 수많은 학교, 병원, 교회들이 의로운 기초를 놓아 오늘의 발전을 기했던 것처럼 대한당은 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 현재 대기업, 큰 부자들이 지닌 재화만으로도 전 국민의 평생 복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 정당은 이를 계몽하고 모범을 보여서 자진하여 국가와 사회로 환원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 모색하고 이를 실천하는 기업과 사람들에게 명예를 주어야 한다. 큰 기업과 부자(재벌)에게는 과징세를 징수하여 사회적 평생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세금의 사용도 간접시설 확장보다는 국민들이 평균하게 잘 살 수 있게 한다.
- 농토와 해상을 보존 유지하되 수익성을 위한 대책 마련과 세계무역협정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치성을 높이는 개발을 한다. 농지로 활용할 수 없는 지역을 과감히 개발하여 서민 주택정책과 공장시설 등으로 확장하여 간다. 특히 통일 후로 비무장지대는 국제자연 공원을 중심으로 개발한다.

5

한민족의 정신문화 계승과 강국 육성

정책분야 | 문화, 예술, 교육, 언론

- 우리 조상들의 문화·예술에 맞는 역사전통문화와 예술을 바탕으로 의식주 생활을 계승하고 전시회, 박람회 등을 열어서 국내외에 홍보한다.
- 세계문화, 예술 중에 가장 인간적이며 아름답고 마음에 기쁨을 더하여 선을 추구하는 음악, 미술, 연극, 영화, 창조적인 문화행사 등을 수입하고 비인간적이며 악을 초래할 문화 예술은 차단한다. 또한, 노인과 상관을 공경하는 예절문화와 아이들을 보호하는 풍토를 조성한다.
- 교육은 먼저 초등단계부터 부정과 거짓하지 않고 정직과 의를 행하는 기초교육을 실시하여 중·고등학교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부정과 거짓을 행하면 죽게 된다는 강력한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모두가 의를 행하게 한다. 또한 계속하여 악과 부정을 행하는 자들은 별도 처벌 관리한다. 특히 전교조와 같이 학교밖 정치투쟁하는 자들은 전부 사직시켜야 한다.
- 국가와 국민과 이웃을 사랑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선행의 교육과 이의행함에 등급한 신상명세서가 각 직장, 사회, 사법 행정시험에 50-90% 이상의 반영과 교사채용에도 엄별하고 대우를 하여야 한다.
- 애국애족교육, 반공교육, 창조교육, 과학교육과 삼강오륜의 정신을 회복하는 교육과 강력한 체력을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
- 공공의 언론은 악한 것들에 대한 보도보다는 선행과 발전적인 면에서의 언론정책을 추구하고 언론은 보도하고 말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부정한 부분을 정하게, 정한 것을 부정하게 왜곡한 보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한다.
- 반인륜, 반도덕적 동성연애, 짐승과의 교합 등은 엄벌에 처한다.

정책순위

6

국가 안보의 실질적인 선진화

정책분야 | 안보

- 그 동안 통일정책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돕는 정책을 대화와 타협이란 각도에서 펼쳐왔다. 그러나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공산주의는 양민학살과 학대 및 인권을 유린하여 왔으며 우리가 아무리 저 악한 자들을 도와주어도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핵무기 개발과 같은 무력도발의 재화 등으로 이용하였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민관은 김정은에게 일체의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된다.
- 국방력 강화를 위하여 북한보다 월등한 개인 및 육해공군의 군사훈련, 예비군훈련, 전국민 비상체제 군사훈련도 보강하여 실시한다. 곧 전쟁 도발시 북한을 단번에 쳐부수고 통일할 수 있는 전 국민의 투철한 정신무장을 하여야 한다.(숫자와 군사력 열세에도 아랍전쟁<제3차 중동 6일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처럼)
- 국내외로 북한 공산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척결한다. 이렇게 불순한 세력들은 북한으로 강제 추방하는 법 제정도 필연하다.
- 군사 무기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세계 어느 나라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최첨단 무기 체계를 유지하고 미국 등과 우방국 동맹을 강화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핵을 보유하여야 한다.
- 한반도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크고 작은 도발과 위협적 언사로 전쟁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에 대한 대응과 위기관리 능력은 미흡하여 국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모든 평화위협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군사력을 완비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바탕으로 총체적인 국가안보 태세를 구축하고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고 안심하면서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 어떠한 경우라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주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보유에 강력히 반대하고 무력화할 방안을 찾아 철저히 굴복시켜야 한다. 북핵은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며 통일을 진전시키는데도 명백한 장애물이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하에 북한을 비롯한 역내의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체계를 철저하게 구축한다. 이를 위해 한미연합 전력을 기반으로 한 능동적인 억제전략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고 한미동맹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킨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이 가시화될 시 남북정상간의 핫라인을 최우선 구축하여 한반도의 위기를 차단한다.
- 미래 전쟁과 동북아 안보환경변화에 따른 잠재적 위협까지 고려하여 첨단화, 과학화된 강군을 육성한다. 현대전의 효과적인 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군구조와 전력구조, 병력구조를 개선하고 고효율 국반 운영 체계를 만들고 이를 위해 미래 지향적인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적정 국방비를 확보하여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한다

정책순위

7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

정책분야 | 윤리

정책, 성실, 공의, 진리를 위한 윤리강령을 전 국민과 대한당 당원들은 지켜야 하며 특히 대의원에 속한 당원들은 이에 준하지 않을 경우 즉시 사퇴하고 평당원으로만 존재한다.

-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직후보자와 대의원들은 당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대한당의 강령에 준수할 것을 서약·서명한다.
- 서문에 밝힘처럼 사리사욕 사치하지 말고 공명정대 근검절약 최소치의 기본생활 등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동방예의지국의 예절과 윤리 도덕을 지켜 준수한다.
- 욕설 비방 모욕 등을 주는 행위를 금하고 타자의 부정을 책하고자 할 때에는 근거에 의거하여 사랑안에서 권면한다.
- 당원들간의 고소 고발을 금하며 당내의 문제를 외부로 유출 시켜서 당의 명예를 훼손시켜서는 안되며 심할 경우는 강제탈당 또는 처벌한다.
- 당직자 공직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은 항상 자기의 유익이 아닌 국가와 국민과 당의 유익 편에서 일하며, 중앙당은 이의 신상필벌을 철저히 적용한다.
- 경로우대 효친사상을 국대화 한다. 특히 노인, 가난한 사람, 장애인, 어린이들을 각별히 보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소유와 정성을 다하여 도와 국민의 본이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M.간디, 백결선생과 같은 본이 되자)
- 지위와 신분을 남용하여 사취 및 가족 지연 학연 등을 돕는 행위는 처벌하나 정당한 수고로 얻어지는 대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가능한 한 사취하지 말고 공의를 위할 줄 아는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
- 당직자 및 소속공무원들은 철저하게 공사를 구별하여 자금 사용을 하여야 한다. 회계책임, 총무부에서는 이를 감시하는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
- 당의 기밀을 유지 보안하여야 하며 사적 유용 등의 책임과 특별히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할 경우는 법적 가중처벌을 받게 한다.
- 일반적으로 재화의 가치가 없는 선물, 서민적인 숙식의 접대 등은 허용하나 사치스런 향응, 금품 등의 수수행위는 금지 및 처벌한다.
- 당내의 공직자 경선을 위한 세부규정(규약)을 마련하여 공적에 의한 선출제도를 확립한다.
- 모든 정치자금은 투명하게 수입, 지출이 되어야 하며 로비활동 역시 사적이 아닌 공적에 의한 선출제도를 확립한다.

정책순위

8

외교 안보 및 세계화

정책분야 | 외교

- ◎ 세계는 정보화 일일시대로 변화되었다. 기존 미국에 의존하던 외교정책을 초월하여 다국적인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각 나라에 설치된 대사관을 통하여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방적인 외교 전략을 펼쳐서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앞당기고 세계를 지배할 경제, 문화, 정치의 외교 정책을 수립 강화한다.
- ◎ 대사관 및 외교관이 파송된 나라의 경제, 문화, 정치, 군사의 교류증대와 국가의 발전을 위한 제반 전문가들을 선임하여 대사관에 공존시키고 파송하며 특히 러시아 대륙으로 이어지는 유럽과 서남아시아의 주도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고용인력 증대 및 자국의 이익을 증대하여 간다.
- ◎ 5대양 6대주를 주도하고 다스릴 교육, 군사훈련, 경제정책훈련, 생산능력의 증대, 언어 훈련, 각 나라에 대한 적응능력을 배양한다.
- ◎ 안보의 최고점은 북한 공산당 수뇌부를 속히 박멸하고 흡수 통일할 제반 정책들을 세워 실천 함이며, 타국의 부정한 윤리, 도덕, 문화 침범 등의 국내간섭을 막는 것으로 국방력 강화, 정 신력 강화, 국민 개인의 애국애족하는 정신 배양이다. 이에 상응하는 국가시책이 시급함에도 나라는 악한 정치인, 경제인들로 흔들리니 강력한 정부를 구축하여 부정부패를 먼저 뿌리 뽑 아야 한다

정책순위

9

소득평균화와 근로(서민)정책

정책분야 | 근로

- 어느 직종을 막론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상위급여 책정은 당연하다. 따라서 일하지 않고 노동쟁의 투쟁만을 일삼는 자들에게는 그에 상응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퇴사하게 하는 법안을 강력히 입법한다.(불법노조) 곧 일하는 단체의 각 사람들과 사업주, 노사가 함께 상벌을 갈음하는 기록을 유지하되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분쟁이 없게 하는 체제를 갖춘다.
- 행정부와 근로자들은 회사의 책임자(공직자의 장)가 근로기준법에 불법하는 행위, 회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사취하는 행위 등을 고발하여 노사(공무원 상하)가 서로 한가족으로 소득의 분배와 대우를 형편에 알맞게 하고, 노사는 또한 직장이 없거나 소외된 서민들을 도와 기회를 제공하여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경주할 법체계를 확립한다.
-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소단위 행정관으로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노인, 장애인, 어린이, 저지 노숙자들에게 사랑의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기업의 부와 정부의 예산투입을 우선하여야 한다. 이의 보강책으로 각 종교단체가 이것을 선행할 경우는 세금을 면제할 수도 있으며 단 이의 시행은 그 지역의 행정관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전 국민의 소득평준화와 서민 정책이 실현되어야 하며 이 일들이 허위, 사취하는 경우에는 엄벌에 처한다.
- 대한당은 분배 및 재분배 구조를 개혁하여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비정규직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민주적 시장경제를 확립하여 경제 주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며 공정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경제체제를 만든다. 이 역사적 과업의 성취를 위해 기업을 포함하여 국민 경제를 구성하는 각 경제 주체들 간의 협력과 대화를 촉진한다.
- 일터에서의 격차와 차별은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와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격차,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장애인차별, 연령차별 등은 아직도 많은 부분이 보이고 있는 현실이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며 각종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와 좋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노사정 생산발전 관계를 구축한다.

- 비정규직에 의존하는 성장전략을 폐기하고 동일 가치노동 동일임금제를 실시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특정 업무를 제외하고는 정규직 채용을 기본으로 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하여 비정규직 남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한다. 단 개인사업자와 회사의 실정에 따라 일정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고용 등을 할 수가 있다.
- 일자리를 갖는 것은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일자리 나눔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공유함으로써 전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강화한다. 실업, 육아, 퇴직, 산업재해 등 근로자가 직면한 사회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해소하며 적정한 최저임금과 실업 급여보장, 직업훈련 확대,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 등을 골간으로 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 고용과 복지, 직업훈련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정책순위

10 국민단합과 세계주도

정책분야 | 통일

- ◎ 대한당은 애국가에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함처럼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시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중왕으로 모시고 대한민국을 진리와 정의로 세계주도 및 최강국화하기 위하여 2016. 2. 15. 진리대한당으로 창당하게 되었으나 5천만 대한민국과 8백만의 해외동포를 종교적 이념을 초월하여 하나로 단합하기 위하여 2019. 11. 14. 당명을 개정하게 되었으니 대한당 당원과 이에 합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기 유익과 탐심을 버리고 스스로 성결 거룩하게 하고, 5천년의 유구한 백의민족 정신을 되살려 불법한 행위들(공직자들의 부정 부패, 국민의 비윤리, 비도덕, 불신, 공산주의 사상, 동성애 등의 악한 행위)을 척결, 회개하게 하고 대한당은 입법 사법 행정부의 관리들을 학벌 재벌 지연에 무관히 의로운 사람들로 발굴하여 이순신 장군, 유관순 열사 등 목숨 바쳐 애국애족한 선진들처럼 세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안보, 외교 등을 전반적인 국가부흥의 지표로 삼는다. 따라서 대한당의 중진들은 무소유적인 정신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국민을 사랑하고 애국하여 세계를 주도할 정신을 갖추어야 한다.
- ◎ (1항) 대한당의 정치력을 1950. 6. 25. 남침하여 70년이 찬 이제까지 무수한 남침과 살인 등으로 한반도를 공산화하려는 3김 북한공산독재체제를 멸하거나 해산시켜 북음평화통일하는데 둔다. (2항) 대한당은 사랑과 용서로 대국민 화합 단결할 수 있는 국가로 세워 나가며 신상필벌의 대국민 애국정신을 고취한다. (3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더욱 굳건히 세워 각자가 노력하여 기업 및 서민경제개발 등으로 각 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간 일한 만큼의 보상책을 강구한다. 따라서 불법기업, 불법노조는 척결하여야 한다. (4항) 시장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에 장애가 되는 재산상속세, 이중과세적인 종교세, 금융실명제, 수출입 관세 등의 세금과 법을 수정 폐지 또는 보완한다. (5항) 사회, 문화, 교육 등을 국민 간의 사랑과 이해와 신뢰와 희생정신 등 주님의 가르침대로 의(義)롭게 만든다. (6항) 작은 섬나라가 해가지지 않던 대영제국이 되고 모든길은 로마로 통했던 로마제국의 탄생은 당시 영국과 로마의 전 국민 정신이 한 나님의 경외하여 군인들과 함께 최강의 대국을 건설하고자 했던 애국정신이 세계를 지배했으나, 다시 이사람들의 탐심과 사치로 망했듯이-, 5천년 한반도 역사도 그러했다 이로 대한당은 이의 본을 삼아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순교자적인 자세로 국민정신과 국방력 등을 강화 단결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통일하고 세계를 주도한다. (7항) 세계주도란 의를 행하는 전체 대한민국의 단합된 지체로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을 대한민국이 주도-, 세계백성이 진리와 정의 안에서 천국적인 삶을 누리게 하는 최종목적이 대한당의 결론인 것이다.

- 일자리를 갖는 것은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일자리 나눔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공유함으로써 전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강화한다. 실업, 육아, 퇴직, 산업재해 등 근로자가 직면한 사회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해소하며 적절한 최저임금과 실업 급여보장, 직업훈련 확대,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 등을 골간으로 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 고용과 복지, 직업훈련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반공정당코리아

No.	정 책
1	멈춰버린 대한민국 규제 조폭 악법 대개혁으로 다시 뛰는 성장동력을 준비하자
2	대한민국 힘, 세계의 힘의 원천, 반공, 문화문명경제를 준비하자.
3	대한민국경제주식회사 설립으로, 세금으로 투자한 국민에게, 매년 주식배당금을 지급하겠습니다.
4	대통령탄핵규정 명문화, 면책규정명문화 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으로부터 독립 국회, 통일헌법제정위원회가동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세금으로 지방 또는 국가정책을 정할시 반듯이 시민사회단체 또는 여, 야. 및 군소정당의 대표자들과 함께 생방송으로 공청회를 열도록 의무화 한다.
6	의료 조직을 대개혁 하자 병원만 돈벌어주는 의료제정, 다시 원상 복구 시키겠습니다.
7	세계경제위기대응센터설치, 세계적 기업인 면책조항 도입, 조폭정당 기업탈취범 특별법제정하겠습니다.
8	모든 교육, 단계적 교육제도 철폐, 국민 누구나 초중고대학을 자유롭게 입학할 수 있는 개방교육제를 신설하겠습니다.
9	공산화, 조폭이 된 공무원노조 조직, 공무원 탄핵조항 삭제, 징계 해고 규정 완하로 공공조직 대변혁을 시키겠습니다.
10	대한민국만년역사위원회, 대한민국미래문명위원회, 대한민국악법 철폐위원회, 대한민국 반공, 문화문명경제위원회 설치

정책순위

1

멈춰버린 대한민국 규제 조폭 악법 대개혁으로 다시 뛰는 성장동력을 준비하자

정책분야 | 행정, 사법, 검경, 국방, 감사

가장 부패한 사유재산권 탈취하는 행정사건을 저지른 서울시 종로구청이 행자부에 의해, 10년째 행정서비스 1위로 지자체 선정되는 몰지각한 지방부패행정, 지방부패의회 권력의 개혁 무풍지대, 그러면 전국지자체 공무원들은 종로구보다 더한 쓰레기들이란 말인가?

- ◎ 대한민국 힘의 원천, 반공문화·문명·경제위원회 설치
 - 세계경제위기대응센터 설치, 반국가테러(전쟁)위기대응센터 설치
 - 약탈행정법개폐위원회, 통일헌법제정위원회, 대통령탄핵소추사유 명문화
 - 국민권리장전보호법제정, 제한받는 권리배상제(공무원구상권제) 실시, 부동산매수제도폐기
- ◎ 막강국민재산정보 공무원권익위 된 국민권익위원회 해체,
- ◎ 국토부, 환경부, 여성부, 복지부 해체,
 - 복지재정 간접지원폐지, 현금직접수령대폭확대, 복지인력인력재배치
 - 국가개입 조폭화된재개발조합감독위원회 및 건설분쟁감시위원회
 - 국가 조폭 된 공무원노조의 개혁
- ◎ 국민약탈법 - 개발제한구역법 폐기-청원경찰제 폐기, 강제재량권확대
- ◎ 국민약탈법 - 자연보전법, 공원법 통폐합, 문화재보호법재산권침해규정완화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체 후 산악안전구조센터로 개편
- ◎ 국민약탈법 - 법원경매제도 개혁, 기업회생법 개폐, 법원부정감정인 제도개선,
- ◎ 국민약탈법 - 국세, 지방세법 개폐, 조세심판제도 개선
- ◎ 국민약탈법 - 서울시 비오톱, 문화재발굴의무화조례 폐지

1. 행정

국민권익위, 국토부 환경부 여성부 해체, 조직 통폐합- 허가권 10/1 축소 폐지

- ① 국토부-건설부동산, 교통기술, 국가검정기술, 환경육해공재난구조본부, 국토-교통-도로-항만관리청, 전문 분야로 해체 분화
- ② 기초자치제 폐지, 광역화만 지방자치허용,
- ③ 지방의회폐지, 광역화자치의회만 허용, 지역구선출폐지, 탈정당비례대표제선출
- ④ 주식회사개념도입 수시 공무원 퇴출, 임용제 허용, 공무원신분보장제 폐지

- ⑤ 공무원 연금 폐지, 노동의 강도에 따른 보수 차별제 도입
- ⑥ 지방자치 허가권, 입안권, 조례 제정권 10/1로 축소
- ⑦ 지방의회 의원 각종 행정위원회 참여 불허
- ⑧ 지방자치조직 3/1축소, 구조조정으로 복지전문공무원 배치
- ⑨ 소방공무조직 소방재난안전경찰로 국가공무원으로 신분변경
- ⑩ 시민사회종교 조직 정부, 지방 사업 및 복지시설 대행 수행 금지

2. 사법

- ⑪ 대법원개혁, 대법관확충, 법관보수 2배인상, 상고심사제폐지
- ⑪-1 변호사시험제 수시제 변환, 대학미수학자대상 사법시험부활, 법대교수변호사자격증부여
- ⑪-2 대법관 정수 33인 이내 증원

3. 검경

- ⑫ 검찰의 기소권, 법원내 법원검찰, 선관위검찰 설치
- ⑬ 경찰조직 개편, 수사전문청, 보안전문청, 정보전문청, 가정실종자수사전문청, 공수처전문청, 행정, 형사 전문 경찰로 조직개편

4. 국방

- ⑭ 주적 확대에 따른 전략 전술 부대 설치
- ⑮ 국가테러방비안전 전략 전술 부대 설치
- ⑯ 전통 육군 공군 해군의 전략 통합군부대 설치
- ⑰ 국방비 재정비, 국방전략자산 전문부대 설치

5. 감사 회계

- ⑱ 감사원의 혁신. ⑲ 회계감사원 설치 ⑳ 정부·지자체 회계직 감사직 독립청화

▣ 현황과 문제점

- 시대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위에 군림하여 미래문명을 전혀 준비함이 없이 과거 체제와 조직 이론에 기대어 망국적 경제 체제를 완전히 개조해야 함

▣ 목표

- 정부 지방 조직의 리모델링화

▣ 이행방법

-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책임지어야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정치 사회 조직 일반

의 망상적 통일정책과 중복 좌파적 성향의 투쟁을 종식시켜 사회불안 비용과 정치 일반 사회의 낭비적 좌파 성향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여 비용충당

▣ 이행기간

- 2006년 6월부터 - 2026년 6월까지

▣ 자원조달방안 등

- 대북 퍼주기 예산 절감, 기업의 정치조직의 상납 비용 금지, 시민사회에 뿌리는 정부 지자체 사업 대행처리 중지, 낭비 전시행정 중지, 도둑질 당하는 경제활성화 예산 절감사업 시행으로 자원 마련

정책순위

2

대한민국 힘, 세계의 힘의 원천, 반공, 문화문명경제를 준비하자.

정책분야 | 국방, 안전, 외교, 통상, 분야

반공정당 코리아당, 반공 문화·문명·경제위원회가 책임지겠습니다.

1. 통일

북진통일, 흡수통일 정책

- ① 국가비용 절감으로 지속가능한 통일경제발전5개년계획 수립
- ② 통일 헌법·정부 조직 구성 통일위원회 발족
- ③ 통일수도 강역 - 남북한 휴전선 전부/개성·장단·문산·철원 금강산·고성일대
- ④ 통일수도 명칭 - 아사달
- ⑤ 통일정부 권력구조 - 통일대통령 1인 임기10년-국민직접선거
- ⑥ 지방자치 - 대통령남북총리임명제 각1인 임기5년
- ⑦ 국방원, 사법원, 정보원, 경제원, 감사회계원, 헌법원, 대법원, 선관위
- ⑧ 통일헌법 육법전서제정
- ⑨ 통일국가 명칭 - 코리아 COREA
- ⑩ 통일기·애국가 - 삼태극기

2. 북한왕조 종북좌파 타도 정책

- ⑪ 친북한기업·정당정치세력·경제세력·위장국내재외노동자세력·종교사회단체·공공조직
축출로 국가적, 사회적비용 절감으로 북진통일비용 재원 마련

3. 국방

- ⑫ 핵무기, 수소폭탄 무력화 전략·전술·기술·개발
- ⑬ 첨단 ICT 통합국방군 설립

4. 안보

- ⑭ 국가안보도청법제정-국내외를 총망라 한 도청기술개발
- ⑮ 국가테러방비안전법 제정
- ⑯ 대미안보 우호 강화
- ⑰ 주변국 주적을 행한 안보전략 개발

5. 외교 및 대외 통상

- ⑱ 북진통일 국제외교 강화

- ①9 FTA등 통상외교 강화
- ②0 내국인 우선보호 정책, 재외 국민보호를 위한 교민청 신설

■ 목표

- 북진통일, 흡수통일

■ 이행방법

-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책임지어야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정치 사회 조직 일반의 망상적 통일정책과 중복좌파적 성향의 투쟁을 종식시켜 사회불안 비용과 정치 일반 사회의 낭비적 좌파 성향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여 통일 안보 국방 예비 비용으로 적립하여 사용함.

■ 이행기간

- 2006년 6월부터 - 2026년 6월까지

■ 재원조달방안 등

- 대북 퍼주기 예산 절감, 기업의 정치조직의 상납 비용 금지, 시민사회에 뿌리는 정부 지자체 사업 대행처리 중지, 낭비 전시행정 중지, 도둑질 당하는 경제활성화 예산 절감사업 시행으로 재원 마련

정책순위

3

대한민국경제주식회사 설립으로, 세금으로 투자한 국민에게, 매년 주식배당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정책분야 | 경제, 일자리, 노사, 세금, 금융

대한민국경제주식회사 개념으로 모든 공공조직을 대변혁해, 이익잉여금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1. 경제

ICT 융합 경제학 확립, 원아시아 원히스토리 아시아 공동체 주창

- ① 국가비용 절감으로 지속 가능한 통일경제발전5개년계획 수립
- ② 고대역사경제학 ③ 문화경제학 ④ 문명경제학 ⑤ 민권경제학
- ⑥ 매국경제정책 폐기 ⑦ 과거죄자수기업인사면정책수립
- ⑧ 기업인전용연금정책실시 ⑨ 부동산등재산평가제폐지 및 담보대출활성
- ⑩ 국민지식재산권등재사업 ⑪ 친원전정책으로 원자력산업기반 재건

2. 일자리, 노사, 기업

- ⑪ 일자리나눔, 2/1 3/1 근무, 투잡 쓰리잡 허용
- ⑪-1 복수노조제 및 귀족노조폐지, 대기업대주주 가족 기업세습경영배제
- ⑪-2 건설(공장)현장업무방해죄 조직폭력 증강력 범죄로 징역 10년형으로 단죄

3. 세금, 교통과태료 인하

- ⑫ 양도세, 재산세, 부가가치세등 절반 인하, 상속세 및 증여세 폐지
- ⑬ 교통과태료 절반 인하
- ⑬ 고속도로 속도제한 시속 130km 허용

4. 금융

- ⑭ 서민금융 자본금 1000억원이하 소규모 금리 저리 은행 설립자유화
- ⑮ 기준금리 0%달성, 금융이자 인하
- ⑯ 서민전용(제2금융권) 기업전용(제1금융권) 분리운영
- ⑰ 서민금융 신용·소득 증빙제도 철폐
- ⑱ 비트코인(bitcoin) 국제통화로 편입허용. 거래 합법화
- ⑲ 한국은행, 지자체 코인 불허,

5. 생활경제

- ⑲ 금융소비자원설립

- ㉔ 긴급민생지원은행설립, 식량연료의료지원긴급센터설립
- ㉕ 신용불량자사면복권, 은행부실채권 휴지화정책 수립

▣ 현황과 문제점

- 시대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위에 굴림하여 미래문명을 전혀 준비함이 없이 과거 체제와 조직 이론에 기대어 망국적 경제 체제를 완전히 개조해야 함

▣ 목표

- 빈익빈 부익부 정책 폐지로 차별 없는 금융이용

▣ 이행방법

-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책임지어야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정치 사회 조직 일반의 국민재산을 축내는 정책 폐지와 정부와지자체 행정조직의 리모델링 및 구조조정으로 이행.

▣ 이행기간

- 2006년 6월부터 - 2026년 6월까지

▣ 자원조달방안 등

- 낭비되는 국가예산 절감과 정부조직 및 인력 구조조정으로 달성

정책순위

4

대통령탄핵규정 명문화, 면책규정명문화 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으로부터 독립 국회, 통일헌법제정위원회가동

정책분야 | 입법, 대통령, 선거관리위원회

반공정당 코리아당 통일헌법제정위원회에서 준비하겠습니다.
부정선거의 주범, 국회와 지자체, 대법원을 개혁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국회, 대법원, 행정부로부터 독립시키겠습니다.

1. 입법

북진통일 비상시국 상태로 변환

- ① 여의도 국회를 미8군 주둔지역인 국립박물관과 교체
- ② 국회의원선출 지역구제 폐지, 정당권역별비례대표제로만 선출
- ③ 각종법률폐기위원회설치 ④통일수도 명칭 - 아사달
- ⑤ 통일정부 권력구조 - 통일대통령 1인 임기10년-국민직접선거
- ⑥ 지방자치 - 대통령남북총리임명제 각1인 임기5년
- ⑦ 국회 상·하 양원제

2. 선거관리위원회

- ⑪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회 선거관련법 입법 거부권 행사권 부여
- ⑪-1 선거관리위원 중 현직 판사 검사 전현 정당원은 제외한다.
- ⑪-2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시도 급 선거관리위원장과 함께 선거로 선출한다.
- ⑪-3 선거관리위원회 모든 도우미 직은 무작위 국민동원제로 실시한다.
- ⑪-4 컴퓨터(전산)선거·개표금지, 선관위 독립적인 선거수사 및 기소권 부여
- ⑪-5 선관위직원 경찰 검찰 법원 선거범죄 묵인죄 5년 징역형 입법
- ⑪-6 각종노조, 위장당원, 각종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인 선거업무참여 처벌죄 신설

3. 대통령

- ⑫ 대통령이하 지방단체장 및 선출직 예비 후보자 상시 선거운동 허용
- ⑬ 대통령 탄핵사유 명문화, 5년 중임 허용, 뇌물성정책 형사고발죄 신설.
- ⑭ 대통령 지방단체장 국회 지방의회 정부예산 차별집행.뇌물성 처벌죄 신설

4. 통일헌법

- ⑮ 남한대통령 5년임기 중임제, 통일대통령 10임기 단임제 개헌
- ⑯ 통일정부 이원집정부제 및 내각제 가미 권력구조개편

- ⑰ 통일헌법제정 ⑱ 대통령, 지방단체장, 국회의원 임기1년 후 해산권 허용

5. 헌법재판소

- ⑲ 대법원판결 헌재심사권 부여
헌재재판소 구성은 대법관 및 30년이상 재직 법대교수로 임용제한
- ⑳ 헌법개정심사권부여

□ 목표

- 북진통일, 흡수통일

□ 이행방법

-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책임지어야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정치 사회 조직 일반의 망상적 통일정책과 중복좌파적 성향의 투쟁을 종식시켜 사회불안 비용과 정치 일반 사회의 낭비적 좌파 성향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여 통일 안보 국방 예비 비용으로 적립하여 사용함.

□ 이행기간

- 2016년 6월부터 - 2026년 6월까지

□ 자원조달방안 등

- 대북 퍼주기 예산 절감, 기업의 정치조직의 상납 비용 금지, 시민사회에 뿌리는 정부 지자체 사업 대행처리 중지, 낭비 전시행정 중지, 도둑질 당하는 경제활성화 예산 절감사업 시행으로 자원

정책순위

5

인건비로, 사회복지단체로 줄줄 새는 복지재정, 국민께 직접 지출하고, 결혼하는 젊은이에게 공무원, 공공단체직원으로 우선 채용 및 각종 복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책분야 | 보건복지

사라지는 대한민국 인구절벽, 결혼한 유자녀 젊은이를 공무원과 공공단체직원으로 우선 채용하고, 각종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직접 국민께 지급하는 복지제정으로 모두 개혁하겠습니다.

1. 복지

보건복지부의 해체 및 전문화 조직 구성

- ① 보건복지부를 해체한다.
- ② 의료보험관리청을 설치하며 낭비적인 무상건강진단을 폐지한다.
- ③ 건강식품·식량자급종자 안전청을 설치한다.
- ④ 복지공무·경제청을 신설한다.
- ⑤ 신약개발 및 대체의학청을 신설한다.
- ⑥ 국가병원·의료자원청 신설한다.

2. 여성

- ⑪ 가정보호, 여성성침해, 여성인권, 여성 노동력 착취하는 양성평등 제도하의 여성정책 개선
- ⑪-1 여성, 가정, 폭력실종수사처 설립

3. 아동

- ⑫ 아동의 육아는 원천적으로 국가가 책임지어야 한다. 기업탁아소의무설치운영제
- ⑬ 무상복지를 지양하고 잉여인력 여성 노인 인력을 투입하고 보수는 국가가 지급하는 각종 복지자금으로 충당한다.

4. 가정

- ⑭ 가정의 구성원은 행복한 가정을 영위할 권한이 있다.
- ⑮ 국가는 가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정책에서 우선하여야 한다.
- ⑯ 국가는 하위계층에게 보살핌을 주어야하나 유노동 유임금제로 변환한다.
- ⑰ 국가는 가정의 육아 교육 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5. 노인

- ⑱ 대한민국을 건설한 노인을 위한 정책을 활성화 해야한다.
- ⑲ 복지센터에서 아동 여성 가정 교육을 위해 노동을 제공하고 농임을 지급한다.
- ⑳ 노인 지식재산권을 국가가 매입하며, 노인의 재교육 재취업을 위한 복지정책을 수립한다.

■ 목표

- 북진통일, 흡수통일

■ 이행방법

-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책임져야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정치 사회 조직 일단의 망상적 통일정책과 중복좌파적 성향의 투쟁을 종식시켜 사회불안 비용과 정치 일반 사회의 낭비적 좌파 성향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여 통일 안보 국방 예비 비용으로 적립하여 사용함.

■ 이행기간

- 2006년 6월부터 - 2026년 6월까지

■ 재원조달방안 등

- 대북 퍼주기 예산 절감, 기업의 정치조직의 상납 비용 금지, 시민사회에 뿌리는 정부 지자체 사업 대행처리 중지, 낭비 전시행정 중지, 도둑질 당하는 경제활성화 예산 절감사업 시행으로 재원 조달

정책순위

6

의료 조직을 대개혁 하자 병원만 돈벌어주는 의료제정, 다시 원상 복구 시키겠습니다.

정책분야 | 보건의료

종합병원 모든 진료과에 세분화 된 진료과목을 단순화 시키겠습니다. 한과를 20개과로 나누어 진료해, 돈 뜯어먹는 의료재정 확, 바꾸겠습니다.

1. 의료, 의약, 한의, 대체의술

- ⑪ 대체의술을 허용한다

2. 국민연금 공공연금

- ⑫ 국민연금 공공연금 통합
- ⑬ 공공연금폐지

3. 첨단의료기술 합법화를 위한 의학제도 개혁

- ⑭ 의학신기술처를 설립한다.
- ⑮ 의과대학을 개편하고 의료인을 전부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한다.
- ⑯ 의료, 의약, 한의, 한약, 대체의료, 통폐합 한다.
- ⑰ 병의원을 모두 공공자원화 한다.

4. 의료인 육성

- ⑱ 첨단화하는 의료발전에 맞게 교육제도를 개편한다.
- ⑲ 연중시험제로 의료인을 다수 양성한다.
- ⑳ 공공의료와 사적의료 시설을 분리 운영한다.

□ 목표

- ◎ 국민건강

□ 이행방법

- ◎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책임져야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의료사회 조직 일반의 일반 사회의 낭비적 국가 예산을 절감하여 의료제도를 개편한다.

■ **이행기간**

- 2006년 6월부터 - 2026년 6월까지

■ **재원조달방안 등**

- 의료보험 연기금등을 구조조정하여 자금을 조달한다.

정책순위

7

세계경제위기대응센터설치, 세계적 기업인 면책조항 도입, 조폭정당 기업탈취범 특별법제정하겠습니다.

정책분야 | 재경, 세무, 행정자치

세계경제위기대응센터설치로, 모든 기업의 어려움을 극복시키겠습니다. 책임지는 세무사법으로 고치고, 강제징수제를 진화적인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시군구자치조직을 모두 없애겠습니다. 기업탈취 조폭 정당인들 특별처벌법을 제정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경제주식회사 설립 -민족자본 민족은행 설립

국가도 회사다. 잉여예산제 실시

- 가. 민족자본 민족은행 17개시도에 설립 - 경제활성화대책 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시
도농민 경제지원 대책
- 나. 신용불량자 사면 - 신용불량자도 담보와 지식으로만 재할 대출을 받는다.
- 마. 백화점세일기간 주차장 폐쇄 - 교통정체 해결
- 바. 정부규제 정책시행 대행업무 축소
- 사. 공공 청사 축소
- 아. 정당, 정치 중립의무 위반 시민단체 지원 배제

2. 국가세계경제위기대응센터 설치

- ⑪ 남북한, 중국, 일본과의 경색국면, 유럽 및 서양사회의 경제위기에 따른 국민보호정책 수립

3. 정당조직폭력배 척결

청탁인사, 개방허가제, 위원회공화국폐지, 행정조례축소

- 가. 민족자본 민족은행 설립 - 담보대출허용, 신용대출과 분리
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대책
- 나. 신용불량자 사면-신용불량자도 담보 대출제도
- 다. 정당제 조직폭력행정 뿌리 뽑는다
청탁인사, 개방허가제, 위원회공화국폐지, 행정조례축소
- 라. 부당감정 감정사 감정기관개혁과 검찰고발 및 손해배상청구
- 마. 집주인 공짜 아파트 공급 -재개발 재건축 적극지원
- 바. 분양가 상한가 통제
- 사. 불법주차공과금연체차, 세금기여자, 영세사업자, 생계곤란자, 각종 부담금 면제 사면 조치

■ 현황과 문제점

- 낭비적 예산집행 / 신용제도, 소득증빙제도로 재산권행사제한, 연체자만 양산, 경제활동위축 해소, 재산세 2%이하로재산평가 현실화로 실질소득 증가, 부익부 빈익빈 정책 폐지

■ 이행방법

- 정책변경

■ 이행기간

- 2006년 6월부터 - 2026년 6월까지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정 구조조정

정책순위

8

모든 교육, 단계적 교육제도 철폐, 국민 누구나 초중고대학을 자유롭게 입학할 수 있는 개방교육제를 신설하겠습니다.

정책분야 | 교육

조폭화 된 명문 고등학교, 명문대학 등식을 확 깨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조폭화 되는 공산화교육자의 처벌법을 마련하겠습니다.

1. 교육제도

- 가. 단계적 교육제 폐지
- 나. 유아, 초등, 중등 교육 의무화, 고등학교폐지
- 다. 6년제 고등대학 직업교육제도 실시
- 라. ICT 직업교육, ICT인문역사교육, ICT인성법률교육
- 마. 교육자치제 폐지, 서울대학 및 문과대 폐지, 기술과학개방대학원으로 개편
- 사. 법과대학 부활, 아. 대학 미수학자 대상 사시부활

2. 족보종친회청 설치, 고대역사연구원설치, 원구단, 장충단 복원,

- 가. 종친회 공영화 재산제 실시, 1인1족보 지원
- 나. 족보 온라인 발급제도 도입
- 다. 종친회 협동조합 지원 - 전통 세습 문화 사업화 지원
- 라. 전국성씨종친회 무상이용 빌딩 제공
- 마. 역사도서관 설치 사. 역사 시험 복원
- 아. 미래교육 - 공공자산 사교육 서당화 - 실제미래직업교육
- 자. 고학력실업자 퇴직자 미래직업 교육직 채용 - 유아교사, 유치원교사, 초중고교사, 대학 직업교육 교사제 도입 및 채용제도

3. 원아시아 원히스토리 고대역사연구원설치

향구적인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위한 고대역사연구원 설치

▣ 현황과 문제점

- ◎ 패권적인 국가 우월주의 민족우월주의 종교우월주의 타파하여 아시아의 시원의 역사를 연구하여 향구적인 아시아와 세계 비폭력 평화 정착을 위한 연구소 발족이 시급함

■ 목표

- ◎ 전쟁을 향한 현실과 미래시대 대비

■ 이행방법

- ◎ 동북아역사재단을 해체 개편한다.

■ 이행기간

- ◎ 2006년 6월부터 - 2026년 6월까지

■ 재원조달방안 등

- ◎ 문화재청예산전용, 동북아역사재단 재원을 사용함

정책순위

9

**공산화, 조폭이 된 공무원노조 조직, 공무원 탄핵조항 삭제, 징계
해고 규정 완하로 공공조직 대변혁을 시키겠습니다.**

정책분야 | 특수사회, 시민, 정당, 중앙정부지방행정청설립, 지방행정개혁

국민권익을 탈취하는 공무원권익위원회가 된, 국민권익위원회 즉시 해체 단속, 규제, 담합조직 건축사회 세무사회 변호사회 법무사회 공무원노조, 정당조직의 담합해 약탈경제를 박살내겠습니다.

1. 시민 종교 사회

시민종교 봉사적 조직이 국가시설과 예산을 이용하여 이념전파 정당정치 종교등의 선교를 목적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아웃제 신설

2. 자유 민주주의 시민교육의 제도화

성매매 자유촌 설치

가. 인신매매 납치 고용 강력 처벌

나. 성매매 개인사업자 부여

다. 위생증미소지자 -강력처벌

라. 성매매 금지법 개정 추진

마. 성매매 노임착취 강력처벌

3. 정당 및 지역패권주의

가. 정당원 또는 지지자가 지지대가로 행정허가 또는 사업에 불개입 조치

나. 국회, 국회의원 행정권행사에 불개입 원칙 확립

4. 중앙정부지방행정청

가. 국가사무지방자치행정에 위임업무폐지

국가사무는 중앙정부가 지방행정청을 설립하여 직접 수행한다.

5. 지방행정개혁

가. 지방시군구단체장 및 의원은 선출직폐지 전까지 정당가입 금지

나. 지방행정청은 복지 교통 등 허가관리직 폐지하고 봉사조직으로 변환한다.

□ 목표 (현황과 문제점)

- 점증하는 성폭력범 대비 정책, 무너지는 가정보호, 국회입법

▣ 이행방법

- ◎ 국회입법 및 공청회

▣ 이행기간

- ◎ 2006년 6월부터 - 2026년 6월까지

▣ 재원조달방안 등

- ◎ 행정조직 개편과 구조조정으로 모교달성/ 민간자본 참여

정책순위

10

대한민국만년역사위원회, 대한민국미래문명위원회, 대한민국악법 철폐위원회, 대한민국 반공, 문화문명경제위원회 설치

정책분야 | 국가연구대통령실

용산에 국본(나라의근본)전당, 세본(세계의 근본)전당의 대통령실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만년 역사위원회, 대한민국미래문명위원회, 대한민국악법철폐위원회, 대한민국 반공, 문화문명경제위원회 설치로 세계문화문명을 책임지는 대한민국으로 만들겠습니다.

1. 고대역사

북진통일, 흡수통일 정책에 기여되는 부분

- ① 진보이념으로 무장된 대남통일 전선 정책을 무력할 수가 있음
- ② 아시아의 원류 역사를 통한 국가간 민족간 동질성 회복
- ③ 북한왕조 세습정권과 인간성 말살 정책, 독재정권 악습을 제거
- ④ 세뇌된 북한 지도층의 재교육으로 민족문화 동질성 고취
- ⑤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종말을 앞둔 시점에 새로운 문명 탄생을 모색
- ⑥ 살인적인 종교간 갈등을 해결
- ⑦ 인공지능 로봇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경제체제의 연구
- ⑧ 통일헌법 육법전서제정에 다문화 이념 수용
- ⑨ 해방전쟁에 동원되는 최소한의 살상을 수반 전쟁수행 방법연구
- ⑩ 이념간 국가간 문화간 이해 충돌을 해결할 다자간 동질성회복 방안 연구

2. 미래시대준비

- ⑪ 언제까지 화폐교환의 경제체제가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
- ⑫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북미 남미 체제를 어떻게 비폭력평화 세계를 구축할 것인가
- ⑬ 인공지능에 인간성 및 인권을 집어넣을 수 있는가
- ⑭ 인공지능 시대에 맞서 인간의 먹거리와 놀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 ⑮ 세계인구는 폭발일로인데 어떻게 3000년 정도의 문명차이를 조정할 것인가
- ⑯ 인간 생명의 경시로 인한 종교전쟁 패권전쟁 부의 집중화 정책을 어떻게 완하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 ⑰ 독재경제체제와 자유경제 체제하에서 독점적 노동착취와 부의 집중 현상을 해소할 연구
- ⑱ 인공지능시대에 인간 사회의 낙원은 가능한가

3. 이해충돌의 시대와 문명의 충돌시대 해결방안

- ⑲ 북한왕조 종북좌파와 애국자유주의 입각한 보수주의와 싸움 해결 방안

- ㉔ 남한 사회의 자유주의 자본주의와 북한의 독재 작당적인 민주주의 계획경제와 대한민국의 신진세력인 작당적인 부패한 진보 보수 주의자에 의한 왜곡된 국가이념의 재확립의 필요성 및 해결방안으로서의 북진통일과 흡수통일의 당위성연구

□ 목표

- 북진통일, 흡수통일, 역사연구, 미래연구

□ 이행방법

-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책임지어야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정치 사회 조직 일반의 망상적 통일정책과 중복좌파적 성향의 투쟁을 종식시켜 사회불안 비용과 정치 일반 사회의 낭비적 좌파 성향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여 통일 안보 국방 예비 비용으로 적립하여 사용함.

□ 이행기간

- 2016년 6월부터 - 2026년 6월까지

□ 자원조달방안 등

- 동북아역사재단의 재편



가자환경당

No.	정 책
1	탈이념 · 친환경 · 친경제 온-오프라인 캠페인 정책연대정당으로 한국정당사의 새지평
2	비닐플라스틱 쓰레기 100% '재활용'
3	무본드 무라벨 페트병 100% 재활용
4	전국의 235개 120만톤 쓰레기산 100% 제거
5	수돗물 음용율 현 5%에서 50%로 제고(OECD 수준)
6	과대포장 OUT - 무포장 OK
7	미세먼지 OUT - 기후변화 대응
8	바다살리기 - 아시아 및 태평양 연대를 통한 해양쓰레기 대청소
9	감염병 질환 예방 및 치료의 고도화
10	가자환경당 각지역 환경공약

정책순위

1

탈이념·친환경·친경제 온-오프라인 캠페인 정책연대정당으로 한국정당사의 새지평

정책분야 | 환경

□ 목 표

- 창당과정에서부터 오로지 환경보호와 환경을 사랑하는 풀뿌리당원들이 중심이 되어 탈이념 친환경·저비용 고효율·범시민 親시장·쏘당원의 친구화·친환경 고소득의 정당을 지향한다.
- 지역에 뿌리를 둔 지역당과 생명·생활 의제에 뿌리를 둔 의제별 당원 모임, 그리고 청년당원들의 연합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모든 조직과 활동은 지구환경 살리기운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하며, ‘가자환경당’ 창준위발기 취지문의 정신에 따라야 한다.

□ 이행방법

- 정당의 일상활동을 통하여 진행
- 생활 속에 녹아있는 실천방안 의제들을 발굴하여 전 시민 생활참여 활동

□ 이행기간

- 정당의 일상 홍보활동으로 상시적으로 진행

□ 자원조달방안 등

- 별도재원 필요 없음

정책순위

2

비닐플라스틱 쓰레기 100% '재활용'

정책분야 | 환경

■ 문제점

- 대한민국의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가장 치유하기 힘든 고질적 악성 쓰레기는 비닐 프라스틱 쓰레기임
- 2018년 4월 1일 중국발 쓰레기대란 이후 환경부는 단 한가지도 효율적인 대책도 결과도 내어 놓지 못하고 있어 전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하는 실정임.

■ 목 표

- 쓰레기를 돈으로 만들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한다.
 - 1) 핵심전략 : 쓰레기 발생량 보다 처리량이 많아야 한다는 것
 - 2) 쓰레기를 경제적 재화로 만들어 내는 발상을 전환이 필요.
 - 예) 헌옷, 스티로폼, 고철 등은 재화로 바뀌어서 이제는 쓰레기가 아님
- 특히 가장 고질적인 비닐플라스틱쓰레기를 100% '재활용' 정책으로 대한민국 쓰레기 정책을 획기적으로 혁신한다.

■ 이행방법

- 비닐플라스틱 쓰레기를 100% 재활용 할 수 있는 '환경기술'은 이미 잘 개발되어 있음. 이를 입법재정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자 함.

■ 이행기간

- 관련 법률 제정과 개정 : 제22대 국회 회기 기간 내에 추진(2024년에서 2028년까지)

■ 재원조달방안 등

- 관련 법률 제정에 따라 재원 마련하여 시행.

정책순위

3

무본드 무라벨 페트병 100% 재활용

정책분야 | 환경

■ 문제점

- 페페트병은 우수한 품질과 효능으로 인간이 만든 탁월한 발명품으로 인류의 생활향상에 크나큰 기여를 하고 있으나, 인간이 이를 너무나 남용하고 있어 전세계의 생태계를 파멸시키고 있음.
- 더구나 대한민국(환경부)는 페트병에 라벨을 접착할 때, 유해본드로 접착하도록 ‘환경부고시’에서 강요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
 - 1) 고온의 양젯물로 장시간 세척하고 있어 2차오염 및 미세먼지 발생
 - 2) 잔류본드로 인해 고급의 섬유나 식품용기로의 사용 불가

■ 목 표

- 환경부 고시에서 잉터리 규제 단서를 달아, 페트병 라벨을 유해본드로 접착하도록 정부가 강요하고 있는 악성 규제 철폐
- 무본드 절취선 라벨의 페페트병은 고가의 재화로서 중요한 자원이므로 페페트병을 고가의 재화로 재활용할 수 있게 입법화하여 쓰레기 대란도 해결하고 재활용시장과 영세민들의 기초소득 증대에 기여할 예정.

■ 이행방법

- 페트병 라벨 관련 상위법안 개정 - 페페트병 100% 재활용, 고급자원화

■ 이행기간

- 관련 법률 제정과 개정 : 제22대 국회 회기 기간 내에 추진(2024년에서 2028년까지)

■ 재원조달방안 등

- 관련 법률 제정에 따라 재원 마련하여 시행.

정책순위

4

전국의 235개 120만톤 쓰레기산 100% 제거

정책분야 | 환경

■ 문제점

- 전국에 방치된 쓰레기산 235개의 120만톤 쓰레기더미는 국가의 수치이며 행정실패의 산물임.
- 특히 CNN발 경북 의성의 ‘쓰레기산’ 등은 충격적 현실임.
- 재활용이 어렵게 만들어진 제품은 분리수거장을 거치더라도 중국에는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해외에 불법 수출되고 있음.
- 이런 현실 속에 ‘쓰레기 대란’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미래세대에 대한 커다란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

■ 목표

- 전국의 쓰레기산 등을 제거하고 관리하여 깨끗한 한국 이미지 형성

■ 이행방법

- 1년내 전국의 쓰레기산 모조리 제거
- 재발 시 땅주인과 처리업자, 실사업자, 위탁자 등을 찾아내어 쌍벌처벌 강화.
- 향후 신설 쓰레기선별장은 신설 공공기관 옆에 설치하여 관리
 - 독일, 일본 등의 사례 참조
- 의료폐기물, 산업폐기물은 발생부터 처리까지 처리이력제 실시
- 비닐플라스틱 등 악성쓰레기 재활용을 제고

■ 이행기간

- 2024년에서 2028년 사이에 단계별로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행정조직을 활용하여 시행하며, 중앙정부 2,000억원 초기 투입

정책순위

5

수돗물 음용율 현 5%에서 50%로 제고(OECD 수준)

정책분야 | 환경

■ 문제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직접 음용률 평균은 51% 수준임. 네덜란드가 87%, 스웨덴 86%, 스위스 62%, 칠레 60%, 호주 54%, 캐나다 46%, 일본 46% 수준으로 우리나라 음용률 5.3%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 우리나라 현행 수돗물 음용율 5%는 수돗물 행정 불신분만 아니라 정부전체의 불신임.

■ 목 표

- 현행 수돗물 음용율 5%를 OECD수준(50%)으로 제고

■ 이행방법

- 남한강 낙동강 등 취수원 전역의 주변 오염업체 철폐 및 폐수처리 고도화
- 수질검사 결과의 현실화, 고도화
 - 가정의 수도꼭지까지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실제 송수관 신뢰도 제고
- 4대강 녹조라떼 개선과 방지책 수립
- 상수원 오염업체 처벌기준 상향
- 크레졸 정수방법 대신 탄소법 등 신기술 활용

■ 이행기간

- 2024년에서 2028년 사이에 지자체 별로 단계적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지자체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시행하면 별도 예산 필요 없음.
- 중앙 예산의 경우도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시행함.

정책순위

6

과대포장 OUT - 무포장 OK

정책분야 | 환경

■ 문제점

- 현행 법령에서는 이미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품 판촉을 위해 과도한 추가 포장 등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
- 더구나 포장박스의 코팅처리로 재활용이 불가하여 포장박스 쓰레기를 양산하는 실정

■ 목표

- 과대포장을 금지하고 무포장 확대.

■ 이행방법

- 패키징환경진흥법 제정 - 포장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법안 제정
- 3중포장 절대 금지, 과대포장 택배 시정
- 포장율 120% 초과 금지 및 위반시 현행 300만원 벌금의 상향
- 마트에서 (유럽형) 무포장시스템 도입
- 시장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부직포 대체 : 태국 등의 사례)
- 재활용이 어려운 코팅종이 포장재 금지
- 다양하고 우수한 장비구니 개발 보급과 캠페인을 통한 범국민 의식개선 활동

■ 이행기간

- 2024년 ~ 2028년 1단계 준비 및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별도재원 필요 없음.

❑ 문제점

- 한국 인구 10명 중 6명 가까이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한 수준의 2배가 넘는 초미세먼지(PM-2.5)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남. 이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음.
- 한국에서 WHO 권고치의 2배인 $20\mu\text{g}/\text{m}^3$ 이상 초미세먼지 농도에 노출된 인구 비중이 55.1%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음. 2위인 칠레(42.5%) 보다는 10%포인트 이상 높음. 3~5위인 멕시코(20.7%), 폴란드(19.8%), 이스라엘(10.6%)은 한국보다 이 비율이 30%포인트 이상 낮았고 나머지 OECD 회원국은 한 자릿수에 그침.

❑ 목 표

- 긴밀한 한·중협력 추진, 친환경 에너지정책 추진
-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미세먼지 대책에 적극 노력

❑ 이행방법

- 대도시 건물옥상 공기 집진정화기 설치
- 초등학교 교실에 식물화단 등 설치
- 수소 및 전기자동차 대폭 지원
- 전기자전거관련 규제 철폐
- 신재생에너지 발전율 1%에서 20%로 제고
- 원전의 안전성 강화 - 수명초과 원전 폐쇄
- 화석화력발전소 폐쇄 - 독일사례 참조
- 코로나19 등 공기감염 방지, 청소 청결
- 기후변화 대응, 지구온난화 대응

▣ 이행기간

- ◎ 2024년 ~ 2028년 1단계 준비 및 시행
- ◎ 2029년 ~ 2033년 2단계 시행 완료

▣ 자원조달방안 등

- ◎ 별도자원 필요 없음.

정책순위

8

바다살리기 - 아시아 및 태평양 연대를 통한 해양쓰레기 대청소

정책분야 | 환경

■ 문제점

- ◎ 해양환경정보포털에 따르면 2018년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95,632톤에 달함. 이중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쓰레기는 전체의 4%임.
- ◎ 또한 이웃나라인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등 해양오염은 현재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목표

- ◎ 바다는 국경이 없고 경계가 없음. 아시아 및 태평양 연대를 통하여 해양 쓰레기 대청소하고 깨끗한 바다살리기에 앞장서겠음.

■ 이행방법

- ◎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사반대
- ◎ 방사능 오염 없는 우리 바다 지키기
- ◎ 바닷가 고질적인 폐기물, 구조물쓰레기 제거 : 민관군 협력
- ◎ 전국민 바다살리기 축제화 → 일본보다도 훨씬 깨끗한 나라 만들기
- ◎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메콩강) 등 아시아 민관군 환경연대로 해양쓰레기 척결
- ◎ 태평양 연안국 및 UN연대로 태평양 쓰레기섬 제거 - 고래살리기

■ 이행기간

- ◎ 2024년 ~ 2028년 사이에 시행 완료.
- ◎ 2024년에서 2025년 준비계획과 2026년에서 2028년 시행 완료.

■ 재원조달방안 등

- ◎ 별도재원 필요 없음

정책순위

9

감염병 질환 예방 및 치료의 고도화

정책분야 | 환경

■ 문제점

- 사스,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19 등 주기적인 감염병 질환이 발생과 확산이 팬데믹 현상으로 까지 이어져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음.
- 이러한 감염병 질환은 미래사회의 새로운 위협요인이며 글로벌 차원의 대응태세 마련이 요구 되는 사안임.
- 사회적 종교적 신념과 집회가 오히려 공동체사회의 바이러스 감염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함을 경험

■ 목 표

- 감염병 질환 전문연구기관 설치 및 진단센터 구축을 통해 공공의료체계를 개편하여, 더 새로운 감염병 발생에 대한 대응태세 구축

■ 이행방법

- 질병관리본부의 전문화 및 감염병 질환 전문연구기관 설치
- 공공의료체계 개편을 통한 진단센터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 청결하고 깨끗한 환경의 조성 :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 정비

■ 이행기간

- 2024년 ~ 2033년까지 중장기적 계획 수립과 시행.

■ 자원조달방안 등

- 관련법에 의거하여 재원마련.

□ 목 표

- 서울
 1. 미세먼지 - 대형공기집진정화기 설치
 2. 주택가 쓰레기 수거처리시설 고도화
 3. 도심의 재개발지역 거주환경 개선
- 부산, 경남
 1. 낙동강 수질살리기
 2. 동천 등 도심하천살리기
 3. 생곡, 창원 등 쓰레기처리장 정비
- 울산
 1. 태화강 살리기
 2. 노후 원전 폐기
 3. 방사능폐기물 처리산업 지원
- 제주
 1. 삼다수 유해본드 라벨접착 금지
 2. 바다살리기
 3. 쓰레기처리장, 소각장 정비, 난개발 방지
- 인천, 경기
 1.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정비
 2. 페트병 양젯물세척 처리시스템 정비
 3. 수도배관 정비, 고도화
- 대구, 경북
 1. CNN 발 경북의성 쓰레기산 완벽 제거
 2. 염색공단 폐수정비
 3. 감염병 연구소, 진단센터 설치

● 충청지역

1. 화력발전소 줄이기, 신재생에너지 확산
2. 쓰레기 소각장 정비
3. 쓰레기산 집중 제거

● 강원

1. 골프장 난개발 금지
2. 케이블카정책 민관협력 수립
3. 청정자연 관광특구 확대

■ 이행방법

- 지자체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

■ 이행기간

- 2024년에서 2028년 사이에 지자체별로 단계적 시행

■ 자원조달방안 등

- 지자체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시행.
- 중앙 예산의 경우도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시행함.



No.	정 책
1	최저임금 제도 개혁
2	상속세 · 증여세 전면 폐지
3	고용할당제 폐지
4	중고등 학력검정제도 보편화
5	광역지자체 개편 및 지방세 비율 확대
6	안보 · 방첩역량 강화(007法)
7	싱가폴식 임대주택제도 도입
8	대북전단금지법 철폐
9	북한인권재단 정상화 및 진흥
10	국민의 4대 의무에 준하는 국적 취득기준 설립

정책순위

1

최저임금 제도 개혁

정책분야 | 노동

□ 목 표

1. 상승 일로의 최저임금으로 인하여 경색된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기한다.
2. 포퓰리즘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최저임금제도를 개혁한다.

□ 이행방법

1. 최저임금-기준임금 이원체계를 수립한다.
2. 광역지자체 별로 상이한 수준을 지니도록 변경한다.
3. 각 광역지자체의 기준물가에 연동되어 자동으로 최저임금과 기준임금이 책정되도록하며, 연 4회, 매 분기마다 자동으로 갱신하여 고시한다.
4. 최저임금(규제사항)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한다.
5. 기준임금(권고사항)을 준수하는 기업에 대해, 나라장터 입찰 가점 배정,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 * 최저임금 : 해당 광역지자체 기준소비자물가 기준, {(필수주·부식 N종 구매에 대한 한 달 소요비용) * 3}만큼의 임금을, 주5일 6시간 근무로 벌 수 있는 시급 수준.
 - * 기준임금 : 해당 광역지자체 기준소비자물가 기준, {(필수주·부식 N종 구매에 대한 한 달 소요비용) * 2 }만큼을 제한 금액 * 2가, 해당 광역지자체 주택부동산(매매) 3.3m²의 중위값에 해당하는 임금의 시급수준.

□ 이행기간

- ◎ 계도기간 : 3년
- ◎ 유예기간 : 최저임금·기준임금 고시일로부터 1주 안에 상승분 반영
- ◎ 효력기간 : 확정고시일로부터 3개월 (분기마다 고시)

□ 재원조달방안 등

정책순위

2

상속세 · 증여세 전면 폐지

정책분야 | 재정경제

□ 목 표

- ◎ 조세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를 폐지한다.

□ 이행방법

1. 상속세 유지를 위한 법적 근거 전면 폐지한다.
2. 상속세와 증여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광역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폐지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
3. 납부자와 당사 지자체 간의 협의에 따라, 상속세 · 증여세에 준하는 금액을 자선기금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정비.

□ 이행기간

- ◎ 법안 통과 후 즉시

□ 재원조달방안 등

- ◎ 감소하는 세수는 여성가족부 축소 및 폐지에 따른 지출 감소로 상쇄한다.

정책순위

3

고용할당제 폐지

정책분야 | 노동

□ 목 표

- ◎ 사회적 형평성과 효율성에 어긋나는 각종 고용할당제를 폐지하여 사회적 박탈감을 최소화하고 사회제도 유지에 따르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국민복지에 이바지한다.

□ 이행방법

1. 기업에 강요되던 각종 고용할당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한다.
2. 특정 인력 고용에 대해 지급되던 고용보조금을 폐지한다.
3. 고용형태에 대한 법적 규제사항을 금하는 예방적 법안을 입안한다.

□ 이행기간

□ 자원조달방안 등

정책순위

4

중고등 학력검정제도 보편화

정책분야 | 교육

□ 목 표

- ◎ 중등 및 고등 학력 취득에 대한 유연화 및 실효성 증대를 기한다.

□ 이행방법

1.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 졸업과 별개로, 학력 검정시험을 통과 여부로 학력을 인정한다.
2. 검정시험 통과에 따른 학력만을 채용 및 임용 기준학력으로 인정토록 강제하는 법적 근거 신설한다.
3. 학력 검정시험을 세분화 : 과목별로 검정시험을 응시토록 하여, 학력의 일원적 비탄력성을 해소한다.
4. 세분화된 과목 중 필수과목 N개 + 선택과목 5개 이상을 응시하여 통과하는 것으로 검정시험 통과를 기준한다.
5. 이에 대응하여, 각 학교는 특화된 교과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한다.

□ 이행기간

- ◎ 6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현재 입학년도 학생에게 혼선을 가중하지 아니함.
- ◎ 6년마다 6년의 유예를 두는 시스템 개정을 거치도록 한다.

□ 자원조달방안 등

- ◎ 고등졸업검정시험 선택과목 가운데 특정 기업의 입사에 요구되는 특수과목을 기업의 요청 및 기획내용에 따라 설치하고, 그 설치비용을 기업에게 납입받아 운영에 보탬으로 함.

정책순위

5

광역지자체 개편 및 지방세 비율 확대

정책분야 | 행정자치

□ 목 표

1. 지자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 및 구성 개선
2. 대도시가 발달하면 이탈해버리던 과거 도(道)-광역시 체제를 탈피하여,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도시지역 육성토록 하고 지방도시 경쟁력 개선한다.

□ 이행방법

1. 새로이 개편하는 광역지자체의 이름은 부(府)로 하며, 광역지자체장은 부사(府使), 급수는 차관급으로 한다.
2. 중심도시를 중심으로, 합계 100만 이상의 경우 4개 이상의 시·군을 아우르도록 하고, 합계 100만 이하의 경우 6개 이상의 시·군을 아우르도록 하여, 도(道)를 대체하는 부(府)를 설치한다.
3. 향후 모든 지방 재정사업은 부(府) 단위로 진행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4. 당사 시·군 간의 자발적인 협의를 통해 부(府)를 구성토록 하고, 부(府)가 구성된 지역 순으로 국세-지방세의 비율을 최대 5:5로 조정한다.
5. 철원군(철원부 중심지역)과 파주군(개성부)은 향후 통일에 대비하여 직할군으로 존치한다.
6. 재정독립이 불가능한 지역은 도(道)체계를 유지하되, 광역지자체장은 임명직으로 변경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으로 지역발전을 유도하고, 충분한 발전이 이루어졌을 때 부(府)로 전환한다.
7. 부 간의 거리는 최소 50km를 두도록 하며, 구성인구의 상한은 없다.

□ 이행기간

- 5년의 협상기간을 통해 각 기초지자체의 협의를 거쳐 부(府)를 구성 및 출범한다. 협상기간 동안은 도(道)와 부(府)가 공존하는 이원체계를 유지한다.

□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세 비율을 최대 50%까지 조정하여 독립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정책순위

6

안보 · 방첩역량 강화(007法)

정책분야 | 국방

□ 목 표

- ◎ 정보기관 및 정보부의 활동을 보장하여 안보 및 방첩역량 강화

□ 이행방법

1.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비밀보장 및 면책특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 행정부의 이념적 성향에 좌우되지 아니하는 독립적 지위를 보장한다.
3. 의회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는 특수재정을 편성한다.

□ 이행기간

□ 재원조달방안 등

정책순위

7

싱가폴식 임대주택제도 도입

정책분야 | 보건복지

□ 목 표

- 싱가포르에서 실시된 ‘연금 연동형 임대주택 보증금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임대주택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국민연금에 대한 저항감을 해소한다.

□ 이행방법

1. 납입된 국민연금 누적금액의 80%를 국민임대주택 보증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싱가포르의 전임 총리 리관유의 정책을 벤치마크한다.

□ 이행기간

- 법안 통과 후 즉시

□ 자원조달방안 등

정책순위

8

대북전단금지법 철폐

정책분야 | 통일외교통상

□ 목 표

- ◎ 국민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북한정권 종식을 통한 북한인권문제의 근본적 종식을 위해, 대북 전단금지법을 전면 철폐한다.

□ 이행방법

1. 대북전단금지법을 완전히 철폐한다.
2. 대북전단살포에 대한 북한의 협박과 도발에 대응하여 매뉴얼을 수립한다.
3. 표현의 자유의 원칙에 근거하여 향후 이념에 좌우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이행기간

- ◎ 법안 발효 후 즉시

□ 재원조달방안 등

정책순위

9

북한인권재단 정상화 및 진흥

정책분야 | 통일외교통상

□ 목 표

- ◎ 북한인권재단의 활동을 보장하고 진흥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 이행방법

1.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되는 현재 북한인권재단의 회장직을 대통령 임명직으로 전환한다.
2. 북한인권재단을 대통령직속기구로 전환한다.
3. 국내 사회저명인사들을 초빙하여 북한인권재단의 자문위원단을 구성한다.

□ 이행기간

- ◎ 법안 발효 후 즉시

□ 자원조달방안 등

- ◎ 이북5도청에 북한인권재단의 재정을 편성하여 지급한다.

정책순위

10

국민의 4대 의무에 준하는 국적 취득기준 설립

정책분야 | 행정자치

□ 목 표

- ◎ 모호하고 과도한 한국 국적 취득 난이도 개선을 통하여, 이민자 수용성 확대 및 효과적인 이민자 용화를 기한다.

□ 이행방법

1. 납세의 의무는 성실한 국세 및 지방세 납부로 검증한다.
2. 국방의 의무는 현역 및 보충역 복무나 국방세 납부로 검증한다. 이를 위해 대체복무제도를 개선하여,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국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교육의 의무는 기대수준의 한국어 및 한국사 능력검정으로 검증한다.
4. 성실의 의무는 기준 이상의 양형여부로 검증한다.
 - * 한국어 및 한국사 능력검정을 거친 이는 현역복무에 지원할 수 있으며, 현역 복무 시 국방 및 납세의 의무는 자동으로 충족됨.
 - * 복무 시 군 교도소 수감 수준의 범죄사실이 없을 경우 성실의 의무 역시 충족됨.
 - * 국적 취득 후에도 4대 의무에 충족하지 아니할 경우, 참정권을 일시적으로 박탈당할 수 있음.

□ 이행기간

1. 최소한의 한국어 및 한국사 능력검정을 거친 사람(교육의 의무)에 대하여, 1년의 관찰기간 동안 여타 능력에 대해 검증하여 국적을 발급.
2. 국적 취득 후 본인 귀책사유로 기준조건에 위배되는 행동이 발생할 시, 시정될 때까지 참정권의 행사를 정지한다.

□ 재원조달방안 등



국가혁명당

No.	정 책
1	긴급생계지원금 1억 지급 및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 평생 지급
2	결혼하는 부부에게 3억원 지급 / 출산수당 5천만원 / 전업주부수당 매월 100만원 지급 / 연애수당 매월 20만원 지급 / 여성가족부 폐지, 결혼부 신설
3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 무보수명예직으로 전환(지자체 의원 포함)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제도 폐지
4	징병제를 폐지 후 모병제로 전환 / 기존 사병월급 매월 200만원으로 상향 지급 / 월남·6.25참전 용사 및 파독(광부, 간호사)각 5억원 일시불 지급 / 유엔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
5	중·고등 전공 1과목만 시험 그 총점으로 대학 진학
6	청년취업 국가책임제 실시 /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월 100만원 지급 /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무자 창업 시 무이자·무담보·무보증 창업자금 3억원 융자 지원 / 통일부 폐지 후 취업부 신설
7	양도소득세, 상속세, 부동산·자동차 보유세 폐지 / 증권거래세, 갑근세 폐지 / 김영란법 및 금융실명제법 등 잘못된 악법 폐지 / 국민연금 폐지 / 건강·고용보험료 중산층 이하 면제
8	용산 미군기지와 성남 서울공항 부지에 100만호의 신혼부부 주택건설 무상 공급
9	반려동물 무료진료카드, 안경무료카드, 청소년안심식사카드 무료 제공
10	한반도 외곽 순환도로, 수도권 순환 고속전철 건설 / BV벨트인(부산-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원산시 50년 임대 개발, 연해주 코리아 자치주 건설

정책순위

1

긴급생계지원금 1억 지급 및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 평생 지급

정책분야 | 재정경제

□ 목 표

- ◎ 국민 가계부채 2000조 해결
- ◎ 국민배당금으로 국민 모두가 중산층 이상으로 살아가는 중산주의 실현
- ◎ 돈 걱정 없는 세상 만들기

□ 이행방법

- ◎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 18세 이상 국민에게 각 1억씩 지급(1회)
- ◎ 국민배당금 지급
 - 18세 이상 국민에게 월 150만 원씩 평생 지급
 - 국민이 주주로서 배당금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
 - 주권재민(株券在民) 실현

□ 이행기간

- ◎ 긴급생계지원금 1억 지급
 - 2027년 5월 대통령 취임 후 즉시(1호 결재)
- ◎ 국민배당금 월 150만원 평생지급 시작
 - 2027년 5월 대통령 취임 후 2개월 이내(2호 결재)

□ 재원조달방안 등

- ◎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 양적완화 4000조 실시
 - 「헌법제76조제1항」대통령 긴급재정명령
 - 한국은행이 국가 자산을 담보한 채권발행
 - 미국, 일본과 상호 통화스와프 체결 추진

- 국민배당금 지급
 - 취임 초기 당해연도 임시적 조치로 양적완화 예산에서 일부 대체
- 국민배당금 등 지급예산 확보(800조 여원)
 - 국가 예산 600조원의 70% 절감 400조 여원 확보
 - 지방세를 국세로 통합하여 100조 마련
 - 재산비례별금제로 100조 마련
 - 고소득자 탈세방지로 100조 마련
 - 특수사업자 500만 신설로 100조 마련

정책순위

2

결혼하는 부부에게 3억원 지급 / 출산수당 5천만원 / 전업주부수당 매월 100만원 지급 / 연애수당 매월 20만원 지급 / 여성가족부 폐지, 결혼부 신설

정책분야 | 보건복지/행정자치

□ 목 표

- ◎ 망국적 저출산 해결
- ◎ 청년가정 결혼 생활기반 마련
- ◎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적 경제 문제 해결

□ 이행방법

- ◎ 결혼하는 부부에게 3억 원 지급
 - 결혼자금 1억, 주택자금 2억(무이자, 무보증, 무담보)
- ◎ 출산수당 5천만원 지급
 - 출산하면 자녀 1명당 5000만원 지급
- ◎ 전업주부수당(육아수당) 매월 100만원 지급
 - 자녀 10세까지 매월 100만원씩 지급
- ◎ 연애수당 매월 20만원 지급
- ◎ 여성가족부 폐지, 결혼부 신설
 - 정부부처 조직 개편

□ 이행기간

- ◎ 대통령 취임 후 2개월 이내 즉시 실행

□ 재원조달방안 등

- ◎ 저출산예산 45조 여원 및 성인지예산 32조 여원 절감액 사용
- ◎ 국가예산 600조 여원 70% 절감액 사용

정책순위

3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 무보수명예직으로 전환(지자체 의원 포함)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제도 폐지

정책분야 | 정치

□ 목 표

- ◎ 국회의원 100명으로 감축,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
- ◎ 지방자치단체 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
-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제도 폐지

□ 이행방법

- ◎ 취임 2개월 내 국회에 법안상정
- ◎ 현 국회가 공약 법안을 계속 부결 시 정신교육대 입소
※ 임시 국회의원 100명(무보수 명예직) 선발
- ◎ 선거제도 개선

□ 이행기간

- ◎ 취임후 2개월 내

□ 자원조달방안 등

- ◎ 예산절감 효과(예산낭비 요소 제거)

정책순위

4

징병제를 폐지 후 모병제로 전환 / 기존 사병월급 매월 200만원으로 상향 지급 / 월남·6.25참전 용사 및 파독(광부, 간호사)각 5억원 일시불 지급 / 유엔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

정책분야 | 국방

□ 목 표

- 현시대의 국방 현대화 체제에 맞는 병역제도로 개편
- 군 사기 제고와 국방력 강화
- 병역기피 문제 해결
- 유엔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

□ 이행방법

- 징병제 폐지 모병제로 전환, 징병제도 변경
- 기존 사병 월급 2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지급
- 징병군인 제대 인원을 고려하여 모병 군인으로 대체
- 유엔 판문점 이전 건은 미국, 유엔과 외교를 통해 즉각 해결

□ 이행기간

- 취임 후 2개월 내 추진
- 모병제는 제대군인 인원에 맞춰 점진적으로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양적완화
- 유엔본부 판문점으로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이전으로 자금 유입 기여
※ 평화조성에 따른 국방비 절감 효과

정책순위

5

중·고등 전공 1과목만 시험 그 총점으로 대학 진학

정책분야 | 교육

□ 목표

- ◎ 입시위주의 고질적 교육문제 해결
- ◎ 체덕지 위주의 청소년 전인교육 실현
- ◎ 창의적 인재 육성

□ 이행방법

- ◎ 수능시험 폐지
- ◎ 중등교육 6년과정에 개인이 선택한 1과목 시험 그 총점으로 대학 진학
- ◎ 현행 중·고등학교 1, 2, 3학년 재학생의 경우, 남은 학업 기간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시행

□ 이행기간

- ◎ 취임 후 2개월 내 추진

□ 자원조달방안 등

- ◎ 예산절감 효과

정책순위

6

청년취업 국가책임제 실시 /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월 100만원 지급 /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무자 창업 시 무이자·무담보·무보증 창업자금 3억원 용자 지원 / 통일부 폐지 후 취업부 신설

정책분야 | 행정자치/산업자원

□ 목표

- ◎ 청년실업자 구제
-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국가경쟁력 제고

□ 이행방법

- ◎ 청년취업 국가책임제 실시
- ◎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월 100만원 국가에서 지급
- ◎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무자 창업 시 무이자·무담보·무보증 창업자금 3억원 용자 지원
- ◎ 통일부 폐지 취업부 신설(행정부 개편)

□ 이행기간

- ◎ 취임 후 2개월 내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 국가예산 70% 절감액
- ◎ 국가경쟁력 증대에 따른 세수 증대

정책순위

7

양도소득세, 상속세, 부동산·자동차 보유세 폐지 / 증권거래세, 갑근세 폐지 / 김영란법 및 금융실명제법 등 잘못된 악법 폐지 / 국민연금 폐지 / 건강·고용보험료 중산층 이하 면제

정책분야 | 재정경제

□ 목표

- ◎ 양도소득세, 보유세 등 폐지
- ◎ 상속세 폐지로 기업경영권 보호
 - 해외자본으로부터 국내기업 경영권 보호
- ◎ 1억 미만의 소액증권거래세 폐지로 주식 거래 활성화(기업 자금 조달 용이 및 경제활성화)
- ◎ 현행 잘못된 악법 폐지
- ◎ 한계를 다한 사회보장제도 폐지

□ 이행방법

- ◎ 조세제도 개혁
 - 상속세 제도폐지, 부동산(재산세, 종부세) 및 자동차 보유세 폐지
 - 1억미만 증권거래세 폐지
 - 소득이 없는 곳에는 부과하지 않는 조세원칙 적용
- ◎ 1억 미만의 소액증권거래세 폐지로 주식 거래 활성화
 - 기업 자금 조달 용이 및 경제활성화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해외기업 국내 유치 용이)
- ◎ 현행 잘못된 악법 폐지
 - 김영란법 폐지, 쌍벌죄 폐지, 교도소 폐지(1개만 유지)
 - 금융실명제 폐지로 국내 자금 해외 유출 방지

□ 이행기간

- ◎ 취임 후 2개월 내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 국가예산 70% 절감액으로 세수대체

정책순위

8

용산 미군기지와 성남 서울공항 부지에 100만호의 신혼부부 주택건설 무상 공급

정책분야 | 건설교통

□ 목표

- ◎ 결혼하는 청년층의 주거난 해결

□ 이행방법

- ◎ 용산 미군기지와 성남 서울공항 부지에 약 100만호의 신혼주택 건설
- ◎ 성남 서울공항 기능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하여 건립단지 및 주변 고도제한 해제
- ◎ 건축비는 상가 분양대금 등으로 충당
- ◎ 결혼하는 선착순으로 입주 분양 고도제한 해제

□ 이행기간

- ◎ 취임 후 2개월 내 추진

□ 자원조달방안 등

- ◎ 정부재정 투입
 - 양적완화, 국가예산 70% 절감액 사용
- ◎ 민간 건축비 확보
 - 상가 분양대금에서 건축비 일부 충당

정책순위

9

반려동물 무료진료카드, 안경무료카드, 청소년안심식사카드 무료 제공

정책분야 | 보건복지

□ 목표

- ◎ 청소년 건강 보호 및 정신적 정서함양
- ◎ 청소년 시력보호

□ 이행방법

- ◎ 반려동물 무료진료카드
 - 동물을 매개로 한 질병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 ◎ 청소년 무료안심 식사카드
 - 안심재료(무농약 음식재료 사용) 음식점 지정
- ◎ 무료 안경카드
 -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카드 제공
- ◎ 반려동물 관리체계 구축

□ 이행기간

- ◎ 취임후 6개월 내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 국가예산 70% 절감
- ◎ 33정책 실현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따른 세수 증대

한반도 외곽 순환도로, 수도권 순환 고속전철 건설 /
BV벨트인(부산-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원산시 50년 임대 개발,
연해주 코리아 자치주 건설

정책분야 | 건설교통

□ 목표

- ◎ 한반도외곽 순환고속철도 및 수도권 순환고속전철
 - 한반도 세계적인 관광지화
 - 해외 관광객 유치로 관광 수입증대
 - 전국지역 통합효과, 수도권 교통난 해소
- ◎ BV벨트인(부산-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원산시 50년 임대개발
- ◎ 연해주 코리아 자치주 건설

□ 이행방법

- ◎ 민간 전문기관의 예비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 ◎ 국내 민간 건설기업 참여 사업추진

□ 이행기간

- ◎ 임기 내 추진

□ 자원조달방안 등

- ◎ 민간자본 유치



국민주권당

No.	정 책
1	윤석열 대통령 탄핵
2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정치테러 특검
3	한반도 전쟁 방지 입법
4	제2반민특위로 검찰·언론독재 청산
5	기본소득, 기본주택 실시
6	국공립대 통합 및 국공립대부터 무상교육 실시
7	노인·영유아·아동·고아·장애인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돌봄제 추진
8	최저임금 1만 2천원에 국가보조 4천원으로, 소상공인과 알바 노동자의 상생
9	군사작전권 즉시 환수, 전쟁 완전 종식
10	소속 의원 월급 300만원 등 기득권화 방지

정책순위

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책분야 | 정치

□ 목 표

-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함.

□ 이행방법

-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 탄핵 추진 사유를 여론화하고 정당을 설득, 견인
 - ① 탄핵 사유 1. 검찰 독재 민주 파괴
 -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동원한 불공정 편파 수사로 정적 제거 정치에 몰두함.
 -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 국회 입법에 대한 과도한 거부권 행사로 정치를 파괴함.
 - 국민을 ‘입틀막’하고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정당한 선거운동을 공권력을 동원하여 탄압하는 등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심각히 저해함.
 - ② 탄핵 사유 2. 당무 개입
 -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법적으로 금하고 있음에도 ▲이준석 전 국힘당 대표 축출 ▲ 김기현 전 국힘당 대표 선출 개입 ▲ 공천 빌미로 한 태영호 압박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입 ▲ 김기현 총선 불출마 종용 ▲ 한동훈과의 갈등 등 빈번히 자행했음.
 - ③ 탄핵 사유 3. 삼권분립 위반
 - 대법원의 일본 전범기업에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윤석열 정권이 제삼자 변제안으로 개입.
 - ④ 탄핵 사유 4. 수사 외압
 -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에서 피의자를 제외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수사에 외압 행사.
 - ⑤ 탄핵 사유 5. 독도 포기 외교
 - 일본이 독도에 대한 침략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도 제대로 수호하지 않음.
 - 독도 영유권을 공식 주장한 일본의 3대 안보 문건에 지지를 표명함.
 - 군 장병 정신전력 교재 개정에서 독도 삭제·분쟁 지역 기술.
 -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독도를 ‘재외’로 표기.
 - ⑥ 탄핵 사유 6. 이태원참사에서 국민을 구조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함.

- ⑦ 탄핵 사유 7. 양평고속도로 의혹
 - 윤석열 정권이 양평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직권을 남용해 무리하게 변경하여 사익을 추구하려 한 의혹.
- ⑧ 탄핵 사유 8. 전쟁 위기 고조
 - 대결 지속 시 한반도 핵전쟁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불필요한 공격적인 남북 대결 정책을 무책임하게 지속하여 평화 통일 의무를 저버리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심각히 저해하였음.
- ⑨ 기타 : 대통령실 졸속 이전, 천공 등 국정농단 의혹 등

▣ 이행기간

- 22대 국회 개원 즉시

□ 목 표

- ◎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정치테러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범죄자를 모조리 처벌

□ 이행방법

- ◎ 22대 국회에서 특검 실시
 -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 사건은 테러로 민주주의를 압살하려는 중대한 민주주의 훼손 시도임.
 - 정치테러를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시도가 재발할 것임.
 -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진상 규명에 미온적이어서 수사 축소·은폐 의혹이 나오고 있음.
 - 국회가 나서서 특검으로 진상 규명해야 함.
 - ① 사건 축소·은폐 의혹 1. 경찰, 사건 직후 현장 보존 대신 물청소. 대테러상황실에서 경미한 사건으로 오도하는 문자 발송.
 - ② 사건 축소·은폐 의혹 2. 경찰, 범인이 만난 사람, 사용한 핸드폰, 머무른 숙소, 이용한 택시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열흘 만에 단독범이라고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함.
 - ③ 공범 존재 의혹 : 범인은 사건 전날 여러 사람과 접촉하였으며 차량을 얻어 타고 모텔이 있는 건물에 내렸다가 일을 본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숙박한 것으로 보임. 사건 당일 택시 이용 시 목적지 주소가 적힌 문자를 보여주었다고 함. 이런 정황들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함.

□ 이행기간

- ◎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책순위

3

한반도 전쟁 방지 입법

정책분야 | 국방, 통일외교통상

□ 목 표

- 국회 권한을 이용해 한반도 전쟁 방지

□ 이행방법

- 한·미·일 연합훈련 중지법과 미국 전략자산 반입 금지법 제정.
 - ① 한·미·일 연합훈련 중지법 제정
 - 외국 군대와와의 연합훈련은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 특히 일본 자위대까지 끌어들여 북한 선제공격, 전면전쟁 훈련을 하는 것은 남북 적대 긴장과 군사 갈등을 심각히 고조시킬 수밖에 없음. 또한 연합훈련 시 중요 무장 장비들과 병력이 집결됨.
 - ② 미국 전략자산 반입 금지법 제정
 - 전략자산을 반입하면 당장 핵 및 그에 준하는 공격이 가능해지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한반도 전역에 심각한 군사 긴장이 조성됨.

□ 이행기간

-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책순위

4

제2반민특위로 검찰·언론독재 청산

정책분야 | 정치

□ 목 표

- 검찰개혁, 언론개혁 단행

□ 이행방법

- 반민주행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범죄자 조사 및 처벌
 - ① 해방 이후 국회서 친일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친일 청산 시도한 바 있음. 반민특위는 특별 조사위원회·특별 검찰부·특별 사법부로 구성되어 수사부터 기소, 판결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기구였음.
 - ② 현재 한국 사회는 검찰-경찰-사법부 등이 기득권 세력으로 연합하여 카르텔을 구축하고 있음. 공정한 수사·기소·재판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실행하기 매우 어렵고 더딤.
 - ③ 국회가 반민주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별건 수사·증인 회유·편파 수사·사건 은폐 등 반민주 범죄와 언론의 부수조작·가짜뉴스·왜곡 보도·불공정 편파 보도 등에 대해서 공정하고 엄격한 수사와 처벌이 단행되어야 함.

□ 이행기간

- 정권 교체 직후

정책순위

5

기본소득, 기본주택 실시

정책분야 | 재정경제, 보건복지, 건설교통

□ 목 표

- ◎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주거권을 보장

□ 이행방법

- ◎ 기본소득 실시
 - 국민 누구에게나 정기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
- ◎ 기본주택 실시
 - ① 무주택자에게 조건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제공
 - * 현 공공임대 주택은 소득 기준 등이 있어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이 다수임.
 - ② 기본주택 확대를 주요 부동산 기본 정책으로 수립.

□ 이행기간

- ◎ 22대 국회 임기 내

□ 자원조달방안 등

- ◎ 사회적 협의를 통해 기본소득 금액 및 기본주택 추진 규모를 산출.
- ◎ 국토보유세 도입.
- ◎ 부자에 대한 감세 혜택 축소.
- ◎ 남북 경제협력 추진 시 기본소득세 적용.

정책순위

6

국공립대 통합 및 국공립대부터 무상교육 실시

정책분야 | 교육

□ 목 표

- 교육 격차 및 그로 인한 사회적 격차를 완화함.
- 국공립대학의 비중과 경쟁력을 적극 향상함.

□ 이행방법

- 국공립대 통합 및 국공립대부터 무상교육 시행.
 - 현재 교육은 지나치게 입시경쟁화되었고, 대학 진학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과도하게 진행되었음. 교육이 기득권들의 세습 도구로 전락함.
- ① 국공립대를 통합하여 대학별 서열화를 완화함.
 - 국공립대를 통합하여 졸업시 동일한 학교명의 학위를 수여받음으로써 대학 간 서열화를 완화할 수 있음.
- ② 국공립대에서 먼저 대학 무상교육 시행함.
 -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 경감하고 국공립대 진학 선호도를 높임.
- ③ 국공립대 집중 육성으로 경쟁력 향상
 - 국공립대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육성하여 국공립대의 경쟁력, 신뢰도, 선호도를 대폭 향상시킴.
- ④ 사립대 통제 및 국공립대로 비율 상향.
 - 현재 한국 대학 교육에서 사립대학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음.
 - 국공립대에 대한 무상교육, 집중 투자를 실시하며 이를 기초로 사립대의 국공립대 전환을 도모.

정책순위

7

노인·영유아·아동·고아·장애인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돌봄제 추진

정책분야 | 재정경제, 보건복지, 건설교통

□ 목 표

- ◎ 돌봄을 국가가 완전히 책임짐.
 - 돌봄은 사람이 살아가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임.
 - 출산 및 육아, 아픈 사람 및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노인에 대한 돌봄 등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나 고단한 돌봄노동, 경력단절, 커다란 경제적 부담 등이 수반됨. 출산을 기피하고 생존 불안을 야기하는 중요 요인 중 하나임.
 - 돌봄을 개인에게 온전히 맡겨두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에게도 감당키 어려운 희생과 부담을 지우게 됨.
 - 이에 돌봄에 대한 최종 책임을 국가가 지는 방향에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함.

□ 이행방법

- ◎ 돌봄 영역을 계획성 있게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해야함.
- ◎ 22대 국회 개원 직후 재정 대책 및 장기 계획을 연구·계획 수립·공론화함.

정책순위

8

최저임금 1만 2천원에 국가보조 4천원으로, 소상공인과 알바 노동자의 상생

정책분야 | 노동

□ 목 표

-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국민의 생활을 향상
-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

□ 이행방법

- 최저임금 1만 2천원으로 인상, 소상공인에 대해선 4천원 국가 보조
 - 소득 격차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심각한 사회 문제임.
 -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나 7년이 지난 지금도 1만원의 벽을 넘지 못함.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자영업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것임. 자영업자 대 노동자 간 갈등을 조장해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음.
 -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으로 대폭 향상하여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있는 노동자의 삶을 시급히 향상.
 -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국가보조를 과감하게 지급하여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상생을 도모함.

정책순위

9

군사작전권 즉시 환수, 전쟁 완전 종식

정책분야 | 국방, 통일외교통상

□ 목 표

- 군사주권을 환수하고 대한민국의 안보 결정권을 회복하여 정상국가화
- 전쟁을 완전히 종식하여 평화 실현 안보 정상화

□ 이행방법

- 전시작전통제권 조건 없이 즉각 환수
 - 군사주권은 국가가 국민, 주권,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는 주권임.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 시 미국에게 이양한 후 74년이 넘도록 군사주권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안보 상황을 온전히 통제하고 정상국가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군사주권을 회복해야 함.
 -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결정한 바 있음. 그러나 그 이후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기 위한 조건을 설정하면서, 조건 미충족을 사유로 지속해서 지연되고 있음.
 - ‘나라를 지킬 힘이 없어서 외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식민 논리임. 조건 없이 군사주권을 즉각 환수해야 함.
- 한국전쟁 종료 의사를 천명하고 남북 종전선언 및 평화협상 추진
 - 군사주권 확보는 전쟁 유발 아닌 평화 실현으로 이어져야 함.
 - 평화 실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현재 지속되고 있는 전쟁상태를 끝내는 것임. 전쟁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평화 실현은 어불성설임.

정책순위

10

소속 의원 월급 300만원 등 기득권화 방지

정책분야 | 정치

□ 목 표

- ◎ 소속 국회의원의 특권화, 기득권화 방지

□ 이행방법

- ◎ 국회의원, 보좌진, 당직자 월급을 최대 3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특별당비로 납부할 것을 권고
 - 국회의원, 보좌진, 당직자 등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같은데, 고액 월급과 특권이 국회의원 등에게 집중되어 있음. 이는 국회의원 등이 특권화, 기득권화를 조장하는 온상임.
 - 국회의원, 보좌진, 당직자들이 300만원 수준(노동자 평균임금 수준)으로 하고 초과분은 국민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데 사용.
- ◎ 의원 활동 집단 운영
 - 의원 활동은 의원 개인의 활동이 아니라 당원의 결정을 집행하는 것으로 전환.
 - ‘의원, 보좌진, 전문가’이 집단적으로 토론하고 활동하며 함께 책임짐. 당원이 의정활동을 지도, 감독.
 - 의원 활동 감독 기구를 두어 국회의원 활동을 깊이 있게 진단, 평가하고 활동을 잘 하도록 지도.



No.	정 책
1	시민권력 강화-전면 정치개혁으로 노동자-시민 중심 정치 실현
2	국가투자은행 설립으로 민주·생태·돌봄 중심 공공경제 실현
3	기후정의법 제정으로 기후정의 실현
4	읍면동 공공통합돌봄센터 설립으로 국가책임 돌봄사회 실현
5	공공 복지체계로 기본권 보장
6	노동·고용정책 대전환으로 노동권-일자리-생활임금-생명안전권 보장
7	여성 차별과 폭력없는 성평등 사회 실현
8	차별금지법 제정 등으로 평등사회 실현
9	지역격차 해소-지방자치 강화
10	한반도평화협정 체결-한반도 비핵지대화

정책순위

1

시민권력 강화-전면 정치개혁으로 노동자-시민 중심 정치 실현

정책분야 | 정치

□ 목표

- ◎ '보수정당 중심의 기득권 정치' 타파
- ◎ '노동자·시민 중심의 정치-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치제도 개혁.

□ 이행방법

1. 직접민주주의 제도 강화로 시민권력 강화
 - 국민 직접, 대통령-국회의원 파면권 도입
 - 국민 직접, 국회 해산권 도입
 - 국민발의제, 국민투표권 도입
 -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발의제 실질화
2. 전면적인 정치개혁
 - 대통령·지자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국회의원 특권 폐지-국회의원·지방의원 전면비례대표제 도입
 - 국회 교섭단체 폐지-국회운영위 및 상임위별 운영위로 기능 대체
 - 정치자금법상 보조금제도 폐지-독일식 국고보조금제도 도입
 - 정당법 개정: 정당 설립요건 폐지, 선거연합정당, 지역정당 허용
3. 정치기본권 보장
 - 국가보안법·테러방지법, 집회시위와 노동3권에 대한 각종 제한 폐지
 - 교사 및 공무원의 정당 가입·정치활동 보장
 -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개혁

□ 이행기간

- ◎ 즉각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 별도의 재원 필요 없음.

정책순위

2

국가투자은행 설립으로 민주·생태·돌봄 중심 공공경제 실현

정책분야 | 경제

□ 목표

-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필수/기간산업을 노동자·시민의 민주적 참여 하에 공영화하여 재벌과 불로소득자 중심의 한국경제 개혁
- 기후위기, 고용위기, 돌봄위기를 해결하는 민주·생태·돌봄 중심 공공경제로 한국경제 구조 전환

□ 이행

1. 부자-불로소득 증과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보유세 강화, 소득세 종합과세)
 - 법인세 최고세율을 최소 40% 이상 상향
 - 금융·임대소득 종합과세, 모든 개발이익 환수
 - 토지보유세 강화-대기업 대주주 자산에 대한 자산보유세 신설
2. 국가투자은행 설립으로 공공투자 확대
 - 국가투자은행을 설립으로 ▲필수산업 공영화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 ▲국가책임 기 후·돌봄일자리 창출
3. 에너지-통신 등 필수산업 공영화
 - 에너지, 통신, 교육, 통신, 플랫폼, 주택, 수도, 의료, 돌봄영역 공영화
 - 민주적 운영구조: 해당산업 종사 노동자·시민의 운영과정 참여 보장
 - 공적자금 투입 기간사업 공영화
4. 약탈금융 종식과 삶을 위한 공공금융
 - 시중은행 공영화로 약탈금융 종식
 - 한국은행법 전면개정으로 금융운용의 질적 전환: 한국은행 주 운용목적은 고용안정과 국민생활 보장으로 명문화
 - 연기금 운용기조 전환: 공공사회서비스 확대와 재생에너지 투자확대 등 사회적 목적으로 전환
 - 고리사채 무효화, 저소득층 부채탕감
 - 법정이자 최고한도 15%로 제한

- 세계안정을 위해 저리로 대출하는 서민 공공금융기관 설립

5. 공공토지 확대

- 택지소유 상한제 도입
-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와 공공개발 의무화
- 토지임대부주택-환매조건부 분양 확대
-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환수(기업보유 유휴부지 공공택지화)
- 투기 불로소득 환수, 토지 보유세 인상 또는 지분 납부 등으로 공공토지 확대

6. 민중을 위한 확장재정과 국가예산 민주화

- 매년 국가재정 1천조 투입: 기후정의, 국가책임 완전고용, 인간다운 국가책임 돌봄·복지 실현
- 파산-취약계층 지원: 파산-취약계층 지원 조건 완화 및 재정 지원
- 국가예산의 민주화: 기획재정부 예산편성권 박탈, 독립적 국가예산위원회 설치로 국가예산 운영 민주화

■ 이행기간

- ◎ 2024~2028년, 연별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통해 계획 재수립 및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 기업·부자증세: 법인세 최고세율을 최소 40% 이상 상향, 금융·임대소득 종합과세, 토지보유세 강화, 대기업 대주주 자산에 대한 자산보유세 신설, 모든 개발이익 환수, 군비 축소
- ◎ 연기금 투자, 정부의 국채 발행,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정책순위

3

기후정의법 제정으로 기후정의 실현

정책분야 | 환경

□ 목 표

- ◎ ‘기후악당-생태파괴 국가’에서 ‘기후위기 극복-정의로운 전환-생태사회’로 전환

□ 이행방법

1. ‘기후위기 극복 국가책무’ 헌법 조항 신설- ‘기후정의법’ 제정
2. 전력/가스 민영화 중단-전력공기업 통합-에너지산업 재공영화
 - 발전회사 공공적 재통합-재생에너지공사 설립: ‘공공재생에너지법’, 6개 발전회사를 재통합하는 ‘발전공사법’ 제정
 - 공적 소유형태의 재생에너지 확대
 - 통합발전공기업 운영구조와 전력생산-전달-소비과정에 대한 민주적통제
 - 가스직도입제·가스민영화법 폐지, 에너지산업 재공영화
3. 탈석탄-탈핵 및 2050년까지 100% 공공재생에너지로 전환
 - 2030년까지 석탄발전 중단
 - 수명이 끝난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및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
 -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비정규직 포함 모든 노동자의 고용 보장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농지와 산림을 해치는 태양광발전 금지-유희부지와 건물 주차장 활용
 - 30년까지 공공재생에너지 30% 확대, 50년까지 100% 공공재생에너지로 전환
4. 생태적 공공교통체계로의 전환 및 도보·자전거중심 이동체제 구축
 - 철도수송분담률 50%까지 확대
 - 자동차도시에서 대자보 도시로 전환: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및 판매 중단, 도심지 교통혼잡료 징수 확대 및 주차장 축소, 차없는 거리 확대 등
 - 버스완전공영제, 광역단위 대중교통 정액이용권 도입 및 단계적 무상화
5. 기후일자리 대폭 창출, 노동시간 단축으로 정의로운 전환
 - 탈탄소 에너지-공공교통-건물 확대 및 돌봄일자리 창출
 - 주4일 노동제 도입

6. 기후위기 가속하는 개발중단 및 자연휴식제 도입
 - 가덕도, 새만금, 제주 제2공항, 흑산도, 울릉 등 신공항개발 중단
 - 설악산, 지리산 케이블카 등 개발 중단
 - 자연휴식제 도입으로 산림생태계 및 해양생태계 보호
7. 탄소다배출기업 탄소감축 강제제도 실시
 - 197개로 제한된 기업 탄소배출감축의무 전면 확대, 탄소배출권거래제 폐지
 - 에너지 다소비기업 전기요금 혜택 폐지
8. 탄소무배출 건물의 확대 및 탄소다배출건물 탄소부담금 부과
 -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를 일정 규모 이상 민간건물까지 확대
 - 탄소다배출 건물에 대한 탄소부담금 부과
9. '제로 웨이스트'사회 구현
 - 산업폐기물 발생량과 처리과정에 대한 통제 강화, 폐기물 운송·수집·처리업무 전면 공영제 도입
 - 일회용 플라스틱, 비닐 생산 금지, 플라스틱 폐기물 보증금제 도입
 - 생태오염·주민민원 발생 생산시설에 대한 통제·환수법 제정
10. 농축산업의 생태적 전환
 - 공장식(밀집사육·감금틀 사육) 축산 폐지를 통한 축산업의 생태적 재편
 - 생태유기농업-재생농업 확대, 생태적 전환에 따른 농축산가구 국가 지원

▣ 이행기간

- ◎ 2024~2050년

▣ 자원조달방안 등

- ◎ 기후정의를 위한 '누진세' 도입 + 기후대응기금 + 전력기금 + 기업탄소부담금 + 연기금 투자 등으로 연 40조 이상 확보

정책순위

4

읍면동 공공통합돌봄센터 설립으로 국가책임 돌봄사회 실현

정책분야 | 보건/복지

□ 목 표

- ◎ 지역기반 공공 통합돌봄체계 도입으로 사회적 권리로서의 돌봄권 보장
- ◎ 가사/돌봄노동의 가치 인정, 성평등한 가사/돌봄노동 분담

□ 이행방법

1. 공공사회서비스기본법 제정: 사회적 권리로서의 돌봄권, 돌봄서비스의 공적 책임, 지역 기반 통합돌봄, 돌봄노동의 가치인정, 이용자-노동자 돌봄기관 운영 참여 명문화
2. 지역 기반 공공 공급체계 구축: △어린이집·요양시설 국공립화(민간위탁 시설 재공영화) △시군구 사회서비스원 설치 △읍면동 통합공공돌봄센터 설립
3. 의료-돌봄 통합과 간병서비스 국가책임: △건강보험법 요양급여 대상 간병비 포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실시
4. 돌봄노동자 직접 고용 및 노동기본권과 생활임금 보장: △사회서비스원 확대·읍면동 공공통합센터 설립으로 돌봄노동자 직접고용 △가사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가사/돌봄노동자의 생활임금, 적정노동시간 보장
5. 성평등한 가사/돌봄노동 분담 : △주4일제 도입으로 가정 내 성평등한 가사/돌봄노동 분담조건 조성 △고용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보호자에게 육아휴직 급여 보장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통상임금 100%로 상향 △육아휴직 기간 3년, 육아휴직 쿼터제 도입
6. 가정 내 가사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 인정: 1인 가구 포함 가족수에 따라 주가사돌봄노동 담당자에게 '돌봄수당' 지급

□ 이행기간

- ◎ 2024~2028년

□ 재원조달방안 등

- ◎ 재벌-부자-불로소득 증세, 국민연금 투자 등

정책순위

5

공공 복지체계로 기본권 보장

정책분야 | 보건/복지

□ 목 표

- 의료-주거-교육-교통-에너지-통신 공영화로 기본권 보장
- 사각지대 없는 복지제도 구축

□ 이행방법

1. 주거 : 투기·블로소득 차단-공공주택 확대로 주거권 보장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선구제-후구상)
 - 민간임대업 특혜 폐지
 -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지역표준 임대료제 도입, 임대차 기간 연장
 - 공공주택 1, 000만호 공급: 공공선매권제도로 기존 주택 매입, 신규공공주택 공급
2. 의료: 지역공공의사제-공공의료 확대로 건강권 보장
 - 의료격차 해소-필수 의료 강화: 지역공공의사제 도입, 보건의료 인력 확충
 - 병원·공공공공병상 확대: OECD 수준(공공병원 50% 공공병상 70%)으로 단계적 확대
 - 무상의료·공공주치의제 단계적 도입: 어르신-아동부터 도입하여 전국민으로 확대
 - 간병비 건강보험 보장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민간의료보험 규제-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법제화
3. 교육: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단계적 무상화
 - 중등교육 전면 개편: 기후생태-인권교육 강화, 고교학점제 폐지
 - 입시폐지: 수능시험 폐지, 대학입학 자격고사 실시
 - 대학서열 폐지-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로 공공대학체제 도입
 - 대학등록금 단계적 폐지
 - 학생인권법 제정, 학생의 교육정책 참여 권리 보장
 - 학교 내 모든 비정규직 철폐
4. 공공교통 체제로 교통권(이동권) 보장
 - 대중교통 공영화: △버스 완전공영제 및 마을버스 공영화 △민간도시철도 재공영화, 외주 사업 직영화 △KTX·SR 통합

- 철도 중심 통합 공공교통체제 구축: 철도(지하철)-버스(시내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 공영화에 기초해 이동생활권(광역단위) 내 통합공공교통체제 구축
- 이동생활권 무제한 정액권(프리패스)·청소년-어르신부터 교통요금 무상화

5. 에너지: 공공에너지체제로 에너지 기본권 실현

- 공공 에너지체제 구축: 발전공기업 통합, 민간공급 도시가스 공영화
- 에너지 기본권 보장: △빈곤층 에너지 무상 공급 △가정용 필수 전기/가스 사용량의 요금 인하. 이후 완전 무상무상정책 도입 △취약계층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주거환경 개선
- 요금체계 개편: △가스요금 누진제 도입 △전기요금 누진제 강화
- 대기업 특혜 폐지: △산업-상업용 요금 인상 △경부하 요금제 폐지

6. 통신: 통신비 인하와 통신 공영화

- 온국민 통신정액제(기본요금제) 도입: △기본료 폐지 △인터넷과 전화를 포괄하여 필수데이터 사용에 대한 저렴한 정액제 도입 및 추가되는 데이터 양은 누진제 적용 △저소득층 통신비 무상 지원
- 통신 공영화: △공공와이파이 대폭 확대 △통신3사 국유화(공기업화)

7. 사각지대 없는 전국민 복지제도 구축

- 4대보험 강화: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4대보험 적용 및 보장성 강화 △4대보험 자본부담률 최소 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로 상향(OECD 평균) △상병수당 도입
- 공공부조 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급여 선정기준 상향(현행 중위소득의 32%(생계), 40%(의료)를 50%로 상향) △노인기초연금 수급액을 단독(40만원), 부부(70만원)로 상향.

■ 이행기간

- ◎ 2024~2028년

■ 재원조달방안 등

- ◎ 재벌-부자-불로소득 증세로 국가 재정 투입+국민연금 투자+군비 축소

정책순위

6

노동·고용정책 대전환으로 노동권-일자리-생활임금-생명안전권 보장

정책분야 | 노동/안전

□ 목 표

- 노동시간 단축, 노동기본권 완전 보장으로 생존권·존엄권 실현
- 노동·고용정책 대전환으로 노동권·일자리·생활임금 보장
- 노동자-시민의 생명안전권 보장

□ 이행방법

1.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간다운 삶, 기후정의 실현
 - 주 4일제로 법정노동시간 단축
 - 점심시간의 노동시간 포함, 여름·겨울 휴가기간 확대
 - 단시간 노동 사용 제한 및 차별 철폐
2. 불안정 노동 철폐, 국가책임 일자리 보장
 - 파견법·기간제법·다단계하도급 철폐, 원청사용자 책임 강화
 - 국가책임 일자리 보장제: 돌봄·사회서비스·의료·안전·기후일자리 확대
 - 산업전환 노동자 충고용 보장
3.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 모든 노동자(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플랫폼, 가사 노동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
 - 단시간 노동자 차별 철폐
 -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철폐 및 노동허가제 전환
 - 노동·노동권 정규 교육 과정 포함
4. 모든 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
 - 최저임금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
 - '물가-임금연동제'로 실질임금 삭감 방지
 - 민간 직업소개소 금지로 중간 착취 금지-공공·노조가 담당하는 취업 알선

5. 노조할 권리 완전 보장

-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포함 모든 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철폐 등 노조 활동 제한 금지
- 산업별, 지역별 교섭 제도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 교원, 공무원노동자 포함 노동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보장

6. 안전한 일터, 쉴 수 있는 권리 보장

- 온전한 작업중지권과 노동자시민의 참여권 보장: △기업의 영업비밀 철폐로 노동자시민의 알권리 보장 △사고사업장에 대한 노동자와 주민의 사고조사 권리 보장
- 위험의 외주화 중단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강화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 일하는 모든 이에게 산재·고용 보험 보장, 육아휴직 보장
- 일하는 모든 이에게 상병수당·질병휴가 제도 도입

7. 안전사회를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위험에 대한 대중의 알 권리, 사고예방과 관리에 대한 대중의 참여 권리를 보장. 재난·참사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
- 헌법에 '안전권' 신설
- 화물안전운임제 도입

▣ 이행기간

- ◎ 2024년 내 즉각 도입: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생명안전기본법 등
- ◎ 국가책임 일자리 대폭 창출은 2030년까지 1년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 재원조달방안 등

- ◎ 재벌-부자-불로소득 증세
- ◎ 국민연금 투자
- ◎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정책순위

7

여성 차별과 폭력없는 성평등 사회 실현

정책분야 | 여성

□ 목 표

- 여성차별과 폭력없는 성평등 사회
-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

□ 이행방법

1. 일터에서 평등하게 일할 권리 보장
 - 성평등공시법 제정: 모든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 기업 적용
 - 성별에 근거한 임금 및 고용형태 차별금지, 위반 기업 강력 제재
 - 가사/돌봄노동자에게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근로기준법 적용, 적정임금·적정노동시간 보장, 공공통합돌봄센터 설립으로 가사·돌봄노동자 직접고용
2. 성평등 가사/돌봄 분담제도 구축과 돌봄 국가책임 강화
 - 성평등한 가사/돌봄 분담: △주4일제 도입으로 가정 내 성평등한 가사/돌봄노동 분담조건 조성
 - 읍면동 공공통합센터 건설로 가사/돌봄노동의 탈성별화, 탈가족화, 탈시장화
3. 여성에 대한 폭력 중지와 예방조치 강화
 - 비동의강간죄 도입: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를 “동의 없이”로 개정
 - 성폭력 피해자 회복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 성폭력피해자회복지원법 제정
 - 지자체별 성폭력 대응 및 피해자회복지원기관 설치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확대
 - 가정폭력 반의사불벌조항 폐지, 교제폭력 가정폭력처벌법으로 적용, 처벌
 -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 성폭력 예방조치로서의 포괄적 성교육 의무화
 - 모든 사업장 법정 의무교육으로 포괄적 성평등교육 실시
 - 고위공직자 및 임용후보자 대상 반성폭력교육 법정 의무교육화

- 초·중·고·대학까지 포괄적 성교육 의무화
- 직장 내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독립적 사건해결기구 설치 의무화
 - 외부 전문위원 포함 의무화
 -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 업무정지, 피해자 유급휴가 등 보호조치를 위한 권한 부여

4. 여성의 재생산권리 보장

- 성재생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 유산유도제 즉각 도입, 사후피임약 일반의약품 지정, 임신중지시술 의료보험적용
- 근로기준법 유산·사산휴가 적용범위에 임신중지 포함
- 태아산재법 일터 적용 안착화, 태아산재법 개정 보완(아버지 태아산재 인정, 소급적용기한 확대, 보험급여 확대)
- 이주·장애여성 배제 없는 지역재생산권리센터 구축
- 여성청소년 생리대 무상공급

5. '조용한 학살' 방지법 제정

- 법제정을 통한 젠더적 관점의 국가책임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 여성 및 성소수자 전문 정신건강서비스센터 설치, 심리상담 및 지원체계 구축

▣ 이행기간

- ◎ 국가책임 지역-공공 통합돌봄체계 도입: 2024~2028년
- ◎ 나머지 공약: 2024년 내 도입

▣ 재원조달방안 등

- ◎ 재벌-부자-불로소득 증세로 국가 재정 투입

8

차별금지법 제정 등으로 평등사회 실현

정책분야 | 기타(소수자)

□ 목 표

- ◎ ‘차별-배제’에서 ‘평등-포용’으로 한국사회 패러다임 전환

□ 이행방법

1. 평등과 포용으로의 국가적 패러다임 전환
 - 여성·성평등 업무 전담부서로 여성가족부 개편(정부조직법 개정)
2. 포괄적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
3. 성소수자 기본권 보장
 - (1) 모두에게 평등한 가족구성권 보장: 혼인평등법 제정
 - (2) 성소수자를 범죄화하는 악법 폐지: 균형법 제92조의6(추행) 등
 - (3) 트랜스젠더 기본권 보장
 - 성별정정 요건 완화, 법적 성별 자기기입제 실시, 주민등록번호 완전난수화
 - 성별정정 목적의 의료조치, 의료보험 급여화
4. 장애인 기본권 보장
 - (1) 장애인권리 보장법 제정
 - GDP 4% 장애인 예산 보장, 장애인 제반권리 명시
 - 장애당사자 관점에서 정책을 심의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할 국가장애인위원회 및 지자체 별 장애인위원회 신설
 - (2) 장애서비스법 제정
 - 활동지원서비스 완전 공영화 및 자부담 폐지: 국가장애서비스공단으로 지역사회 24시간 개인 맞춤 지원서비스 제공
 - 국가장애서비스공단 활동지원사 직접고용으로 노동권 확보와 안정적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3)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활성화,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일원화 및 공영화, 휠체어 접근 가능 시외·고속버스 도입 의무화
 - (4) 장애인 노동권 보장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 국가 책임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1만개 확대
- (5)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생활 보장
 -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 금지, 단계적 전면폐쇄, 인권침해시설 즉각 폐쇄
 - 탈시설 지원예산으로 '자립생활 권리' 보장
- (6) 장애인 교육권 보장
 - 생애주기별 통합교육을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 특수학급 의무화, 통합교육 지원인력 및 장애인교원 대폭 확대
- 5. 학생·청소년의 권리 보장
 - 학생인권법 제정
 - 청소년보호법 폐지
 - 정당법 및 선거법 등 개정으로 온전한 청소년 정치기본권 보장
 - 탈가정 청소년의 기본권 보장: 청소년쉼터 대폭 확대, 입소 절차 간소화, 생활지원금 지급
- 6. 난민·이주민 권리 보장
 - 단속추방 금지, 구금 기간 제한
 - 건강보험 등 차별 없는 사회보장
 - 이주아동의 보편적 출생등록, 의료, 체류, 의무교육 등 기본권 보장
 - 경제적 난민 인정 및 보호, 신속하고 공정한 난민심사 절차 마련
 - 고용허가제 폐지 및 노동허가제 도입
 - 근로기준법 제63조(예외근로자 규정) 폐지, 차별 없는 4대보험 적용
 - 이주여성 재생산권 보장: 임신·출산에 따른 산전·후 휴가 보장 및 차별없는 재생산 관련 사회서비스 이용 보장
 -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체계 마련

▣ 이행기간

- ◎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제 차별 철폐-권리보장' 법조항 및 정책 즉각 도입

▣ 재원조달방안 등

- ◎ 부자-재벌-불로소득 중과세, 군비 축소로 재정 투입

□ 목 표

- 지방자치 및 지방재정 강화, 지역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소멸 억제

□ 이행방법

1. 지방자치 및 지방재정 강화

- (1) 주민참여예산제 실질화: △예산참여 범위와 권한 확대 △해당 사안의 반영결과와 그 이유에 대한 공개 제도화
- (2)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제도 실질화: △관련 절차와 요건 완화 △처리기한과 처리과정 공개의 제도화
- (3) 주요 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 폐지 및 전액 국고부담
- (4) 행정안전부 축소 및 지방행정청 설립: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행정청 설립 △총액 인건비 제도 폐지, 주민 통제 하에 지자체의 자율적인 지방공무원수 결정

2. 지역격차 해소

- (1) 증세 및 재정구조 정비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간 격차 해소: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 억제, 각종 개발이익 환수 △중앙정부 재정책대와 발맞춰 지방교부금 확대 △지방세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재분배 등 지역격차 해소 방안 마련
- (2) 공공일자리 대폭 확대: △돌봄 분야 공공 일자리의 비수도권 지역 우선 확대 △비수도권 지역내 공공 문화서비스 및 공공 의료서비스 확충으로 관련 일자리 확보
- (3) 지역 내 대중교통 및 광역교통체계 대폭 개선: △비수도권 지역 광역전철망 구축 및 광역 단위 환승 보장과 정액제 프리패스 도입 △지역 내 대중교통 공영화(다양한 모델로 지역 실정에 맞게 공영화) △대중교통 요금을 단계적으로 무상화하며,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추진(지방대중교통에 대한 교부금 지원 대폭 확대)
- (4) 지역 내 문화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확대: △건물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서비스 제공 및 관련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문화서비스 확대 △지역공공의사제 도입 및 무분별한 수도권 병상 증설 억제 △공공병원만이 아니라 보건소 기능 대폭 강화 및 방문 진료, 정신보건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 △의료전달 체계 재확립 및 주치의 제도 도입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수도권 집중 억제

- (5) 지역 국공립대학 중심의 고등교육 활성화: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 및 지방캠퍼스에 대한 전략적 국고지원 강화 △통합네트워크 구축 이전이라도 비수도권 소재 국공립대학에 대한 연구비 우선 배정 등 각종 국고지원 강화 △지역 내 산학연 협력에 기반한 중소기업 공동R&D센터 설립 및 각종 직업훈련과 평생교육 체계 강화로 지역 소재 대학의 역할 강화
- (6) 수도권의 기업 집중 억제: △기업 소재지에 따라 산업용 전기료 등 각종 산업용 에너지요금 차등화 △수도권 내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각종 지방세 세율 차등화 및 필요시 과밀억제 부담금 부과

▣ 이행기간

- 지방자치 및 지방재정 강화는 즉각 추진
- 나머지 정책은 2024~2028년 내로 완료

▣ 자원조달방안 등

- 부자-재벌-블로소득 증과세, 군비 축소

정책순위

10

한반도평화협정 체결-한반도 비핵지대화

정책분야 | 통일/외교

□ 목 표

- 남북 대결, 미중패권 경쟁으로 인한 '이중의 한반도 전쟁위기' 해소
- 한반도평화체제 구축-핵없는 한반도 실현

□ 이행방법

1. 전쟁위기 부추기는 한미동맹, 한미일 동맹 폐기
 - 한미연합훈련·한미일 연합훈련·인도-태평양 지역 다국적군 훈련 참가 중단
 -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한미동맹 폐기
 - 한미일 동맹(캠프데이비드 선언) 폐기
 -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보상, 일본의 전쟁가능한 국가화 반대, 후쿠시마 핵오염 수 방류 저지
 - 사드 배치, 제주2공항·새만금공항 건설 중단
2. 핵없는 한반도 실현
 - 한국의 유엔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기초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 실현
3.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획기적 군비 축소
 - 평화협정 체결: 정전협정 당사자인 북/중/미와 분단 당사자인 남한이 참여하는 평화협정 체결
 - 한국형 3축체계 구축 등 공격적 군사전략과 군비확충 폐기
 - 군비 축소로 민생위기·기후위기 해결
4. 무기 수출 전면 중단
 - 분쟁지역을 포함한 무기 수출 전면 중단
 - K방산 주력수출산업 정책 폐기

■ **이행기간**

- 2024~2028년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원 필요 없음



노인복지당

No.	정 책
1	대한민국의 건국이념 계승
2	노인들의 노후가 행복한 세상
3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세상
4	스마트 경로당 활성화
5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
6	노인들의 주거가 안정된 세상
7	노령연금 지급 및 경로당 회장 업무추진비 현실화
8	저출산 해소 및 행복한 주택, 유아, 교육정책
9	청년이 마음껏 꿈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나라 건설
10	노인에게 필요한 정책 정책분야 재정경제

정책순위

1

대한민국의 건국이념 계승

정책분야 | 정치분야

목 표

○ 대한민국 건국이념 계승, 호국수호자 최대한 예우

1.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고,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을 단호히 척결하겠습니다.
 - ①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무법 폭력세력은 엄단한다.
 - ②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 왜곡하는 교육을 일삼는 교사는 파면 조치한다.
 - ③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체제를 동경하는 자는 의사를 타진하여 복송 조치한다.
 - ④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4·19 유공자 수당을 연차적으로 월 2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고엽제환자로 편입시킨다.
2. 한미동맹을 강화하며 국방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① 남북통일 시까지 한·미동맹강화 기본 틀 유지로 국방력을 강화한다.
 - ② 남북통일 시까지 한·미 연합사령부의 전시 작전통제권을 공동대표체제로 전환한다.
 - ③ 한반도 주변 4대 강국(미·일·중·러)과의 선린 친선외교를 강화한다.
 - ④ 대통령은 연중 수출증대를 위한 경제외교에 주력하기 위해 해외 각국을 순방한다.
 - ⑤ 고조선 및 고구려 유민 등 알타이어족이 다수가 살고 있는 터키, 중앙아시아국가 및 몽골반점국가 경제연방체 결성을 주도한다.
3. 인도적이고 우호적인 입장에서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하겠습니다.
 - ① 북한당국이 핵개발 포기선언을 하기 전까지는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기구(PSI)'를 결성한 유엔의 결의를 존중한다.
 - ② 북한의 굶주린 인민을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과 비료를 지원하되 실수요자에게 전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③ 통일을 대비한 북한 난민 수용소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훈련 공단을 설치하여 북한 동포의 소득 보장과 시장경제체제 수련을 도모하도록 한다.

▣ 이행방법

- ① 입법조치
- ② 행정조치

▣ 이행기간

- ① 22대 국회 회기 내

▣ 자원조달방안 등

- ① 국가 SOC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고 현행 SOC사업 예산을 전용
- ② 국부 펀드 조성 - 국방산업, 자동차산업, 원자력산업, 선박 및 해양산업, 반도체산업, 의료 및 바이오산업, 석유화학산업, 이차전지산업, 해외건설업, 철강 및 자원산업, 항공 및 우주산업 등
- ③ 현재 중첩되고 비효율적인 예산 및 단체지원금을 복지예산으로 전용
- ④ 전국단위의 스마트 경로당과 청년농 스마트팜 운영 수익기금
- ⑤ 면세점 하향조정 및 상속세를 기부금제도와 병행하여 실시- 국민개세주의원칙을 준용하여 현재 938만명의 무세금자에게 면세점을 하향 조정하여 소액이라도 과세하도록 하고, 상속세를 기부금제도와 병행하여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

정책순위

2

노인들의 노후가 행복한 세상

정책분야 | 고용복지분야

□ 목 표

● 노인복지 정책

1. 노인들의 노후가 편안하고 행복한 세상

우리나라 노인들은 개발도상국가(OECD)중에서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율 1위라는 심각한 복지 공황상태에 놓여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한달 최소 30만원(하루 1만원)의 용돈이 필요하다고 파악되고 있다. 하버드대학교에서 700명의 사람을 75년간 추적조사한 결과 행복의 조건은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좋은 인간관계'라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한다. 건강수명 백 세를 누리며 좋은 인간관계를 누리며 노후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노인복지정책을 제시한다.

● 전체 노인정책

1. 토·일 노인사원제도 실시

주민센터·관공서민원창구 및 일반회사에 일당제 '토·일 노인사원' 근무제를 도입한다.

※ 월평균 50만원 용돈을 보장해준다.(일당 6만원)

▶ 월 4주인 경우 : 토·일근무 6만원X2=12만원, 12만원X4주=48만원

▶ 월 5주인 경우 : 토·일근무 6만원X2=12만원, 12만원X5주=60만원

2. 노인복지수당 월 30만원 지급(토·일 노인사원 비 해당자)

① '토·일 노인사원'으로 근무하지 못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30만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한다. ※학생들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무료급식을 제공하듯이 보편적 복지를 적용하여 65세 노인이면 월 30만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3. 점심식사 무료 제공 식당을 확대

종교시설(교회·성당·사찰 등)의 식당에 봉사단체(로타리·라이온스클럽 등)의 봉사금으로 식량과 반찬을 구입하고 부녀봉사회(새마을부녀회·적십자봉사회 등)가 밥 짓고 설거지하는 형태의 동네 곳곳에 민간 주도 무료 점심 제공 식당을 확대하여 노인들이 점심 한 끼를 손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한다.

4. 지하철처럼 시내버스 무임승차카드 제공

현재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에 거주하는 노인은 지하철 무료승차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지하철

이 없는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은 교통비 혜택이 없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하철이 있는 지역에서도 지하철노선이 없는 장소로 갈 때를 대비해 지하철 및 시내버스 무임승차권을 지급한다.

5. 노인(老人)이란 용어를 혜인(慧人:지혜로운 어른)으로 바꾸어 경로효친 사상 고양
6. 지금의 보건복지부를 노인행복부와 보건사회부로 개편
7. 충주시 수안보에 대한노인회 중앙연수원 건립
8. 시·군·구지회에 리무진대형버스 1대(기사 월급 매월 지급 옵션), 봉고차 1대, 소형승용차 1대(배정받지 못한 각 지회에 선배정)를 배정
9. 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아기가 타고 있어요” 처럼 “노인이 타고 있어요” 표시를 하고, 주차장에 장애인·여성 전용 주차표시처럼 “노인전용주차표시”를 추가하도록 함
10. 노인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야광 보도블록’을 깔아 특별히 야간 교통사고를 방지하도록 함

▣ 이행방법

- ① 입법조치
- ② 행정조치

▣ 이행기간

- ① 22대 국회 회기 내

▣ 자원조달방안 등

- ① 국가 SOC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고 현행 SOC사업 예산을 전용
- ② 국부 펀드 조성 - 국방산업, 자동차산업, 원자력산업, 선박 및 해양산업, 반도체산업, 의료 및 바이오산업, 석유화학산업, 이차전지산업, 해외건설업, 철강 및 자원산업, 항공 및 우주산업 등
- ③ 현재 중첩되고 비효율적인 예산 및 각종 단체지원금을 복지예산으로 전용
- ④ 전국 단위의 스마트 경로당과 청년농 스마트팜 운영 수익기금
- ⑤ 면세점 하향 조정 및 상속세를 기부금제도와 병행하여 실시- 국민개세주의원칙을 준용하여 현재 938만명의 무세금자에게 면세점을 하향 조정하여 소액이라도 과세하도록 하고, 상속세를 기부금제도와 병행하여 추가 재원 확보

정책순위

3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세상

정책분야 | 보건복지분야

□ 목 표

● 대한노인회 정책

1. 대한노인회법'을 제정하여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승격
 - ※ 대한노인회법의 회원자격에 65세 이상의 국민을 정회원으로, 60세 이상의 국민을 준회원으로 정하여 1, 000만 회원을 확보한 국내 최대 최강의 단체로 승격시킨다.
 - ※ '새시대 한국노인회'를 불법단체로 해체시키고, 시니어클럽 등 제반 노인관련 단체를 대한노인회로 흡수하여 노인관련 단체를 대한노인회로 일원화 한다.
 - ※ 직원들의 급여를 국고로 지급하며, 전국적 통일된 급여조건표를 적용하고, 호봉 및 퇴직금을 지급한다.
2. 임플란트 현재 2대 혜택을 4대까지로 확대
3. 안구건조 해소용 눈물약을 보험수가로 포함시켜 가격 할인
4. 보청기 혜택을 현재 60 dB을 40 dB로 낮추어 확대 실시
5. 무릎 자아지방 줄기세포 배양액 주사허용 법제화 및 의료보험 적용
 - ※ 현재 보건복지부 고시(2024.01.19.)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를 고시함'
 - ※ 고시에 따라 의료기관이 본인 무릎 자아지방 줄기세포를 배양하여 건강보험심사원에 안전성평가한 후 승인되면 의료행위가 가능함
6. 의료수가 20, 000원 이상 본인부담율 20%를 15%로 인하(5% 인하 조정)

□ 이행방법

- ① 입법조치
- ② 행정조치

□ 이행기간

- ① 22대 국회 회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① 국가 SOC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고 현행 SOC사업 예산을 전용
- ② 국부 펀드 조성 - 국방산업, 자동차산업, 원자력산업, 선박 및 해양산업, 반도체산업, 의료 및 바이오산업, 석유화학산업, 이차전지산업, 해외건설업, 철강 및 자원산업, 항공 및 우주산업 등
- ③ 현재 중첩되고 비효율적인 예산 및 단체지원금을 복지예산으로 전용
- ④ 전국단위의 스마트 경로당과 청년농 스마트팜 운영 수익기금
- ⑤ 면세점 하향조정 및 상속세를 기부금제도와 병행하여 실시- 국민개세주의원칙을 준용하여 현재 938만명의 무세금자에게 면세점을 하향 조정하여 소액이라도 과세하도록 하고, 상속세를 기부금제도와 병행하여 추가재원을 확보한다.

정책순위

4

스마트 경로당 활성화

정책분야 | 과기부, 한국지능정보진흥원

□ 목 표

● 대한노인회 정책

1. 대한노인회 시·군·구 지회의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
 - ※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 스마트 생활지원 서비스, 비대면 여가·복지 서비스 운영지원
 - ※ 어린이 놀이방 운영지원, 스마트팜 운영지원, 시니어 옴부즈맨제도 운영지원
2. 보조금법 및 노인복지법 중 경로당 냉난방비 지급 조항을 개정하여 냉난방비 절약으로 남는 금액을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경로당에서 콩나물·두부 등을 생산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부녀회 결의로 우선구매를 권장하여 경로당의 수익을 증대시킨다.
4. 경로당에서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어린이집에서 보육 후 유아들을 돌보면서 돌보미 수당을 지급하여 할머니 노인의 용돈 수입을 보장한다.
5. 시·군·구 조례를 제정하여 노인들에게 월 2회 '무료입욕권'을 제공한다.

□ 이행방법

- ① 입법조치
- ② 행정조치

□ 이행기간

- ① 22대 국회 회기 내

□ 자원조달방안 등

- ① 국가 SOC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고 현행 SOC사업 예산을 전용

- ② 국부 펀드 조성 - 국방산업, 자동차산업, 원자력산업, 선박 및 해양산업, 반도체산업, 의료 및 바이오산업, 석유화학산업, 이차전지산업, 해외건설업, 철강 및 자원산업, 항공 및 우주산업 등
- ③ 현재 중첩되고 비효율적인 예산 및 단체지원금을 복지예산으로 전용
- ④ 전국단위의 스마트 경로당과 청년농 스마트팜 운영 수익기금
- ⑤ 면세점 하향조정 및 상속세를 기부금제도와 병행하여 실시- 국민개세주의원칙을 준용하여 현재 938만명의 무세금자에게 면세점을 하향 조정하여 소액이라도 과세하도록 하고, 상속세를 기부금제도와 병행하여 추가재원을 확보한다.

정책순위

5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

정책분야 | 보건복지분야

□ 목 표

● 대한노인회 정책

1.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연합회와 지회에 2년 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
 - ※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문화생활 기회를 확대한다.
 - ※ 1차로 2025년에 추경예산 2조원을 배정하여 100군데 건립하고, 2차로 2026년 예결위에서 2027년 본예산에 3조원을 배정하여 150군데 건립한다.
 - ※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장은 연합회장 및 지회장이 겸직하고, 월 400여만 원의 판공비를 지급한다.
 - ※ 2025년 스마트팜 빌리지 실증시험센터와 청년농육성대학교 협동하여 운영 (홍천, 논산, 경주, 기장, 영주, 함안, 음성, 나주 등)
2. 전국 시·군·구에 노인전용운동장을 건설하도록 하여 운동 붐을 조성하여 노인의 건강수명 증대 - 노인이 건강해짐으로 인해 국가 의료비 지원액 절감
3. 전국체전·전국소년체전처럼 전국노년체전을 실시하여 노인건강의 생활화 도모

□ 이행방법

- ① 입법조치
- ② 행정조치

□ 이행기간

- ① 22대 국회 회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① 국가 SOC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고 현행 SOC사업 예산을 전용

- ② 국부 펀드 조성 - 국방산업, 자동차산업, 원자력산업, 선박 및 해양산업, 반도체산업, 의료 및 바이오산업, 석유화학산업, 이차전지산업, 해외건설업, 철강 및 자원산업, 항공 및 우주산업 등
- ③ 현재 중첩되고 비효율적인 예산 및 단체지원금을 복지예산으로 전용
- ④ 전국단위의 스마트 경로당과 청년농 스마트팜 운영 수익기금
- ⑤ 면세점 하향조정 및 상속세를 기부금제도와 병행하여 실시- 국민개세주의원칙을 준용하여 현재 938만명의 무세금자에게 면세점을 하향 조정하여 소액이라도 과세하도록 하고, 상속세를 기부금제도와 병행하여 추가재원을 확보한다.

정책순위

6

노인들의 주거가 안정된 세상

정책분야 | 국토복지분야

□ 목 표

● 대한노인회 정책

1. 노인 행복의 보금자리인 노인전용 실버주택 보급(2024~2028)
 - ※ 고려해야 할 사항 : 인구소멸 대응, 지방균형발전, 디지털 인공지능, 탄소제로, 청년일자 리 창출, 재난 안전마을, 노인인구와 재원 마련 등
 - ※ 농림부·복지부·행안부 : 스마트팜과 함께 힐링과 치유, 정신건강, 재난 안전에 중점
 - ※ 산자부·과기부 : 분산전원(RE100), 신재생에너지, 탄소제로 농업마을 등 에너지융합
 - ※ 국토부·농림부 : 기존 스마트팜 시범단지과 도시 그린벨트 내의 실버주택단지 조성
2. 노인 주거시설을 소득 능력에 따라 3가지 형태로 운영하여 노후생활이 즐겁도록 함
(①유로 실버타운, ②저소득층을 위한 노인전용 임대주택, ③치매, 중풍 노인을 위한 무료 노 인요양시설)
3. 전국 광역시·도에 대한노인회 직영 추모공원을 건립하여 장례비용을 대폭 절약

□ 이행방법

- ① 입법조치
- ② 행정조치

□ 이행기간

- ① 22대 국회 회기 내

□ 자원조달방안 등

- ① 국가 SOC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고 현행 SOC사업 예산을 전용
- ② 국부 펀드 조성 - 국방산업, 자동차산업, 원자력산업, 선박 및 해양산업, 반도체산업, 의료 및 바이오산업, 석유화학산업, 이차전지산업, 해외건설업, 철강 및 자원산업, 항공 및 우주산업 등

- ③ 현재 중첩되고 비효율적인 예산 및 단체지원금을 복지예산으로 전용
- ④ 전국단위의 스마트 경로당과 청년농 스마트팜 운영 수익기금
- ⑤ 면세점 하향조정 및 상속세를 기부금제도와 병행하여 실시- 국민개세주의원칙을 준용하여 현재 938만명의 무세금자에게 면세점을 하향 조정하여 소액이라도 과세하도록 하고, 상속세를 기부금제도와 병행하여 추가재원을 확보한다.

정책순위

7

노령연금 지급 및 경로당 회장 업무추진비 현실화

정책분야 | 보건복지분야

□ 목 표

● 대한노인회 정책

1. 노인 복지수당과는 별개로 현재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노령연금을 월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2028년 까지)
2. 경로당 회장에게 이·통장 수준의 수당 지급(회장: 월 30만원, 총무: 월10만원)

□ 이행방법

- ① 입법조치
- ② 행정조치

□ 이행기간

- ① 22대 국회 회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① 국가 SOC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고 현행 SOC사업 예산을 전용
- ② 국부 펀드 조성 - 국방산업, 자동차산업, 원자력산업, 선박 및 해양산업, 반도체산업, 의료 및 바이오산업, 석유화학산업, 이차전지산업, 해외건설업, 철강 및 자원산업, 항공 및 우주산업 등
- ③ 현재 중첩되고 비효율적인 예산 및 단체지원금을 복지예산으로 전용
- ④ 전국단위의 스마트 경로당과 청년농 스마트팜 운영 수익기금
- ⑤ 면세점 하향조정 및 상속세를 기부금제도와 병행하여 실시- 국민개세주의원칙을 준용하여 현재 938만명의 무세금자에게 면세점을 하향 조정하여 소액이라도 과세하도록 하고, 상속세를 기부금제도와 병행하여 추가재원을 확보한다.

정책순위

8

저출산 해소 및 행복한 주택, 유아, 교육정책

정책분야 | 보건복지, 교육, 건설교통분야

□ 목 표

● 획기적인 저출산 해소방안 - 정책

인구가 곧 소비자다. 인구가 줄게 되면 소비자가 줄게 되는 것이고, 소비자가 줄게 되면 경기가 위축되고, 경기가 위축되면 경제가 침체되어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저출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그 어느 정책보다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 부었으나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당은 다음과 같은 저출산 해소방안을 이번 4.10 총선에 정책으로 제시하며 저출산 해소를 반드시 해결하려 한다.

● 자녀만 출산하면 무상으로 내 집 마련이 되는 주택정책

결혼 적령기 청년들이 주택문제가 해결되어 결혼을 서두르도록 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유지 중 토지가격이 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나 교육부지 중 폐교 지역을 택지로 조성하여 저출산 해소용 목적의 아파트를 대량 건설 확보하도록 한다. 민간 건설업체에게 임대아파트 건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을 연 2%의 저리로 용자한다. 취업할 하게 된 청년에게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내 집 마련용으로 14평형 영구임대주택을 배정해 주고, 결혼한 부부에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 후 1자녀를 출산할 경우에는 25평형 아파트를, 2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8평형, 3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32평형 아파트를 무상으로 기증하도록 하여 내 집 마련과 다자녀 갖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한다. 직장이 있는 무주택자에게 주택가격 5%의 입주금 납부로 주택을 소유하게 해주고, 나머지 95%는 360개월 분할납부하게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임대아파트 건설위주로 전환
2. 민간 건설업체 임대아파트 건설 참여 유도
3. 영구임대주택(15평형 아파트) - 취업한 청년에게 배정
4. 1자녀 출산가정(25평형 아파트) - 무상 기증
5. 2자녀 출산가정(28평형 아파트) - 무상 기증
6. 3자녀 출산가정(32평형 아파트) - 무상 기증
7. 직장이 있는 무주택자에게 아파트 특별 공급

● 일체의 경제 부담 없는 임신부 및 유아정책

여성이 임신했을 때부터 출산 때까지 모든 의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여 출산에 따른 가계 부담을 제로로 해주고, 맞벌이 부부의 자녀 돌봄에 대한 염려를 해결해 주기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수업을 마친 오후 3시 이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는 거주지 경로당에서 아동 돌보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육아휴직기간을 재택근무로 인정하여 급여의 50%를 지급해 주도록 하고, 정부가 50%를 기업에 보상해 주도록 하여 기업은 아르바이트 사원을 채용하여 근무하게 한다.

1. 임신에서 출산까지 의료비용 국가가 전액 부담
2. 맞벌이 부부를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마친 아동 경로당에서 돌봄
3. 육아휴직기간을 재택근무로 인정하여 급여의 50%를 지급
4. 휴직 재택근무기간 동안 급여의 50%를 정부가 기업에 보전해주어 기업은 아르바이트 사원을 고용
5. 기업이나 사회가 육아유직에 대해 가장 소중한 인간존중의 행위로 인식을 전환하도록 의식구조 변화운동 전개

● 교육비 제로화 교육정책

사교육비 부담 요인을 완전히 근절하고, 유치원·초·중학교까지는 물론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으로 전환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는 대학 졸업까지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여 교육비 부담을 제로화 한다.

1. 정부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이 재원으로 고등학교 의무교육 전면 실시
2. 대학을 전문 인력 배출 4년제 대학과 취업 전문 2년제 대학으로 2원화
3. 4년제 대학 입학 정원을 5배로 확대하고 전국에 6개의 분교 설치
 - 사교육 필요성 제로화
4. 전문 인력 배출 4년제 대학 반값 등록금 실현
 - 예시) 등록금 500만원 X 10, 000명 입학정원 = 500억원(등록금 총액)
 - 등록금 250만원 X 50, 000명 정원 확대 = 1, 250억원(등록금 총액)
5. 정원 확대로 확보된 재원으로 정원 확대 이전에 합격할 수 있었던 우수 학생(20%)에게 4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여 우수 학생은 대학 졸업까지 교육비 부담 제로화
6. 취업전문 2년제 대학 운영 - 4년제 대학에서 탈락한 학생이 전학
 - 1학년 : 교양과목 이수
 - 2학년 : 전공과목별 관련 직장에서 현장실습으로 수업 대체

▣ 이행방법

- ① 입법조치
- ② 행정조치

이행기간

- ① 22대 국회 회기 내

재원조달방안 등

- ① 국가 SOC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고 현행 SOC사업 예산을 전용
- ② 국부 펀드 조성 - 국방산업, 자동차산업, 원자력산업, 선박 및 해양산업, 반도체산업, 의료 및 바이오산업, 석유화학산업, 이차전지산업, 해외건설업, 철강 및 자원산업, 항공 및 우주산업 등
- ③ 현재 중첩되고 비효율적인 예산 및 단체지원금을 복지예산으로 전용
- ④ 전국단위의 스마트 경로당과 청년농 스마트팜 운영 수익기금
- ⑤ 면세점 하향조정 및 상속세를 기부금제도와 병행하여 실시- 국민개세주의원칙을 준용하여 현재 938만명의 무세금자에게 면세점을 하향 조정하여 소액이라도 과세하도록 하고, 상속세를 기부금제도와 병행하여 추가재원을 확보한다.

9

청년이 마음껏 꿈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나라 건설

정책분야 | 교육, 국방, 건설교통분야

□ 목 표

● 청년이 마음껏 꿈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나라

1. 적성과 소질에 맞는 중·고등학교 진학

- ① 중고등학교를 인문중고등학교, 체육중고등학교, 예능중고등학교로 다변화 한다.
- ② 초등학교 6학년 동안 담임선생이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분석 파악하여 인문·체육·예능 중고등학교로 진학을 지도한다.

2.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

- ① 현재 정부가 대학교에 지원하는 약 20조 원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고등학교 의무교육 재원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줄인다.
- ② 고등학교도 인문·체육·예능 고등학교로 다변화한다.

3. 대학입시제도 개편

- ①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실시하되 수능시험 성적을 대학입시에 적용하지 않고 대학 진학 여부를 평가하는 대학진학 자격시험으로 전환한다.
- ② 대학입시는 대학마다 입학시험을 실시한다.
- ③ 대학입시는 전 과목 평가제를 지양하고, 전공학과 연관 과목만 시험을 실시한다.
예시) 물리학과 진학의 경우 : 물리학과 전공과목인 물리와 연관 과목인 화학·수학만 시험을 본다.
- ④ 고등학교 3학년을 현재의 문과·이과반의 구분에서 세분화하여 ‘물리·화학반’등으로 나눈다.
- ⑤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물리·화학반’일 때에는 오전 1교시에 물리, 2교시에 화학, 3교시에 수학을 공부하고 오후 4교시에 물리 실험, 5교시에 화학실험, 6교시 자율학습으로 수업을 종료하고 귀가한다. 학교에서 실험을 실시하여 사설학원에 다닐 필요성을 없애줌으로써 사교육비 지출을 절감한다.
- ⑥ 직장인인 부모도 러시아워를 피하기 위해 ‘오전 6시 출근 오후 3시 퇴근’ ‘오전 7시 출근 오후 4시 퇴근’ ‘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제를 실시하여 일찍 귀가하도록 하여 저녁 식탁에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며 ‘밥상머리교육’이 회복되도록 하며, 고3 자녀와 부모가 베트민턴을 친다든지 걷기운동을 한다든지 하며 여가 시간을 즐기도록 한다.

4. 대학을 4년제 대학과 2년제 취업대학으로 양분화

- ① 대학을 고급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4년제 대학과 취업을 전문으로 하는 2년제 취업대학으로 양분화 한다.
- ② 4년제 대학의 경우 졸업정원제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입학정원을 5배로 늘려 입시전쟁을 없애므로써 사교육비 지출의 근원을 해소한다.
- ③ 대학입학 정원을 5배로 늘림으로 인해 입학생 지원이 없어 문을 닫아야 할 대학 캠퍼스는 입학 지원생이 넘칠 서울대학교·고려대학교·연세대학교 등의 지역별 6개 분교로 개편하고, 그 외의 대학은 취업대학으로 전환한다.
- ④ 취업대학은 1학년은 교양과목을 공부하고, 2학년은 전공과목별로 해당 업체에서 실습을 하며 취업 훈련을 쌓는다.
- ⑤ 4년제 대학에서 매 학기마다 탈락되는 학생은 취업대학으로 전학하도록 한다.

5. 사교육비 제로화, 반값 등록금 해결

① 사교육비 제로화 해결

지원 선호도가 높은 우수대학의 입학정원을 5배로 확대하여 쉽게 우수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입시난을 해소하여 사교육의 필요성을 느낄 수 없도록 하여 사교육비 제로화를 달성한다.

② 대학입학정원 5배로 확대, 반값등록금 문제 해결

졸업정원제를 준수하면서 대학입학정원을 5배로 확대하여 반값 등록금을 실시한다.

※ 반값등록금 소요재원 확보 및 방안 :

입학정원 10, 000명인 대학을 5배수 50, 000명으로 늘릴 경우 : 입학정원 10, 000명인 경우 : 등록금 500만 원 X 10, 000명 = 500억 원(재정수입)정원 5배로 늘릴 경우 : 등록금 250만 원 X 50, 000명 = 1, 250억 원(재정수입)으로 대학의 재정은 2.5배나 더 많아지기 때문에 입학정원 20%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대학마다 장학 제도를 확충하고 과학기자재 및 도서관을 확충하여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발돋움 시킨다.

③ 우수학생(입학정원의 20%)에게 4년간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급

입학정원 5배로 늘릴 경우 확충되는 대학의 재정수입으로 입학정원 20%의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6. 병역의무제를 폐지하고, 모병제 전환으로 청년일자리 50만개 확보

※ 의무병제의 문제점

- ① 입대한 날부터 제대날짜만 세고 있는 강제 의무병으로는 전투력의 약화와 병영 사고 빈발
- ② 현역병 복무로 인해 청년층(대학생, 직장인, 운동선수, 예술인)의 전성기 단절로 청년기의 성장에너지를 감퇴시켜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 큰 손실 초래

※ 모병제 효과

- ① 노동집약적 군대보다 기술집약적 군대로 전환하여 정예군대로 전환
- ② 첨단장비를 갖추고 유사시 중무장 기동타격대 운용
- ③ 청년일자리 50만 개 창출(주택 및 중소기업 수준의 급여 지급) - 소요재원 12조원(국방비 절감액 +국방세 신설)
- ④ 청년층(대학생, 직장인, 운동선수, 예술인) 전성기 단절 해소 효과로 성장에너지 제고
- ⑤ 세계 용병으로 투입 수익창출 효과
- ⑥ 국내총생산(GDP)의 1.5%만 국방비에 투입해도 북한 전체 GDP의 50%에 해당

※ 병역의무제 폐지, 4개월 군사기본훈련 대체로 청년 성장에너지 극대화

현재의 병력 의무기간 (18개월~22개월)을 폐지하고, 모병제(직업군인제)를 도입하여 군대를 재편하고, 4주 기본 군사훈련만 받고 예비군에 편입시켜 전쟁 또는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한다.

▣ 이행방법

- ① 입법조치
- ② 행정조치

▣ 이행기간

- ① 22대 국회 회기 내

▣ 자원조달방안 등

- ① 국가 SOC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고 현행 SOC사업 예산을 전용
- ② 국부 펀드 조성 - 국방산업, 자동차산업, 원자력산업, 선박 및 해양산업, 반도체산업, 의료 및 바이오산업, 석유화학산업, 이차전지산업, 해외건설업, 철강 및 자원산업, 항공 및 우주산업 등
- ③ 현재 중첩되고 비효율적인 예산 및 단체지원금을 복지예산으로 전용
- ④ 전국단위의 스마트 경로당과 청년농 스마트팜 운영 수익기금
- ⑤ 면세점 하향조정 및 상속세를 기부금제도와 병행하여 실시 - 국민개세주의원칙을 준용하여 현재 938만명의 무세금자에게 면세점을 하향 조정하여 소액이라도 과세하도록 하고, 상속세를 기부금제도와 병행하여 추가재원을 확보한다.

정책순위

10

노인에게 필요한 정책 정책분야 재정경제

정책분야 | 건설교통분야

□ 목 표

● 기타 노인에게 필요한 정책

1. 의원자유투표제(크로스보팅 투표제) 도입

남북통일·헌법 개정·정당의 존립과 관련되는 법률 개정 등 중차대한 안건을 제외하고는 사사건건 당론을 정하지 말고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 표결에 임하는 의원자유투표제(크로스보팅 투표제)를 실시하여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보장하여 거수기라는 오명의 작폐를 근절하도록 한다.

2. 국민의 정당 가입 장려

국민 대다수가 자기 성향에 맞는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장하여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지역구 당원대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특정 지도부에 예측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주어 국회의원이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도록 한다.

3. 국회의원선거 합동연설회 부활

국회의원 선거 합동연설회를 부활시켜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을 넓히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 준다.

4. 자치단체 장을 임명제로 전환

자치단체장의 직선제로 인해 지방행정 차원에서 대통령의 통치권이 잠식당하여 국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자치단체장은 임명제로 전환하고, 지방자치의원만 직선제로 한다.

5. '기초생활필수품물관리청'을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하여 생필품 물가안정 도모

- ① '기초생활필수품물관리청'을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하여 품목마다 담당자가 배치되어 생산에서 소비까지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생활필수품(식량·부식·일용잡품 등)의 물량 이동 추이를 면밀히 추적하여 기초생활필수품 수급 조절과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서민 생계를 보호한다.
- ② 현재 부서별로 산재해 있는 기초생활필수품 관련 부서를 '기초생활필수품물관리청'으로 집중화하여 효율적인 물가 관리 체계를 수립한다.
- ③ 가뭄이나 홍수 등 기상이변으로 생산 부족이 예측될 때에는 수입을 서둘러 공급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양파 등이 과잉생산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비축 자금으로 적정량을 구매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도록 한다.

- ④ '기초생활필수품물관리청' 공무원에게 준사법권을 부여하여 물가 관리의 실효성을 도모한다.
- ⑤ 농산물의 과잉생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협을 통한 계약재배 및 판매를 실시하여 수급을 조절하고 생산자의 소득을 보장해 준다.

6. 교민청 설립

재외동포를 위해 “교민청”을 설립한다.

7. 교포 우선 채용(2세~3세)

한국 기업이 해외공장이나 지사를 설립할 때 교포 2세~3세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한다.

8. 재외동포 인명부 작성

재외동포 인명록을 데이터베이스(db)작성하여 거주지 국가에서 분야별 유력자를 정부나 기업이 해외진출 할 때 효과적인 인맥관리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9. 처방약을 제외한 일체의 약품을 슈퍼 및 자동판매기에서 판매

지금의 약국이 병원근무와 같이 영업을 하므로 인하여 병원근무시간 외에 약을 구입하기가 어려움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 국민 92%가 처방약을 제외한 일체의 약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에 부응하여 처방약을 제외한 일체의 약품을 슈퍼 및 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하도록 입법조치 하여 병원근무시간 외에도 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국민의 편의를 도모한다.

10. 침구사제도 양성화

일침·이구·삼약(一鍼 二灸 三藥)이라는 의료 명구가 있듯이 침구(침과 뜸) 의술의 탁월한 효험을 질병 치료의 의료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인정하는 의료행위로 입법조치 한다.

▣ 이행방법

- ① 입법조치
- ② 행정조치

▣ 이행기간

- ① 22대 국회 회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① 국가 SOC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고 현행 SOC사업 예산을 전용
- ② 국부 펀드 조성 - 국방산업, 자동차산업, 원자력산업, 선박 및 해양산업, 반도체산업, 의료 및 바이오산업, 석유화학산업, 이차전지산업, 해외건설업, 철강 및 자원산업, 항공 및 우주산업 등
- ③ 현재 중첩되고 비효율적인 예산 및 단체지원금을 복지예산으로 전용
- ④ 전국단위의 스마트 경로당과 청년농 스마트팜 운영 수익기금
- ⑤ 면세점 하향조정 및 상속세를 기부금제도와 병행하여 실시- 국민개세주의원칙을 준용하여 현재 938만명의 무세금자에게 면세점을 하향 조정하여 소액이라도 과세하도록 하고, 상속세를 기부금제도와 병행하여 추가재원을 확보한다.



대한국민당

No.	정 책
1	육해공우주사이버 국가안보체제 강화
2	국가정체성 및 공직기강 확립
3	전국민평생연금복지제도 실시
4	한반도 유엔 제5본부 설립
5	KBS 혁신으로 세계공영방송시스템 전환
6	8백만징용피해자 국가유공자등록
7	유엔군 참전용사 보훈사업 강화
8	한미일동맹체제 강화
9	대한민국만년역사대관 편찬
10	22대 땀흘려 일하는국회만들기 국민공감운동

정책순위

1

육해공우주사이버 국가안보체제 강화

정책분야 | 국방

날로 증가하는 북한의 핵공격 및 장사정포 위협과 전파교란, 사이버침투 등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압도적 전술적 우위 확보에 주력하여 국가안보체제를 공고히 함.

□ 목 표

- 민간우주기업에 국방군사분야용도의 개발 지원
- 병력자원감소에 대비하고 사이버공격등에 대처에 유리한 여성사이버군 양성,
- 육군 AI로봇 돌격대, 해군 AI 로봇UDT, 해병대 AI 로봇상륙부대, 공군 AI 파이로봇 비행사 양성을 위한 국방부 AI로봇방위청 창설
- 우주로부터의 고공공격에 대한 방어력 확보를 위한 국군 우주군사령부 창설
- 주변 핵무기보유 3개국에 대한 독자적 핵억지력의 확보를 위한 핵무기 개발.
- 서해 해저잠수함기지 개발 등 주변 해역 지형과 자원 활용극대화

□ 이행방법

- 대학 사이버공학과 육성 지원, 교류협약으로 군사사이버전문가 양성, 공급
- AI·로봇산업, 대학, 군, 정부기관의 협력기구 가동
- 국방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조성, 관련기업 유치, 예비군일자리 창출
-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 협조 하에 법률 개정
- 대통령 특별조치로 제도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제·개정

□ 이행기간

- 2028년까지 4개년 계획

■ **재원조달방안 등**

- 우주방위특별소비세 신설(고가품, 사치품거래시 과세)
- K-Military 기금마련 글로벌 사이버복권 발행
- AI 로봇산업특별기금 확대편성
- 지자체 불요불급 예산 통폐합, 공공조달구매 구조조정
- 국회의원특권폐지 경감예산 전용

정책순위

2

국가정체성 및 공직기강 확립

정책분야 | 행정자치

공직 부패지수 OECD 최하 수준의 후진국형 관료시스템(오프라인)의 일대 혁신을 통해 세계 최고의 디지털정부(온라인)에 맞는 '온오프라인 일체형' K-Government를 세계 앞에 내놓음으로써 연구하고 봉사하며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일류정부의 모범 공직자상을 세운다.

□ 목 표

- 온오프라인 연동형 대한민국 디지털정부 version 2.0 시스템 구축
- 전 부처공무원 10년단위 안식년제 실시하여 재교육연수
- 인허가 관련부서 순환근무제 실시
- 청백리공직자 대한민국정부공훈록 간행
- 공공기관의 국민서비스만족도평가 관민공유제 실시
- 공직업무수행 관련 위법행위자 블랙리스트 분기별 공개

□ 이행방법

- 온오프라인 공직연동제시스템 아이디어, 플랫폼 국민현상대공모
- 분기별 청백리공직자 33인 선정 인기투표와 평가시스템 운용
- 공공기관의 국민서비스만족도평가 관민공유제 실시
- 공직업무수행 관련 위법행위자 블랙리스트 분기별 공개
- 공직자 재산등록/변동사항 분기별 공개
-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 협조 하에 법률 개정
- 대통령 특별조치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제·개정

□ 이행기간

- 2028년까지 4개년 계획

□ 자원조달방안 등

- 예비비 활용 및 신규 예산 편성
- 불요불급 예산 통폐합 및 축소, 물자 절약, 재활용 극대화

정책순위

3

전국민평생연금복지제도 실시

정책분야 | 보건복지

‘한강의 기적’ 세계가 놀라는 경제성장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이룩하는 데 공헌한 노인세대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우대함으로써 글로벌 4차 산업혁명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값진 경험과 지혜를 후세들에게 전수하여 국가발전의 멘토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 목 표

- ◎ 공공 및 민간기업 정년 65세로 연장(60세 이후 차감제 도입)
- ◎ 실업자 국민기본소득 월 100만원 지급
- ◎ 비행/결손 청소년 다중후견인제 도입

□ 이행방법

- ◎ 노인세대 공공일자리 확대, 은퇴후 재취업 재택근무제 도입
- ◎ 공사직 은퇴자재취업 직업교육프로그램 확대
- ◎ 비행/결손 청소년 1인에 공사직 은퇴자 3~5인 다중 후견인 수당 지급
- ◎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 협조 하에 법률 개정
- ◎ 대통령 특별조치로 제도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제·개정

□ 이행기간

- ◎ 2028년까지 4개년 계획

□ 재원조달방안 등

- ◎ 지자체 불요불급 예산 통폐합, 공공조달구매 구조조정
- ◎ 4차 산업혁명 산업구조개편에 따른 신생분야활성화 부가가치 창출

정책순위

4

한반도 유엔 제5본부 설립

정책분야 | 국제

북미(뉴욕 본부), 유럽(스위스, 오스트리아), 아프리카(케냐)에 비해 세계 인구 65%를 차지하는 아시아에는 없는 유엔 제5본부를 한국에 유치하여 한반도의 전쟁위협을 근본적으로 방지함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시대에 최적의 임무수행을 위한 새로운 유엔 산하기구를 신설, 운용함으로써 국제 정치, 경제, 외교의 중추로서 획기적인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다.

□ 목 표

- 세계 4대 강국의 협력으로 세계평화의 새로운 구심점으로서의 유엔 5본부
- IT, AI, 우주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능의 유엔산하기구 20여개 신설, 유치
- 관련 국제회의산업(MICE)의 활성화로 100억달러 경제효과
- 한국 청년, 고학력자 수만명 이상 일자리 창출로 신성장 동력
-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부각되고 연 100억달러 관광수입 증대
- 남북긴장관계 해소로 민간교류, 경제협력 활성화 남북경제 원원, 상승효과

□ 이행방법

- 대통령긴급 담화로 유엔제5본부 유치 범국민 공공 및 민간 외교 활동 전개
- 세계 GDP 60%인 한미일+중국, 아세안, 대양주 범태평양 협력 외교 전개
- 각급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유엔, 국제협력 관련학과 전문가 양성
- 산하 유엔기구에 60여개 아시아 각국 청년, 전문인력 유치, 배정
- 북한대표부, 산하 기구에 전문인력 배정, 아시아 각국과 업무협력 활성화
-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 협조 하에 법률 개정으로 법적, 제도적 지원체제

□ 이행기간

- 2027년까지 3개년 계획

▣ **재원조달방안 등**

- 워렌 버핏, 짐 로저스 세계적인 투자그룹 투자유치
- 아마존, MS, 테슬라, META 등 세계적 빅테크 투자유치
- 10여년 미사용 방치된 남북협력기금 활용
- 공공기관, 지자체 불요불급 예산 절감, 통폐합

정책순위

5

KBS 혁신으로 세계공영방송시스템 전환

정책분야 | 과학기술정보통신

미디어 환경의 급변과 OTT 영상산업의 팽창, 편파방송 시비 등으로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공영방송의 역할과 위상을 바로 세워 훼손된 보편성의 회복, 진영과 계층간, 사회공동체 및 가족간의 화합에 기여하며 올바른 가치관과 여론 형성, 인성 함양 및 한류문화 전파의 메카로 세계방송문화를 선도하는데 기여한다.

□ 목 표

- ◎ 정부와 대기업으로부터 독립성유지
- ◎ 건전한 가족공동체를 위한 인성강화, 여론 형성, 선진문화 창달
- ◎ 홈드라마 등으로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저출산 극복
- ◎ 한류문화 전파의 거점 미디어로 프로그램 혁신

□ 이행방법

- ◎ 디지털 세대에 부합하는 콘텐츠 혁신, 시청자 참여의 확대
- ◎ 한류문화 세계확산의 메인 컨트롤타워로서의 방송기능 확대, 고급 전문인력 양성
- ◎ 세계적인 공신력을 가진 영국 bbc방송과 한영방송협정 체결
- ◎ 전세계 공영방송과의 협력체제로 다언어 세계방송채널 편성, 운용

□ 이행기간

- ◎ 2027년까지 3개년 계획

□ 자원조달방안 등

- ◎ 국내 전파 및 서버사용 글로벌 빅테크기업의 사용수수료 현실화
- ◎ K-POP, K-무비 등 한류산업의 공영방송발전기금 조성

정책순위

6

8백만징용피해자 국가유공자등록

정책분야 | 기타 (국내보훈)

영원한 한일간 선린 우호관계를 위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과 유가족, 후손에 대한 배상과 지원, 혜택을 부여하여 지난 과거사를 청산하고 용서와 화합으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원 국가보훈유공자로 서훈을 실시한다.

□ 목 표

- 한일 양국 기업 출연으로 한일화해기금 조성
- 한미일 3국간 민주주의 가치와 이념, 안보 이익을 공유하는 한미일동맹운동의 확산
- 한미일 3국민 간 영원한 우호를 위해 공동의 의무를 규정한 한미일인권법의 제정
- 강제징용자 800만 후손 우선이용권 부여하는 부관연락선 페리호 공동운영
- 한일 가교 역할을 해온 대마도를 '한일화해의 섬' 관광특구로 조성하여 한일 공동운영

□ 이행방법

- 한일 양국 기간방송 KBS-NHK 상시 특집 프로그램 편성
- 매년 8월 6일부터 9일까지 세계평화기원문화제 한일 공동개최
- 한일 학생 정기 수학여행, 학교간 자매결연, 기타 역사, 문화, 예술 교류 활성화

□ 이행기간

- 2024년부터 매년

□ 재원조달방안 등

- 한일 양국 기업출연 한일 화해기금 조성
- 한일 양국 시장 통용 디지털화폐 발행
- 한일협력추가경정예산 편성

정책순위

7

유엔군 참전용사 보훈사업 강화

정책분야 | 기타(해외보훈)

한국전쟁 당시 공산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 5대양 6대주에서 긴급 파병되어 목숨을 걸고 피흘린 참전 유엔 회원국(전투병 16개국, 의무대 6개국, 구호물자 지원 33개국)의 은혜에 보답하는 유엔참전국 및 참전용사 보훈사업을 통해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한다.

□ 목 표

- 저개발 참전국 경제, 과학기술 발전과 부흥 지원협력
- 참전용사 및 후손에 대한 국내 보훈급여에 준하는 보상 실시
- 참전용사 및 후손 가족, 무료 한국방문 관광 제공
- 참전용사 및 후손 가족, 유학, 취업 기회 제공
- 참전용사 및 후손 가족 무료 진료

□ 이행방법

- 해외 참전용사 및 후손 가족 조사, 방문프로그램 공모
- 국내 각 자치단체, 민박 제공을 위한 '유엔패밀리' 가입가구 모집
- 국내 각 기업, 대학, 봉사단체 자원봉사자 모집
- 대통령 특별조치로 필요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제·개정

□ 이행기간

- 2024년부터 매년

□ 재원조달방안 등

- 유엔기금 활용
- 유엔제5본부 유치 기금 중에서 활용
- 정부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

정책순위

8

한미일동맹체제 강화

정책분야 | 통일 외교 통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공, 가자지구의 분쟁의 여파로 전세계에 안보와 경제위기가 촉발하는 가운데 북한은 잇따라 핵도발과 러시아, 중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에 위협받고 있어 무엇보다 한미일 3국이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든든한 축으로서 긴밀히 협력하여 3각 동맹체제로 단결해야 하는 시점이다. 한미일 3국은 공동의 가치와 신념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안정은 물론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 목 표

- 한미일 3국의 굳건한 협력과 결속으로 역내 안보와 평화를 유지하며 3국의 공동 번영을 추구
- 인도-태평양국가의 일원으로서 한미일 3국이 국제법, 공동의 규범, 공동의 가치를 지키는 캠프데이비드 원칙의 준수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하고 대화와 협력의 국제무대로 이끌어 내도록 협력
- 한미일 3국은 경제, 금융, 에너지, 인적 교류,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우정의 연대로 한미동맹, 미일동맹이 더욱 강한 결속력을 유지.

□ 이행방법

- 굳건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기구 상설기구화
- 한미일 3국간 민주주의 가치와 이념, 안보 이익을 공유하는 한미일동맹운동 전개
- 한미일 3국민 간 친선 우호를 위해 공동의 의무를 규정한 한미일인권법의 제정
- 한미일 3국 학생 정기 수학여행, 학교간 자매결연, 기타 역사, 문화, 예술 교류 활성화

□ 이행기간

- 2024년부터 매년

□ 재원조달방안 등

- 한미일 3국 기업출연 한미일교류기금 조성
- 한미일 3국 시장 통용 단일경제권 지향의 디지털화폐 발행
- 한미일협력 추가경정예산 편성

민족 옛 역사를 기록한 환단고기에 한민족 1만년이상의 상고 역사를 정립하여 민족자긍심을 드높이고 세계를 감동시키는 한류문화의 근원과 뿌리로서 우리 역사를 선양하고 인류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지표로 삼는다.

□ 목 표

- 각급 학교, 대학 국사교과서를 개편하여 잊혀진 민족 상고사를 정립
- 한자문화권과 문명을 공유한 한중일 3국의 역사에 대한 공동 연구, 정립
- 역사와 전통문화의 동질성을 기반으로 한중일 3국의 친선과 우호를 증진
- 대한민국 1만년 역사박물관 개관

□ 이행방법

- 각급 학교 국정 국사교과서 개편, 편찬을 위한 범국민 국사바로세우기위원회 구성
-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역사연구체계, 기구 개편
- 한중일 3국 민간, 공공 역사자료 공동 번역
-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 협조 하에 법률 개정
- 대통령 특별조치로 제도 개선이 가능 사항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제·개정

□ 이행기간

- 2027년까지 3개년 계획

□ 자원조달방안 등

- 재외불법반출 문화재 국제공매 수익금
- 대한민국인류시원문명답사관광프로그램 개발, 관광 수익금
- 지자체 불요불급 예산 절감, 통폐합, 공공조달 원가절감

정책순위

10

22대 땀흘려 일하는국회만들기 국민공감운동

정책분야 | 정치

주권자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국회가 국민의 신임을 잃어가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우리 젊은이들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소중한 결실로 민주주의쟁취 역사가 수백년이 넘는 서유럽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쓰레기더미에서 장미꽃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는 외국인들의 인식을 기적처럼 바꿔놓은 전세계의 자랑거리를 지키기 위해 민생을 외면하고 편법과 특권만 누리는 현재의 국회를 개혁해야 한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땀흘려 일하는 국회만들기 국민공감운동을 펼친다.

□ 목 표

- 연간 수십억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국회의원 특권폐지
- 9명의 국회 보좌진을 절반으로 감축하여 예산 30%이상 절감
- 의석수 확보 목적의 편법 위성정당 남발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 지역구 여성정치인 최저 30% 이상 의무공천 의무화
- 국회 의정활동 분기별 국민보고회 의무 개최

□ 이행방법

- 여성정치인 교육, 양성 여성정치아카데미 광역시도 설치
- 국회의원 운전담당 비서 감축(연 5천만원 절감)
- 국회의원 및 보좌진 기후동행패스 지급, 광역통근버스, 한강수상버스 운영, 승용차 공동 모터 풀제 운영, 긴급출장시에만 배차(연 1억원 이상 절감)
- 대통령 특별권한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제·개정

□ 이행기간

- 2024년 22대 국회부터 매년 실시

□ 재원조달방안 등

- 대중교통요금 인상분에서 일부 편성
- 국회의원특권폐지 경감비용으로 홍보예산



대한민국당

No.	정 책
1	대한민국당은 150세 건강장수장생의 새시대를 열고 돈걱정 하지않고 행복한 인생을 살수있는 복지대국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2	대한민국당은 세계인류 지구촌 대축제를 문화, 예술, 체육, 음식 올림픽으로 주최하여 우리나라를 세계중심국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3	대한민국당은 신인류창조의 최첨단 교육시스템으로 행복한 학교 (happy school)를 만들고 부모조상 유통역사교육부터 행복한 사후 교육까지 평생교육 첨단대국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4	대한민국당은 악덕금융을 흥익금융화하여 세계경제를 살려나가는 경제대국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5	대한민국당은 부모님 존영모심 운동을 통하여 경천 송조 애인의 효문화를 이룩하고 종교문화가 아름답게 상생되는 나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6	대한민국당은 심정교류를 통한 평화화합통일과 함께 DMZ를 세계평화교육장화하고 유엔본부 및 각국 박물관유치로 전쟁종식 세계평화의 지구촌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7	대한민국당은 만주, 간도, 연해주 고토 회복과 유라시아 횡단철도망 및 AI인공지능 로봇자동화시스템으로 노동없는 행복한 4차산업의 첨단국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8	대한민국당은 신문고 암행감찰제도를 도입하여 엄격하게 실행하고 세계네트워크 총본부 설립으로 다단계 피해자를 구제하며 무한에너지 실용화로 깨끗한 지구환경을 만들고 자연치유 신물질로 전염병없는 나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9	대한민국당은 입법, 사법, 행정부의 적폐청산을 시작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반 영역에 혁신적인 정책으로 깨끗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10	대한민국당은 국가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국가유공자님들과 유족님들께 충분한 위로금을 드릴것이며 국민보호 제도를 도입하여 마음놓고 국·내 외활동을 하는 국민보호시스템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책순위

1

대한민국당은 150세 건강장수장생의 새시대를 열고 돈걱정
하지않고 행복한 인생을 살수있는 복지대국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책분야 | 복지, 건강, 의료

■ 현황과 문제점

- ◎ GDP는 OECD국가중 12위인데 복지수준은 OECD 28개국 중 꼴찌로 경제수준과 복지 수준 사이에 괴리가 매우 큼
- ◎ 낮은 복지 수준은 사회불평등을 고착화 시키고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지고 성장동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가 자체의 존립마저 위협함
- ◎ 생활고로 자살하는 가족들이 늘어나 자살공화국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 목 표

- ◎ 대한민국에 태어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보람과 희열을 느끼고 자존감을 갖게 한다.
- ◎ 요람에서 무덤까지 150세 국가에서 건강장수를 보장한다.
- ◎ 세계인류의 시원국으로서 천손민족 장손나라의 자손으로 자존심과 명예회복
- ◎ 전국에 2,000개의 자연치유센터를 개설하여 건강과 의료복지를 담당한다.
- ◎ 노인빈곤 해소, 소득지원 확대, 다양한 가족 지원
- ◎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찾아가는 재가복지 서비스를 운영하여 온국민이 조국으로 자랑하는 대한민국을 실현

■ 이행방법

- ◎ 복지 부문 정책
 1. 결혼 축하금 지급
 - 초혼: 1억원 경비 지급과 주택마련비용 6억원 지원
 - 재혼: 출산시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결혼축하금 소급지급

2. 출산 축하금지급
 - 1자녀: 1억원, 2자녀:1억5천만원, 3자녀:2억원, 4자녀:2억5천만원, 5자녀부터 자녀당 5,000만원씩 추가 지급
3. 연령별 기본소득 지원금
 - 0세 ~17세 까지 월 50만원 지급
 - 18세~24세 까지 월 150만원 지급
 - 25세~74세 까지 월 240만원 ~480만원 기본생활 유지비 지원 (5년주기 월 24만원 씩 상향)
 - 75세~150세 까지 5년주기 월 24만원씩 감액하여 최종 월 240만원 기본생활 장려금 지원
4. 효자효부 지원금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 부모님까지 1가정에서 함께 모시면 각 1대 자손에게 부모님 계좌를 통해
 - 1분모심 : 월333만원(2분모심: 월666만원 지급 3분모심 : 월999만원...)
 - 4대 부모 모심과 5대 제사봉사를 통해 웃대, 아랫대 자손까지 10대가 화목한 가정을 이룸
5. 생일 케익과 생일 축하금 지급
 - 유아(10), 청소년(20), 성인(50)만원 씩 지급
 - 중소기업 관련 상품권으로 지급(제조기업 활성화)
 - 문화예술 관람권, 여행상품권 등을 지급
6. 장애인 정책 첨단화
 - 260만 장애인의 실질 생활비 월 100만원 지원과 취업 보장
 - 장애인 고용 기업 획기적인 우대 정책 마련
7. 국가 유공자 최고의 예우
 - 소년, 소녀 학도병, 독립 유공자, 6.25참전 용사, 월남 참전용사, 일제징용, 위안부, 국가를 위해 생명을 바친 모든 분들에 대한 예우
 - 최초 6억 원과 월 333만원지급 하고, 신청시 이미 사망한 경우 직계 가족에 최초 6억 원 지급 하고 5대손까지 월 333만원 지급
8. 미혼모 보호 및 자녀 양육 지원시설 확충
 - 정부 직접 관리, 보호시설 확보
9. 소년 소녀 가장 생활비 지원
 - 무상교육은 물론 생활비 매월 100만원과 부양가족 수 대비 50만원씩 추가지급
10. 국민들을 찾아가는 재가복지서비스

■ 150세 장수 건강·의료 부문 정책

1. 의료계의 혁신 및 의료 적폐 해소(제3의학 정착 실현)
 - 4무주의: 무혈. 무통. 무약. 무수술
 - 4친주의: 인간. 자연. 환경. 생태친화주의
2. 인간존중/생명존중/인도주의/평화주의 구현
 - 생명 최우선의 정책으로 빈민한 자 구제와 건강사회 구현
3. 의료관광 대국화(세계적 의료 관광 체계 구축)
(양, 한방 협진과 자연치유 조화 시스템 구축)
4. 150세 건강장수 시대 개막 : 장기재생 등 건강장수에 꼭 필요한 신약과 신 물질 확보

■ 이행기간

- 대한민국정부 및 국회와 관련 법조항 제정 및 정비 후 시행

■ 자원조달방안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한민국당 10대공약 자원조달방안(※별첨 참조)

정책순위

2

대한민국당은 세계인류 지구촌 대축제를 문화, 예술, 체육, 음식 올림픽으로 주최하여 우리나라를 세계중심국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책분야 | 문화, 예술, 체육

■ 현황과 문제

싸이, BTS등 의 예술인들과 체육인들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한류열풍이 일고 있으나 조상님의 얼을 숭상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풍습이 사라진 지 오래이다. 이제 문화, 예술, 체육 분야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복원하고 조상님께 예를 올리는 유통식으로 신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 목 표

- 세계인류 지구촌 대축제 개최
- 세계적인 문화 행사를 년1회 이상 개최한다.
- 관혼상제시 정부지원금으로 활성화 시킨다.
- 유통식으로 신문화 정착
- 한글 전세계 공용어화

■ 이행방법

- 세계 인류 지구촌 대축제를 대한민국에서 개최하고 한글만을 써 자연스럽게 세계공용어가 되게 한다.
 1. 세계인류 지구촌 문화 올림픽 : 한글경연대회, 전통문화경연대회, (제기차기, 윷놀이, 씨름, 택전, 연날리기, 자치기, 땅따먹기, 구슬치기, 공기놀이, 그네뛰기, 널뛰기, 고리던지기, 줄넘기, 투호, 비석치기, 술래잡기, 닭싸움, 굴렁쇠 등) 세계전통문화 경연대회(전 세계인의 문화축제 한마당, 지역별 전통문화 경연)
 2. 세계인류 지구촌 예술 올림픽 : 전 세계인 대상 새노래경연대회, 각설이 경연 비보이 경연대회, 그림, 건축, 조각 등 한글과 대한조선에 영감을 받은 작품 경연대회, 탈춤, 농악놀이, 강강술래, 장고, 사물놀이 경연대회
 3. 세계인류 지구촌 체육 올림픽 : 명랑운동회, 에어로빅, 배드민턴, 댄스, 요가, 팔씨름, 차전놀이, 씨름 대회 등
 4. 세계인류 지구촌 음식 올림픽 :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전세계 요리 경연대회

5. 세계인류 지구촌 한류 올림픽 : 한문화, 한복식, 한류스타 따라하기, 한지공예, 칠보, 자개 공예, 한옥설계 경연대회, 송편만들기, 떡메치기 경연대회
6. 세계인류 지구촌 영화 올림픽 : 지구의 어머니 마고님을 주제로한영화제작으로 세계인류에게 역사 교육 자료로 활용함. 시청률 세계1위영화 제작 세계영화 경연대회

◎ 관혼상제의 전통문화 복원 및 전세계 보급

1. 장례장묘산소문화역사 정착(매장 시 3, 000만원)
2. 장례비용(1, 000만원) 정부 지원
3. 조상부모님 사진(존영)모시기: 각 가정당 매년 100만원 정부 지원
4. 제사(3대까지 50만원, 4대 70만원, 5대 100만원) 정부지원
- 5대이상 제사(시제, 차례비용) 비용 지원
5. 성인식 개인별 500만원 정부지원
- 20세 도달 성인 남녀대상(성인식 교육 수료자 대상)

◎ 첨단 4가정 유통식의 신문화 정착

1. 유통식 비용 전액 국가 부담
2. 천성경 음원 보급 지원 과 음향 기기 지원
3. 제례 용품 및 유통식 의상 지원
4. 유통식 행사 전담반 구성 지원
5. 유통식 실행의 방송 중계 지원

◎ 노래방 문화 혁신

- 부정적이고 염세적이며 비관적인 기존 대중가요의 노랫말을 긍정적이며, 희망적이고 꿈을 이루는 가사로 개사한 개사곡 음원을 보급하여 노래방 문화를 혁신한다.

◎ 문화, 예술, 체육 활동비 지원 : 실비 제공

- 전국민 악기 제공 등 문화, 예술, 체육 교습비 지원으로 취미생활을 즐기며, 여가 선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대한조선 전통문화 체험단 모집 운영 : 연중 전세계인 대상, 경비, 숙식비, 선물 제공

- 궁궐순례체험, 화전놀이, 강강술래, 막걸리체험, 김치담기, 음식체험프로그램
- 한복체험, 한지공예, 도자기공예 체험 등

▣ 이행기간

- ◎ 대한민국정부 및 국회와 관련 법조항 제정 및 정비후 시행

▣ 자원조달방안 등

-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한민국당10대공약 자원조달방안(※별첨 참조)

정책순위

3

대한민국당은 신인류창조의 최첨단 교육시스템으로 행복한 학교(happy school)를 만들고 부모조상 유통역사교육부터 행복한 사후 교육까지 평생교육 첨단대국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책분야 | 교육

■ 현황과 문제점

교육은 백년지대계로서 국가의 존립과 안위는 물론 민족의 자존감과 민족성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자아실현을 위해 자기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지식의 교육보다는 일률적이고 흥미없는 지식을 강제로 주입시킴으로 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무시한 채 똑같은 인간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교육의 문제점이 있다. 기회제공이 적으며, 성적으로만 평가하는 평가방법, 윤리나 도덕 보다는 평가위주로 교육을 받게 되는 총체적인 불합리함을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재능을 발휘하고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생애 교육을 정부가 맡아서 하면서 부모는 부모되는 교육을 받고 자녀는 성장하면서 진정한 참부모가 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모든 일체의 비용은 정부에서 맡아야 한다.

■ 목 표

- 전국의 45개 국립대학을 서울대학교로 통폐합하여 세계제일의 첨단대학으로 만든다(하버드 대학 능가)
- 수능시험을 3과목(건강체육, 인성과영성, 특기적성)으로 축소평가
- 사교육비 제로, 영유아부터 대학까지 그리고 2번째 3번째 대학까지 무상으로 지원하며 석, 박사과정도 동일하게 지원한다.
- 정부주도 전생애 교육(성인식, 혼전, 부모 잉태전, 태아, 영아, 유아 교육 부터)실시
- 단동십훈 교육법 보급 프로그램 개발
 - 단동십훈 「불아불아(弗亞弗亞), 시상시상(侍上侍上), 도리도리(道理道理), 주앙주앙(主仰主仰), 건지곤지(乾知坤知), 섬마섬마(西摩西摩), 업비업비(業非業非), 아합아합(亞合亞合), 짹짹궁짹(作宮作宮), 질라아비 훨훨(地羅亞備活議)」 우리의 전통육아법의 보급으로 철학과 정신을 계승하게 한다

이행방법

- ◎ 과목수의 획기적인 감축과 평가방법을 혁신
 - 고등학교 시험은 3과목만 실시
 - 중3때 평생전공 결정, 고교부터 특기적성 1과목(인성, 체육포함)만 시험을 치고 수능 시험을 폐지한다
 - 몸과 마음과 실기로 전인적 성장 평가
- ◎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백과사전식 시험 폐지
- ◎ 사교육비 제로, 영유아부터 대학 그리고 2번째 3번째 대학까지 무상으로 지원하며 석, 박사 과정도 동일하게 지원한다.
- ◎ 특별장학금지급 : 효도장학금, 영재장학금, 노벨장학금 등
- ◎ 신인류창조의 최첨단 교육시스템으로 행복한 학교(happy school)를 만들고 부모조상 유통 역사교육부터 행복한 사후 교육까지 평생교육 첨단대국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 잉태 전 부모교육, 태아교육, 영아교육, 유아교육, 초.중.고 보통교육, 대학, 대학원, 전문교육, 사회교육, 평생교육, 노년교육, 웰빙, 웰다잉교육, 영계교육의 수직적 첨단교육 시스템 구축
- ◎ 전생애 교육용 교과서의 혁신적 개발
- ◎ 세계인류 역사교육관 설립 개발
 -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혼돈을 중심잡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경제절벽을 넘은 새로운 이념의 융합주의 융복합이즘ism의 구현
 - 강화도를 전세계 인류역사 교육 성지로 조성한다
 - 강화도 마니산 길상산 전체를 교육의 성지로 조성 한다
 - 하나님, 조상님, 부모님 경천송조애인 사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영성교사/지도자 양성
 - 전국 교육청 교육 과정 보급
 - 지구의 어머니 마고님을 주제로한 영화제작으로 세계인류에게 역사 교육 자료로 활용함.
시청율 세계1위영화 제작
- ◎ 어린이·청소년 인권의 실현
 - 학생의 천부적 인권을 보호하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의 시스템을 구축
 - 어린이, 청소년 인권법을 기본법으로 제정하여 어린이, 청소년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실현 되는 사회를 만든다
 -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으로 어린이.청소년이 진정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대우를 받는 사회를 구축

◎ 청소년 교육환경 조성

- 학교중심의 교육에서 사람중심의 교육 정책으로 전환하고 교외활동을 보장
-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성평등교육, 통일교육, 다문화교육을 의무화 한다.
- 전학년 전면 무상교육 및 급식의 질 향상과 농어촌 및 작은학교 보호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행정동 단위별로 지원한다.
- 건강을 해치는 0 교시 및 심야야간 자율학습 강제의무를 철폐한다.
- 저탄소 배출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마련
- 차별과 징계위주의 학교 폭력 대응 방안에서 회복적 실천교육으로 변화시킨다
- 초, 중, 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교복, 두발 등의 학생자율을 보장한다.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의무적으로 참석시킨다.
- 학생회 법제화 교육과정 내 청소년 모의 투표 실현 및 청소년 피선거권 연령 하향(현 25세)
- 청소년 노동자의 최저임금제 법제화로 법적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자리 및 노동권을 보장한다.
- 청소년 기본소득 정책은 별첨 재원조달 방안 참조

◎ 교육의 어원적 의미를 교육과정에 반영

- 孝 + 攴(효도 효 + 회초리 복, 칠 복) = 교(敎)
- E + Duco (out + throwing) = Education(교육) 일방적 주입식이 아니고 천부적 재능을 끌어내어 계발시킨다.

▣ 이행기간

- ◎ 대한민국정부 및 국회와 관련 법조항 제정 및 정비후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대한민국당10대공약 재원조달방안(※별첨 참조)

정책순위

4

대한민국당은 악덕금융을 흥익금융화하여 세계경제를 살려나가는 경제대국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책분야 | 흥익금융, 조세

■ 현황과 문제점

- 시장금리는 하락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취약계층에는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음
- 공급자 위주의 서민금융지원으로 서민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원하는 종합적 금융서비스 지원 체계 미비
- 국내경기부진으로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서민의 대출이자 상환부담 가중으로 신용불량자 속출
- 세금 누수 현상 및 탈세자 해외도피 자금 유출 등 심각한 상황

■ 목표

- 서민을 확실하게 살려드리고 파격적인 신용회복 방안 마련
- 신용불량자 전원 신용 회복 및 부채완전 탕감
- 누수없고 탈세없는 공정 사회 구현
- 암호화폐를 국가기간화폐로 발행 유통

■ 이행방법

- 흥익금융 부문 정책

1. 화폐개혁, 카드사용(탈세 막음)

- 통합 카드(신용+체크+적립+신분증 등 기타)한 개로 하고 정부 복지 지원금도 카드에 지급, 전국민과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 기업의 카드의무화, 세금누수 원천봉쇄 및 집행누수 제로 시스템가동
- 화폐 어음 유가증권 등의 디자인 개혁으로 사장되어 묻혀있는 돈의 양성화와 함께 세수를 확보한다

2. 1,000만 신용불량자 구제 시스템 개발로 산업 전사의 명예회복과 재기할 수 있는 여건 마련

3. 1,500조 원의 가계부채와 780조 국가부채를 집권기념으로 전액 탕감 조치
4. 악덕 금융을 밝고 맑은 흥익금융으로 대 전환, 무이자 흥익금융 대출 또는 지원
5. 암호화폐를 한국은행에서 국가기간 화폐로 발행 유통(화폐개혁)
6. 돈을 벌어야 했던 earning money시대에서 돈을 만들어 쓰는 making money 시대를 거쳐 돈을 상속받아서 쓰기만 하는 using money 시대를 향유하는 흥익금융 시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조세 부문 정책

1. 조세정책 혁신으로 탈세 없는 공정사회 조성
 - 약 40종류의 세금을 국세1개로 통합하여 중앙통합관리하고 15종의 자동차 관련세금은 통합징수시키며 세금포인트제도로 인센티브를 주면서 세수를 확보한다
2. 전산 납세 포인트제도 도입(매매, 상속, 증여 가능)
 - 납세 포인트 제도를 실시하여 개인과 기업에게 납세 실적에 따라 국가 유공자 대우와 금융지원을 하며, 납세 포인트를 매매, 증여, 상속까지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즐거운 납세와 성실납세자를 존경하며 전산화 카드로 부정과 탈세 없는 밝은 사회로 환원
3. 지방세 폐지
 - 국세로 통일하여 중앙통합관리로 예산낭비를 막는다
4. 과태료, 벌금, 범칙금, 각종 조세와 준조세 등을 재산비례로 부과시켜 세수의 획기적 증대 100조 이상 창출
5. 악덕 체납자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체납자 공개 수배: 현상금 체납액의 1/10 포상
 - 체납자 신원만 확인되면 : 사용수익권 현장에서 강제 박탈
(ex. 자동차압수, 주택압수, 골프채압수 등)
6. 공유 경제를 위한 복지 지원금의 10%는 세금으로 납부 의무화
 - 모든 지원금의 1/10은 의무적 세금으로 납부하게 하고 그 이상은 자율에 맡긴다. 돈을 벌고 저축하며 상속하는 문화가 서서히 바뀌게 되면 9/10 나아가서는 전체금액과 개인 돈까지 대한민국당에 후원기증하는 문화가 되면서 돈에서 완전해방되는 신문화가 형성될 것입니다.

정책순위

5

대한민국당은 부모님 존영모심 운동을 통하여 경천 송조 애인의 효문화를 이룩하고 종교문화가 아름답게 상생되는 나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책분야 | 종교, 국교

■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다종교 사회이다.전체인구의 대부분이 종교를 가지고 있고 전통 민족 종교는 거의 쇠퇴하고 불교, 개신교, 천주교 3대종교가 독과점 구조로 되어 있다. 민주화 이후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정치가 종교에 협조를 구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고 쉽사리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권력으로 성장되어졌다. 모든 종교는 사리사욕과 자기중심, 개인주의, 양적팽창, 외형지상주의 등으로 젊은 청년들 중심으로 종교를 갖지 않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실정이다. 태초에 우리의 조상님들께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자연의 이치에 따라 나라를 다스려 왔던 얼을 되살려 첨단 신앙으로 모든 종교를 부활 복귀 시키고 통합하여 부모님, 조상님, 하나님을 잘 모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 목 표

- 경천송조애인 사상 고취
 - 하늘을 공경하고 조상을 기리며 사람을 사랑하는 법
 - 나라를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인간된 도리를 다하는 정신함양
- 첨단 신문화 정착
 - 밝게하고 새롭게하라 실천운동을 새마음운동화 시킨다.
 - 최첨단 신문화 유통식 정착
- 효도와 신앙(종교)의 조화로운 생활문화 추진

■ 이행방법

- 부모님 존영모심 운동을 통하여 경천 송조 애인의 효문화를 이룩하고 종교문화가 아름답게 상생되는 나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종교의 부활 복귀 및 국교 통합 지원
 - 면죄부를 돈으로 팔아버린 종교의 부활 복귀
 - 먹고 살기 위한 도구로 직업이 되어버린 종교의 부활 복귀

- 원죄를 교묘히 상술로 포장한 종교의 부활
- 수많은 교주를 양산하여 선량한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 먹는 타락한 종교의 부활 복귀
- 수많은 이름의 종교와 그 안에서 쪼개지고 쪼개지는 허상의 종교의 부활 복귀
- 모든 종교의 대표자들과 총 연대하여 새로운 종교문화 창출과 국교 통합의 새 시대를 여는 시금석 마련
- 진정한 종교의 부활 복귀 와 국교 통합을 위한 과감한 지원
- 지구촌 세계인을 사랑과 평화정신으로 교육시킴
- ◎ 첨단 4가정 첨단유통식(천도제, 회원식) 신문화 정착
 - 유통식 비용 전액지원
- ◎ 효도와 신앙의 조화로운 생활문화
- ◎ 악덕교주의 사회문제 해결
- ◎ 천손민족 장손나라 역사교육으로 종교의 실체검증

▣ 이행기간

- ◎ 대한민국정부 및 국회와 관련 법조항 제정 및 정비후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한민국당10대공약 재원조달방안(※별첨 참조)

정책순위

6

대한민국당은 심정교류를 통한 평화화합통일과 함께 DMZ를 세계평화교육장화하고 유엔본부 및 각국 박물관유치로 전쟁종식 세계평화의 지구촌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책분야 | 통일, 외교, 국방

■ 현황과 문제점

현정부에서 추구하는 힘을 통한 평화 추구 전략에 의하면 향후 5년간 270.7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며 이를 확보하려면 연평균 국방비를 7.5% 증가시켜야 한다.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3.7% 늘어난 15조3733억원 규모로 편성된 것을 보면 평화통일은 요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4.27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평화시대 개막을 선언한 것을 토대로 현재 남쪽 63만명의 군인과 북쪽 119만명의 군인에 들어가는 막대한 국방비를 통일한국에서는 57만명정도만 있으면 자주국방이 가능하고 이들 또한 모병제를 통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한다면 엄청난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목표

- 평화화합 통일한국을 완결한다.
- 자주국방에 필요한 병력 57만명으로 감축한다.
- 모병제로 직업군인을 선발하고 준 공무원 대우
- DMZ에 세계평화 교육장 개장
- DMZ에 UN기구 유치
- 평화화합 통일 후 국호를 대한조선으로 변경한다.
- 전쟁을 원초적으로 종식시킨다.

■ 이행방법

- 통일 부문 정책
 1. 심정 교류를 통한 평화 화합 통일 분위기 조성
 2. 남·북·미 평화 협상의 주도적 경영
 3. 전국에 평양 형 백화점 5개, 남한 형 백화점 5개와 문화예술 센터 조성 (인적 물적 문화교류 확대)

4. 영종도에서 중국 청도(칭다오)까지 한중 해상 대교 건설
(아시아 통일 기반 조성 및 외국과의 활발한 교류)
5. DMZ비무장 지대를 세계인의 평화교육 장소화
(6.25 참전 16개국을 필두로 세계 민속 박물관 설치)
6. DMZ에 유엔본부와 각종 국제기구, 각국 박물관 등을 유치
7. FDA 승인국, 노벨상 시상국을 만들어 첨단 대국 건설
8. 세계인이 찾아오는 중심국이 되게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행 육로·해로·항공로의 시스템 재정비
9. 평화화합 통일 이후 국호를 대한조선으로 변경
10.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대량 살상무기와 물자를 폐기하여 지구상에서 전쟁을 종식시킨다.
11. 군수물자 생산공장을 폐기하고 융복합 산업기지로 바꾼다.

◎ 국방·병역 부문 정책

1. 의무병제 폐지, 모병제로 전환
2. 공무원에 준하는 안정적 보수와 복지 지급
- 월 300만원 이상 급료와 생명수당 지급
3. 철저한 직업의식 속에 국방의 실익 증진
4. 국방 관련 부조리와 병역 비리 근절 시스템 구축
5. 전쟁 종식, 세계평화의 완결을 통하여 절감된 국방비를 세계인류 구원 복지기금으로 충당

▣ 이행기간

- ◎ 대한민국정부 및 국회와 관련 법조항 제정 및 정비후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대한민국당10대공약 재원조달방안(※별첨 참조)

정책순위

7

대한민국당은 만주, 간도, 연해주 고토 회복과 유라시아 횡단철도망 및 AI인공지능 로봇자동화시스템으로 노동없는 행복한 4차산업의 첨단국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책분야 | 국토교통, 산업, 경제

■ 현황과 문제점

대표적인 산업경제를 부흥시키는 클러스터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샌디에고의 바이오클러스터, 일본 도쿄의 시부야 비트 밸리등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대덕밸리, 테헤란밸리, 울산의 자동차 클러스터, 이천의 도자기 클러스터 등 30여 개가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산업특성을 적절히 융합하여 정체성과 경쟁력을 갖추게하여 긴밀히 상호작용이 되도록 만들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면 산업, 경제의 부흥을 가져올 것으로 확신한다.

■ 목 표

- 만주-간도 연해주 고토 회복 및 정착
- 농업 뉴딜정책과 AI인공지능 로봇자동화 시스템 보급
- 무한동력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화석 및 원자력 발전 완전대체
- 청년취업국가 책임제 실시
- DMZ에 세계자연유산유네스코 지정으로 세계적인 관광명소화

■ 이행방법

- 농업 뉴딜정책과 친환경 인공지능 로봇자동화시스템 경영
 - 800여개 단지 특용작물, 일반 작물 재배
 - 600만 실업자(20~70세) 급여와 숙식제공 실업자 해결 및 농업을 살린다.
 - 농촌은 체험, 관광, 테마공원이 되어 노동은 사라지고 부와 여유와 무한 식량 자동 생산의 행복한 전원이 된다.
- 무한동력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화석 및 원자력 발전 완전 대체
- 만주, 간도, 연해주 고토 회복 및 유라시아횡단철도망 구축
 - 시베리아 횡단철도 9.288km / 중국횡단철도 8.613km
 - 만주횡단철도 7.7021km / 몽골 횡단철도 7.753km

- 경제벨트를 연결 접점에 있으면서 대륙경제권, 해양경제권
- 도시와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협력



- AI인공지능 로봇자동화 4차 산업혁명 미래시대를 앞 당겨 생활속에 실현
 - 인공지능로봇 산업에 적극 활용 : 3D업종, 노동력 필요 현장 등에 투입
 - 유전학, 생물공학, 3차원 프린팅 등을 생활속에 적극 활용
 - 사람은 본연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아실현과 취미, 특기적성 기본 소양 함양에 주력할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노동없는 행복한 4차산업의 첨단국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곡류창고, 세계중고 자동차 시장 개척
- 국민가계부채 1,500조와 국가부채 780조를 완전 탕감
- 청년취업국가책임제를 실시
 -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게 봉급 외 월100만원 씩 5년간 지급
 - 5년이상 근무자가 창업시 무이자 5억 대출
 - 대기업 위주의 취업경쟁을 바꾸며 청년 창업을 키워 나간다
- DMZ를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 지정받아 세계인들의 관광코스 1호가 되게 한다.

정책순위

8

대한민국당은 신문고 암행감찰제도를 도입하여 엄격하게 실행하고 세계네트워크 총본부 설립으로 단단계 피해자를 구제하며 무한에너지 실용화로 깨끗한 지구환경을 만들고 자연치유 신물질로 전염병없는 나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책분야 | 언론, 사회, 환경

■ 현황과 문제점

- 언론적폐는 관료제와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서 변화와 혁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언론사간 과도한 경쟁등에서 출발한다. 각 언론사가 수익성 악화와 신규인력 충원의 감소등으로 불가피하게 무리한 취재경쟁과 저널리즘의 윤리를 경시하는 보도가 늘어나게 되고 노조 또는 자회사 중심주의를 심화시키고 종사자 개인의 이익을 챙기려는 모순에서 적폐가 발생되게 된다. 따라서 언론사간 경쟁 심화는 기자 및 보도 등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시민과 시청자의 불신을 초래하게 한다. 특히 한국사회의 가장 큰 적폐는 언론이라 할 수 있다.
- 불공정한 사회 생활속 반칙과 특권을 생활 적폐라 하며 이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학사비리, 갑질행위, 지역토착비리, 보조금 등 공적자금 부정수급, 탈세행위, 재개발.재건축 비리,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안전분야 부패 등이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 출발점에서부터 불평등과 우월적 지위남용, 권력유착과 사익편취 등 과제를 안고 있으며 진정한 적폐청산의 의지를 가지고 발본색원 근원부터 청산하여야 한다.

■ 목 표

- 신문고 암행감찰제도 부활
- 행정구역 통 폐합 - 16개 시.도를 5개도로 통합
- 석유 등 화석 및 원자력을 무한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로 완전 대체

■ 이행방법

- 언론 부문 정책
 1. 정도 정법의 신문명 방송 재단 설립
 - 공정·공평한 언론 문화 정착
 - 빅데이터를 활용한 초고속 동영상 시대 개막

- 현장 홈쇼핑 직거래 방송으로 경제 활성화
 - 서민의 애환을 해소하는 신문고 역할 담당
2. 언론 통폐합으로 믿음직한 언론 문화 형성
 3.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 시켜줄 수 있는 시스템 정립
 4. 사이버 기자 악덕 기자 근절 시스템 정립
 5. 선거개표 조작, 세월호 사건 은폐 등 악순환 청산

◎ 사회·환경 부문 정책

1. 네트워크 사업 첨단 활성화
 - 세계네트워크 총 본부 설립
 - 국가 첨단 시스템으로 다단계의 폐해 예방
 - 눈물의 테헤란로를 성공과 기쁨의 테헤란로로 바꾼다.
2. 신문고 암행감찰제도 부활로 부정부패와 적폐 청산
 - 신문고 암행감찰제도 시행으로 선심성예산의 색출과 자회사를 암암리에 밀어주는 관행 및 교묘한 상속비리와 각종 부조리한 거래관행을 일망타진시켜 악덕금융을 일소시킴
3. 행정 구역의 혁신적 통폐합
 - 망국적 지역감정 해소
 - 행정 비용의 획기적 감축, 복지자금으로 전환
 - 남한 16개 시도를 4~5개, 북한을 2~3개로 통합
 - 경기도와 인천지역 인근을 서울로 통합하여 『서울』을 세계에서 가장 큰 수도로 홍보 하여 아시아 연방통일국을 준비, 또한, 인천공항을 서울공항으로 이름을 바꾸어, 우리나라 문화홍보를 통해 『세계의 첨단공항』으로 혁신.
 - 전국 16개 시. 도(道)를 5개 시. 도(道)로 합병하여 지역감정을 완전히 해결 (서울, 경기, 인천을 서울로 합병, 제주도,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전경남도로 합병 경상북도 와 전라북도 합병 전경북도, 충청남북도와 강원도는 충청도)
4. 팔당의 취수 원을 소양강 댐으로 이전(특급수 화)
5. 농약 공장을 모두 없애 오염의 근원 해소, 전 세계 친환경 한국산 공산품이 값비싸게 팔리도록 하여 농업대국을 실현 첨단 지형적 개발 지구 대지 보존 기능을 열게 하겠습니다.
6. 석유 전기 원자력을 무한 에너지로 대체하여 지구 환경의 원천적 보호
 - 무한동력 무한에너지 실용화

7. 국토 이용계획 법률의 재정비로 난 개발 예방 및 자연 보호
(4대강의 폐해 예방)
8. 중국과 협조하여 대단위 삼림조성으로 황사의 근원을 차단
- 미세먼지방지용 공기청정기 와 황사마스크 공급
9. 코로나 19,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전염병에 대비 면역력 증강을 위한 신약 및 신물질 개발하고, 자연치유력 향상을 위한 미라클 연구시스템 가동

▣ 이행기간

- 대한민국정부 및 국회와 관련 법조항 제정 및 정비후 시행

▣ 자원조달방안 등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한민국당10대공약 자원조달방안(※별첨 참조)

정책순위

9

대한민국당은 입법, 사법, 행정부의 적폐청산을 시작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반 영역에 혁신적인 정책으로 깨끗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책분야 | 사법, 정치, 외교

■ 현황과 문제점

법은 약자를 묶고 지배하기위한 강자들의 발명품이고 도덕은 강자를 제한하고 저지하려는 약자들의 발명품이란 철학적 논거에 의해 지금까지 강자로 군림 해온 정부와 검찰에 대해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적 처신을 요구하고 있다. 언론과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관행적으로 행해온 모든 사법부 적폐들을 청산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과거사를 부정 하고 우리 정부를 굴복시키려는 아베정부의 노골적인 정치 꿈수에 놀아나지 않도록 하고 위안부 문제는 반드시 개인배상을 받아야하고 그 바탕위에 진정한 사과와 용서도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중국의 동북공정과 미국 등 열강의 제국주의적 침탈도 근절 시켜야 한다.

■ 목 표

- 사법부 적폐청산
- 입법부 체질개선
 - 학생인권법제정/ 어린이.청소년 인권법 제정
 -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
- 정당제도 시스템 개선/ 행정부 관료제 병리현상 타파
- 지자체장 임명제 시행

■ 이행방법

- 사법부의 적폐 청산
 1.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관행 타파/ 전관예우 악습 척결을 위한 임용 방법 개선
 2. 판사 검사 변호사 간의 부정 연결고리 차단
 3. 국민 배심원 제도 도입으로 재판 투명성 확보
 4. 판결문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인사에 반영
 5. 재산 비례 벌금형으로 교도소 범죄 확산 차단
 - 매년 100조원 이상 세수 증가 예상

- 벌금 : 생업을 위한 불법주차 0 원

◎ 입법부의 체질 개선

1. 명예직 봉사직으로의 전환
2. 임기 중 국민 소환제 시행
3. 국민민복을 위한 선거구제 및 직능 대표제 도입

◎ 정당 제도의 시스템 혁신

1. 선거비용 100% 국가지원
2. 투·개표 투명성 확보
3. 정경유착의 고리 원천 차단, 언론 재벌 야합 근절

◎ 행정부 관료제의 병리현상 타파

1. 결재 단계의 대폭 축소로 신속한 정책 집행
2. 기관장, 단체장, 부처장 등의 솔선수범 정착
3. 위인설관, 부서 신설 규제로 공무원 수 축소
4. 행정 실명제 도입으로 명확한 책임 행정 구현
5. 화백제도 부활로 투명 공정 행정 구현

◎ 범죄 훈련소와 같은 교도소 범죄의 전염을 막고, 예산 절약을 위해 강력범 또는 흉악범을 제외한 범법자는 재산비례 벌금형으로 바꾼다.

◎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바꾸어 예산낭비(2조 3천억) 및 국민혈세를 절약한다.

▣ 이행기간

◎ 대한민국정부 및 국회와 관련 법조항 제정 및 정비후 시행

▣ 자원조달방안 등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한민국당10대공약 자원조달방안(※별첨 참조)

정책순위

10

대한민국당은 국가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국가유공자님들과 유족님들께 충분한 위로금을 드릴 것이며 국민보호 제도를 도입하여 마음 놓고 국·내 외활동을 하는 국민보호시스템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책분야 | 4차산업경제, 재외동포

■ 현황과 문제점

국민보호제도는 국민의 생존권과 신변보호를 목적으로 시행중인 제도로서 자국내는 물론 재외동포에도 적용되는 제도이다. 자국민이 해외범죄에 휘말리면 선진국은 조사, 재판, 지원등을 하는데 비해 우리정부의 보호는 미흡하다. 경비지원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범죄피해를 보거나, 형사절차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령 체계가 없는 상황. 각국 법률이 서로 충돌 할 수 있는 부분은 느슨하게 규정하되 우리나라 국민이 피해를 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우선 보완할 필요가 있다. 자국민으로서 국가의 재정적, 제도적 한계로 지원받지 못하는 민.형사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최소 생계를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국민보호제도를 마련한다. 국가는 모든 국민을 철저히 보호해 드려야 한다.

■ 목 표

- 국가유공자 명예회복 및 경제적 권위 확립
- 가정생활용품 압류금지
- 전, 월세보증금 6억원까지 재산 압류금지
- 국민위원회 설립 신속한 민원 해결
- 국민보호제도 완벽보완(내국인, 재외동포)

■ 이행방법

- 국가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국가유공자님들과 유족님들께 충분한 위로금을 드릴 것이며 국민 보호 제도를 도입하여 마음놓고 국·내 외활동을 하는 국민보호시스템 가동
 - 소년, 소녀 학도병, 독립 유공자, 6.25참전 용사, 월남 참전용사, 일제징용, 위안부, 국가를 위해 생명을 바친 모든 분들에 대한 예우
 - 최초 6억 원과 월 333만원지급 하고, 신청시 이미 사망한 경우 직계 가족에 최초 6억 원 지급 하고 5대손까지 월 333만원 지급

- 가정생활용품 압류 금지와 악법 철폐
- 전·월세 보증금 6억원 까지 재산 압류금지
- 기업으로부터 받은 어음은 즉시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는 시스템 가동
-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시스템 구축
- 국민위원회를 두어 민원 신속히 해결한다
 - 암행감찰제도의 결과를 통해 비리와 불법을 미리 차단하고 선행을 알리어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에 의한 『정의와 공평』의 나라를 만든다.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헌법 제1조 2항) 준행
- 재외동포 국민보호제도 보완
 - 신속대응팀 구축, 고위급 파견
 - 영사콜센터 홍보
 - 긴급구난활동비 사용한도액 파격 증액
 - 긴급대피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
 - 해외 위난상황 발생시 전용기 투입
 - 신속 해외 송금시스템 가동
 - 인터폴과 연계한 신속한 수사팀 구축
 - 국제테러, 마피아 등으로부터 재외동포 생명을 보호하는 시스템 완비
 - 해외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 영사관, 공무원 들의 직무태만 일소로 봉사행정 구현

▣ 이행기간

- 대한민국정부 및 국회와 관련 법조항 제정 및 정비후 시행

▣ 자원조달방안 등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한민국당10대공약 자원조달방안(※별첨 참조)

※ 별첨 :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대한민국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

가정, 나라 살리기 정책안 1년 예산

2017~19년 통계청 자료 참조

항목	연령	인원	년간 지급액(단위:원)	비고
결혼축하금		250,000	175,000,000,000,000	결혼비용1억원+주택자금6억원(부부공유) ※재혼: 출산시 결혼비용 소급지원
출산축하금		330,000	115,500,000,000,000	1자녀:1억,2째:1억5천,3째:2억,4째:2억5천, 5째부터5천만원지급 ※시행년도기준
연령별 기본소득 지원금	0~17	7,900,000	47,400,000,000,000	요람에서무덤까지기본생활보장 ※ 별첨 조건표 참조
	18~24	4,500,000	81,000,000,000,000	
	25~74	36,000,000	1,555,200,000,000,000	
	75~150	3,600,000	134,784,000,000,000	
효자효부 지원금		2,000,000	159,840,000,000,000	1분모심:333만원,2분모심:666만원
생일 축하금		52,000,000	249,600,000,000,000	유아(10만원), 청소년(20만원)성인(50만원)※ 축하금지급생일케익과상품권
국가유공자 지원금		850,000	510,000,000,000,000	사망시: 직계가족에 최초 6억원 + 5대손까지 월 333만원 지급
			33,966,000,000,000	
장애인 기본생활 지원금		2,600,000	31,200,000,000,000	월 100만원 지급
소년,소녀가장 기본생활 지원금		1,600	19,200,000,000,000	본인 월 100만원 지급,부양가족 1인추가50만씩 지급
장례비지원금	장례비 지원금	300,000	3,000,000,000,000	장례비용 : 1,000만원 매장시 추가지원 : 3,000만원
	매장시 지원금	150,000	4,500,000,000,000	
부모님(조상님) 존영 모심 지원금		20,000,000	20,000,000,000,000	매년 100만원 지급
제사모심 지원금		20,000,000	22,000,000,000,000	3대까지 50만원,4대70만원. 5대 100만원 정부지원
성인식 축하금		630,000	3,150,000,000,000	500만원 지급
모병제 군인 급료		570,000	20,520,000,000,000	월300만원지급 ※생명수당 별도 책정
청년취업국가 지원금		4,000,000	48,000,000,000,000	5년간 월 100만원 지급, 5년이상 근무자가 창업시 무이자 5억 대출
가계부채탕감			500,000,000,000,000	3년 기한, 신청자에 한함
국가부채탕감			156,000,000,000,000	5년만기 분부터
전생애 평생교육 지원금	0~24세까지	12,000,000	100,000,000,000,000	임태전태아, 영아, 유아, 초, 중, 고 대학교: 1인 2억지원
	25~150세까지	40,000,000	16,000,000,000,000	평생교육으로진행,75세까지1회가정 ※1인:5,000만원
총액			4,385,347,120,000,000 (4천385조3471억2천만원)	※예비비10%포함

재원조달방안 및 홍익금융 지원

1. 카드의무화로 세금누수 원천봉쇄 및 집행누수 제로 시스템가동
2. 지자체선거 폐지로 단체장 임명제 전환 및 정당지원금제도 폐지
3. 시·도 행정구역을 5개로 축소 통·폐합 행정비용을 대폭 축소
4. 과태료, 벌금, 범칙금, 각종 조세 와 준조세 등을 재산비례로 부과 세수 100조 이상 창출
5. 체납자 신원 확인되면 모든 부동산 현물 사용수익권을 현장에서 몰수, 고액체납자 근절법 가동
6. 약 40종류의 세금을 국세1개로 중앙통합관리하고 15종의 자동차 관련세금은 통합징수, 세금포인트제도로 인센티브 지급
7. 암행감찰제도 시행 , 관행 및 교묘한 상속비리와 각종 부조리한 거래관행, 일망타진시켜 악덕금융을 일소시킴
8. 화폐 어음 유가증권 등의 디자인 개혁으로 ,돈의 양성화, 세수 확보
9. 하늘의 사명에 따라 천손민족, 장손국가 한민족 대한민국을 세계의 지도자 국가로 다시 세우는 대한민국당에 근본본체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 조상님, 부모님이 주신 하늘의 돈을 홍익금융이라 명명하고 정부에 직접 지원하여 국민복지 활용
10. 모든 지원금의 1/10은 의무적 세금 납부 하고 그 이상은 자율에 맡긴다. 돈을 벌고 저축하며 상속하는 문화가 서서히 바뀌게 되면 9/10 나아가서는 전체금액과 개인 돈까지 대한민국당에 후원 기증하는 문화가 되면서 돈에서 완전해방되는 신문화 형성
11. 돈을 벌어야 했던 earning money시대에서 돈을 만들어 쓰는 making money시대를 거쳐 돈을 상속받아서 쓰기만 하는 using money 시대를 향유하는 홍익금융 시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기본생활 장려금 지급 기준

연령별	월지급액(원)	평균지급액(원)	연령별	월지급액(원)	평균지급액(원)
0~17	500,000	500,000	80	4,560,000	3,120,000
18~24	1,500,000	1,500,000	85	4,320,000	
25	2,400,000	3,600,000	90	4,080,000	
30	2,640,000		95	3,840,000	
35	2,880,000		100	3,600,000	
40	3,120,000		105	3,360,000	
45	3,360,000		110	3,120,000	
50	3,600,000		115	2,880,000	
55	3,840,000		120	2,640,000	
60	4,080,000		125	2,400,000	
65	4,320,000		130	2,400,000	
70	4,560,000		135	2,400,000	
75	4,800,000	140	2,400,000		
			145	2,400,000	
			150	2,400,000	



대한상공인당

No.	정 책
1	소상공인 전담은행 설치
2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상환 이자 면제
3	소기업 올리는 중대재해처벌법 폐지
4	유희공간 활용, 장애인 일자리 센터 구축
5	노인복지시설 체계화 추진
6	출산·보육 지원 전담기관 설치
7	반려동물 복지 강화
8	저소득층 세금부담 경감
9	소상공인청 설립
10	탄소중립 실천 강화

정책순위

1

소상공인 전담은행 설치

정책분야 | 재정경제

□ 목 표

- ◎ 저리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전담은행 설립
- ◎ 소상공인 부채 축소 및 이자 부담 완화
- ◎ 코로나 피해 이후 소상공인 재도약 자금 조달력 보장
- ◎ 소상공인 협업 촉진 공간 확보 및 단체협상 역량 강화

□ 이행방법

- ◎ 소상공인 전담은행 설립
 - 법률 제정 등 전담은행 설치방안 확정 및 소상공인 대출, 채무 등 금융 업무를 전담하는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 ◎ 소상공인의 자금조달력 보장
 - 소상공인 재도약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금융 조달 협상권 강화 및 소상공인, 시장상인, 자영업 특화 여신서비스 제공
- ◎ 40조~60조원 소상공인 재생기금을 통한 적극적 채무조정
 -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40조~60조원 규모 ‘소상공인재생기금’ 설치, 전담은행 설립 전 혹은 설립 지연 시 활용
 - 새출발 기금의 까다로운 조건을 대폭 완화해 채무조정 실효성 확보
- ◎ 소상공인 협업 촉진역량 강화
 - 전담은행 내 공간을 확보하여 소상공인 공동대응 행위 등 협업 촉진역량 강화 및 전담
 - 은행 여신서비스 활용을 통한 소상공인 공동체 활력 제고

□ 이행기간

- ◎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 2024년~2025년까지
- ◎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제도개혁 작업 진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소상공인 전문은행은 소진기금 등 정책자금 활용 및 개별 법률 제정 추진
- 소상공인 채무조정은 은행의 출연금을 통해 마련

정책순위

2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상환 이자 면제

정책분야 | 재정경제

□ 목 표

- ◎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이자 면제 및 상환만기 연장
- ◎ 상환 유연성 확대를 통한 재정 압박 소상공인 지원
- ◎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및 활력 회복지원

□ 이행방법

- ◎ 소상공인 수입 감소에 따른 최대 5년 이자 면제(2+3 면제 실행)
- ◎ 소상공인 경영상황을 반영하여 맞춤형 원금상환 일정 설계
- ◎ 개별적, 재무적 취약상태를 고려한 상환 채무의 탄력적 조정
- ◎ 필요시 저리의 대환대출 시스템 제공 및 중도상환 불편 해소

□ 이행기간

- ◎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이자 면제 및 맞춤형 상환작업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른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
(매년 재량지출 예산증가 평균 6조원 규모)
- ◎ 연말 보도블록 정비 등 불요불급 사업의 지속적인 지출구조 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정책순위

3

소기업 올리는 중대재해처벌법 폐지

정책분야 | 안전

□ 목 표

- ◎ 50인 미만 소기업 및 자영업자 올리는 중대재해처벌 관련법 폐지
- ◎ 산업안전보건법 정비를 통한 소기업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 확보
- ◎ 시민안전을 위한 시민재해방지시책 추진 법령 개선

□ 이행방법

- ◎ 소기업 경영난 차단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폐지 법안 조기발의
 - 금년 2월 27일부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 적용 개시
- ◎ 소기업 및 자영업자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정비
- ◎ 소기업 및 자영업자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 관리의 실효성 확보
- ◎ 소기업 근로자 재해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체계’로 재편,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원청회사 및 하청회사 통합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등 후진적 산재예방시스템 전면 개편,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등 산업재해 예방 지원 대폭 확대

□ 이행기간

- ◎ 중대재해처벌법 폐지 : 22대 국회 임기 시작 후 3개월 이내 발의 및 상정
-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즉시 개정안 발의

□ 재원조달방안 등

- ◎ 재정지출 구조조정 및 연간 총수입 증가분 활용

정책순위

4

유휴공간 활용, 장애인 일자리 센터 구축

정책분야 | 보건복지

□ 목 표

- ◎ 장애인 직업권 및 일자리 접근권 확대
- ◎ 장애인 생업 돌봄 부담완화 및 장애인 청년지원 거버넌스 구축
- ◎ 장애인 거주공간과 일자리 공간 밀착화를 통한 이동 불편 해소
- ◎ 장애인 특성에 맞는 인공지능(AI), IT·SW, 미래 일자리 제공

□ 이행방법

- ◎ 폐교된 학교 등을 스타트업 메이커 스페이스로 전환
- ◎ 빈 상가 및 상점을 장애인 창의적 공유 작업 공간으로 활성화
- ◎ 빈 가옥을 장애인 문화예술 레지던스 스튜디오로 변환
- ◎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유치를 통한 자립 지원
- ◎ AI 등 장애인 전문 벤처·스타트업 등 활성화 공간 기반 조성

□ 이행기간

- ◎ 관련법 제·개정 사항은 2024년부터 준비하여 지속 추진
- ◎ 재정사업의 경우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투자 확대

□ 자원조달방안 등

- ◎ 소요재원은 국가 재정운용 계획에 반영되어있는 재원과 재정지출 구조조정 및 연간 총수입 증가분으로 마련
- ◎ 필요시 부자감세 원복을 통해 소요재원 마련

정책순위

5

노인복지시설 체계화 추진

정책분야 | 보건복지

□ 목 표

- 노인복지시설 품질 향상을 통한 품위있는 노후 보장
- 정부와 사회적 자본 유치를 통한 노인복지 타운 구축
- 복지서비스 첨단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 시설 접근성 개선을 통한 이동성, 편의성 증진
- 치매 예방 및 치료 등 노후 리스크 관리기능 강화

□ 이행방법

- 노인복지시설 접근성 활용률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개량 지원
- 남성노인, 여성노인 특성에 맞는 체육시설 지속 확보
- 노인복지관 급식시설 개량 및 점심제공 일수 단계적 확대
- 중점 돌봄 군(약 6만 명) 노인대상 생활지원서비스(이동·세탁·가사·청소·취사 등) 제공 확대
- IOT, 센서 등을 활용, 노인복지시설 및 재택 상호 간 요양서비스 지원 연계망 강화
- 치매 예방 정기진단 노인복지시설 확대 및 치매 진단 시 '위치감지기' 보급 추진- 건강관리, 생활지원, 여가지원, 복지지원 원스톱 스마트 노인복지시설 구축

□ 이행기간

- 관련 법 제·개정 사항은 2024년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관련 재정사업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 재원조달방안 등

- 예상되는 재정소요 비용은 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재량지출의 10%수준) 및 2023~2027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 증가분(2023~2027년 연평균 증가율 3.7%, 2025년 49조원 증가) 등으로 충당

정책순위

6

출산·보육 지원 전담기관 설치

정책분야 | 여성

□ 목 표

- 산모 및 태아 보호 및 긴급돌봄 응급 대응
- 출산가정 부부 지원 및 일자리 유연화 구현
- 공동육아 및 직장내 육아 지원체계 개선
-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 육아를 최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사회적 토대 마련

□ 이행방법

- 출산 보육 책임지원 기관 설치, 운영(가칭 출산보육 서비스센터)
- 산모 및 태아 보호를 위한 안심출산 콜센터 운영
- 긴급돌봄 응급 대응을 위한 긴급보육 지원센터 운영
- 출산가정 부부에 대한 육아휴직, 후견기능 역할 수행
- 공동육아 체계 구축 및 직장내 육아 지원시스템 강화
- 일자리 유연화를 통한 육아휴직 제도 확대
- 결혼·출산지원 저리 대출제도 도입(신혼부부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
- 아이돌봄서비스 국가 후견책임 무상 바우처 지원
- 소상공인 출산·육아 급여 보장 및 세제 혜택
- 육아휴직제 및 대체인력지원 확대
 - 예술인,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저소득·저임금 근로자까지 포괄

□ 이행기간

- 2024년 하반기부터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한 단계적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재량지출의 10%인 18조원 수준) 및 2023~2027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 증가분(2023~2027년 연평균 증가율 3.7%, 2025년 49조원 증가) 등으로 충당

정책순위

7

반려동물 복지 강화

정책분야 | 기타

□ 목 표

- 반려동물 입양 600만 가구(2020년 기준) 의료비 부담 완화
-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시설 및 화장시설 접근성 개선
- 반려동물과 함께 누리는 복지기반 시스템 구축
- 반려동물 친화적 생활기반 마련

□ 이행방법

-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반려동물 보험 신설 추진
- 반려동물 보험제도 활성화 및 보험료 산정 통계 체계화
- 공공 동물병원 및 화장시설 시범도입 및 확산
- 공립 놀이공간 확충 및 친화적 건축 추진
- 반려동물 유기 감소 및 분실 방지를 위한 등록제 강화
- 안전친화 시스템 구축 및 반려동물 매너학교 운영

□ 이행기간

-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시행(2024년 4월 27일) 이후 필요한 조치 단계적 추진
- 2024년 하반기부터 관련예산 확보를 통한 단계적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에 따른 예산증가분(평균 3.6%)과 지속적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재원 충당

정책순위

8

저소득층 세금부담 경감

정책분야 | 재정경제

□ 목 표

- 물가 폭등, 실질임금 감소로 인한 경제적 고통 극복
- 조세 경감방안 활용을 통한 소득 불평등 해소
- 세금부담 경감을 통한 기본소득 및 행복추구권 보장
-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적 안정성 강화

□ 이행방법

-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간이과세(과세특례) 기준을 2억 4천만원으로 인상
-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공제 확대로 과세기준 인하
- 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인하로 생활비 경감
- 국가 재정조달 다각화를 통한 세금경감 여력 확보
- 최저소득 보장을 위한 비과세 추진 및 최저생계비 실제 물가반영 조정

□ 이행기간

- 법령 제·개정사항은 2024년 상반기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저소득층 소득보장 공론화 및 제도정비 지속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2024년 세입 감소는 여타 세목 조정으로 대응

정책순위

9

소상공인청 설립

정책분야 | 행정자치

□ 목 표

- 열악한 소상공인 경영환경, 근로환경 긴급 복구 및 지속성장 지원
- 소상공인 영업 인프라 개혁으로 동반성장 상생 네트워크 육성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부담 대폭 경감 및 공정시장 조성
- 골목상권·전통시장 매출 회복지원 및 재도전 지원 확대

□ 이행방법

- 소상공인 관련 법령 통합운영 및 소상공인 종합 추진시책 관리
- 소상공인 경제적 취약성 해소를 위한 장단기 기본계획 수립
- 정부 지원사업의 관리 및 소상공인 네트워킹 강화
- 소상공인 자금조달 체계 개선 및 재도전 금융지원 확대
-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및 스마트화·디지털화 지원 확대
- 소상공인, 골목상권, 전통시장 규제 제로박스 신설
- 간편 결제시스템 도입 지원 및 합리적 수수료율 마련
- 골목상권, 시장 등 킥커머스 서비스 지원 및 불공정 피해구제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공제사업 등 복지 플랫폼 예산 확대
-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시장 규율 법제 구축
- 한국무역보험공사 업무에 소상공인 판로 확대 전용 T-커머스 온라인채널 신설 추진

□ 이행기간

- 재정사업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은 2024년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단기 재원은 불요불급 사업의 지속적인 지출구조 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 장기 소요재원(연평균 2조원 예상)은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재원과 재정지출 구조조정 및 연간 총수입 증가분(23~27년 연평균 증가율 3.7%, 2025년 49조원 증가)으로 마련(매년 재량지출 예산증가 평균 6조원 규모)

정책순위

10

탄소중립 실천 강화

정책분야 | 환경

□ 목표

- RE100 시대 구현을 위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체계 구축
- 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형 산업전환 추진
-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시스템 전환 및 산업 경쟁력 향상
-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육성
- 재생에너지 산업 거점 클러스터 확대

□ 이행방법

-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및 협약을 통한 RE100실천
- 신재생에너지 보급 여건 마련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인센티브 제공
-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 및 지자체 분산전원 확보
- 탈 플라스틱 등 친환경제품 사용 촉진 및 환경보호 캠페인 전개
-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연구 개발 및 확대 적용
- 지속적으로 탄소 배출 감축기술 발굴 및 친환경적 농업 생산 확대
- 국제사회(COP28)와의 약속 이행(2030년 재생에너지 3배 확대)
- 탄소중립기본법의 연장선상에서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 제정으로 2050년 탄소중립 실현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사항은 2024년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제도개선과 함께 재정사업 등은 2025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추진

□ 자원조달방안 등

- 소요재원은 2023~2027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재원 및 연간 총수입 증가분(2023~2027년 연평균 증가율 3.7%, 2025년 49조원 증가)으로 마련



No.	정 책
1	국가발전에서 국민행복으로(1): 일과 삶의 균형과 국민정신건강 보장
2	국가발전에서 국민행복으로(2): 공동체 돌봄과 사회적 포용 증대
3	성장경제에서 균형경제로(1):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전략과 재분배
4	성장경제에서 균형경제로(2): 디지털·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 경제
5	승자독식정치에서 합의민주주의로(1): 국민주권 개헌과 사회적 합의의 제도화
6	승자독식정치에서 합의민주주의로(2): 정치개혁과 디지털 민주주의 확대
7	전쟁체제에서 평화체제로(1): 전쟁종식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8	전쟁체제에서 평화체제로(2): 한반도에서 시작하는 세계 평화
9	화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1): 탄소중립 실현과 녹색 인프라 확대
10	화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2): 재생에너지 기반 순환경제로의 전환

국가발전에서 국민행복으로(1): 일과 삶의 균형과 국민정신건강 보장

정책분야 | 보건복지

□ 목 표

- 미래당은 안녕한 삶 실현을 위한 국민총행복(GNH) 정책을 추진한다.

□ 이행방법

‘안녕한 삶’은 국민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의 헌법 가치가 실현되는 미래형 복지국가를 추구한다. 너무나 빠르게 진행된 압축적인 경제성장의 이면에 평범한 국민의 삶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존엄성 훼손, 정신적 위기, 혐오의 확산, 개인의 고립, 안전하지 못한 일상이 여전하다.

특히 ‘일과 직장’에서 과도한 경쟁 체제와 불균형은 ‘행복하지 않은 삶’의 주요한 원인이다. 경쟁과 이윤이 아닌 국민의 ‘행복할 권리’를 충족시킬수 있는 ‘국민총행복’ 지표의 도입과 공공 정책 실현을 통해 좋은 삶(well-being)을 실현해야 한다.

-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행복한 직장 만들기
 - 직장민주주의 인증제 도입, 공공기관·기업 심리주치의 배치
 - 공공기관 주4일 기반 유연근무제, 민간기업 주4일 인증제 도입
 -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으로 소득감소 우려와 공백 보완
- 국민정신건강 접근권 및 심리의료서비스의 보편적 확대
 -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주기 단축(10년 중 1회→3년 중 1회)
 - 보건소·학교·군대 등 공공기관에 정신건강 전문의료인 배치
 - 중독성질환 치료보호기관과 국공립 트라우마 센터 확대

정책순위

2

국가발전에서 국민행복으로(2): 공동체 돌봄과 사회적 포용 증대

정책분야 | 보건복지

□ 목 표

- 미래당은 안녕한 삶 실현을 위한 국민총행복(GNH) 정책을 추진한다.

□ 이행방법

청소년과 노인 층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높은 자살률은 생애주기의 시작과 끝이 모두 불행한 우리의 현실을 보여준다. 젊은 세대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로 응답하고 있다. 일상을 지켜주는 울타리로서의 공동체 기능을 회복해 이 땅에 사는 모두가 행복한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 공동체 돌봄과 활력을 위한 사회동반자 관계의 제도화
 - 육아휴직 3년, 부모소득 3년 보장 및 마을공동육아 활성화
 - 생활동반자법 도입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생활공동체 지원
 - 1인 가구 지원정책을 강화, 생활공유의 공적공간 확대
- 초고령사회 대비를 통한 행복한 노후 보장
 -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복지와 사회참여 증진의 정부 책임 명시
 - 지역의료와 돌봄 인프라 확충해 살던 곳에서의 행복한 노년 보장
 - 세대 간 디지털 격차 해소와 돌봄의 디지털화 촉진
- 다양성 보호와 공존을 위한 혐오·차별 대책 법제화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혐오 방지 및 갈등조정 강화
 - 다문화·이주민 지원 및 인권 보호 정책 확대
 - 언론·기업 혐오책임 징벌적배상제

□ 목 표

- ◎ 미래당은 균형경제 실현을 위한 균형경제지표 정책을 추진한다.

□ 이행방법

‘균형경제’는 GDP 성장을 국가발전과 경쟁력의 척도로 삼았던 성장 중심경제 전략을 ‘분배 정의와 분산형 경제망’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경제는 정경유착의 관행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 개발이 지배하고, 정당한 노동권과 이익분배를 보장받지 못하였다. ‘선진국 따라하기 경제구조’는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의 동력을 발목 잡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 빈부격차는 줄어든다는 ‘낙수효과의 법칙’은 사실이 아니다.

균형경제는 경제적 부와 안전망이 국민 모두에게 고르게 분배되고 보장되는 ‘사회적 기초’와 대한민국 경제발전 시스템이 ‘생태적 한계’를 넘지 않는 ‘좋은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인간 존엄성과 기본권을 지키는 ‘사회적 기초선’과 인류의 지속가능성과 생명권을 지키는 ‘생태적 한계선’의 균형 안에서의 국가 경제의 역동적 발전이 새로운 미래 경제 전략의 목표이다.

- ◎ 균형경제지표에 기초한 대한민국 미래산업전략2050 수립
 - 분산형 경제 기반의 국가산업전략추진법 제정
 - 한국형 사회적기초지표 마련
 - 한국형 생태적한계지표 마련
- ◎ 강력한 소득·자산 재분배 정책 실행
 - 기본소득·기초자산·기본주거·기본교육 보편복지를 위한 보편증세
 - 공무원 보상체계 개혁, 고위 공직자 임금 조정(OECD 평균 수준)
 - 공시가격 제도 폐지·부동산 시가평가제 도입, 주택임대소득 정상과세

정책순위

4

성장경제에서 균형경제로(2): 디지털·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 경제

정책분야 | 재정경제

□ 목 표

- 미래당은 균형경제 실현을 위한 균형경제지표 정책을 추진한다.

□ 이행방법

저성장 국면의 대한민국에서 좁은 성공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디지털 경제의 도래와 재생에너지 체제 전환의 기회를 통해 새로운 문을 열어나가야 한다. 비파괴적이고 순환 가능한 균형경제 체제에서 국민 개개인에게 더 많은 기회가 안정적으로 주어질 수 있다.

- 강소기업(히든챔피언) 육성을 통한 분산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 중소기업 원천기술개발 지원으로 산업영역 확장
 - 사회안전망 기반의 노동안정유연성 제고
 - 재벌개혁·공정거래법 강화
- 디지털경제 및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가산업인프라 구축
 - '분산형 네트워크' 에너지-미래산업 기반 기업경쟁력에 투자
 - 산업, 수송, 건물 등 각 부문별 에너지 효율 혁신 추진
 - 포괄적 데이터거버넌스 체제 구축 및 데이터 산업인프라 구축
- 미래형 인적·사회적 자본 육성 전략 추진
 - 맞춤형교육(창조력·생태친화성·디지털화)으로 교육체제 재구성
 - 진학·취업 등 이행과정의 자기 탐색을 지원하는 '갭이어' 프로그램
 - 특성화 대학 육성으로 산업별 인력 미스매치 해소

□ 목 표

- 미래당은 협치정부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정책을 추진한다.

□ 이행방법

‘협치정부’는 국가통치에서 ① 연합정부체제 ②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③ 다당제와 자치분권제 ④ 거버넌스와 참여민주주의 제도화로 운영되는 정치체제이다. ‘다수의 지배적 통치’보다 ‘합의에 의한 정치’가 국가적·국제적 정치 환경 대응력을 높이고, 다원화된 국민 의사를 더욱 잘 반영하며 사회적 소수와 약자의 정치적 이익을 보호하는데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공할 것이다.

협치정부는 ① 시민참여와 노동참여를 촉진하여 사회적 갈등과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문화’를 만들어가는 법·제도화 ② 권력구조·선거제도·정당체제의 영역에서 정치적 갈등과 문제에 대해 ‘정치적 합의구조’를 만들어가는 법·제도화 ③ 공공의 권력·자원·정보의 독점과 편중을 분권과 자치화의 방식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 헌법개정(기본권·자치·분권·협치)을 통한 7공화국 체제로의 이행
 - 기본권·국민주권 확대
 - 선거제도 비례성과 지방자치 확대
 - 불평등해소·경제민주화 확대
- 시민참여·노동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의 법·제도화
 - 참여예산·공론화 제도 강화 및 시민의회 적극 도입
 - ‘노사공동결정법’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갈등 해소 촉진을 법제화
 - 시민 참여의 제도화(국민소환·국민발안·국민투표) 확대

정책순위

6

승자독식정치에서 합의민주주의로(2): 정치개혁과 디지털 민주주의 확대

정책분야 | 정치

□ 목 표

- 미래당은 협치정부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정책을 추진한다.

□ 이행방법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다당제 정착은 소통하는 국회, 일하는 정부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다.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는 정부교체나 의회 구성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정책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기후위기와 해양생태계 문제 등 국경을 넘는 거버넌스를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다수 국민의 합의된 의사가 더 잘 전달되도록 할 것이다.

-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과 다당제 촉진
 - 대통령 결선투표제, 4년 중임제 도입 추진
 - 국회의원 세비 제한, 비례의석 확대를 통해 연동형비례대표제 완성
 -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개정으로 참정권과 정당참여 확대
- 지방 자치와 분권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제도 전면적 개혁
 - 지방자치법 개혁(행정권·재정권 확대)
 - 동장직선제·주민참여예산 확대
 - 지방조례 주민발의제 보완 및 확대
- 정보 기본권과 디지털 민주주의의 확대
 - 정보기본권 보장(정보접근·정보공개)
 - 데이터 기본권 도입으로 무료데이터 제공 확대
 - 다국적기업 등 대상으로 데이터세 도입

□ 목 표

- 미래당은 통일한국 실현을 위한 한류평화네트워크 정책을 추진한다.

□ 이행방법

한국은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전쟁과 분단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비록 한국이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전쟁 위험과 분단 체제를 유지하는 한 인류 문명을 선도하는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담당하기는 한계적이다.

전쟁과 분단의 100년이 지나기 전에 ‘사실상의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국가 비전에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평화체제와 통일한국’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평화외교는

①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매개로 한반도 평화기반의 조성을 먼저 달성해야 하며 ②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 공동체의 발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을 실현해 가는 것이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경제·문화 영역에서 한류네트워크’ 기반이 중요하다.

- 전쟁종식을 위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체결
 - 한반도 종전선언 비준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 한반도 종전·평화선언 UN결의안 채택
- 핵 없는 한반도 만들기와 점진적 모병제 추진
 - 북한의 즉각적인 ‘핵 동결’과 북미관계 정상화 프로세스 촉진
 - 한반도 비핵화와 점진적 군비감축·모병제 동시 추진
 - 주한미군의 평화유지군 전환

정책순위

8

전쟁체제에서 평화체제로(2): 한반도에서 시작하는 세계 평화

정책분야 | 통일외교통상

□ 목 표

- 미래당은 통일한국 실현을 위한 한류평화네트워크 정책을 추진한다.

□ 이행방법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세계 대전의 향을 도화선에 불이 붙고 신냉전 체제로의 진입이 가시화하고 있다. 분단, 갈등과 분쟁의 상징이던 한반도에서 가장 극적인 평화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일은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에 대한 가장 큰 기여가 될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 ‘코리아 프리미엄’을 온전히 누리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 남북경제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경제공동체 추진
 - 개성공단 재개로부터 남북한 경제협력 복원
 - 경제적 남북교통망(철도·도로) 복원
 - 남북한 포괄적 경제공동체 협약 체결
- 한류네트워크 기반의 한중일-북방-남방 평화경제외교 추진
 - 한중일 문화경제공동체를 추진하고 사무국 한국 유치
 - K-ASEAN 경제협력으로 외교·통상 다원화 및 다각화
 - K-유라시아국가와 협력 증대로 국익외교 역량 강화
-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에의 책임과 기여 강화
 - 국제개발협력기금(ODA) 1% 초과 달성 추진
 - 한중일평화시민네트워크 확대
 - UN·국제기구 참여·기여 확대

□ 목 표

- 미래당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정의 정책을 추진한다.

□ 이행방법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은 화석에너지(석유·석탄·천연가스) 및 원자력발전이라는 높은 탄소 배출과 비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이룩한 성과다. 결과적으로 기후위기·환경오염·자원고갈·생태계 파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 이상 ‘경제 성장에 따른 지구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기후약당국의 오명을 벗고 ‘탄소중립국가’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무엇보다 ①전환(에너지)·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 분야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② 쓰레기처리와 식량자급 분야에서 생태친화적 국가전략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산업 재편에 따르는 좌초자산 전환 계획과 탄소산업 일자리에 대한 사회안전망 대책이 필요하며 이는 공적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 2030년 탄소배출 50%감축 법제화
 - 전면적 기후변화영향평가제 도입
 - 탄소세·기후정의배당제 도입
- 녹색교통·녹색건축 인프라 전면적 확대
 - 저탄소·재생에너지 교통 확대 및 대중교통 무상화 추진
 - 내연기관 교통수단 규제 강화
 - 건물 에너지 효율 인증제 의무화

정책순위

10

화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2): 재생에너지 기반 순환경제로의 전환

정책분야 | 환경

□ 목 표

- 미래당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정의 정책을 추진한다.

□ 이행방법

COVID-19 백신 부족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겪으며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기후위기는 식량생산 감소로 이어져 자국 우선주의를 심화시킬 것이다. 화석연료와 우라늄 같은 수입 에너지원이 아닌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최소한의 식량자급을 목표로 생태농업을 육성해야 한다. 자원순환 시스템을 강화해 자원과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 전체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높여 변화의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

- 2050년 재생에너지 100% 실현을 위한 에너지산업 전환
 - 화석연료 및 원자력 발전소 단계적 가동 중단
 - 시민참여 에너지효율화·RE100 지원
 - 양방향 전력계통 활성화 촉진
-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
 -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강화·플라스틱 재활용률 100% 달성
 - 수리권·재사용·재활용 확대를 통한 폐기물 감축
 - 음식물 쓰레기 저감 인센티브 및 퇴비화 지원
- 농업의 국가전략산업화 지정 및 생태농업 육성
 - 귀농·귀촌 지원 확대
 - 생태농업·친환경급식·채식선택권 확대
 - 2050년 식량자급률 100% 초과 달성



새누리당

No.	정 책
1	정당에 주는 국고보조금을 없애자!
2	지방자치제를 중앙집권제로 바꾸자!
3	국회의원제도를 변경하자!
4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함부로 바꾸지마라!
5	자유시장 경제정책을 함부로 건들지마라!
6	선심성 정책을 만들지 마라! 우리의 아들, 딸이 짙어질 빛이 된다.
7	축구협회를 특검하라
8	민주화라 말하는 5.18을 정확히 조사하라!
9	박근혜대통령님을 청와대로 복귀
10	문재인의 정부의 실패한 정책의 배경과 결정과정을 조사하라!

1

정당에 주는 국고보조금을 없애자!

정책분야 | 정치

- 정당에 주는 국고보조금은 공영선거를 통한 깨끗한 선거와 국민의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기 위한 중소 정당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의 대부분이 양대 정당에게만 지원되고 있다.
- 정당의 운영비에 국회의원의 수에 비례하여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어, 자금력이 풍부한 양대 정당이 선거에서도 많은 득표율을 얻게되고 15% 이상의 득표율을 받는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상황이다.
- 이와 같은 선거공영제로 인해 국회의원 등의 정치인들은 선거를 통한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 하기보다는 양대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 정당권력에 충성하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소신있는 정치인이 많아지려면 정당운영과 선거비용을 지원해주는 국가보조금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 목 표

- 국회의원이 없는 중소정당과 득표율이 적은 후보자에게도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한다

□ 이행방법

- 정치 무관심을 해소하고 활성화를 위해 양대 정당이 자신들의 손해를 감내하고 정치자금법의 개정을 이끌어내도록 지속적으로 국가보조금의 문제점을 이슈화한다.

□ 이행기간

- 지금의 21대 국회부터 당장 시작하라!

□ 재원조달방안

- 시행하고 있는 정책의 방법만 바꾸기에 재원조달 불필요

정책순위

2

지방자치제를 중앙집권제로 바꾸자!

정책분야 | 행정자치

-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정책과 무계획적인 정책으로 효율적인 국가적인 정책추진이 실종되고 지방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지방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균형성장을 위해선 지방자치제를 전면 개선하라!
- 노선이 거의 없는 지방공항, 사람이 찾지 않는 지방호텔, 테마파크 등의 문제점은 현실을 왜곡하고 인기있는 정책만을 추구하는 지방자치제도의 폐해를 없애자!
- 국가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지자체장의 당선을 도와준 이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선심성 지방자치제도의 계획들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 중앙집권제로 바꾸자!

□ 목 표

-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의 세금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에 낭비하는 중앙집권제로 바꾸어서 지방자치제의 폐해를 없애자!

□ 이행방법

- 지방자치제를 없애고 중앙집권형으로 바꾸자.

□ 이행기간

- 다음 지방선거를 없애자! 선거보조금을 없애자.

□ 재원조달방안

- 낭비하는 세금을 없애는 것이므로 재원조달필요없다.

정책순위

3

국회의원제도를 변경하자!

정책분야 | 정치

- 국회의원수를 200명으로 줄이자!
-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제도를 없애자!
-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으로 바꾸자!
 - 보좌관의 수도 줄이고 국회의원에게 주는 각종 특혜를 없애자!
- 국회의원 연임횟수를 무제한에서 3선까지로 제한하자!
 - 국민의 정치 무관심으로 국회의원은 종신직이 되고 있다.

□ 목 표

- 진짜 국민을 위한 정치, 자신의 이익과 자신들의 가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1번당, 2번당과 그 외 아류당이 아닌 진짜 민주주의 정치를 하자!

□ 이행방법

- 헌법을 고치려고 하는 1번당, 2번당들아. 너 자신을 알라. 너희들이 고치려하는 것이 아니라 부조리한 국회의원 제도부터 고쳐라!

□ 이행기간

- 22대국회에서 전국민에게 선포하고 22대국회 해산하고 다시 선출한다.

□ 재원조달방안

- 선심성 정책이 아니므로 재원조달 필요없다.

정책순위

4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함부로 바꾸지마라!

정책분야 | 교육

- 의대정원등 대학정원을 함부로 건드리리 마라!
 -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의대생의 입학생을 2000명씩이나 늘린다고요? 혹시 중국공산당자녀를 합격시키려하나? 노무현정권때의 사시제도폐지하고 로스쿨도입으로 공명정대해야 할 제도를 번드르한 말로 법대의 사시제도에 매진하던 아니 자신은 고졸로 사시패스해서 변호사하고 대통령이 된 자가 기회의 균등을 없앤 로스쿨제도로 그 학비가 없어서 기회조차 못갖게 하더니 이젠 의대정원을 늘린다고요.
-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하라!
 - 자사고, 과고, 외고, 예체능고는 최초의 만든대로 원래의 정책대로 환원하자!
- 기회의 균등의 대표적이었던 사시를 부활하자!
 - 논문과 인턴십의 거짓조작으로 엄마찬스, 아빠찬스와 같이 힘있는 자의 자녀가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신중 음서제도와 같은 수시제도와 로스쿨제도와 의전제도를 없애자!

□ 목 표

- 겉으로는 번드르한 의대정원증가는 의료민영화, 중국공산당자녀의 의대합격하게 하기위한 수단일 뿐이므로 절대로 안된다.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무슨 증원이냐? 원래의 정원 그대로 하게 한다.

□ 이행방법

- 박영수특검의 4팀장인 윤석열정부가 하려는 일을 못하게 하면 된다.

□ 이행기간

- 당장 의대정원을 늘리지 않는다부터 시행하여 몽땅 환원하라!

□ 재원조달방안

-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므로 재원조달필요없음

정책순위

5

자유시장 경제정책을 함부로 건들지마라!

정책분야 | 경제

- 주 52시간, 시급정책등의 정부의 지나친 규제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 이 정책으로 자영업자들이 망하고 알바생의 알바자리가 사라졌다. 자유경제체제하의 대한민국에선 시장의 자율에 맡겨라.
- 자영업자를 죽이는 개정된 법(중대재해처벌법 제6조-2024년1월27일적용됨)을 폐기하라!
 - 자영업자가 살인자냐? 자영업자의 가족은 살인자의 가족이냐? 그들은 어찌 살라고 그런 무지막지한 법을 개정하나? 자영업자들을 없애 공산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이냐? 당장 폐기하라!
- 상속세를 완하하라! 아니 폐지하라!
 - 지나친 상속세로 대기업을 앗아가는 너희들은 사회주의잔가?
- 종부세를 폐지하라!
 - 이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도 있고 양도소득세도 있는데, 소득이 없으면 세금도 없어야 하는 기본 원리를 무시하는 종부세를 폐지하라.

□ 목 표

- 자유민주주의가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실현되길 원한다.

□ 이행방법

- 주52시간등 시급체제는 공무원에겐 엄청 좋은 일덜하고 돈 더 받기라 좋은 것이겠지만 자영업자들을 죽이는 정책이다. 코로나 이전에 이 주52시간과 시급제로 자영업자의 몰락이 왔다. 물론 알바생도 일자리를 잃었다.

□ 이행기간

- 당장 자율적으로 주52시간제와 시급제를 바꿔라!

□ 자원조달방안

- 선심성 정책이 아니므로 자원조달이 필요없다.

정책순위

6

선심성 정책을 만들지 마라! 우리의 아들, 딸이 짊어질 빛이 된다.

정책분야 | 정치

- 지자체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선심성 정책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지자체장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과도한 선심성 정책은 비효율적인 투자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결국은 지방경제와 지자체의 재정을 파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자에게 횡령에 버금가는 죄를 물을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라.

■ 목 표

- 선심성정책을 입안하는 자에게 그의 자산과 월급의 일부를 압류한다.

■ 이행방법

- 그 선심성 정책에 의해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여한다.

■ 이행기간

- 모든 앞으로 있을 공직선거입후보자에게 제시하는 정책들을 점검하라!

■ 재원조달방안

- 재원조달이 필요없다.

정책순위

7

축구협회를 특검하라

정책분야 | 예체능

- 5천년 역사의 뿌리 깊은 공경, 겸손 등의 예의범절을 숭상하는 우리나라를 하루아침에 전세계에 우습게 만든 감독을 선임한 축협회장과 선수들을 보호하고 단합을 이끌어야 할 축구협회가 비난을 피하려고 위해 내부 문제를 해외언론에 흘리는 행위는 정상적인 조직의 판단이라 볼 수 없다.
- 전쟁은 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며, 스포츠도 전쟁이다. 국가의 위신, 신용, 선호도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축구협회의 행정과 축협회장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을 철저히 조사하라!
- 축구협회의 운영에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축협에서의 불합리한 운영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지 세무조사를 실시하라.

□ 목 표

- 축구협회의 무능하고 독선적인 운영진을 퇴출시켜, 투명하고 신뢰받는 축구협회를 만들자.

□ 이행방법

- 축구협회에 대한 특검과 세무조사를 즉시 시행하라!

□ 이행기간

-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이 끝나는 2024년 6월말까지

□ 자원조달방안

- 특검과 국세청은 공무원이므로 자원은 따로 필요없다.

정책순위

8

민주화라 말하는 5.18을 정확히 조사하라!

정책분야 | 국방

- 제헌국회의 선거를 못하게 한 제주 4.3사건을 왜 민주화라 포장하나?
- 광주사태가 왜 어찌하여 5.18민주화가 되었나?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라!
- 박정희대통령이 저격당한 것을 기화로 북한의 대한민국의 전복시키려는 시도와 5.18민주화를 전국민이 올바른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

□ 목 표

- 지만원박사의 주장과 선정과정에 의혹이 있는 5.18유공자의 주장을 공정하게 전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 이행방법

- 속이는 자, 숨기는 자가 범인이란 말이 있다. 지만원박사와 당시의 계엄사령관과 5.18민주유공자와 그 당시의 살아있는 분들과의 생방송대담을 하라!

□ 이행기간

- 공산화를 시도하고 있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때에 당장 시작한다.

□ 재원조달방안

- 정당에 주고 있는 국고보조금을 당장 주지 말고 이 돈의 일부로 조사하라! 생방송을 소재를 주는데... 방송사도 돈 필요없을 것이 고 ...

정책순위

9

박근혜대통령님을 청와대로 복귀

정책분야 | 정치

- 국가내란을 한 박영수특검, 국회탄핵소추를 가결한 자, 현재, 박영수특검의 수사자료로 구속하고 구형하고 선고한 모든 자를 구속시켜라!
- 그 때는 나쁜 자라 말하고 지금은 그가 옳은 자라 말하는 자가 진정 보수우파 애국자일까?
- 탄핵은 무효다. 그 때 그것을 한 위의 자들은 모두 반성하고 되돌려라!

■ 목 표

- 국방부에 있는 자는 내려오고 청와대로 박근혜대통령님을 복귀시키자!

■ 이행방법

- 당장 대통령을 바꾸어 실행하면 된다.

■ 이행기간

- 탄핵은 잘못된 것이므로 전국민에게 알리고 진정 대한민국의 애국국민은 당장 대통령으로 복귀시킨다.

■ 재원조달방안

- 원래대로 돌린다. 무슨 재원이 필요한가? 선심성 정책들만이 돈이 필요하다.

정책순위

10

문재인의 정부의 실패한 정책의 배경과 결정과정을 조사하라!

정책분야 | 보건, 외교 전정권의 행정자치

- 국내 태양열전지 업계를 놔두고 중국공산당의 태양열전지로 한 이유는?
- 중국공산당을 배부르게 만드려고 한 것인가?
- 원전폐지를 즉흥적으로 결정한 정책이 초래한 전기값 인상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국민들에게 원전폐지의 책임있는 자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다.
- 코로나백신으로 전국민을 위협하게 만든 자, 넌 정말로 백신맞았나?
- 백신의 피해조차를 철저히 하라!

□ 목 표

- 전 정권의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전정권의 책임자들에게 사죄와 보상을 받게 한다.

□ 이행방법

- 당장 전 정권의 폐해를 낱낱이 조사하여 처벌하라!

□ 이행기간

- 다 밝혀질 때까지 한다.

□ 재원조달

- 제대로 된 공무원들이 조사하면 되고 거두어들일 일이지 재원조달할 일이 아니다.



새진보연합

No.	정 책
1	재생에너지 전환과 '햇빛바람연금'
2	디지털 산업 혁신
3	다양한 기본소득으로 소득 안정성 강화
4	필수 사회서비스 부담 완화와 공공성 강화
5	가계부채 축소와 금융소외 해소
6	보편적 노동권과 인권의 보장
7	성평등·돌봄사회 실현
8	검찰 개혁과 정치 개혁
9	한반도 평화와 균형·실리 외교
10	헌법 개정

정책순위

1

재생에너지 전환과 ‘햇빛바람연금’

정책분야 | 과학기술정보통신 · 산업자원 · 환경

□ 목 표

- 국가주도 신속한 재생에너지 체제 전환으로 기후위기 극복
- 탄소중립 국제 경쟁에서 국가 경쟁력 유지·강화
- 재생에너지 전환과 자산 및 소득 불평등 해소를 동시에 추진

□ 이행방법

1.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60% 달성
 - 윤석열 정부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21.5% 목표는 탄소 무역장벽 국제 질서에서 낙오할 것이 분명해 전면 수정 불가피
 -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2035년 60%로 설정함
2. 국토의 1.5% 이상을 재생에너지 발전 용도로 지정
 - 육지와 바다 포함 국토의 1.5%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용도로 지정함
 -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별로 지정함
3. 10년간 500조원 규모 재생에너지 공공투자
 -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산업에 500조원 규모의 공공투자를 진행함
 - 에너지전환부를 설치해 재생에너지 전환 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한국전력 포함 발전공기업을 통합해 재생에너지 생산과 공급 업무를 담당토록 함
4. 성인 1인당 500만원 재생에너지 바우처 지급
 - 재생에너지 공공투자 500조원 재원 중에서 2035년까지 성인 1인당 500만원을 재생에너지 바우처로 지급함
 - 바우처의 용처는 전기차 구매, 태양광 패널 설치,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투자금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용도로 한정함
5. 탄소세 도입
 -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국제사회가 탄소배출 감축 노력으로 인정하는 탄소세로 전환하고, 이산화탄소 환산톤당 6~12만원의 탄소세를 부과함

6.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와 생태사회 실현에 국민의 참여를 높이기위한 기본법을 제정함

7. 탈핵 로드맵 구축

- 신규 핵발전소 중단,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중단 등 탈핵 로드맵을 구축함
- 탈핵에 이르는 동안 핵발전소 안전체계를 대폭 강화함

▣ 이행기간

- ◎ 향후 10년간 법과 제도를 정비와 재생에너지 전환 공공투자를 진행함

▣ 재원조달방안 등

- ◎ 500조원 재생에너지 투자 및 바우처 지급: 정부가 기후채권을 발행하고 한국은행이 인수하여 조달

정책순위

2

디지털 산업 혁신

정책분야 | 과학기술정보통신 · 산업자원 · 재정경제

□ 목 표

- 국가 주도의 조속한 디지털 산업 전환
- 첨단·원천 기술 강화를 위한 제도 구축
- 혁신경제 조성을 위해 지대추구 경제를 규제하고 혁신친화적 조세체계를 도입

□ 이행방법

1. 종합반도체 생산 역량의 확보
 - 반도체 생산 역량을 메모리 반도체 중심에서 비메모리 AI반도체, 설계, 파운드리 제조, 소재·부품·장비 등 종합 반도체 생산 역량으로 발전시킴
 -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이외 비수도권 4개 권역에 거점 클러스터를 조성함
2. 제조업과 인공지능의 결합 ‘AI+X 프로젝트’
 - 제조업에 AI 기술을 응용하는 R&D와 산업 적용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함
3. 한국형 DARPA ‘한국기초원천연구원’ 설립과 공공 R&D 혁신성 제고
 - 미국 국방고등과학연구원(DARPA) 모델을 적용한 한국기초원천연구원을 설립하고, 단기 기술이 아니라 유망하고 도전적인 장기 첨단·원천 기술 연구기관으로 육성함
 - 공공 R&D 수행시 실패 사례를 포함한 전체 과정을 축적하고 공유하는 연구아카이브를 구축해 학습 효과를 제고함
4. 미래혁신기금 조성을 통한 디지털 혁신 공공투자
 - 기후채권(500조원)과 함께 미래혁신채권(100조원)을 발행해 미래혁신기금(600조원)을 조성하고 차세대 태양광-풍력 발전, 인공지능, 첨단 반도체 부문에 집중 투자함
 - 미래혁신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기금의 투자는 국민 지분권을 설정하고 투자 수익을 ‘디지털 혁신연금’으로 배당함(기후채권 재원의 투자 수익은 ‘햇빛바람연금’으로 배당)
5. 재벌·대기업의 지대추구 행위 규제로 혁신 경제 생태계 조성
 - 인적분할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물적분할시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상장사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등으로 대주주의 불공정한 지배권 강화를 막고 소액주주를 보호함

- 콜옵션 전환사채(CB)와 전환사채 파생상품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거래를 규제해 재벌의 신종 '세급 경영'에 악용되지 않도록 함
- 카카오, 쿠팡 등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제도를 통해 독과점적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철저히 규제함
- 원청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인의 대항력을 강화함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하도급 부당특약에 대한 제재 강화, 유통대기업의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가맹점주 보호 강화 등

6. 혁신 경제를 위한 조세 개혁

- 상장사 자사주 매입액의 1~2%를 기업투자 촉진세로 부과함
- 금융투자소득세 2025년 정상 시행하고 소득공제 5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인하함
- 탈탄소 전환을 위해 이산화탄소 환산톤당 6만~12만원의 탄소세 도입함
- 부동산 안정과 투기 근절을 위해 공시가격의 0.5~1.0%의 토지세 도입함
- 은행의 이자수익 초과이득에 대해 50% 세율로 상생연대기여금(은행 횡재세) 부과함

▣ 이행방법

- ◎ 각종 법령의 제·개정

▣ 이행기간

- ◎ 22대 임기 시작과 함께 제도 개혁 작업 진행

▣ 재원조달방안 등

- ◎ 미래혁신기금: 정부 발행 기후채권과 미래혁신채권을 한국은행이 인수
- ◎ 기타 정책들의 재원: 혁신 경제를 위한 조세 개혁으로 충당

정책순위

3

다양한 기본소득으로 소득 안정성 강화

정책분야 | 재정경제 · 보건복지

□ 목 표

- 물가 폭등, 임금 감소 등 국민의 고통을 다양한 기본소득을 통해 극복
- 투자수익에 대한 국민이 지분권을 갖는 산업 혁신 공공투자, 기본소득 배당과 연계된 조세를 적극 활용해 자산과 소득 불평등을 해소

□ 이행방법

1. 햇빛바람연금
 - 재생에너지 전환 공공투자에 대해 국민이 수익배당권을 보유함
 - 기후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미래혁신기금 공공투자(500조원 규모)의 수익을 국민에게 ‘햇빛바람연금’으로 지급함
 - 태양광 협동조합 가입 주민에게 1인당 연 150만원 지급하는 전남 신안군 모델을 변형해 전국화함
2. 디지털 혁신연금
 - 디지털 전환 공공투자에 대해 국민이 수익배당권을 보유함
 - 미래혁신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미래혁신기금 공공투자(100조원)의 수익을 국민에게 ‘디지털 혁신연금’으로 지급함
3. 탄소배당
 -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하고 국제사회가 탄소감축 노력으로 인정하는 탄소세 도입. 세율은 탄소배출량 톤당 6만~12만원
 - 탄소세 도입에 따른 물가 상승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약 탄소세 수입의 일부를 탄소배당으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1인당 5만~10만원 배당 가능, 탄소배출량 축소에 맞춰 배당액은 감소 전망)
4. 토지배당
 -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공시지가 대비 0.5~1.0%의 세율로 토지세 도입함
 - 토지세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배당함(1인당 5~10만원 추정)

5. 청년 첫출발 기본소득

- 만 20세 청년에게 2년 동안 월 50만원 기본소득 지급

6. 농어민 기본소득

- 농어민 1인당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농어민기본소득법 지급)
-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절반씩 재정 부담

■ 이행기간

- ◎ 22대 임기 시작과 함께 제도 개혁 작업 진행

■ 재원조달방안 등

- ◎ 햇빛바람연금·디지털혁신연금: 각각 정부 발행 기후채권과 디지털혁신채권을 중앙은행이 인수하여 조성한 미래혁신기금의 투자 수익으로 마련
- ◎ 탄소배당·토지배당: 각각 탄소세와 토지세를 도입해 마련
- ◎ 청년첫출발기본소득·농어민기본소득: 증세를 통한 정부 재정으로 마련

정책순위

4

필수 사회서비스 부담 완화와 공공성 강화

정책분야 | 보건복지 · 재정경제

□ 목 표

- 의료 · 주거 · 교육 · 교통 등 필수 공공서비스의 국민 부담 완화
- 필수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 이행방법

1. 어린이주치의 제도
 - 소아청소년의학과,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0~12세 어린이의 신체 · 정신건강에 대해 주치의 역할을 담당하는 시스템 구축
2. 국민 간병보험제 도입
 - 건강보험과 별개의 간병비보험제를 도입하고 중증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경증 입원환자에는 간병 서비스 제공
 - 간병비보험에 기반해 지역사회 가정형 간병이 통합된 공공간병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3. 1000병상 이상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치 및 공공병상 확보
 - 신축, 증축, 중소병원 통합 등의 방법으로 1, 000병상 이상 규모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 2030년까지 공공병상 비율 30% 달성
4. 공공의사 면허제와 개원면허제 도입
 -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병원에서만 근무하는 공무원 의사 면허제 도입, 공무원 의사 증원을 위한 공공의대를 설립함
 - 의사 면허 취득 후 2년간의 임상수련 과정을 거쳐야만 의사로서 진료 권한 부여하는 개원 면허제 도입
5. 중산층도 살고 싶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 30년 이상 장기 거주 보장하는 임대주택을 2026년부터 매년 10만호씩 공급해 2035년까지 100만호 공급함
 - 저가 건축을 지양하고 3~4인 가구 살 수 있는 전용면적 66~85m² 사이 공공임대주택 확대함

6. 토지임대부 분양 확대

- 2030년까지 50만호, 2035년까지 100만호의 주택을 공공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하고 상가와 산업단지 등으로 토지임대부 방식 확대

7. 전세사기 방지 종합대책

- 임차보증금에 대한 선순위 권리가 있을 경우 임차보증금 범위를 제한함
- 전세보증금 미반환시 임대인에게 지연이자(현재 12%) 지급 의무 부과
- 소액 보증금에 대해서는 전액 우선변제권 부여

8. 사교육 부담 없는 대학

- 지역별 연합국립대 설립과 공동입학, 공동학위제 실시
- 입시 경로를 내신과 수능으로 단순화하고 경로별 입시를 강화
- 비정규직 교수들의 안정된 일자리에서 연구 전념하는 학술교수제 도입
- 고등교육 재정 GDP 대비 2.2% 수준으로 높이고 대학교육 점진적 무상화

9. 교통과 통신요금 인하

- 5G 서비스에 대해 30G 데이터 제공 기준 월 4만원 이하 보편요금제 도입
- 대중교통 연 100회 무료이용권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무료이용권 확대

이행기간

- 22대 임기 시작과 함께 제도 개혁 작업 진행

재원조달방안 등

- 의료 분야: 간병비보험료 도입, 정부 건강보험료 지원 의무 준수 등
- 기타 분야: 정부 재정 지원 확대

정책순위

5

가계부채 축소와 금융소외 해소

정책분야 | 보건복지 · 재정경제

□ 목 표

- 가계부채 축소를 통한 국민의 이자 부담 완화
- 저소득층과 서민의 금융 복지 확대

□ 이행방법

1. 50조원 소상공인재생기금을 통한 적극적 채무조정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50조원 규모 ‘소상공인재생기금’을 설치함
 - 새출발기금의 까다로운 조건을 대폭 완화해 실질적인 채무조정이 이뤄지도록 함
2. 은행 초과이득에 대한 횡재세 부과와 금융 취약계층 지원
 - 일반은행의 이자수익 중 과도한 초과이득에 대해 50% 세율로 은행 횡재세를 부과함
 - 은행 횡재세 세수는 금융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함
3. 3%대 이자로 1000만원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본대출’ 시행
 - 모든 경제활동인구에게 3%대 이자로 1,000만원 신용대출 시행
 - 기본대출을 전담 공공은행 설립하고 한국은행 특별대출을 통해 대출 자원 마련
4. 주택담보대출 축소 유도
 - BIS 자기자본비율 계산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높은 위험도 적용, 주담대 축소시킴
 - 다주택자의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보유 주택 수에 비례해 높은 금리 적용함
5. 개인 파산·회생 제도에서 채무자 보호 강화
 - 파산·회생 채무자에 대한 취업제한 폐지하고, 당연복권 경과기간을 5년으로 단축함
 - 개인회생 절차에만 도입돼 있는 중지명령제를 개인파산에도 도입함

□ 이행기간

- 22대 임기 시작과 함께 제도 개혁 작업 진행

□ 자원조달방안 등

- 소상공인 채무조정: 주로 은행의 출연금을 통해 마련
- 기본대출: 한국은행 특별대출, 정부는 미상환금에 대해서만 보증 책임

정책순위

6

보편적 노동권과 인권의 보장

정책분야 | 노동·안전

□ 목 표

- ◎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노동권과 인권을 제고함

□ 이행방법

1. 주 3일 휴식제(주 32시간 노동시간 단축)
 -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40시간에서 2030년까지 32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함
 - 주 12시간 연장근로 상한을 주 6시간 상한으로 단축함
2.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함
3. 노동 중개 플랫폼의 알고리즘 공개
 - 일감 배정, 계정 정지, 수수료 등 단가 결정, 등급·평점의 설계 및 작동 방식에 대해 노동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플랫폼에 공개 의무를 부과함
 - 노동 중개 플랫폼의 알고리즘 업그레이드시 플랫폼 기업에 노동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4. 손배·가압류 제한
 -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힘
 -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
 - 사회적 폭력·파괴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 근로조건 개선만이 아니라 포괄적 권익 보호를 위한 쟁의행위를 합법 쟁의로 인정함
5. 산별협약 효력확장제도 개선
 - 산별 교섭체계 구축과 교섭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함
 - 대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단체협약이 지역 동종업종 전체에 적용되도록 단체교섭 효력확장제도를 개선함
6. 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대
 - 공무원의 노동 3권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확대·강화함

7.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성별, 성적 지향, 장애, 인종, 고용형태 등을 포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8. 사형제 폐지와 평시 군사법원 폐지
 - 법정 최고형에서 사형을 폐지하고 감형 없는 무기징역을 최고형으로 함
 - 군사법원은 전시에만 운영하고, 평시 모든 군대 내 형사사건은 민간 사법기구가 담당하도록 함
9.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탈시설 지원
 - 모든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대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 지역사회 통합돌봄시스템을 구축해 공공주택 주거 및 활동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
10. 아동·청소년 인권 강화
 - 학생인권법 제정하고 어린이·청소년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함
 - 아동·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강화함
11.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전환
 - 사업장 변경 사유와 횟수를 제한하는 현행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로 전환함
12. 난민제도 개선
 - 난민 심사 기간을 평균 6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심사 지원을 대폭 강화함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확충으로 심사기간 동안 생계비 및 주거 지원 확대함

▣ 이행기간

- 22대 임기 시작과 함께 제도 개혁 작업 진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 재정 지원 확대

정책순위

7

성평등 · 돌봄사회 실현

정책분야 | 여성 · 보건복지

□ 목 표

- ◎ 성범죄, 일자리와 고용, 가사 등 모든 분야에서 성평등 사회 구축
- ◎ 성평등한 돌봄 사회를 실현해 사회 재생산 위기를 극복

□ 이행방법

1. 성별 임금평등법 제정

- 공공기관, 공기업, 300인 이상 기업에 성별임금, 지원자 성비 대비 합격자 비율, 성별 승진 상황 등을 공개하는 성별임금공시제를 도입함
- 고용노동부에 성별임금격차해소위원회를 설치해 임금격차 해소 계획 수립 및 시행

2. 성평등한 돌봄

- 육아휴직 확대와 소득대체율 상향
 - 자녀 1인당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함
 - 1년간 통상임금의 80%에서 90%로, 남은 6개월은 90%로 휴직수당을 지급하고, 소득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한액을 7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함
- 엄마아빠 육아휴직 할당제
 - 18개월 이하 영아 돌봄 육아휴직의 아빠 6개월 이상 참여시 부와 모에게 1년간 통상임금의 100% 휴직수당을 지급하고, 급여 상한액을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기간에 따라 첫 1개월 300만원에서 마지막 6개월 550만원으로 상향함
 -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를 출산전후 10일에서 40일로 확대하고 의무화함
- 한부모 가정의 경우 1년 6개월 육아휴직 전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휴직 급여 상한을 500만원으로 함
- 육아휴직 불이익금지법
 - ‘불리한 처우’ 규정을 구체화하여 사용자의 불이익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을 노동위원회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 대상으로 하여 입증책임을 사용자로 전환함

3.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 가해자의 '양형 전략'에 휘둘리지 않도록 법원의 양형 기준을 재정립함
- 국가가 불법촬영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고 이를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충함
- 인터넷범죄 국제조약 '부다페스트협약' 가입, 모든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도입

4. 친밀한 관계 성폭력 대응 강화

- 가정폭력처벌법에 교제 폭력 정의 규정을 도입하고, 현행 가해자 조치 및 피해자 보호 규정을 적용함
- 성범죄에 대해서는 사인소추제도와 변호사 부대공소제도를 도입함
- 스토킹범죄처벌법상의 범죄, 교제 폭력에 대해 피해자 신변보호 범위를 피해자의 지인까지 확대하고,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함

5. 권력형 성범죄 대응 강화

- 강간죄, 추행죄의 구성요건 '폭행 또는 협박'을 '당사자 동의 여부'로 변경함(비동의 간음죄·추행죄 도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에 권력형 성범죄를 포함함
- 국방부 내 성범죄 전담기구 신설로 군대내 성범죄 대응을 강화함

6. 생활동반자법 제정

- 혼인·혈연과 무관하게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는 생활동반자관계를 규율을 법률을 제정
-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는 혼인 가족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 사회보험과 공공서비스, 사회복지, 출산휴가, 인적공제 등에서 혼인·혈연 가족과 동등한 권리를 보유함

7. 여성의 온전한 임신중지권 보장

- '성과 재생산권리 기본법' 제정하고 임신중지에 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명시함
- 임신중지 약물의 신속히 도입하고, 임신중지 의료 급여화 등 건강보험 전면 적용함

▣ 이행기간

- ◎ 22대 임기 시작과 함께 제도 개혁 작업 진행

▣ 자원조달방안 등

- ◎ 정부 재정 지원 확대

정책순위

8

검찰 개혁과 정치 개혁

정책분야 | 정치·사법윤리

□ 목 표

- ◎ 검찰의 공정한 검찰권 행사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
- ◎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과 다원성 강화를 통한 정치의 생산성·역동성 회복

□ 이행방법

1. 공소권심사위원회를 통한 검찰의 공소권 통제
 - 시민대표로 구성된 공소권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검찰의 기소권 행사의 당부를 감독
 - 공소권심사위원회는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에 대해서는 기소를 명할 수 있고, 부당한 기소에 대해서는 기소 취하를 권고할 수 있음
2. 수사-기소의 분리
 - 기소는 검찰, 수사는 경찰 등 수사기구가 전담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함
 - 수사-기소 분리 과정에서 수사 지연,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수립함
3. 개인적 법익 침해 범죄에 대한 사인소추제도와 변호인 공동참여 기소제 도입
 - 성범죄, 폭행, 가택침입, 개인정보침해,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만이 아니라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기소를 명할 수 있는 사인소추제도를 도입함
 - 성범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기소한 경우에도 변호인이 공소참여인으로 검사와 함께 공소에 참여할 수 있는 부대공소제를 도입함
4.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부여하고 경찰청장 임명 제청권 등 주요 인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
 - 경찰위원회 내에 국가경찰인권감독관을 두어 인권침해 조사와 감독, 구제, 교육 담당
5. 대법원·헌재 개방성 강화
 -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폐지
 - 사법시험 비합격 전문가 등도 대법원 판사, 헌재재판관에 지명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완화

6. 노동법원·인권법원 설치 등
 - 노동과 인권 분야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의 설치로 노동권과 인권의 강화를 도모함
 - 재판 과정의 녹음, 영상 녹화를 의무화하고 판결서 공개를 대폭 확대해 사법 과정의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함
7.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강화와 국회의원의 특혜·특권의 폐지·축소
 -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2:1로 하고,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위해 의석을 400명까지 증원함
 -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강화와 함께 의정활동과 무관한 국회의원의 특혜와 특권은 대폭 축소·폐지하고, 세비도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함
8. 선거연합정당 제도화
 - 한 정당이 다른 정당과 연합하여 후보자 추천 및 선거운동, 단일 연합정당 명칭을 사용하여 선거법상 하나의 정당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연합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하나의 의석할당정당으로 취급하여 배분함
9. 민주주의 배당
 - 정치 후원금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정치후원금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1만원(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공직선거당 1만원 추가) 바우처를 모든 유권자에게 지급함
10. 정당 활동과 정치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 중앙선관위 등록 정당의 설립요건을 폐지함(지역당 설립 가능)
 - 자유로운 정당 활동과 정치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대폭 축소·폐지함

▣ 이행기간

- ◎ 22대 임기 시작과 함께 제도 개혁 작업 진행

▣ 재원조달방안 등

- ◎ 정부 재정 지원 확대

정책순위

9

한반도 평화와 균형·실리 외교

정책분야 | 통일외교통상

□ 목 표

- ◎ 대결주의적 대북 노선을 전환해 한반도의 긴장고조를 막고 평화체제를 실현
- ◎ '가치 외교'에서 '평화·균형·실리 외교'로 전환

□ 이행방법

1. 9.19 남북군사합의서 복원
 - 남북 정부에 의해 무효화된 9.19 군사합의서를 복원함
 - 북에 9.19 군사합의서 복원을 위한 고위급 대화 제안부터 시작함
2. '가치외교' 노선에서 평화·균형 외교로 전환
 - 미국의 동북아 및 세계 패권 전략에 대한 일방 추종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안보 이해와 충돌하는 상황
 - 외교 기조를 평화·균형·실리 외교 기조로 전환함
3.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고 중간단계 목표를 '북의 핵무기 고도화 수준과 한미 핵안보협력 수준의 현재 상태 동결'로 설정
 - 한반도 비핵화를 우리나라의 한반도 전략적 목표로 유지함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간 단계 목표를 북의 핵무기 수준과 한미 핵무기 협력의 현단계 유지로 설정함
 - 미국은 24년 3월 6일 현재 한반도 비핵화 중간 단계 조치를 위한 대북 대화 제안
4. 긴장 고조 한미 군사훈련의 조정
 - B-1B 전략폭격기 동원, 북 지휘부 제거 등 북의 공포와 긴장고조 대응을 유발하는 군사훈련은 중단함
 - 9.19 군사합의서 복원 등 남북 긴장완화 및 평화 프로세스 가동과 연계하여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의 빈도, 강도, 규모를 조절함
5. 국제분쟁 개입의 평화적·인도주의적 원칙 강화
 - 국제 분쟁 지역(예,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무기 수출시 국회 동의권 신설
 - 전쟁이 아닌 국내 반인도적 범죄 정부(예, 미얀마)에 대한 수출과 통상 규제 강화

6. 모병제 전환 공론기구 설치

- 한반도 전략적 안보의 강화, 한반도 평화 기여, 군인 인권의 개선, 성평등과 사회적 평등 제고 등의 원칙이 지켜지는 모병제 전환을 검토함
- 모병제 전환 공론화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여 타당성, 방법, 사회적 부작용 방지책 등을 다각도로 논의함

7. 영토조항 개정

- 한반도가 2국가 체제임을 인정하되 평화와 통일 지향을 담아 헌법의 영토조항을 개정함
- '대한민국의 영토는 통일이 이뤄지기 전까지 정전협정에 의한 정전선 이남 지역으로 한다'로 개정함

▣ 이행기간

- 22대 임기 시작과 함께 관련법 제·개정, 공론화 시작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원 무관

정책순위

10

헌법 개정

정책분야 | 정치·사법윤리

□ 목 표

- ◎ 87년 헌정체계를 넘어서는 ‘제7공화국’ 시대를 위해 헌법을 개정함
- ◎ 직접·참여·의회민주주의, 인권·기본권,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강화를 개헌의 주요 방향으로 함

□ 이행방법

1.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탄핵 촛불운동을 포함함
2.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 도입
3. 대통령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방지
 - 대통령 특별사면권은 독립 헌법기구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
 -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행사의 대상 법률을 ‘명백하게 위헌적인 법률’로 제한하고, 친인척에 대한 특별검사법은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 감사원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회로 전환함
4. 직접·참여 민주주의 강화
 - 법률안 국민발안제 도입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 숙의형 민주주의 장치로서 ‘시민의회’ 도입하고 국가 중대 현안에 대한 공론 조직과 운영 역할을 담당토록 함
 - 국민이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법원’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로 변경해 배심제·참심제 등 국민참여 재판의 헌법 근거를 마련함:
5. 국민의 사회경제적 권리의 확장·강화
 - ‘예산안’을 ‘예산법률안’으로 수정하고(예산법률주의 도입), 국회가 예산 항목을 신설하거나 증액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함
 - 기본소득 등 적극적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한 경제사회 정책들의 위헌성을 없앨 수 있도록 현행 경제민주화 조항에 더해 토지, 지식 등을 사회적 공유자산으로 하는 조항을 도입함

6. 인권과 기본권의 강화

-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함
- 차별금지 사유로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더해 장애, 연령, 인종, 지역을 추가함
-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을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의무에서 국가에 대한 국민의 권리로 확장함
- 주거권, 건강권, 안전권, 생태권을 새로운 기본권으로 설정함
- 국민의 근로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노동 조건 개선에 국한된 노동자 단체행동권의 범위를 '권익 보호'라는 포괄적 범위로 확대함
- 형사 피고인에 적용되는 국선변호인 선임권을 형사 피의자에게도 적용, 구속·체포시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고지받을 권리에 추가함

7. 감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보장 조항 삭제

- 감사가 영장 청구의 주체라고 규정한 조항을 개정해 영장청구의 주체를 법률로 정하도록 함

8.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대표제 원칙 규정

- 국회의석 할당이 투표자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도록 비례대표제를 명문으로 규정함

▣ 이행기간

- ◎ 22대 임기 시작과 함께 공론화 시작

▣ 재원조달방안 등

- ◎ 재원 무관



여성의당

No.	정 책
1	여성혐오범죄 근절! 성범죄자는 잘리는 나라
2	임금차별, 채용차별, 승진차별 3대 차별 철폐! 여자 못 거르는 나라
3	여성 1인 가구도 내집 마련! 여자도 사람답게 사는 나라
4	악성 여혐 유튜버 수익 몰수! 여성혐오로 돈 못 버는 나라
5	가족 중심의 여성이 아닌 여성 중심의 가족으로
6	딸들도 안심하고 학교 다니는 나라
7	유사 성매매 산업 박멸! 여자 파는 전단지 없는 나라
8	여남동수제로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
9	내 몸에 남의 동의 필요 없는 나라
10	여성가족부 위상 강화, 성범죄자는 나랏일 못하는 나라

정책순위

1

여성혐오범죄 근절! 성범죄자는 잘리는 나라

정책분야 | 안전

□ 목표

- 여성증오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
- 성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 여성폭력 전반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하여 2차가해, 보복범죄의 위험을 줄이고 처벌 실효성 확보
- 디지털 성범죄 삭제 대상 범위 전면 확대하여 피해자 신상 노출 등 2차 가해 방지, 유포 방지 도모
- 미성년자 성범죄 근절 및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

□ 이행방법

- ① ‘여성혐오 동기’ 폭력 범죄가 포함 되도록 여성폭력 범위 확대 및 정비
 - 여성증오범죄는 파급력과 모방범죄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일반 폭력 범죄보다 중하게 다뤄야 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여성혐오동기가 양형상 가중요소로 고려되지 않고 심신미약 등 감형 요소로 고려되는 문제가 존재하므로 이를 반영한 법제 개선
 - 여성폭력방지법에 피해자 보호지원 규정 신설
 - 여성폭력방지법에 여성폭력 형량 1/2 가중 처벌 규정 신설
 - 양형 가중 사유로 “가해자가 여성에 대한 특정한 편견을 가져 여성만을 범죄 표적으로 삼는 등 여성혐오적 범행동기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포함
- ② 성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 고위험 성범죄자 성충동약물치료 명령(화학적 거세) 청구 의무화: 10년간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이 내려진 경우는 총 96건에 불과함. 성충동약물치료법 제4조 제1항은 약물치료의 청구 여부를 검사의 재량에만 맡기고 있어 비활성화의 주 원인이므로 고위험 성범죄자에게는 검사가 의무적으로 약물치료 청구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배달기사, 헬스트레이너, 장애인 재활치료사와 같이 고객과 직접 대면하거나 업무상 접촉이 수반되는 직업군의 경우 성범죄 이력 조회 의무화, 이력 있을 시 자격 제한

- ‘성전’ 카페 폐쇄 조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기존 사법계의 통념과 편견을 적극 활용하여 2차 가해를 성범죄 방어 전략으로 삼는 등 피해가 극심함

③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에서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④ 디지털 성범죄 2차 가해 및 유포 방지

- 성착취물을 유인, 광고, 알선, 소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삭제 대상 정보에 포함.
- 피해자의 주소·성명·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내용의 정보를 삭제 대상 정보에 포함

⑤ 미성년자 성범죄 근절 및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

-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빈발하므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범죄 이력 전수 실태조사 및 성범죄 경력 조회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미성년 간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학내 징계위원회 개최 및 퇴학 처분 의무화하고 학교기관의 장이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하여 책임 강화
- 미성년 간 성범죄 피해자 2차 가해 방지 및 처벌 실효성 확보
- 학교 내 성폭력 성희롱·성폭력 현황 공시 및 실태조사 의무화
- 오픈채팅을 통한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수사 체계를 구축하여 전담 인력, 예산 확보하고 범죄 연루된 계정 영구정지 의무화

▣ 이행 기간

- 22대 국회 임기인 2028년까지

▣ 자원 조달 방법

- 대부분의 사업은 정치적 결단과 법률 개정 등이므로 추가 자원 소요 없음
- 피해 당사자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증액
국가 R&D 지원사업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 포함

□ 목표

- 페미니즘 사상검증 철폐
- 채용 과정, 교육 기회, 승진에서의 성차별 금지 방안 마련
- 성별 임금 공시제도의 대상 및 내용 범위 확대
- 근로시간 단축, 모두를 위한 휴직 제도 마련
- 산업재해 수급 요건 재정비

□ 이행방법

- ① 남녀 고용평등법 개정 및 고용노동부 내 차별시정기능 강화
 - 면접 및 채용과정에서 여남 성비, 면접자와 채용합격자의 여남성비 공개
 - 면접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여남동수의 심사위원 배정
 - 채용성차별 피해자에게 손해 규모의 5배 이상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성차별 익명신고센터 기능 확대
 - 페미니즘 사상검증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발생시 기업 페미니즘 사상검증시 기업 패널티 부과
- ② 성별 임금공개법 제정
 - 동료임금 공개 의무화, 임금 산정기준 및 임금체계에 대한 모든 정보 공개
 - 성평등 공시 내용 확대. 직원 임금 구성항목 중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구성항목별 여남 직원 임금, 직종별 임금, 고용형태별 임금, 여남 평균 근속 연수, 여남 고용형태별 직원 수, 여남 직급별 인원수, 여남 신입교원채용자 수, 여남 퇴직자 수, 여남 육아휴직자 수를 공시 내용에 포함
 - 여남별 고용 성비와 임금 격차, 사상검증 피해사례, 여성 임원 비율 등에 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의무화
- ③ 고용성차별 및 불이익처우에 따른 구제절차 개선
 - 노동위원회 내 여성공익위원 비율 확대

-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제도와 연계하여 고용노동부 내 성차별 시정 기능 확대
 - 고용평등상담실 지원예산 확대
- ④ 근로시간 단축, 모두를 위한 휴직제도 마련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35시간으로 단축
 - 과로사 방지, 쉼 권리 보장을 위해 3년 이상 근속시 자기개발과 돌봄을 위해 사용하는 모두를 위한 휴직 제도마련
- ⑤ 사용자 처벌 강화
- 성별 임금 격차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주에게 임금 격차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게 하고 그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 성차별적 고용 관행, 성적 괴롭힘 관행 기업주에 대한 처벌 및 법적 제재 강화
 - 임금 공시제도와 정부의 노동 통계 조사를 통해 성별 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책임사업주를 직접 처벌하거나 임금총액의 1%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
 - 고용 성차별 처벌 조항에 실행 포함하여 형량 강화
- ⑥ 산업재해 적용 대상 확장
-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여성 질환 및 직장 내 성희롱성 차별적 괴롭힘 등을 재해 유형으로 포괄·확대
 - 근로복지공단의 급식 노동자, 여성 대리기사, 여성 콜센터 직원, 교직원 등 여초업계에서의 산업재해 판정 기준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완화

▣ 이행 기간

- 22대 국회 임기인 2028년까지

▣ 재원 조달 방법

- 고용노동부 예산 확대

3

여성 1인 가구도 내집 마련! 여자도 사람답게 사는 나라

정책분야 | 건설교통

□ 목 표

- ◎ 여성 1인 가구의 안정된 주거권 보장
- ◎ 주거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여성들을 위해, 신혼부부와 유자녀 중심 청약 가산점 제도의 불평등 개선
- ◎ 1인 가구를 위한 복지 및 주거 정책 강화로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대응
- ◎ 주거지 속 여성들의 범죄 노출 위험과 그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주택 안전 제도 강화
- ◎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임금수준이 열악하고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에 놓여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여성 1인 가구의 내집마련 지원 및 주택대출 제도 정비

□ 이행방법

- ①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 보장
 - 생애 첫 전월세 계약 시 중개비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안심중개인제도 실시
 -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전용 공동주택 신설, 공급
 -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금융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우선권 부여
 - 여성 1인 가구 하자수리 우선지급제도 실시
 - 여성 1인 가구 세입자의 하자보수, 주택 수리비용 청구권리 강화를 위한
 - 주거 감독관 제도 시행을 통해 주택의 안전 상태 감독, 세입자와 집주인의 분쟁 상황 시 갈등 조정, 세입자 보호
 - 여성 1인 가구의 주거지 안전 보장을 위해 여성 안심 주거 시설 확대, 주택가 안전 사각지대 조사 및 안전 시설 강화
- ② 주택청약제도 개선
 - 주택청약제도의 부양가족 가산점, 무주택기간 산정 및 생애 최초 구입자 특별 공급 자격 요건에서 결혼 여부, 자녀 수 항목을 삭제하여 1인 가구에게 불리한 주택 정책 개선
 - 전세 및 담보 대출의 신혼부부 혜택을 줄이고, 청년 1인 가구 혜택에 추가

- 청년전세자금 대출 연령을 39세로 통일하여 비혼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불이익을 시정하고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대응

③ 주거 복지 패러다임 전환

- 여성 비혼 공동체/지역 공동체 지원 제도 신설 및 여성 1인 가구에 여성 자립 지원금 제공
- LH 전세자금대출시 공동임차인의 공동 전세대출 허용
-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및 매입임대주택 예산 확대
- 지자체 별 일정 비율의 공공임대공급 의무화

④ 차별 없는 주거권 보장

- 동거가족 및 생활공동체에 공공임대주택 신청, 주택자금 대출 등에 있어 현행 '법적 가족'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주택 건설 및 배분 등 정책에 다양한 주거생활 양식의 요구 반영
- 여성 이주민/여성 장애인 주거 시설 관리 감독 및 금전적 지원 제도 신설
-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차별 없는 전세·집 담보 대출 보장

■ 이행기간

- 22대 국회 임기인 2028년까지

■ 재원조달방안

- 취약여성 1인 가구 지원사업 역시 기존 주거안정정책과 연계해 진행 가능·취약계층 여성 관련 지원기관들이 주거 및 제적 자립과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시행 가능
-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 및 고령여성 1인 가구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 시행사업에 성별관점을 도입하여 예산배분방식 변경 및 서비스 개선 등의 형태로 추진

정책순위

4

악성 여혐 유튜버 수익 몰수! 여성혐오로 돈 못 버는 나라

정책분야 | 과학기술정보통신, 문화관광

□ 목 표

-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현실의 성차별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시키는 여성에 대한 왜곡된 묘사를 제재하여 인식개선
- 문화예술계의 성차별적 고용과 제작환경을 개선하여 여성 문화예술인의 업계 진출을 촉진함으로써 미디어 내 여성혐오를 개선하고 콘텐츠 다양성 확보
- 여성혐오를 규제하는 관계부처 등의 구성원의 여남 동수를 확보하여 심의 단계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확보하고 다양성을 반영
-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양상의 여성폭력에 대해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책 마련
- 여성혐오 미디어의 수익화를 근절하여 성평등한 콘텐츠 제작 및 소비 문화를 조성

□ 이행방법

- ① 정부 부처, 관련 공기업 등 심의 및 제재 기관 동수 고용 추진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영방송사 등 이사 임명시 ‘양성평등기본법’의 기준을 맞춰 성별 불균형 해소
- ② 성평등 모니터링 기구 설치
 - 포털, 유튜브 등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의 여성혐오, 성차별적 콘텐츠에 대한 감시, 대응 근거 규정 마련
 - 기업 자체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해당 사안을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 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투명성 보고서의 필수 항목으로 지정
 - 여성혐오적 콘텐츠 제작자의 수익창출 정지 및 수익 몰수 방안 근거 제도 마련
 - 마녀사냥, 신상공개, 성희롱 등 여성에 대한 공격과 성차별적 인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콘텐츠 제작자의 수익 창출 제한, 악성 유튜버 형사처벌 강화
- ③ 미디어차별시정위원회 설치
 - 방송사 내 고용실태보고서, 고용차별시정계획서 제출 의무화

- 비정규직까지 폭 넓게 감시하여 프리랜서 등이 많은 문화예술계의 사각지대 보완
- 성차별, 여성혐오적인 표현에 대한 시정계획을 담은 보고서 제출
- 이행기준 미달 시 방송 제재 조치를 통해 임금 및 고용 차별과 여성혐오적인 콘텐츠 제작에 대한 불이익 부여

④ 젠더 보도 가이드라인 제작

- 여성 혐오적 편견을 강화시키는 방송 뉴스 및 신문 기사 등 매체 내 성별 불평등적 표기 금지, 매체 내 성별 불평등적 표기에 대한 기준안 마련

⑤ 성폭력, 성매매 사범에 대한 출연 금지 법제화 및 재정 지원 금지

- 성폭력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는 예술인권리보장 제35조 의무조항화
- 예술인권리보장법에 성폭력, 성매매 사범의 5년 이상 출연 금지 조항 추가

⑥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의무자 범위 확대

- 유튜브개인채널도 선별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강화

▣ 이행기간

- 22대 국회 임기인 2028년까지

▣ 재원조달방안

- 대부분의 사업은 정치적 결단과 법률 개정 등이므로 추가 재원 소요 없음

5

가족 중심의 여성이 아닌 여성 중심의 가족으로

정책분야 | 사법윤리, 기타

□ 목표

- ◎ 결혼이나 혈연관계로 맺어지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근거 마련
 -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성애 결혼 제도 중심으로 꾸려진 가족 단위로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설계, 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 제도 마련 시급함
- ◎ 결혼제도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제도 시정
 - 결혼제도와 관련해 ‘부성 우선주의’ 등 성차별적인 관행들이 일부 시정되고 있으나 여전히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이 자리 잡고 있고 결혼, 장례, 상속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경험하고 있음
- ◎ 상속, 장례 절차 과정에서 나타나는 차별, 불평등 관행 개선
 - 장례 절차에서 직계 혈연가족이 1순위 연고자로 취급되므로 법률혼과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이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장례를 치를 경우 고인의 의사나 권리보호에 차질이 생김
- ◎ 반려동물 보험제도 재정비 및 강화
 - 반려동물 의료보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비싼 보험료, 보험 적용 질환의 세부적 정보 미흡

□ 이행방법

- ①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조항) 삭제 및 생활동반자법 도입하여 다양한 가족·공동체를 포괄하는 법·제도 마련
 -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설계
 - 인적공제와 같은 세금공제, 건강보험 등 복지혜택에서의 불평등 시정, 가족의 부양 및 돌봄 의무를 기본으로 가정하는 기존의 복지정책 전반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입법 활동 추진
- ② 「민법」제781조 제1항 개정으로 부성우선주의원칙 폐지
 - 아이에게 엄마 성을 물려주려면 반드시 혼인신고 시 별도 표기하도록 제한하는 현행제도를 정비하여 아파성 우선주의 철폐하여 엄마성 따를 수 있는 권리 온전히 보장

- ③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이혼소송 법률지원, 절차 간소화 제도 마련
- ④ 보편적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 국가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에 대해 실효성 있는 처벌 마련
- ⑤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양육비 지원 자격/절차 간소화
- ⑥ 가정폭력피해 여성노숙인의 재활, 자활관련 민간 위탁 시설 지원 확대
- ⑦ 직계 혈연가족을 1순위 연고자로 삼는 법령을 개정하여 고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 혹은 동거인도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
- ⑧ 동물의료보험 적용 질환 확대 및 세부적 시스템 구축

▣ 이행 기간

- 2025년 내 입법

▣ 자원 조달 방법

- 대부분의 사업은 정치적 결단과 법률 개정 등이므로 추가 자원 소요 없음

정책순위

6

딸들도 안심하고 학교 다니는 나라

정책분야 | 교육

□ 목 표

- 교내 성폭력 전문 상담소 운영
- 학교 내 체계적 성교육 실천 및 적극적인 성폭력 예방
- 성착취 산업에 노출된 아동·청소년 보호 대책 마련
- 대표적 여초 직군, 교사가 돌봄 노동 대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이행방법

- ①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교내 성폭력 전담 상담소 설치
 - 국가 지정 '성교육 전문기관'에서 초빙한 전문인력 및 학교 전담 경찰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6)으로 성폭력 전담 상담소를 구성
 - 보건교사, 학생생활부, 담임 교사, 위클래스로 분산된 성교육 인력 구조 개선으로 교내 성폭력에 일관적 체계적 대응
 - 학교 구성원(교직원, 학생, 관리자) 간 심각한 성범죄는 학교폭력위원회가 아닌 성폭력 전담 상담소에서 접수를 받아 수사기관에 신고
 - 모든 교직원에게 성폭력 신고 의무 강조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② 학교 성평등을 위한 성교육 운영 조례 제정
 - 성차별적 학생 인권 침해 행위 명시 및 금지
 - 성교육 체계화를 위한 학교급별 필수 성교육 내용 (초등학교: 성별 신체 특성, 몸 긍정주의, 성범죄. 중고등학교: 성범죄, 성병, 피임, 관계, 성적 자기결정권) 조례화
 - 성폭력 사건 2차 가해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2차 가해 예방 내용 조례화
 - 전문인력이 성교육을 담당하여 임신 및 출산 과정에 치증된 성교육에서 십대 학생들에 필요한 교제 관계 내 성폭력, 여성 신체 특성과 생애주기, 여성 질환, 성병, 피임, 스텔싱 범죄 등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는 현실적 성교육으로 전환하여 진행
 - 학생 보호자 성교육 책무성 강화 및 서약서 작성 의무화, 학부모 성교육 프로그램(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도입

③ 학교 구성원의 성폭력 예방

- 신고의무자 가중 처벌을 명시한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를 교원에 미적용한 사례 다수, 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교단에 설 수 없도록 처벌 강화
- 소년법 32조 개정, 성범죄 이력 있는 자 교원 될 수 없도록 교직 자격 강화
- 교원평가 폐지로 여교사 대상 익명성을 악용한 성희롱 방지

④ 학교 밖 성폭력, 성착취 산업에 노출된 아동 청소년 적극 보호 조치

- 아동 및 청소년에 유해한 성착취적 인터넷 환경 변화 추진
-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 학생의 상담 및 지원 확대
- 가출 청소년의 가정폭력 피해 여부 의무 조사, 가정폭력 정황이 드러날 시 분리 의무화 하여 쉼터 및 기타 보호기관에 연계
- 학교 '절대보호구역' 50m 내 유해업소 운영 금지에서 기준을 300m 이내로 상향 및 학교 주변 유해업소 실태조사 실시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에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개인교습소 근처(200m 이내)에 열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

⑤ 돌봄 노동을 아동청소년 보호자 및 정부가 주체가 되어 이행

- 교육부 내 보육과 돌봄 사업을 보건복지부로 이전
- 학교폭력법 제2조(정의)에서 학교 내외가 아닌 학교 내에서 학생에게 발생한 폭력만을 의미하도록 학교폭력의 의미를 재정의
- 학교 민원대응팀에서 평교사 완전 배제
- 담임교사 한 명당 학생 수 15명 이하로 감축
- 학교에서 분리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대
- 돌봄노동과 맞닿은 교육 인력의 노동권 적극 보호
-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 '정서적 학대 행위'의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 범위 보장

■ 이행기간

- 22대 국회 임기인 2028년까지

■ 재원조달방안

- 대부분의 사업은 정치적 결단과 법률 개정 등이므로 추가 재원 소요 없음
- 보건복지부 주도 실패한 저출산 정책을 폐지, 돌봄기관 확대 예산 증액

□ 목표

- 유사 성매매 광고 근절, 유흥가 불법 광고전단 처벌 근거 마련
 - 성매매 행위는 불법임에도 남성문화, 접대문화의 일부로 자리하여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하여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으나 성매매업소의 난립을 막지 못하고 있음
- 리얼돌 등 유사 성매매 영업 제한
 - 리얼돌은 여성의 신체를 상품화하고 성적인 도구로 유통하여 사회적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리얼돌 수입 허용 이후 리얼돌 체험방 등 유통, 소비를 조장하는 업체가 운영되고 있음. 이를 규제하고 처벌할 근거가 없어 무분별하게 양산됨
- 이주여성, 청소년, 장애 여성 등 여성폭력에 있어 더 취약한 지위에 놓인 여성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

□ 이행방법

- ①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
 -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현실화
 - 성성매매 알선 차단 및 성산업 축소를 위한 법 집행력 보강, 전담 수사기관 신설, 처벌 규정 강화 및 알선 고리 차단
 - 성매매 관련 수사 전담체계 구성 제재 강화, 성착취 피해 외국인 여성 지원 대책 마련
- ② 유사성매매 광고 처벌 강화
 - 유사성착취 상업 광고 전면 금지, 유흥가 불법 광고 전단 수사 및 검거에 대한 지자체 의무 강화
 - 지자체 별 집중단속구역 지정 후 자체 단속 점검 실시, 집중 단속 기간 지정
 - 각 지역에서 배포된 전단지 수거 의무 지정
 - 불법 광고물 감시, 근절을 위한 민간점검활동 지원
 - 온라인 성매매 광고, 채팅앱 수사 단속 인력 강화

- ③ 리얼돌 수입·판매·운송·체험방 영업 규제
 - 여성의 신체를 일부 묘사한 리얼돌 수입 전면 금지화
 - 아동 형상 인형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
- ④ 성매매 관련 수사 전담 체계 구성 제재 강화, 성착취 피해 외국인 여성 지원 대책 마련
 - E-6 비자 및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는 연예 회사에 대한 심사 절차 강화. E-6 비자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제도 강구
 - 인신매매 피해자의 체류자격 보장 및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 임금체불 업주 및 알선 브로커들에 대한 형사적 처벌 강화 및 입증책임 전환

▣ 이행방법

- 22대 국회 임기인 2028년까지

▣ 자원조달방안

- 대부분의 사업은 정치적 결단과 법률 개정 등이므로 특별히 재원을 소요하지 않음

8

여남동수제로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

정책분야 | 정치

□ 목 표

- 국가의 모든 법률과 정책이 여성주의/페미니즘 관점에 기초해 재구성되기 위해서는 상위법인 헌법을 성평등한 방향과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중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 확보'와 '국가의 성평등 실현 의무'를 헌법에 명시
-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써 선출직 선거에서 여남동수제를 헌법에 명시
- 성범죄 이력이 있는 정치인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방지책 마련
-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정수를 확대하고, 소수정당과 원외정당의 의회 진출을 막는 위성정당 방지책 마련
- 기성정당에 극히 유리한 정당 보조금 배분 기준을 개혁하여 소수정당 지원 확대

□ 이행방법

- ① 제10차 헌법 개정 추진
 - 성평등 헌법 개정을 위해 여성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통로와 공간을 마련
 - 개헌 논의 시 만들어질 모든 공적 위원회의 여성의 참여 비율을 40% 이상 확보
 - 제10차 헌법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 보장'과 '국가의 성평등 실현의무' 명시
 - 국가는 성평등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현존하는 불이익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며, 성평등은 고용, 노동, 복지, 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보장
 - 법률은 선출직·임명직·공직 진출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직업적·사회적 지위와 책임을 동등하게 보장
- ②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다양한 직군과 소수자가 원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수를 100석으로 확대

- ③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
 - 거대정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
- ④ 공천 시 여남 동수 의무화
 -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 보장을 위해 공천 시 여남 동수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제도를 위반할 경우 보조금 회수
- ⑤ 성비위 정치인 활동 제한
 - 성범죄 및 2차 가해 이력 심사 가능한 정당 시스템 마련하도록 「정당법」 개정
- ⑥ 「정치자금법」 개정
 - 여성 후보 비율 30% 미달 시 국고보조금 지급 제한하는 규정 도입
 - 원내정당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현실화를 위한 지급기준 전면 재검토

■ 이행기간

- 22대 국회 임기인 2028년까지

■ 재원조달방안

- 대부분의 사업은 정치적 결단과 법률 개정 등이므로 추가 재원 소요 없음

9

내 몸에 남의 동의 필요 없는 나라

정책분야 | 보건복지

□ 목표

- 성별에 따른 생물학적 차이에 의한 발병원인 및 예후, 유병률, 치료방식 등이 다른 질병들이 많음에도 여성과 남성의 생리적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성인 남성 기준으로 개발, 승인된) 약물 부작용 등의 문제 역시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의료계 약품 성별평가 의무화 및 여성 질병의 비급여 비율을 낮추며 국민건강검진 성별 차등화 삭제
- 무분별한 보호자 동의 관행 폐지 및 보호자 범위 확대하여 여성 1인가구 건강권, 생명권 사각지대 해소
- 모자보건법 제14조를 폐지하여 기혼여성의 임신중지권 확보
- 임신중지를 건강권의 영역으로 공식화하고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과 임신 32주 이내 임신중절 허용하는 법안 신설
- 의사들의 집단이탈 시 의료행위를 간호사에게 불법진료행위 지시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위력행사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으므로 간호사의 근무환경개선과 불법진료행위 지시 철폐를 위한 법 제정

□ 이행방법

- ① 신약의약품 및 치료기술 심사승인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부작용 데이터 포함 의무화하고, 보조생식술이 여성의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이 결과를 관련 법제 및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월경 용품 및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각종 화학약품의 안전성 및 성별에 따른 영향 조사 의무화
 - 국민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검사 대상을 여성, 남성 모두 24세부터로 정책 개선하고 유방초음파 검사 등 여성질병 검사항목 급여 적용
- ② 의료법 제15조에 시행령 신설하여 보호자 동의가 없다는 사정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님을 명시하고,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을시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보호자가 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4조의2의 ‘법정대리인’을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으로 개정.

- ③ 안전하고 완전한 임신중지권 실현을 위한 법·제도 마련
 - 모자보건법 제14조 폐지/임신중지시술에 건강보험 적용/임신중지에 관한 포괄적 정보와 안전한 의료기관 정보 및 임신중지시술 의료체계구성/의학적 사유 외의 경제, 사회적 사유로도 임신 중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청소년 및 취약계층 여성 (장애 여성 등)이 임신 중단을 원할 경우 병원 정보 등 지원을 제공하며 임신 중단을 위한 의약품(미프진) 판매허용.
- ④ 간호법 제정안 추진
 -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 설치와 현장실사단을 별도로 운영 관리/간호사가 대리처방, 대리수술, 검사(검체 채취, 천자), 관련 기록 작성 튜브관리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권 마련/간호사가 의사들의 집단행동 또는 법과 어긋나는 지침을 거부할 시 법적보호 및 관련제도 마련

▣ 이행기간

- ◎ 22대 국회 임기인 2028년까지

▣ 재원조달방안

- ◎ 대부분의 사업은 정치적 결단과 법률 개정 등이므로 추가 재원 소요 없음.
- ◎ 임신중지가 필요한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 목표

- ◎ 여성가족부 위상 재정립, 성평등 정책 평가를 위한 성주류화 제도 확대
 - 여성가족부 위상 재정립, 공공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고려하고 정책효과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을 해소하고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성주류화 정책이 실시되고 있으나 관련 예산의 삭감, 여성가족부의 불안정한 지위로 성주류화 정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기 어려움
- ◎ 공공기관에서 반복 발생하는 성비위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신뢰와 이미지 회복, 공공부문 내 성평등한 조직문화 형성
 - 2023년 기준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사건은 2524건이며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를 고려하면 실제 사건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됨. 반복되는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마련이 필수적
- ◎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성범죄 및 2차 가해에 대한 책임 강화
 - 공공기관에서 반복되는 고위공직자의 성비위 문제는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와 이미지를 추락시킬 뿐 아니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심각하게 후퇴시킴. 특히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기 전에 사임하는 경우 제대로 된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성비위 전력이 있는 자의 공직 진출에 제한을 두기 어려움
- ◎ 공공부문 여성관리직 비율 개선
 - 2020년 기준 공공부문 중앙정부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8.5%로 OECD 회원국 평균비율 37.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특히 공공부문에서도 과학·기술 분야의 여성진출이 저조함

□ 이행방법

- ① 여성가족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
 - 여성가족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권익 증진 분야 인력 충원, 성차별 시정기능 강화
 -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성주류화 정책이 전 공공기관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확충

- ② 공공기관 성비위 관련 신고 해태시 기관장 처벌 명확화
- ③ 공공기관 양성평등 임원임명목표제 강화, 공공기관 경영평가지 여성관리직 비율 반영
- ④ 국가공무원법 상 성비위 관련 징계 규정 강화
- ⑤ 공공기관 내 인사추천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징계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비율 40% 이상 확보, 공직후보자 검증시 성비위, 2차 가해 이력 반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이행기간

- 22대 국회 임기인 2028년까지

▣ 재원조달방안

- 여성가족부 관련 예산 지속적인 확대 편성



우리공화당

No.	정 책
1	노인연금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2	태어나서 19세까지 월 50만원 지급(총 1억2000만원)
3	청년 세대용 '반값아파트' 100만호 건립
4	혁신적 국토균형발전정책 추진, 4+3메가시티 추진,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사는 나라 실현
5	교육제도 혁신
6	선거제도 개혁 및 사이버테러 적극대응
7	첨단정보과학군 건설로 자주국방력 강화 ·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 한미동맹의 기술동맹으로의 업그레이드
8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9	K-방산 · 우주항공, 뷰티 · 의료관광 등 10대 산업 육성
10	민노총 · 전교조 해체를 통한 청년세대의 기회균등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정책순위

1

노인연금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정책분야 | 보건복지

□ 목 표

- ◎ 2025년부터 노인연금(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 현황 및 문제점

- ◎ 한국인은 어제, 오늘도, 내일도 일을 하고 있음. 직장에 있을 때는 최장시간 일하고 퇴직하고도 12년을 더 일하지만 한국 어르신은 가난함
- ◎ 65세 이상 어르신이 받는 연금(월 60만원)이 최저 생활비(월 124만3000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짐. 2021년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 862만명 가운데 연금 수급자는 777만 명이지만, 중위 수급액은 38만2000원에 불과함
-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하면 한국은 2020년 기준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의 50% 이하 인구 비율)이 40.4%로 회원국 가운데 1위임. 한국 노인이 가난한 이유는 연금제도가 1988년에 처음 도입되어 가입 기간이 짧고, 소득대체율(근로기간에 받는 임금에 대한 연금액의 비율)이 낮아서임
- ◎ 연금이 적고 가난하다 보니 정년이 지나고서도 일을 해야만 함.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7.3%로 사상 최대치에 이룸. 노인 10명 가운데 4명 가까이는 일을 하고 있거나, 직장을 찾고 있다는 의미임. 이 비율은 2000년 29.6%에 그쳤지만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2020년 35%를 넘어서더니 2023년에는 40% 가까이로 늘었음
- ◎ 22대 국회에서 입법화
- ◎ 2025년부터 실행

□ 이행기간

- ◎ 2025년 이후 계속

□ 재원조달방안

- ◎ 전체 예산 구조조정 후 복지 예산 확대

정책순위

2

태어나서 19세까지 월 50만원 지급(총 1억2000만원)

정책분야 | 보건복지

□ 목 표

- ◎ 2025년부터 태어나서 19세까지 월 50만원(총 1억2000만원) 지급

□ 이행방법

- ◎ 2023년 8월 출생아 수는 1만8984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2만명 아래로 떨어짐. 1981년 통계를 작성한 후 처음으로 경험하는 숫자임.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이었고, 지난 2/4분기에는 0.70명까지 떨어짐
- ◎ 저출산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오히려 작은 문제일지도 모름. 병력 자원 감소 문제가 그렇고, 청년층의 부양 인구가 늘어나 연금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 수 있음
- ◎ 2022년 경제성장론의 대가인 데이비드 웨일(David Weil) 미 브라운대 교수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 고령화는 향후 수십 년 동안 한국 경제 성장에 ‘역풍(Headwind)’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분석함
- ◎ 저출산 예산의 정의와 범위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역대정부는 지난 16년 동안 280조원이란 예산을 쏟아부음. 왜 효과가 없었을까? 우리공화당은 현재의 저출산 정책이 아이를 키우는 데 집중하고, 출산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보고 있음
- ◎ 최근 현금을 많이 주는 지역에서 출산율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정책의 현실성을 높여주는 것임
- ◎ 22대 국회에서 입법화
- ◎ 2025년부터 실행, 입법화 즉시 실행

□ 이행기간

- ◎ 2025년 이후 계속

□ 재원조달방안

- ◎ 전체 예산 및 지출구조 개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 제고에 따른 세수 증대분을 활용

정책순위

3

청년 세대용 ‘반값아파트’ 100만호 건립

정책분야 | 청년

□ 목 표

- ◎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반값아파트’ 100만호를 건립하여 청년에게 공급

□ 이행방법

- ◎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를 일컫는 ‘3포 세대’라는 말이 처음 생기기 벌써 10년을 훌쩍 넘김. 그 사이 포기하는 것은 늘어나 이제는 ‘9포 세대’라고 스스로 자조하고 있음
- ◎ 현재를 살고 있는 청년 세대는 불안정한 직장에서 받는 낮은 임금으로는 자산 형성이 매우 어려움. 임금상승률보다 높은 생활물가상승률은 청년을 빈곤으로 내몰고 있음. 특히 주거비 상승률은 두드러지게 높아져, 최근 ‘주거 빈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거주할 주택에 관한 관심은 커지고 있음
- ◎ 15~29세 청년의 실업률은 2022년 6.4%로 전체의 2.9%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으며, 자가보유율은 14%에 불과함. 2019년 18.9%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는데 그 이유는 아파트를 비롯한 집값이 그 기간 동안 급등했기 때문임. 한편 주거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 가구’는 2022년 기준 43만에 이르고 있음
- ◎ ‘한강의 기적’ 기간 기성세대는 부를 축적할 기회가 많았지만, 청년세대는 그러한 자본이득을 획득할 ‘운’이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 있음
- ◎ 22대 국회에서 입법화
- ◎ 2025년부터 실행

□ 이행기간

- ◎ 2025년 이후 계속

□ 자원조달방안

- ◎ 주택용지용 그린벨트 해제, 낭비되고 있는 SOC 예산 절약

정책순위

4

혁신적 국토균형발전정책 추진, 4+3메가시티 추진,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사는 나라 실현

정책분야 | 지방자치

□ 목 표

-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과 균형적 발전을 통해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이룩함

□ 이행방법

-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수도권은 인구가 너무 많고, 지방은 인구가 너무 적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수도권에서는 주택 부족, 집값 폭등, 전·월세 부족, 교통 혼잡, 환경오염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지방은 기업의 역외 이전, 상권의 붕괴, 일자리 부족, 열악한 교육·문화·의료 인프라 등으로 인해 고사 직전의 위기를 맞고 있음
- 이제 지방에서도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면서 함께 발전하고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적절한 수준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 국토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
- 국토균형발전을 이룩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법, 지방교부세를 증액하는 방법, 재정자립도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큰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성과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음. 국세와 지방세를 6:4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재정자립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자족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음
- 민간 차원에서도 지방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 지방의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의 세금감면과 각종 규제의 면제와 같은 지원대책을 실시함. 지방의 대학에 대해서는 학교운영비 지원, 국가장학금 확대,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한다. 지방의 의료기관이나 문화시설에 대해서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도록 다양한 지원을 실시함
-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 법률개정 및 제도정비 → 법률과 제도의 시행

■ 이행기간

- ◎ 2024년 ~ 2034년

■ 자원조달방안

- ◎ 국세 대 지방세 비중 조정: 70% 대 30%에서 80% 대 20%로 전환

정책순위

5

교육제도 혁신

정책분야 | 교육

□ 목 표

- 학제의 획기적 개편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교육제도 마련

□ 이행방법

-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산업사회의 단계를 넘어 정보사회의 단계로 접어들었고, 융합과 초연 결성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변화는 국민의 생활양식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 이에따라 교육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사회에서 국민의 교육 욕구를 충족하고 국민에게 국가의 의무인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함임
- [6-3-3-4]의 4단계로 구성된 현재의 학제는 산업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위한 것임.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사회 에서는 학교 교육의 단계를 줄이면서 각 단계에서 집중적이고 압축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제를 혁신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4단계 16년의 학제를 3단계 14년의 학제 [5-5-4]로 개편함. 초등학교를 6년제에서 5년제로 1년 단축하고, 초등학교의 취학연령을 현재의 만 7세에서 만6세로 낮춤. 아동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서 충분한 유아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취학연령을 낮추고 교육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아동들의 교육성과를 높이는데 더 적합함.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초등학교의 초등교육을 대학의 고등교육으로 연결시키는 중등교육기관으로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하여 5년제의 중등학교로 변경함으로써 중등교육의 체계성과 통합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 새로운 학제 하에서는 학생들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학업을 완료하여 만20세가 되면 대학을 졸업할 수 있으며, 군복무를 마친 경우에도 만24세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음. 학교를 떠나서도 사회에서 충분한 교육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학생들을 지나치게 장기간 동안 학교교육에 묶어둘 필요가 없음
- 학제 개편을 통해 학업을 마친 사람들이 조기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하여 청년 시기에 실패한 사람도 다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재도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음. 또 경제활동이 가능

한 연령을 늘려 고령화 사회에서의 경제활동인구 부족에 대비할 수 있음

- ◎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 공청회 → 교육관련법의 개정 → 학제개편의 시행
- ◎ 학제개편에 따라 기존 교육시설인 어린이집과 유치원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취학전 교육기간의 전문성 확대와 지원을 통해 학제 개편이 전체 교육 생태계에 선순환을 할 수 있도록 함. 저출산고령화사회 탈피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과 일·가정 양립정책 확립에 있어 지속적인 대한민국 교육기반 육성과정에서 모든 연령대의 교육기관이 조화로운 협력을 할 수 있음

▣ 이행기간

- ◎ 2024년~2034년

▣ 자원조달방안 등

- ◎ 국비

정책순위

6

선거제도 개혁 및 사이버테러 적극대응

정책분야 | 정치

□ 목 표

- 올바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이행방법

-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인 선거는 국민의 의사가 자유롭게 표현되고, 선거결과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되어야 함. 따라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도 정교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현재의 선거제도는 선거의 공정성·투명성과 관련하여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계수)제임 선거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누구나 선거 당일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는 예산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투표방식 및 투표함 보관·이송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사전투표제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함. 투표함을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이동하고 개표소에서 전자개표(정확하게 말하면 전자계수)를 실시하는 것 역시 참관인들이 투표지의 유효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투표지가 각 후보자에게 올바르게 집계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 개표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개표의 신속성이 아니라 개표와 집계의 정확성임.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투표소 현장에서 참관인들이 입회하는 가운데 수개표가 이루어지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함.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심사계수 이전 단계에 사람의 손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했지만 이것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담보하기 어려움이 있음
- 중앙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선관위가 선거여론조사·언론보도·선거운동·투표과정·개표방식 등 선거의 전반적인 과정과 관련하여 여당에게 유리하고 야당에게 불리한 편파적인 선거관리 혹은 거대정당 후보자에게 유리하고 중소정당 후보자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선거관리를 자행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기관·단체·개인에 대해서는 엄중할 처벌을 가하도록 해야 함. 선관위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선거관리는 선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임

- 검찰과 법원이 선거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기소와 소송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도 민주주의 파괴라는 차원에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사정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용납되어서는 안됨
-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의 사이버테러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외국인의 댓글 작업을 통한 여론선동 등 사이버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거주권의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사이버테러는 있을 수 없는 일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이버테러를 막을 수 있는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 및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부정선거에 대한 염려를 해소해야 함.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비정상적인 사이버활동에 대해서도 대처해나가야 함
- 선거관련 법령의 개정 → 선관위의 공정선거관리 책임 강화 → 선거제도 개혁조치의 시행

■ 이행기간

- 2024년 ~ 2028년

■ 재원조달방안

- 국비

정책순위

7

첨단정보과학군 건설로 자주국방력 강화 ·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 한미동맹의 기술동맹으로의 업그레이드

정책분야 | 국방

첨단정보과학군 건설

□ 목 표

- 무너진 대북억지력의 복원
- 첨단 정보과학군 건설로 자주국방력 강화

□ 이행방법

-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8개 군단 · 39개 사단' 체제를 2025년 '6개 군단 · 3개 사단 체제'로 바꾸는 식으로, 전방 2개 군단, 6개 사단 해체
- 주적 표현 금지
- 지난 문재인 정권은 전쟁억지력 차원에서 만들어진 DMZ GP철거, 철원 지뢰 제거, 탱크 방어벽 철거, 한강 수로 공동조사, 한강 하류 철조망 철거, 20km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으로 안보 환경을 날로 악화시키고 있음
- 드론을 활용한 군사작전 등 군현대화가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군도 신기술에 따른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함. 사이버테러 등을 방어하기 위한 군기술 혁신을 도입해야 함
- F35, 싸드 도입 등 신무기 획득 사업 계속 진행
- 기계화 사단 육성
- 드론 등 신무기 활용

□ 이행기간

- 즉시, 계속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 목 표

- 한미동맹 강화 및 기술동맹으로서 업그레이드하기
-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나라들과의 연합안보에 적극 참여

□ 이행방법

- 국제경제체제 편입으로 부강해진 중국은 국진민퇴(國進民退), 일대일로(一帶一路), 제1 제2 도련선(島鍊線) 설정 등 사회주의적 제국주의 행태를 드러내고 있으며 미국이 인도양 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으로 이에 맞섬에 따라 국제질서가 미-중간 신냉전 체제로 재편되고 있음
- 바다는 교역과 개방과 번영을 가져온 장소로서 바다의 평화를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므로 대한민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동참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이고, 걸프지역 페르시아만에서 석유수송로를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대양해군을 파견하는 것이 필요하며,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독립과 번영에 필요함.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대한민국이 이에 참여하여 자유민주주의의 번영을 이룩해야 함
- 중반미노선 반대: 일대일로 참여,북한을 경유한 러시아 송유관부설 및 철도연결 계획 등 반대
- 인도양 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참여 결의안 및 한미일 삼각 안보 경제 협력 촉구 결의안 국회 통과
- 현재의 한미동맹 관계를 강화하여 기술동맹으로서 업그레이드를 하여 신냉전체제에서의 안보와 경제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함

□ 이행기간

- 즉시, 계속

□ 자원조달방안

- 비예산사업

정책순위

8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정책분야 | 보건복지

■ 현황 및 문제점

- 저출산고령화로 연금이 부실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연금개혁의 ‘골든 타임’을 한번 놓쳤음
- 윤석열 정부는 노동, 교육, 그리고 연금개혁의 3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연금혜택을 늘리면서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현재의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구조로서는 연금고갈 시기가 너무 일찍 다가오기 때문에 이를 바꾸는 것이 긴요함
- 대략 3가지 방안이 존재할 수 있음. 더 내고 덜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더내고 더 받기가 그 3가지 방안임
- 연금의 지속가능성 증대를 위해서는 앞의 2가지 방안이 적합하지만, 현실적으로 연금을 내는 현재 및 미래 세대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움
- 우리공화당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음. 현재의 보험료율을 12%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45%로 올리는 방안임
- 하지만, 이와 같은 개혁을 하더라도 연금의 고갈시기는 약 10여년 정도밖에 줄어들지 않음. 따라서 연금의 수익률을 대략 3%p 정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함. 이 정도로 수익률을 높이면 약 12년 정도 고갈 시기를 늦출 수 있음
- 이렇게 확보된 약 20년 내에 한국 경제는 다음의 3가지 추가 과제를 시행해야 지속가능성이 있음. 첫째, 대규모의 이민 유입, 둘째, 저출산 극복, 셋째, 잠재성장률을 4.5%까지 제고하는 일임

■ 목 표

- 22대 국회 내에 우리공화당 주도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국회 통과 목표
-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5%로 높이는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협의

▣ 이행방법

- ◎ 22대 국회에서 입법화
- ◎ 2025년부터 실행

▣ 이행기간

- ◎ 2025년 이후 계속

▣ 재원조달방안

- ◎ 보험료율이 조정되면 자동적으로 국가와 기업의 부담액 변화

정책순위

9

K-방산 · 우주항공, 뷰티 · 의료관광 등 10대 산업 육성

정책분야 | 산업자원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5년마다 1%p씩 낮아지고 있다는 실증 연구가 나왔음.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저출산·고령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기술 및 산업 경쟁력이 선진국보다 낮기 때문임
-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공공개혁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산업 육성 정책이 없으면 잠재성장률 제고는 구호에 그칠 수 있음
- 윤석열 정부는 2022년 4월 인수위 단계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키울 6대 산업으로 에너지, 바이오, 탄소중립 대응, 방산우주항공, 인공지능(AI), 그리고 스마트 농업을 제시함
- 윤석열 정부의 6대 산업도 인공지능을 제외하면 제조업에 치중되어 있고, 특히 탄소중립 대응은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목표'에 가까움. 에너지는 범위가 너무 커 세부적으로 무슨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려는 의도인지 감이 잡히지 않음
- 우리공화당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10개를 제시함. 선정 변수는 '미래 성장성', '고용 창출력', 그리고 'IT(AI)와의 융합 잠재력'임.
- 5대 제조업은 AI칩·파운드리, SMR·수소, K-방산·우주항공, 바이오, 로봇이며, 5대 서비스업은 AI(인공지능), 뷰티·의료관광, 웹툰, K-Pop(드라마), 그리고 K-Game임

■ 목 표

- 22대 국회 내에 정부와 협의하여 10대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
- 각종 세제 혜택 등을 집중하여 지원

■ 이행방법

- 22대 국회에서 입법화
- 2025년부터 실행

■ 이행기간

- ◎ 2025년 이후 계속

■ 자원조달방안

- ◎ 현재의 산업 육성 정책 자금의 효율성 개선 등

정책순위

10

민노총·전교조 해체를 통한 청년세대의 기회균등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정책분야 | 노동, 교육

□ 목 표

- 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노조로서의 순수성을 상실한 민노총과 전교조의 해체를 통한 노사관계와 교육의 정상화

□ 이행방법

1. 민노총 해체

- 노동조합은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조직임. 하지만 민노총은 사업장의 범위를 넘어 전국적 단위에서 정치투쟁을 전개하는 정치단체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미 노동조합으로서의 순수성을 상실하였음. 특히 민노총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질서를 부정하는 반국가적 활동을 노골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민노총의 이러한 활동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음
- 민노총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고용 세습을 단체협약을 통해 제도화하려는 시대착오적 약속을 자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의 폭압적인 갑질과 같은 악행들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약속과 악행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방해하여 경제를 침체시키고, 청년 일자리를 빼앗고 있으며,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빼앗고 있음.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발전과 시장경제의 성숙한 정착을 어렵게 하고 있음
-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확보하고 경제발전과 산업평화, 그리고 청년 일자리의 확보를 실현하기 위해 민노총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함

2. 전교조 해체

- 전교조는 교사나 교수의 권익을 증진시킨다는 교원노조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벗어나 학교를 교육의 장이 아니라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있음. 전교조는 학생들에게 그들의 능력을 계발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가치관을 심어주는 진정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반국가적인 이념을 주입하는 좌편향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전교조의 활동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존립을 위협하는 것임

- ◎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올바른 교육을 받을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존립을 유지하기 위해 전교조는 반드시 해체되어야 함
- ◎ 특별법의 제정 및 소송의 제기 => 특별법과 판결의 집행

▣ 이행기간

- ◎ 2024년 ~ 2028년

▣ 자원조달방안

- ◎ 비예산



케이정치혁신연합당

No.	정 책
1	디지털 민주주의를 통한 대중주도 사회 실현
2	국민 참여 K-오디션을 통한 새로운 정치문화 조성
3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한 차별없는 공정한 노동시장
4	상호이익이 되는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 준비
5	차별없이 모두가 신명나게 누리는 복지
6	IT·BT 세계일류국가 도약과 모두를 위한 과학
7	기후보호와 모든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나라
8	민주시민과 창의적인 인재 양성하는 정의로운 교육
9	국제사회 균형외교와 강한 안보
10	여성이 주역이 되는 평등한 시대

정책순위

1

디지털 민주주의를 통한 대중주도 사회 실현

정책분야 | 정치

□ 목 표

- 디지털 민주주의를 통해 대중이 모든 분야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이 주역이 되는 대중주도 사회 실현

□ 이행방법

- 대의민주제를 보완하기 위한 지역당과 국민발안제를 기본으로 하는 직접민주주의와 숙의민주제를 제도화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시민 플랫폼 정당을 만든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을 통한 국민 홍보, 언론 보도, 정책과 현장 민원 청취, 24시 국민의 소리 수렴 등 쌍방향 정치활동을 통한 혁신적인 정당체제를 도입한다. 이는 인터넷과 플랫폼이 시민들에게 친숙한 매체로서, 소수 시민들의 제안을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공론화하여 정책을 반영하게 하기 위함이다.

□ 이행기간

- 정당 후보자 당선 후 시행, 플랫폼을 구축하여 항시 유지되도록 구성

□ 재원조달방안 등

- 공약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바탕으로 한 재원의 전략적인 배분이 필요. 예산 검토를 통해 불가피한 예산을 제외하고 낭비되는 예산을 적극 삭감하여 활용 예정이며,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조세 확대, 국채 발행, 지출조정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재원 확보 및 활용 예정

정책순위

2

국민 참여 K-오디션을 통한 새로운 정치문화 조성

정책분야 | 정치

□ 목 표

- ◎ 참여민주주의의 확대, 정당민주주의와 정치참여를 확대하여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시민참여의 새로운 혁신 K-오디션 공천시스템을 도입.

□ 이행방법

- ◎ 제22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부터 정당의 밑질 정치가 아닌 시민의 손으로 시민의 대표자를 선택한다. 각 후보자는 시민후보로서 국민 참여 K-오디션(투명하게! 공정하게!) 방식에 지원하고 시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는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반영되는 다당제에 기반을 둔 합의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다. 민심이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로의 개혁과,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분권형 권력구조로의 개헌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사법부가 행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진정한 의미의 3권 분립을 확립한다. 새로운 인재 발굴과 정치문화의 조성을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며 위성정당을 지양한다. 그리고 중앙당 중심의 독점을 막고 시민들이 해당 지역의 지방정당을 통한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심이 반영되도록 한다. 이러한 안정적인 다당제의 정착을 통해 의회제도와 정치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정치개혁을 실현한다.

□ 이행기간

- ◎ 제22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거부터 바로 시행, 선거제도의 개혁과 개헌은 약 10년 이상 예상

□ 재원조달방안 등

- ◎ 공약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바탕으로 한 재원의 전략적인 배분이 필요. 예산 검토를 통해 불가피한 예산을 제외하고 낭비되는 예산을 적극 삭감하여 활용 예정이며,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조세 확대, 국채 발행, 지출조정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재원 확보 및 활용 예정

정책순위

3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한 차별없는 공정한 노동시장

정책분야 | 노동

□ 목 표

- 세대별·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차별 철폐, 일자리 안정과 사회안전망 구축,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으로 차별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며 노동기본권 확립, 부당노동행위 근절, 정리해고 남용 방지 등 노동자의 권익보호 강화

□ 이행방법

- 첫 번째로 청년고용 확대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향후 꾸준히 증가할 공공서비스와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에 적정임금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산업현장의 저임금 고위험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개선하여 청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근로장려세제 등 청년노동자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한다.
- 두 번째로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벤처기업의 창업과 고용확대를 지원하고, IT 및 BT, 로봇, 2차전지, 환경·신재생에너지, 정밀기계, 첨단부품·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세 번째로 비정규직에 의존하는 성장전략을 폐기하고 파견근로를 엄격하게 제한하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제를 실시한다. 정규직 채용이 기본이 되도록 관련법을 정비하여 비정규직 남용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방지한다.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정부사업에서 적정임금을 준수하고 직접고용 비율을 늘려나간다.
- 네 번째로 혁신형 중소기업을 통해 미래지향적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주력한다. 지역 간 격차와 소외를 극복하여 지역 맞춤형 직업교육, 지역별 창업지원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 고용과 복지, 직업교육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 이행기간

- 정당 후보자 당선 후 시행, 항시 유지되도록 구성

□ 자원조달방안 등

- 공약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의 전략적인 배분이 필요. 예산 검토를 통해 불가피한 예산을 제외하고 낭비되는 예산을 적극 삭감하여 활용 예정이며,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조세 확대, 국채 발행, 지출조정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자원 확보 및 활용 예정

정책순위

4

상호이익이 되는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 준비

정책분야 | 통일외교통상

□ 목 표

- 상호 이익이 되는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 준비

□ 이행방법

- 햇볕정책 계승

평화와 화해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무력도발을 일절 허용하지 않고, 흡수통일을 반대하며, 남북 간 화해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햇볕정책을 계승한다. 주도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를 정착시켜 통일을 지향한다.

- 교류협력을 통한 통일기반 조성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문화교류를 강화한다.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한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안정적이고 투명한 대북지원을 확대한다.

□ 이행기간

- 정당 후보자 당선 후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비용 감축, 국가 재원의 전략적 배분을 통한 관련 예산 증액

정책순위

5

차별없이 모두가 신명나게 누리는 복지

정책분야 | 보건복지

□ 목 표

- 실업, 빈곤, 질병 등으로부터 최대한 보호받는 복지국가 건설

□ 이행방법

- **어르신 빈곤 해결과 든든한 노후 보장**
노후에 안정적인 기본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적연금 제도개혁 추진, 노인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특히 생계가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생활프로그램의 확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금을 현실화하여 안정된 노후를 보장한다. 취미, 봉사, 생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실버 매니저를 도입하여 은퇴 후 생활을 지원한다.
- **의료비 부담과 의료격차 해소**
소득 수준별 병원비 상한제를 강화하고 실질화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권 대형병원 위주 지원정책을 지방의 중소 지역병원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전환한다. 영유아 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서비스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어르신 요양 서비스 시설 확충과 서비스 인력에 대한 적정임금을 보장하여 인간적인 품위가 유지되는 어르신 요양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 **시민주거안정**
공평한 세금부과,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등을 도입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다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세입자에 대한 주거급여확대로 전환하여 서민의 주거비용을 줄인다. 공공임대주택 총량을 확대하고 다양한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으로 빈곤층 및 서민층까지 확대·공급한다.

□ 이행기간

- 정당 후보자 당선 후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다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감축 및 서민주거비용 확보, 공약의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의 전략적 배분

정책순위

6

IT·BT 세계일류국가 도약과 모두를 위한 과학

정책분야 | 과학기술정보통신

□ 목 표

- ◎ 경제성 위주로 지원·운영되는 과학기술 정책에서 벗어나 경쟁력과 연구기반을 강화하여 IT·BT 세계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

□ 이행방법

- ◎ 연구자 중심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축
연구 효율성과 민주성을 보장하는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기초과학에 대한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고 연구자에 대한 실질적·안정적 지원을 통하여 연구자들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북돋운다.
- ◎ 실패와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연구 환경 조성
진취적이고 효율적인 과학과 기술의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경제성 위주의 예비타당성 조사의 폐지, 연구 행정의 간소화 및 연구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중복 연구를 허용하여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고, 평가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서류상의 단기성과를 위한 형식적인 연구가 아닌, 실패의 경험과 그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연구성과가 축적될 수 있도록 한다.

□ 이행기간

- ◎ 정당 후보자 당선 후 시행

□ 자원조달방안 등

- ◎ 공약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의 전략적인 배분이 필요. 예산 검토를 통해 불가피한 예산을 제외하고 낭비되는 예산을 적극 삭감하여 활용 예정이며,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조세 확대, 국채 발행, 지출조정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자원 확보 및 활용 예정

정책순위

7

기후보호와 모든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나라

정책분야 | 환경

□ 목 표

- 생태환경의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 이행방법

- 원전 비중 감소와 저탄소 시대

에너지 정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원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한다. 구속력 있고 포괄적인 기후변화대책을 수립·이행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재생 에너지 확대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원전 비중 감소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가적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친환경 클린에너지 정책을 추구한다. 국제기준에 걸맞은 탄소규제를 정책목표로 삼으며,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강화한다.

-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나라

대기 오염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기환경 사회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미세먼지 배출원의 낮춤을 위해 석탄 및 화력발전을 과감히 축소한다. 교통수송 분야를 대중교통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을 적극 확충한다. 국경 없는 대기환경의 관리를 위해 중국 등 동북아와의 실질적 환경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한다.

- 4대강 재자연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의 수질문제, 구조물 안전성 문제, 주민 피해 문제, 생태계 파괴 문제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복원방안을 마련한다.

□ 이행기간

- 정당 후보자 당선 후 시행, 향후 지속적인 관리 필요

□ 재원조달방안 등

- 공약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바탕으로 한 재원의 전략적인 배분이 필요. 예산 검토를 통해 불가피한 예산을 제외하고 낭비되는 예산을 적극 삭감하여 활용 예정이며,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조세 확대, 국채 발행, 지출조정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재원 확보 및 활용 예정

정책순위

8

민주시민과 창의적인 인재 양성하는 정의로운 교육

정책분야 | 교육

□ 목 표

- 교육이 불평등의 원인이 아닌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기회균등, 공공성 강화, 교육재정 확대를 추진하여 모두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받으며 학력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함

□ 이행방법

- 직업교육과 공교육 혁신
개인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발휘되는 교육체계를 구축한다. 창의교육, 인성교육을 중시하며 학교와 지역 및 기업의 연계 교육으로 학생 역량을 극대화하고, 일자리에 필요한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을 혁신한다. '직업중심 고등학교'와 '직업중심 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차별 없는 교육 구현
학력, 학벌, 경제력, 신체적·정신적 장애, 성별, 지역, 문화, 인종 등 차별 없이 모두가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공평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직장교육, 지역교육, 평생교육을 통해 직업환경 변화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며,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과 고용을 연계하여 교육의 지역격차를 해소한다.
-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실질적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소득장학금을 확대하고 요건을 현실화한다. 대학은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도록 하고, 공공기숙사 건립 등을 통해 대학생의 주거비용을 낮춘다.

□ 이행기간

- 정당 후보자 당선 후 시행, 향후 지속적인 관리 필요

□ 재원조달방안 등

- 공약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바탕으로 한 재원의 전략적인 배분이 필요. 예산 검토를 통해 불가피한 예산을 제외하고 낭비되는 예산을 적극 삭감하여 활용 예정이며,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조세 확대, 국채 발행, 지출조정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재원 확보 및 활용 예정

정책순위

9

국제사회 균형외교와 강한 안보

정책분야 | 안보

□ 목 표

- 한반도 평화와 민족생존을 위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적인 통일외교정책을 바탕으로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적인 외교·안보 노선을 지키며,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한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확고히 한다.

□ 이행방법

- 실리적 균형외교
국익우선의 경제외교를 위해 통상교섭 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동아시아의 평화번영을 위해 중국이 적극 참여하는 다자안보체제를 구축한다. 그리고 재외국민 보호법을 제정하여 해외공관의 재외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강화한다.
- 강한 안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전시작전권을 조기에 환수하고, 국군의 단독작전능력을 강화하여 강군을 육성한다. 3군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육군 중심의 전력구조를 해·공군 중심으로 전환하고, 잠수함 등 비대칭 전력을 증강시켜 대양해군을 육성하고 압도적 공군 전력을 구축한다.

□ 이행기간

- 정당 후보자 당선 후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공약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바탕으로 한 재원의 전략적인 배분이 필요. 예산 검토를 통해 불가피한 예산을 제외하고 낭비되는 예산을 적극 삭감하여 활용 예정이며,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조세 확대, 국채 발행, 지출조정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재원 확보 및 활용 예정

정책순위

10

여성이 주역이 되는 평등한 시대

정책분야 | 여성

□ 목 표

- ◎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존귀한 존재로 인정받는 양성평등 사회를 지향하며, 여성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문화를 개선한다.

□ 이행방법

- ◎ 여성의 정치참여
공직후보자를 추천하는데 있어 특정성별이 전체의 60%이상을 차지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당직을 배분하는데 있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며, 여성인재를 발굴하고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는 정치적 제도와 문화를 개선한다.
- ◎ 여성의 권리로서의 결혼, 임신, 출산, 보육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성의 결혼, 임신, 출산, 보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 돌봄 시스템을 강화한다. 임신과 출산, 보육이 국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남성 육아수당 등을 높여 남성의 육아 책임성을 강화한다.
- ◎ 여성 일자리 창출과 여성의 경력단절 극복
출산과 보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고 여성의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 이행기간

- ◎ 정당 후보자 당선 후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 공약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바탕으로 한 재원의 전략적인 배분이 필요. 예산 검토를 통해 불가피한 예산을 제외하고 낭비되는 예산을 적극 삭감하여 활용 예정이며,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조세 확대, 국채 발행, 지출조정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재원 확보 및 활용 예정



통일한국당

No.	정 책
1	세계 5대 경제강국
2	강력한 안보와 동북아 평화시대
3	따뜻한 복지, 행복한 국민
4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
5	공정과 정의, 희망의 나라
6	성숙한 법치주의와 상식이 존중받는 나라
7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강국
8	세계인의 문화를 창조하는 글로벌 문화강국
9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국가
10	통일한국을 위한 준비된 나라

정책순위

1

세계 5대 경제강국

정책분야 | 재정경제

□ 목표

- ◎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 이행방법

- ◎ 자유와 창의를 기반으로 한 세계 일류기업의 육성
- ◎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을 통한 동아시아의 통합 완성
- ◎ 과학기술 혁신과 친인류적 경제성장 전략 추구
- ◎ 세계 한민족 경제네트워크 구축
- ◎ 경제운용방식의 대전환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 균형 및 조화의 추구하고 경제적 약자의 보호
- ◎ 공정경제 시스템과 대기업의 책임 경영
- ◎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성 확보
- ◎ 항공우주 산업 육성 및 우주시대의 주도
- ◎ 1차 산업 육성과 식량안보 강화

□ 이행기간

- ◎ 2024년부터 지속 이행

□ 자원조달방안 등

- ◎ 기존 예산 활용
- ◎ 일반 회계조정 등으로 마련
- ◎ 법률 및 제도 개선

정책순위

2

강력한 안보와 동북아 평화시대

정책분야 | 국방, 통일외교통상

□ 목 표

- ◎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동북아 평화시대를 열겠습니다.

□ 이행방법

- ◎ 한반도 비핵화와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유지
- ◎ 스마트 기술로 무장한 스마트 강군 육성
- ◎ 견고한 한미동맹 유지 및 자주국방 능력 강화
- ◎ 동맹·우호국과의 안보협력 강화
- ◎ 방위산업의 효율화 및 안보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 ◎ 군복무 개선 및 보훈책임의 강화
- ◎ 남·북한 대화 및 교류협력의 확대
- ◎ 한반도 주변 국가와 평화협력을 위한 대화채널 구축
- ◎ 한반도 전쟁 종식 및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

□ 이행기간

- ◎ 2024년부터 지속 이행

□ 재원조달방안 등

- ◎ 기존 예산 활용
- ◎ 일반 회계조정 등으로 마련
- ◎ 법률 및 제도 개선

정책순위

3

따뜻한 복지, 행복한 국민

정책분야 | 보건복지

□ 목 표

- ◎ 따뜻한 복지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이행방법

- ◎ 청년에게 무상 사회 정착 주택 제공
- ◎ 다문화청 / 빈민청 / 반려동물청 / 정신건강관리청 신설
- ◎ 국민 생존권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
- ◎ 더 큰 자유와 복지,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 ◎ 가족애(家族愛) 증진을 통한 가족사회안전망 강화
- ◎ 아이는 웃고, 청년은 희망차고, 중년은 당당하며, 노인은 걱정 없는 사회
- ◎ 지역·계층·세대·남녀 간의 갈등이 없는 사회
- ◎ 개방적인 이민정책과 다문화 사회 조성
- ◎ 자아실현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
- ◎ 100세 시대 맞춤형 정주안정을 통한 행복한 사회
- ◎ 이산가족의 슬픔을 공유하고 함께 치유하는 사회

□ 이행기간

- ◎ 2024년부터 지속 이행

□ 재원조달방안 등

- ◎ 기존 예산 활용
- ◎ 일반 회계조정 등으로 마련
- ◎ 법률 및 제도 개선

정책순위

4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

정책분야 | 보건복지

□ 목 표

-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이행방법

-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및 글로벌 협력 강화
-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기
-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위생관리와 유통환경 조성
- 쓰레기 및 유해폐기물 관리 체계 수립
-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시대 및 친환경 에너지·신기술 산업체제로 전환
- 재난·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및 생활안전통합시스템 구축
- 핵, 범죄, 전쟁의 공포로부터 안전한 사회
- 질병의 공포로부터 안전한 사회
- 일자리 상실의 공포로부터 안전한 사회

□ 이행기간

- 2024년부터 지속 이행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예산 활용
- 일반 회계조정 등으로 마련
- 법률 및 제도 개선

정책순위

5

공정과 정의, 희망의 나라

정책분야 | 정치

□ 목 표

-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 이행방법

- 통합불공정사정원 설립으로 적극적인 국민권익보호 실현
- 개헌을 통한 대통령 중심의 권력 체제 개혁
- 내·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
-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평등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
- 솔선수범하는 공직사회 건설과 이해충돌의 방지
- 신뢰와 믿음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축적
- 공정과 정의를 통한 한마음 통합사회 실현
- 공공 부문의 투명화 및 효율성 제고
- 공정하고 정의로운 노동환경 조성
- 공정하고 정의로운 부와 권력의 이동
-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허용되지 않는 사회 실현
- 정치적 특혜가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

□ 이행기간

- 2024년부터 지속 이행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예산 활용
- 회계조정 등으로 마련
- 법률 및 제도 개선

정책순위

6

성숙한 법치주의와 상식이 존중받는 나라

정책분야 | 사법윤리

□ 목 표

- ◎ 상식이 통하고 법치주의가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이행방법

- ◎ 법치에 앞서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 실현
- ◎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및 상생의 시대 추진
- ◎ 주민자치권 강화와 주민자치의 시대 추진
- ◎ 국가권력의 독립성 보장과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
- ◎ 국민의 요구와 시대에 부합하는 국회의 개혁
- ◎ 행정의 개혁으로 일 잘하는 정부 추진
- ◎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 ◎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선거제도의 개혁
- ◎ 지방분권과 지방정부의 효율성 도모
- ◎ 디지털시대와 국가 법률시스템의 개선

□ 이행기간

- ◎ 2024년부터 지속 이행

□ 재원조달방안 등

- ◎ 기존 예산 활용
- ◎ 일반 회계조정 등으로 마련
- ◎ 법률 및 제도 개선

정책순위

7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강국

정책분야 | 교육

□ 목 표

- ◎ 미래성장을 위해 지속가능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이행방법

- ◎ 무상 교육 확대 : 어린이집부터 대학까지 무상 의무 교육 실시
- ◎ 국가발전의 근본토대인 지속가능한 교육시스템 완성
- ◎ 사교육 혁파 및 공교육의 정상화
- ◎ 공평하고 투명한 대학입학제도 및 대학의 독립성 강화
- ◎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공동체 실현
- ◎ 과학인재 및 글로벌 인재 양성
- ◎ 직업교육 시스템 강화 구축
- ◎ 교육현장의 자율성 강화 및 수요자 중심 교육 강화
- ◎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육 혁신
- ◎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안전망을 통한 교육정의 실현
- ◎ 글로벌 교육 경쟁력 강화 및 세계적인 교육강국 부상

□ 이행기간

- ◎ 2024년부터 지속 이행

□ 재원조달방안 등

- ◎ 기존 예산 활용
- ◎ 일반 회계조정 등으로 마련
- ◎ 법률 및 제도 개선

정책순위

8

세계인의 문화를 창조하는 글로벌 문화강국

정책분야 | 문화관광

□ 목 표

- 국민이 사랑하고 세계인이 향유하는 글로벌 문화강국이 되겠습니다.

□ 이행방법

- 문화·체육·예술산업의 글로벌경쟁력 제고
- 창의적인 문화콘텐츠 육성 및 창작지원시스템 구축
- 국민생활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문화산업 육성
- 지속적인 문화산업 성장을 위한 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 문화 소비격차 해소 및 문화복지 확대
- 자생적인 문화·예술·체육의 생태환경 조성
- 문화·예술·체육인에 대한 지원 강화 및 복지 확대
- 문화예술체육단체의 자율성 보장 및 정부정책 참여 확대
- 남북 문화 교류 활성화 및 문화 동질성 회복
- 세계문화네트워크 구축 및 한류의 세계화

□ 이행기간

- 2024년부터 지속 이행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예산 활용
- 일반 회계조정 등으로 마련
- 법률 및 제도 개선

정책순위

9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국가

정책분야 | 통일외교통상

□ 목 표

- ◎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국가가 되겠습니다.

□ 이행방법

- ◎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 ◎ 개도국에 대한 지원 및 국제개발협력 강화
- ◎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인류문명 선도국으로 부상
- ◎ 비전통적 안보위기에 대한 선도적 대응 강화
- ◎ 국제개발협력과 국가전략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 ◎ 자유무역과 공정무역 확산
- ◎ 국제기구를 통한 선진 외교 활성화
- ◎ 공공외교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 ◎ 국제분쟁 및 평화에 대한 기여 확대
- ◎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과 한반도 통일시대 주도

□ 이행기간

- ◎ 2024년부터 지속 이행

□ 재원조달방안 등

- ◎ 기존 예산 활용
- ◎ 일반 회계조정 등으로 마련
- ◎ 법률 및 제도 개선

정책순위

10

통일한국을 위한 준비된 나라

정책분야 | 통일외교통상

□ 목 표

- 통일한국을 위해 준비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이행방법

- DMZ에 통일 수도 건설 : 통일한국 정부 청사 건립
- DMZ에 각종 국제기구 유지 : 국제평화도시 조성
- 10만 통일인 양성 사업 : 통일 전문 인력 양성 기관 설립
- 통일한국을 위한 통일로드맵 완성 및 실천
- 통일한국을 대비한 법제도의 구축
- 통일한국을 위한 통일재원 확보
- 북한의 개혁개방 지원 및 북한주민과의 신뢰 개선
- 통일운동의 확산과 국론 대통합
- 한민족의 통일역량 강화와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 탈이념 선언 및 중도실용의 정치 실천
- 남북한회담 정례화 및 남북한 신뢰 구축
- 아시아공동체 추진을 통한 통일한국 완성
- 통일한국을 위한 국제사회 공감대 확산

□ 이행기간

- 2024년부터 지속 이행

□ 자원조달방안 등

- 기존 예산 활용
- 일반 회계조정 등으로 마련
- 법률 및 제도 개선



한국농어민당

No.	정 책
1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지키겠습니다.
2	기후위기시대 식량주권을 지키겠습니다
3	수입 농축수산물로부터 농어업을 지키겠습니다.
4	농어업재해, 농어업산업재해 걱정없는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5	농어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키겠습니다.
6	농산어촌을 쾌적한 국민쉼터로 만들겠습니다.
7	청년농어민이 살 수 있는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8	국민 밥상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9	성평등한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10	농어민의 정치적대표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정책순위

1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지키겠습니다.

정책분야 | 농림해양수산

□ 목 표

- 농어민부터 기본소득 월 30만원 지원,
- 필수 농축수산물의 최저가격보장,
- 수입보장보험 전면 도입
- 계약재배 확대로 가격 및 농업소득 안정

□ 이행방법

- 공익형직불제 전면개편 및 농어업 보조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농어민이 기후 및 자연 재난, 농수산물 가격 등락으로 삶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본소득을 지원.
- 공익형직불제의 총액을 농업예산대비 30%이상으로 고정하고 공익형직불제중 소농직불제를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전환하여 경영체 중심이 아닌 생산에 참여하는 모든 농어업인에게 직접 지원을 하도록 하고, 면적직불제의 비율을 줄여나가 형평성을 높여냄.
- 면적중심 직불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모든 농축수산물에 대해 수입보장보험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소득손실에 따른 경영악화를 보험을 통해 구제하도록 함.
- 쌀, 콩, 밀, 고추, 마늘, 양파등 필수농축산물 15개에 대해 매년 생산비를 조사하고 시장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도록 함.
- 시장가격이 생산비를 반영한 기준가격이하로 하락시 하락분의 80%를 정부예산에서 지원함으로써 농산물가격하락에 따른 농가경영 위기를 방지하기 위함.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제도 개선과 함께 재정사업등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감.

□ 자원조달방안 등

- 농업예산 중 30% 이상을 직접지불로 지원하도록 의무화
- 무역이득공유제등을 통한 자원 확보

정책순위

2

기후위기시대 식량주권을 지키겠습니다

정책분야 | 농림해양수산

□ 목 표

- 국가 식량자급률 60% 유지(곡물자급률 30% 이상), 국가식량주권위원회 신설
- 농업진흥지역 90%로 확대. 안정적인 자급기반 유지
- 친환경 농어업 30% 육성, 탄소중립 실현

□ 이행방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식량자급률목표치 및 실행계획 제출 의무화와 법제화, 국회동의제 강화. 대통령 직속 국가식량주권위원회 신설, 식량생산 및 유통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이행점검
-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전용 및 난개발을 억제하고 현 48%에 불과한 농업진흥지역을 식량자급률 목표치와 연동하여 90%확대하여 더 이상 농지가 전용되거나 줄어들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을 법으로 명시.
- 기술발달등으로 생산성이 증가한 반면 생산비가 올라가고 환경부하가 심각해지고 있어 기후 위기에 역행하는 농산업 체계를 생태적으로 전환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수 있는 기반 확대 현행 5%수준인 친환경농업을 30%까지 확대
- 농업-사회-생태계 간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유통소비체계를 구축하여 식량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체계 구축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제도 개선과 함께 재정사업등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감.

□ 재원조달방안 등

- 농산물 수급, 유통관련 예산을 확대 재편성하여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재원으로 재 투입
- 친환경농업육성은 탄소배출권과 연계하여 생산단계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등과 연계 필요.

정책순위

3

수입 농축수산물로부터 농어업을 지키겠습니다.

정책분야 | 농림해양수산, 통일외교통상

□ 목 표

- FTA 무역이득 환수 농어업지원 제도화(무역이득공유제 신설)
- 저율관세할당(TRQ) 농축수산물 수입, 농어민 동의제 도입

□ 이행방법

- WTO, FTA추진과정에서 논의가 되었던 무역이득공유제를 위해 '상생협력기금'제도를 폐지하고 FTA등에 따른 관세인하로 수출입되는 상품에 대해 별도의 목적세(농특세)를 신설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확대, FTA피해보전 직불제의 확대 시행등을 진행함.
- 물가안정을 이유로 수입되는 저율관세할당(TRQ) 농축수산물에 대해 수입단계부터 유통과정까지 품목별 농어민의 참여와 동의제를 신설하여 국내 농축산물 가격변동에 따른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제도 개선과 함께 재정사업등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감.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경직성경비 제외한 재량지출의 10%인 18조원 수준), 2023년-2027년 국가제정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 증가분등으로 충당
- 무역이득공유 농특세를 신설하여 기본 재원으로 활용

정책순위

4

농어업재해, 농어업산업재해 걱정없는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정책분야 | 농림해양수산

□ 목 표

- 농어업재해보상법 제정, 자연재해에 따른 농어업 소득손실 최소화
- 농어민에게도 산업재해보상 도입하여 건강한 일터 보장

□ 이행방법

- 매년 2~3회씩 발생하는 농어업재해에 대해 기존의 복구비 중심의 재해대책에서 실질적인 소득보상을 전제로 영농기반을 복구하고 생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소득손실 기준 80%까지 보상할 수 있는 법적 체계 구축
- 농업재해보험의 경우 대상품목의 확대 및 가입기준 완화등으로 가입대상 및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료 할증 미부과 등 제도개선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
- 장시간 반복되는 노동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농기계의 대형화에 따른 안전사고 확대등으로 1년에 270여명정도 농작업재해로 사망하고 부상에 따른 노동력 상실등으로 소득이 하락하고 있으나 농작업상해보험으로는 소득손실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농작업산업재해보상보험을 도입, 산재전문병원에 농작업 질환센터 구축등 필요.
-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특수검진을 모든 농어민으로 확대하고 '농업안전보건 센터'를 광역권역별 센터에서 시군의료원까지 확대 설치.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제도 개선과 함께 재정사업등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감.

□ 자원조달방안 등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경직성경비 제외한 재량지출의 10%인 18조원 수준), 2023년 -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 증가분등으로 충당

정책순위

5

농어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키겠습니다.

정책분야 | 농림해양수산, 보건복지, 교육

□ 목 표

-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 1시군 1의료 순환버스 배치
- 농어촌 버스와 섬주민 여객선 완전 공영화(무료화)로 이동권 보장
- 0~18세 청소년까지 무상의료, 무상교육 의무화
- 시군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마을공동주거시설 확대

□ 이행방법

- 읍면단위 권역별 거점 보건소 운영, 공공의료 인력 육성 및 배치, 마을 주치의 제도 도입하고 시군별로 의료순환버스를 마련하여 마을 순환진료 확대.
- 지역 공공의대 설립으로 공공의료인력의 안정적 확충과 병행 추진
-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의 규모를 확대하여 단계적으로 공영화로 전환,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천원버스등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무료화 견인, 농어촌지역 교통 약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확대
- '요람에서 대학까지' 지역에서 책임지는 교육의료정책을 도입, 영유아 청소년 병원비 상한제 시행, 교육경비 국가사무로 이관하여 직접지원확대, 국가장학금제도를 확대하여 농산어촌에서 실거주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후 대학진학한 학생에게는 등록금 지원.
- 농촌 서비스 취약 30개 읍면 거점 생활복합센터 확충, 공공임대주택, 혁신학교, 마을주치의, 사회적농업, 농촌유학등이 결합된 돌봄체계 구축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제도 개선과 함께 재정사업등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감.

□ 자원조달방안 등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경직성경비 제외한 재량지출의 10%인 18조원 수준), 2023년 -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 증가분등으로 충당

정책순위

6

농산어촌을 쾌적한 국민쉼터로 만들겠습니다.

정책분야 | 농림해양수산, 환경, 문화관광, 산업자원

□ 목 표

- 산업 및 의료폐기물 발생지 책임원칙으로 농어촌 집중화 방지
- 송전탑, 골프장, 대규모 축사등 난개발 금지, 농산어촌 공간 재생 활성화
- 농산어촌을 기반으로 하는 치유산업 육성
- 신재생에너지 개발 시 주민 지분 참여 50% 의무화, 에너지연금제 도입

□ 이행방법

-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주민지분 참여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이익을 연금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법 개정.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 및 확대를 위해 농림어업부산물 활용 바이오매스 발전소등 에너지원 다각화를 통한 농어촌 난방문제 해결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난개발을 막고 경관보전을 통한 농산어촌의 다원적·공익적기능을 발전시켜 낼 수 있도록 함.
- 농산어촌을 기반으로 휴식이 필요한 국민에게 치유농장, 마을, 치유지구를 제공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등 사회보험과 연계한 서비스 제공 확대. 산림-농업-해양 치유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그린케어' 지원센터를 통해 국민쉼터로 육성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제도 개선과 함께 재정사업등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감.

□ 자원조달방안 등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경직성경비 제외한 재량지출의 10%인 18조원 수준), 2023년 -2027년 국가제정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 증가분등으로 충당

정책순위

7

청년농어민이 살 수 있는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정책분야 | 농림해양수산, 보건복지, 건설교통

□ 목 표

- 농지은행 공공비축 농지, 청년에게 10년 무상임대 및 후매도 정책확대
- 1면 1 농어촌보급자리 주택단지 조성, 무상임대 확대
- 청년자립활동 및 일자리연계 공공커뮤니센터 건립

□ 이행방법

- 안정적인 영농(어) 정착을 위해 취창업 청년농 지원사업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운영, 안정적인 기초소득지원
- 부재지주 및 상속농지등을 농어촌공사로 위탁을 의무화하고 청년농민에게 우선 임대지원, 최장 10년간 임대료를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사후 매도하여 안정적 기반마련 지원.
- 청년농어민이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여 생활할수 있도록 읍면, 마을단위에 농어촌보급자리 주택단지를 조성. 무상임대하고 출산율과 연동하여 장기무상 임대지원.
- 청년 인재(지역청년, 도시청년) 지역 활동 조직 구성 및 운영 지원 : 최소 3년간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와 연관된 지역살리기, 주민의 생활지원, 기타 공적인 역할 등을 수행(자신의 삶의 터전으로서 가능성 모색+재능을 활용한 지역의 변화 경험)
- 3년 후 지역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청년생활 서비스 패키지 및 자립 활동 지원
 - 청년생활 서비스 패키지 지원 : 주거, 일자리,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및 행복택시, 청년 공간 등
 - 청년 자립활동 지원 : 포래집단 형성을 통한 지역 내 관계 맺기(지역 정착 청년+신규 유입 청년 등), 청년문화 활동 보장 지원 등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제도 개선과 함께 재정사업등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감.

▣ **재원조달방안 등**

-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경직성경비 제외한 재량지출의 10%인 18조원 수준), 2023년-2027년 국가제정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 증가분등으로 충당

정책순위

8

국민 밥상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정책분야 | 농림해양수산, 보건복지, 안전, 교육

□ 목 표

- 국가 및 지방정부의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이행 의무화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설치(국민먹거리기본법제정)
- 전 국민 생애주기별 먹거리 돌봄 보장
- GMO 수입통관 강화· 완전표시제 도입
- 수산물이력제 도입, 국내외 수산물 안전검증 강화

□ 이행방법

- 먹거리 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가먹거리종합전략 수립과 국가먹거리위원회 설치, 정책과 예산을 통합 추진하는 제도·정책·대책등을 총괄
-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 식량자급률 제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구조 마련
-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 생애 전주기 먹거리 보장체계 마련
- 학교급식과 함께 유치원, 어린이집, 대학생, 군인, 신혼부부, 임산부, 노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
- GMO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과 GM사료를 먹은 축산물까지 완전표시제 대상 확대
- 유·초·중·고 학교급식과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급식을 국가 사무로 전환
- 도농상생공공급식지원법률 제정 : 도시와 농촌 지자체 간 도농상생 공공급식 연계 협력을 지원
- 일본산 수산물가공품에 대한 수입금지 및 국내외 수산물 허용물질검사 강화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제도 개선과 함께 재정사업등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감.

▣ 자원조달방안 등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경직성경비 제외한 재량지출의 10%인 18조원 수준), 2023년-2027년 국가제정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 증가분등으 로 충당

정책순위

9

성평등한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정책분야 | 농림해양수산, 보건복지, 노동, 여성

□ 목 표

- 여성농어민 육성법 개정, 농어업경영체등록 시 공동경영주 권리 확대
- 여성농민 돌봄노동의 사회화와 노동가치 보장을 위한 제도마련
- 이주농어업노동자의 고용허가제 완화등 기본권 지원

□ 이행방법

- 여성농어민의 법적지위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전담부서와 인력배치등을 법률로 명시
- 농촌형 성평등 교육의 확대 및 강화를 통해 성평등한 문화 정착을 촉진하고 여성친화형 마을, 여성친화형 농기계등 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및 기술개발
- 여성농어민의 노동가치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제도 확대하고 여성농어민 질병의 공공의료 질 및 접근성 개선으로 건강권 보장
- 이주농어업 노동자의 노동권 및 건강과, 행복추구권등을 보장하기 위해 시군별 이주민상담센터를 개설하여 법률, 복지, 문화적 지원을 확대하여 차별과 인권유린 근절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제도 개선과 함께 재정사업등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경직성경비 제외한 재량지출의 10%인 18조원 수준), 2023년-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 증가분등으로 충당

정책순위

10

농어민의 정치적대표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정책분야 | 정치, 행정자치

□ 목 표

- 인구+면적 기준 국회의원선거구 개편으로(농어촌특례지역구) 지역균형발전 촉진
- 비례국회의원 정수 확대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 농어업회의소법 재정. 민관협치, 자치 농·어업 정책 확대

□ 이행방법

- 헌법 및 국회의원 선출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공직선거법개정)하여 농어민의 정치적 대표성이 보장되고 지역균형발전을 추동할수 있는 정치개혁을 추진
- 현행 인구비례 선거구 획정기준을 인구+면적 연동형 선거구 획정으로 개정하여 농산어촌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할수 있도록 함.
- 현행 비례대표제를 수정하여 권역별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소수계층의 국회진출을 뒷받침하여 정치적 다원성을 높여내도록 함.
- 20여년째 입법논의가 반복되고 10여년째 시범사업에 머무르고 있는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조기에 입법하여 농어민들의 농정참여를 제도화하고 민관거버넌스를 촉진하여 지방자치농정을 강화하도록 함.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제도 개선과 함께 재정사업등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감.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경직성경비 제외한 재량지출의 10%인 18조원 수준), 2023년 -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 증가분등으로 충당



한류연합당

No.	정 책
1	국가 대변혁
2	미래를 선도하는 한류
3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
4	국가진단위원회 구성
5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6	튼튼한 안보, 실리외교
7	요람에서 무덤까지, 희망을 주는 사회정책
8	예방 시스템 구축
9	새로운 100년,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는 세계시민 양성
10	함께 사는 지구, 환경

정책순위

1

국가 대변혁

정책분야 | 행정자치, 재정경제, 농림해양수산

현재의 행정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전국의 각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1) 현재 행정구역

대한민국의 행정 체계는 특별시, 도, 광역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 군, 구 등으로 되어 있다. 정부 수립 후 일부 개편이 있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형태를 유지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문제 중 수도권 집중 현상은 주택·교통·교육·환경 문제를 비롯한 여타의 문제를 유발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전국의 시, 군의 규모가 서로 달라 지방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2) 행정 체계 개편

전국의 행정 체계를 대략 인구 150만~200만 규모로 나누어 전국의 시, 군을 재구성한다.

각 행정 단위는 단순히 인구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시가 지역 경제발전을 통하여 경쟁력을 갖출 여건을 가지게 구성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형태의 특구를 선정하여 수출입을 위한 세제 혜택이나 다른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여,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3) 각 도시 구성 (자생, 자족하는 거점 경제도시)

새롭게 구성된 도시가 자생적 자립 성장을 하게 되면, 각 지역이 고르게 발전할 것이고 방만하게 운영되었던 불필요한 행정력을 없앨 수 있다.

식량안보 확보방안으로 농·축·수산업의 재정비 및 도약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제조업, 서비스업 등이 균형적으로 자리 잡게 한다.

도시가 활성화되고 인구 규모가 적절하게 구성되면, 의료·문화·교육시설등이 자리 잡게 되고 각 도시는 자생력을 갖게 될 것이다. 현재의 도시는 저출산 현상으로 인구가 경감, 고령화되어 생산 기능으로서 역할에 어려움이 많고, 대도시에서는 청년층이 스타트업을 시도하려 하여도 장벽이 너무 많아 중도 포기하거나 국내가 아닌 해외로 나가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청년층이 지방으로 귀환하여 농·축·수산업 분야에서 생산기술의 현대화를 시도할 때에는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진행 과정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에는, 과감한 혜택을 보장해주어 안전하고 안정적인 먹거리 마련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한다.

각 지방 정부는 생산자와 연계하여 지역특산물의 판매 및 수출을 담당해주는 역할을 맡고, 연구소를 설립하여 미래지향적인 생산방안 연구를 지원하며, 지역학교에서는 산학협동조합을 꾸려 민·관·학이 함께하는 경제 공동체를 마련한다.

제조업 분야에서 리쇼어링이 될 경우, 도시가 생산 기능을 갖게 되어 지역 경제성장에 활력을 줄 것이다. 이 경우에는 복귀비용을 최소화하고 정책적·기술적 지원 방향을 정하여 과감한 세제 혜택과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또한 자금을 지원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도 함께해서 제조업 선진화를 구축한다. 제조업의 성장으로 서비스업 등 지역의 경제가 순기능을 하게 되면 취업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며 행정 체계를 개편하게 되면 경기 부양책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 결과로 출산과 보육, 교육에 희망을 갖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이며 이는 곧 인구 증가의 효과를 가져와 미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경제성·경쟁력이 갖추어진 도시에는 인구가 적정선을 유지할 것이며, 부수적으로 교육 환경, 의료 환경, 문화 체육 환경 등이 마련될 것이고, 이는 인구 증가와 대도시 인구의 분산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2

미래를 선도하는 한류

정책분야 | 통일외교통상, 건설교통, 문화관광

- 한반도 프로젝트를 실현하여 세계문화예술도시를 건립하고 궁극적으로 UN 유치
- 문화외교를 통한 한류의 세계화(주한외국대사관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사업)
- K-컬처와 디지털 인프라를 활성화하여 세계의 문화를 선도
- 경제·의료 등 여러 분야로의 한류 확대를 이루어 경제효과 극대화하도록 지원
-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 및 전통문화 계승 및 현대화·세계화 지속
- 문화 시설 건립하여, 문화를 통하여 건강한 일상 즐기기

‘한류’는 대한민국의 다른 이름이 되어 가는 중이다.

예술의 멋을 알고 해학으로 삶을 꾸려온 선조들의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한강의 기적’이라는 압축 고도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세계로 인정받아 국가 위상은 높아졌으며, 이것은 ‘대한민국’이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 그런데 경제성장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서는 여타의 부분은 다음으로 미루거나, 불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사회의 여러 부문에 갈등의 요소를 내재시켜왔다.

미래 사회의 동력인 다양성·창의성은 사회가 유연할 때 자유롭게 발현될 수 있으며, 다음을 위한 도약의 토대가 될 것이다. 산업화를 이뤄낸 우리의 동력을 이제는 정서적인 부분으로 확대하여 다양성과 창의성을 키워내는 사회가 되어야 하며, 이런 과정에서 응축된 힘은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문화강국 대한민국이 경제강국·외교강국·정치강국·의료강국으로 확산되어 진정한 한류를 이룰 것이며, 이런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국가브랜드로서 자리를 잡아 세계 중심국으로 우뚝 서게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정책순위

3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

정책분야 | 정치, 행정자치, 사법윤리

- 법률 개정위원회 구성
(현실에 부합하는 법안 마련을 위해 일반 국민, 학계도 함께 참여하는 개정위원회 구성)
-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의원 수 조정, 국회의원에 주어질 특권 및 국회의원 선출 방안 재고,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고 의무화
- 부패한 정치인, 공무원은 공직 불허하는 엄격한 윤리 기준 마련, 권력형 비리 공소시효 없앰
- 지방자치제 개편, 지방선거 재고
- 국가 대변혁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
- 진정한 선진국을 위한 정치체제 구축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아 행해지는 활동으로, 정치인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권위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정치인은 정치권력을 행사할 때 국가와 국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부와 명예, 권력욕을 위할 때가 많았고, 또한 국민 위에 군림하는 봉건적인 모습도 많이 보였다. 국가와 국민을 향한 봉사자세를 갖추지 않고, 개인의 영달을 좇는 세력에게는 공직을 불허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재직하는 공직자가 기본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시에는 영구 제명하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며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이 시기에 필요한 공직자, 정치인은 혁신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의식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소신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이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시민의식, 정치의식 등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도입하고 적용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못하여 책임과 의무를 기본으로 하는 정치보다는 권위와 권력으로서의 정치가 자리 잡혀, 정치인들은 정권 유지·창출을 최우선으로 하고 반칙을 상식처럼 통용하여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되었다.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 정치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이다. 바른 정치인을 선출하고 바른 공직자를 임명하여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경제성장과 궤를 맞추는 정치체제를 갖추어서 미래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

4

국가진단위원회 구성

정책분야 | 사법윤리

오늘을 토대로 과거를 진단하여 미래를 준비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의 성과와 과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미래 사회를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국가진단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국가진단위원회는 정치적인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기구로 운영되어야 하며, 지난 70여 년 성장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모든 조직의 실상을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조직 개편을 목적으로 한다.

조직과 운영시스템을 개편해야 업무에 임하는 사람들의 생각, 태도,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과거의 폐단이 고스란히 있는 상태에서는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업무가 도출될 수 없기에,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를 진단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국가진단위원회는 '바로서는' 대한민국을 위해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합의와 결단을 거쳐 바른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며, 이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정책순위

5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정책분야 | 행정자치, 재정경제, 보건복지, 농림해양수산

-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인구 분산 효과, 주택 문제 해결(지방 거점 경제 도시)
- 중산층과 서민층,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안정 정책
- 수도권외의 주택 공개념 도입으로 주택 문제 해결
- 제조업의 국내 복귀 지원 및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 농축수산업 활성화를 통한 식량 안보
- 조세정책 제고
- 주식시장 활성화
- 재취업이 가능한 직업교육시스템, 사회안전망 확충
- 자영업 준비를 위한 경제 교육 시스템 마련
- 청년 일자리, 스타트업을 위한 경제 교육 마련
- 제조업 혁신과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경제발전 지원

제2의 도약이 필요한 대한민국이다.

현재 중산층·서민층의 몰락 현상은 사회 불안 요소가 되었고, 부의 편재 현상은 빈곤감과 박탈감으로 이어져, 희망적인 삶을 꾸려가기에는 어려운 현실이 되어버렸다. 중산층을 활성화하고 서민층을 안정화하며 저소득층을 줄여서 함께 잘사는 공정한 경제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경제성장과 발전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시기를 지나, 우리는 궤도에 올랐다. 우리 민족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이룬 성과이지만, '나만 잘되면 된다'는 식의 이기주의의 팽배로 경제적인 불평등은 날로 심화되고, 사회적인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의 성장 발전이 개인의 성장 발전으로 이어지며, 개인의 성장발전은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과 궤를 같이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경제성장에는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주거 안정 정책이 최우선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재산 증식의 수단, 투기의 대상으로서의 주

택이 아니라 생활 터전의 개념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됨과 동시에 서민층, 1인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부동산 정책의 시험장처럼 되어버린 지난 몇 년은 오히려 서민의 삶을 힘들게 하였고 사회 불안 요소가 되어버렸다.

국가 대변혁을 통한 인구의 분산과 주거 안정화 정책을 실현하고, 한편으로는 정부, 지자체가 공공의 토지를 마련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이 임대주택은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는 장치를 마련하여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 하게 한다.

기업 분야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실패가 또 다른 도전을 위한 경험이 되도록 경제적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고,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창업교육을 통해 스타트업을 위한 재기의 장을 마련해 준다. 제도적으로는 법률개정위원회를 통해 현실에 맞지 않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구시대적인 법률을 신속히 개정하여 해외로 나간 제조업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게 하고, 국내에서는 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기후 위기, 탈세계화의 현상 등으로 발생할 식량의 문제를 대비하여 농축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각 지자체와 지역학교는 생산자와 협업하여 생산과 수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준비를 하여 현재의 실업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이후 도래할 일자리 규모와 운영 등 다방면으로 연구하여 사회경제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

정책순위

6

튼튼한 안보, 실리외교

정책분야 | 국방, 안전, 통일외교통상

- 지정학적 가치를 이용한 실리외교, 동양과 서양의 중심에서 핫 포인트 외교
- 한반도 프로젝트 실현으로 세계의 중심 역할
- 공공문화 외교를 통한 외교 지평 넓히기
(국제적인 공공문화 외교 행사 개최)
- 한미동맹 체제를 기반으로 튼튼한 안보 구축 및 경제적 동반 파트너 역할

대한민국의 분단은 냉전체제의 결과물로서, 우리가 자발적·자립적 성장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고, 분단으로 인한 사회적·정치적인 이슈들은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여 자유로운 성장에 어려움이 많았다. 현재의 냉전체제 속에서 우리는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실리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입지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를 지켜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주체적 외교와 실리적 외교 사이의 간극을 잘 파악하여 유능하고 실질적인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외교 전술을 펼쳐야 한다. 우리의 지정학적인 가치를 잘 이용하고 국제질서의 흐름에 함께하며 실질적인 이익을 획득하는 외교력을 발휘하며, 군사적 안보 역량이 경제·외교 역량과 직결함을 알아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확보해야 한다.

정책순위

7

요람에서 무덤까지, 희망을 주는 사회정책

정책분야 | 보건복지, 여성

- 저소득층 해소, 중산층 활성화, 서민층 안정화
- 자살 없는 나라(자살률 낮추기)
- 세대 간의 서로 다른 가치관 이해하기
- 결혼·출산·보육의 공공성 확대, 경력 단절 여성 취업 기회 확대 의무화
- 1인 가구의 안정된 삶
- 체계적인 돌봄 공동체
 - 영유아 보호 정책
 - 보호받는 아동, 교육 복지 정책
 - 노후가 보장되는 삶(국가적 차원의 요양 시설 운영)
- 공공 의료의 확대
- 장애가 불편하지 않은 삶

앞만 보고 질주한 ‘한강의 기적’은 획기적인 국가 경제성장을 이루어 내어, 현재 GDP 10위(2021년 기준)에 이르러 국가는 부강해지고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제 21세기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는 우리는 성장의 긴 과정에서 도외시 되었던 사회적인 여러 측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차례이다.

경제성장과 마찬가지로 시민의식, 시민의 의무, 정치의식, 정치인의 의무 등 시민이 갖추어야 할 부분도 단기간에 이루어져 미성숙한 부분도 많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적인 상황으로 발생한 세대 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갈등 요소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피해의식에 의한 보상심리가 작용하여 ‘나와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공동체 의식과 나눔의 철학이 부재한 상태에서 초기득권 세력과 저소득층 간의 경제적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어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다.

경제적 불안정은 남녀 간의 갈등으로 확산되기도 하고, 사회 공동체 의식의 결여는 결혼과 출산과 보육을 회피하는 선택을 하게끔 하였고, 유연하지 않은 사회의식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도 만들기도 한다.

성장과 복지는 시소처럼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 기본적인 복지 정책이 개인의 생활에 무기력함을 주어서는 안 되지만, 개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상태가 지속되면 오히려 사회적 비용 지출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고 진취적인 삶을 준비하도록 교육과 재교육의 장을 마련하면서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촘촘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순위

8

예방 시스템 구축

정책분야 | 안전, 보건복지

재난과 재해, 질병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마련하다.

- 일상을 안전하게, 폭력(가정, 성, 학교, 직장)으로부터 안전한 삶
 - 소통 창구, 공간을 마련하여 공동체 의식 되살리기
- 팬데믹을 대비하는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
- 디지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
-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사회 대비한 의료 시스템 구축
-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 재난 대응 및 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체계적인 복구 시스템

재난과 재해, 질병과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일상이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일회성 정책을 마련하고 보상책 논의 중에 여론이 잦아들면 해결책이 미뤄지는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재난과 재해, 질병과 범죄에 관한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서 안전한 일상이 될 수 있게해야 한다.

모든 사고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관리와 예방을 함께 관리하는 예방 체계를 갖추고, 정기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마련해야 한다. 각 분야의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예방과 조직을 재정비하고 위기를 대비하는 중앙의 Control Tower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책순위

9

새로운 100년,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는 세계시민 양성

정책분야 | 교육, 보건복지

- 인성교육 강화
- 대학교육 무상화 추진
인문적인 소양을 갖춘 세계시민 양성)
- 인구감소로 인한 대학교 특화 정책
- 시민교육으로서의 보편적인 교육과 인재 양성을 위한 특별교육 병행
- 100세 인생을 준비하는 교육 (인생의 후반을 준비하는 교육)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과 대학의 산학협동 체계 확산

급속한 산업화 과정은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교육을 우선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점수화되지 않는 인성교육은 도외시되는 측면이 많았고, 교육은 좋은 대학교 진학, 좋은 직장 취직, 좋은 집 장만 등의 수단으로 이해되었으며, 인성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의식 및 다양성 함양은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저절로 갖춰지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산업 경쟁력에서 중요치 않은 요소로 여겨졌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재는 융합과 상호 소통, 공감 등의 사회적인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미래를 위한 준비는 인성교육 강화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인재양성을 위한 수월성 교육이 한편에서 진행되고, 또 한편에서는 평범한 사회의 일원을 위한 보편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교육의 목표는 대학 진학이 아니라, 다양한 삶을 위한 소양 교육, 세계시민 교육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광범위한 교육을 준비해야 한다. 인생의 후반인 60대 이후의 삶은 단순히 의식주 및 의료지원을 위한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다. 인생 제2막을 즐겁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여가생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교육하여 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한다.

정책순위

10

함께 사는 지구, 환경

정책분야 | 환경

- 환경을 고려하는 경제성장 정책
-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녹색화 정책
-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호 정책 및 입법
- 범지구적 기후 위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주력

선조들이 일구어온 역사의 땅, 현재 우리의 기틀이자 후손들의 터전이 될 이 땅과 지구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한 사회, 지속 가능한 지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환경'이 아니라 성장의 결론에 환경이 있음을 인지하고, 환경 문제 해결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한반도미래당

No.	정 책
1	국가명제 3대원칙 세부강령
2	유엔세계재활은행(UNWRB) 세계금융시스템도입
3	국가무상복지 전환시대 구현
4	국민과 소통하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 TOP 10 정치 구현
5	세계위성통신경제혁명
6	배타적경제수역 200해리 확보
7	UNWRO유엔우주화성정착이주 스토리텔링단지
8	세계문화국가건설 실현
9	1백만청년일자리고용창출
10	서해안(전라도권역통합)시대개막

정책순위

1

국가명제 3대원칙 세부강령

정책분야 | 정치

자의 [민족사상의 대 결집]에 관하여 :

첫째,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평등이 보장되는 신뢰 사회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신 사회를 재창출함으로써 지역 간·계층 간·집단 간 모든 갈등과 이해를 조화 극복하고, 둘째, 하나가 되는 국민은 자아자존으로부터, 하나가 되는 사회는 자아민서로부터, 하나가 되는 국가는 자아민족으로부터 성립되며, 셋째, 국민의식이 개혁될 수 있을 때, 민족의 동질성 함양을 통한 주체성 회복과 국가경영체제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하고, 나아가 남북한 간의 대화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제언한다.

율의 [국가경제부흥]에 관하여 :

첫째, 국가경제개혁은 「국방경제」의 골간인 군산복합체+재활과학+국제금융 산업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고 경제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으며, 부국강병의 근본적 골간인 새로운 군사·경제적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산업구조 개선은 첨단화되고 기술집약적이면서도 군과 민이 결합된 고도의 부가가치 산업인 군산복합 산업 구조체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군산복합 산업구조체제의 전환을 통해 남북한을 비롯한 동북아 주변국들과의 군축제의를 실현할 수 있으며, 군의 현대화와 소수정예화를 달성할 수 있는 한편 향후 통일한국의 제반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둘째, 「복지경제」의 주체인 재활과학(장애인을 위한 항공우주 및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 분야를 일컬음)을 국가SOC산업으로 발전 지향한다. 즉 재활과학산업을 통해 축적된 재활과학 기술을 재활산업(RT)과 4T<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환경 및 극 미세기술(NT)> 등과 연계하여 국가기반산업인 실리콘밸리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고부가가치의 국가경쟁력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

유엔세계재활기구(UNWRO)의 세계재활과학(WRS) 세계정책 과제 중에 우주공간위성계획 일환인 세계장애인의 “우주주거환경개발”을 위한, 우주화성정착이주스토리텔링단지 조성을 “한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유치에 대한 협력요청을 구현함으로써, 한국,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사천시가 세계최초의 우주인류도시로 번영되기를 기대한다.

세계 각국의 소외된 계층과 인류의 지구재난 및 세계 재난기금으로 사용될 5세대/5GHz 인류혁명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해양우주공간 5GHz/130dBm 주파수대역의 복합변조로드인 위성통신 무선복합통신체계인 세계위성모바일폰(일명: SEAgod Mobile Phone)시대 개막에 따른, 한국형, 청년창업사회환원성투자순환기금 위드드림뱅크시스템(withDream Bank System)을 설립하여, 고급두뇌 IT 10만 일자리 창출이 시작되어야 불투명한 한국 미래에 새로운 시대를 기약할 수 있다.

셋째, 국가적 통일구도는 국방경제의 기초인 통일비용 및 이와 관련된 제반 군축산업 인프라경제의 다원적 차원에서부터 해결 방안이 모색 되어져야 한다. 통일비용 창출의 펀드조성은 유엔세계재활기구 산하 세계시장경제가상공간플랫폼연맹 (WFMVP_World Federation of the Market economy in Virtual space Platform)을 한국, 용산(한강지역)유치를 통해, 전액 “세계공동기금”으로 대처해야 한다.

心은 [세계정부 실현]에 관하여 :

첫째,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초가 다져지는 가교역할로써, 인류의 세계평화와 세계인권의 뿌리인 인간존엄성을 위하여, [세계장애인인권헌장선언]을 기초한 유엔세계재활기구 (UNWRO_United Nations World Rehabilitation Organization)를 DMZ 및 서울에 유치, 명실상부한 세계 인권국가의 초석마련과 국가적 위상제고는 물론이고, 세계경제중심 국가로 도약의 계기가 정립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드높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둘째, 한반도와 아시아 태평양의 미래를 위하여, UNWRO CITY [DMZ_세계평화&세계경제특구]의 DMZ 동북아중심물류지대를 활성화 및 유엔 및 유엔세계재활기구와 연계된 세계 금융 특수지구(세계금융지하경제_세계금융스위스포럼 : UNGFFS Policy & Schedule.)의 유엔세계재활기구 산하 세계재활은행(WRB)유치하여, 국제금융권을 제도적으로 국내금융권에 편입시킴으로써, 오늘날의 국내금융 산업구조의 제도적 한계로 인해 국제금융경쟁력 상실을 보완함은 물론이고, 공적자금 손실부분과 부실한 국내외채무상환에 대한 원활한 국가재정을 마련한다.

셋째, 인간생활의 기본생존권인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상호협력증진에 힘쓰며,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외교역량의 결집을 통해 한반도 주변 환경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생태적 보존과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적인 사회상을 지향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를 구축함으로써 환태평양시대의 개막을 예지함에 있다.

정책순위

2

유엔세계재활은행(UNWRB) 세계금융시스템도입

정책분야 | 재정경제

세계경제이론_세계실용자본주의 (or 세계경제통합자본주의) 구현

유엔세계재활기구(UNWRO)_세계금융스위스포럼(ungffs)

세계재활은행(WRB)설립: 9개분야/77세션/307개 프로젝트 중점과제 실현을 통한 세계금융시스템 구축.

(SPECIALIZED) 설정 및 구현

지하경제_유엔세계재활은행(UNWRB) 세계금융시스템도입

유엔세계재활기구(UNWRO)_세계금융스위스포럼(ungffs). 세계재활은행(WRB) 설립 :

9개분야 / 77세션 / 307개 프로젝트 중점과제 (SPECIALIZED)설정 및 구현

세계경제특구지정

지구환경보존과 유엔세계재활기구 한국유치를 통한 세계중심 한반도, 세계금융 및 한반도평화 통일 구축.

유엔세계재활기구(UNWRO)_2015 평화통일대회에서 발표한, [한반도미래, DMZ 세계평화 프로젝트]의 한반도전쟁종식을 위한 세계평화와 세계인권의 교두보인 유엔세계재활기구(UNWRO) 총괄본부를 한국수자원공사 소유 100%매립지 한국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2천5백만평규모에 유치하여, 유엔특구라고 정의되도록 유엔세계재활기구 한국유치위원회 공식출범추진. 특히 이를 골간으로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환태평양시대의 개막으로부터, [UNWRO 한반도통일경제지도] 및 유엔과 연계된 세계금융특수지구로 편성하여 동북아중심물류시대의 개막으로부터, 세계인권 국가의 초석마련과 국가적 위상제고는 물론이고 세계경제중심국가로 도약의 계기가 정립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드높여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전제된 한반도통일시대의 개막으로부터 성립되며, 이는 곧 환태평양시대의 개막, 동북아중심물류시대의 개막, 한반도통일시대의 개막의 삼위 일체로서 국가미래산업의 근원을 정의하며 이를 구현하는데서 비롯된다.

유엔세계재활기구(UNWRO) & 유엔세계재활은행(UNWRB)

한국유치 : 세계경제통합금융시스템혁명

세계실용자본주의 (또는 세계경제통합자본주의) 구현을 추구한다. 유엔세계재활은행(WRB) 세계금융시스템 도입 / 유엔세계재활기구 한국유치/ 유엔세계재활기구(UNWRO)_세계금융스위스포럼(ungffs). 유엔세계재활은행(UNWRB) 설립 : 9개분야 / 77세션 / 307개 프로젝트 중점과제 (SPECIALIZED)설정 및 구현/ 유엔세계재활은행 산하 198개국 세계은행지점설치추진.

정책순위

3

국가무상복지 전환시대 구현

정책분야 | 보건복지

지구환경보존과 국민에 헌신하는 복지경제 인프라 창출을 통한 국가무상복지 전환시대 구현

헌법적 가치인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아우르는 평생맞춤형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한국형식과 세계경제적인 복지모형을 복합한 최상의 교점을 설정한다.

국민 누구나 생애주기별 기본적 욕구와 개인별 특수한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험 보장성 확대, 공적부조 강화, 사회서비스 확충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할 책임을 진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유엔세계재활기구_국가복지정책 의식혁명 전환을 설정하며, 이는 곧 국방경제(군산복합체 + 세계재활과학(WRS) + 국제금융산업)과 복지경제(세계재활산업(WRT) + 4T <정보기술(IT) + 생명공학(BT) + 환경기술(ET) 및 극미세기술(NT)>) 등과 연계된 국가기반산업인 실리콘벨리 형성을 정의한다.

산업경제지향성은 군산복합체 + 세계재활과학 + 국제금융산업의 뿌리인 국방경제로부터,

산업경제구조개선은 장애인을 위한 재활과학산업을 통해 축적된 재활과학기술을 세계재활산업(WRT)과 4T<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환경 및 극미세기술(NT)> 등과 연계된 복지경제로부터,

국가산업적 통일경제구도는 통일비용 및 이와 관련된 제반 군축산업경제의 기초인 인프라경제로부터 성립되며, 이는 곧 국방경제·복지경제·통일경제·인프라경제의 삼위(3.1)일체로서 국가산업적 통일경제의 근원을 정의하며 이를 구현하는데서 비롯된다.

유엔병원구조선유치를 통한 의료지원체계 실현!

유엔세계재활기구(UNWRO) 산하 세계식량위기협약연맹(CGFCF)과 함께 세계식량문제해결과 최첨단 농업단지 RT, IT, BT, CT, NT의 ICT 스마트농업공법을 활용한 최첨단 정보통신기술, 환경친화적인 생명공학기술, 극미세기술 사업등과 연계된 복지경제로부터 세계식량곡물플랫폼 30% 사회환원 복지경제프로그램 구축을 통해, 불치병-난치병 치료를 위한 인간게놈프로젝트를 개발연구 및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유엔병원 및 유엔병원구조선을 서해유라시아해역에 운용토록 한다.

세계식량곡물플랫폼 30% 사회환원 복지경제프로그램 구축

최첨단 유엔병원구조선 건조 및 운용체계

4

국민과 소통하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 TOP 10 정치 구현

정책분야 | 통일외교통상

유엔세계재활기구(UNWRO)세계정책 및 정세분석전망

(한반도신뢰프로세스 TOP10) 실현

한반도통일

한반도 통일과정에 대하여 국제정치학적 차원에서 살펴 본 하나의 패러다임을 설정한 바 있는 「신통일론」에서 <북한체제 붕괴에 따른 무혈흡수통합>을 제시한 바 있다.

2024년11월5일.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출현, 2025년 미국-북한간에 (준)수교 국가체결에 따른 [UNWRO한반도통일경제지도] 가 완성된다.

국방개혁

세계재활과학(WRS)분야와 접목된 국제금융프로그램 시스템을 국방분야 사업획득청의 구조 및 제도적 시스템에 접목함으로써, 국방해외프로젝트금융시스템(OPFs)의 대외군사판매(FMS)지원과 적정 국방비 결정요인에 관한 국제금융과 접목된 FMS 운용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제도적 구조 도입

사드의 의미

한국의 사드배치는 국가안보상황에서 당연한 것이다. 제5130코드의 위성정보통신체계의 전체 그물망에서 볼 때, 클라우드 방식의 데이터집약에서 접근되는 하나의 IP개념에 불과하다. 5G-5GHz-5130 Code 방식의 주파수복합변조를 활용한 정보체계시스템에서 연계됨으로써, 국가정보체계에 요긴하게 쓰이는 패턴일 뿐이다.

정책순위

5

세계위성통신경제혁명

정책분야 | 과학기술정보통신

세계경제교육개선을 통한 한국청년창업과 미래세대 새로운 일자리창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과 성장잠재력 제고의 틀인 기회균등의 창조형 미래가치 형태의 세계실용자본주의 (또는 세계경제통합자본주의) 세계경제교육개선을 통한 한국청년창업과 미래세대 일자리창출

유엔세계재활기구_코페레(CoPeRe). 세계대학연합

코페레 경제소사이어티 포럼 출범._한국청년창업, 10만 명의 젊은 고급두뇌가 세계경제와 한반도미래의 경제를 책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성통신 모바일폰 시대개막, 한국·미국 모바일-폰 IT 대기업의 몰락

“5세대(5GHZ)GPS위성정보통신의 +-130dBm주파수대역의 복합기술”이 인류역사를 바꾼다.

창의적인 재활과학기술을 통한 우주산업시대 개척 및 새로운 국가산업구현

유엔세계재활기구(UNWRO)_우주화성정착이주스토리텔링단지조성.

5세대/5GHz/+-130dBm 주파수복합변조대역 5130코드 위성정보통신 모바일 폰 시대개막.

세계위성통신경제혁명

세계위성통신 모바일-폰 시대개막

한국·미국 모바일폰 IT 대기업의 몰락/“5세대(5GHZ)GPS위성정보통신의 +-130dBm주파수대역의 복합기술”이 인류역사를 바꾼다. 5세대/5GHz/+-130dBm 주파수복합변조대역 5130코드 세계위성정보통신 모바일 폰 시대개막/Trump/s Space X /Trump/s Space

5G-5GHz-5130Code X 세계위성통신 우주그물망과 연계된 SUNBOOKCAP 세계위성통신망 통합운영지휘체계구축.

세계우주산업단지조성_세계재활과학(WRS)

5130코드의 세계IT통합기술로 한국 미래산업을 우주산업시대로 전환/창의적인 재활과학기술을 통한 우주산업시대 개척 및 새로운국가산업구현/유엔세계재활기구(UNWRO)_대구 달성군 하빈면 330만평규모 우주화성정착이주스토리텔링단지 조성 /

2016년2월28일 한-미우주산업협정체결 초안.

정책순위

6

배타적경제수역 200해리 확보

정책분야 | 농림해양수산

한국해양영토 배타적경제수역(EEZ) 200해리 실현

마라도와 독도를 연결하는 벨트라인에 대한 유엔지구재난해역 및 자연해양생태계보존 해역선포, 이를 기축으로 하는 한국해양영토 배타적경제수역(EEZ) 200해리 선언

세계해양정책_해양세력확장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해 아세아-태평양 지역에서 해양세력의 제3지대_한국의 제주도 남단마라도와 DMZ의 삼각주에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항해 선박장거리위치추적(LRIT)센터 총괄기구 건립유치

세계해양/대륙/공대역세력구축 / 우주위성IT통합 : 독도-마라도, 배타적경제수역 200해리 확보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해 아세아-태평양 지역에서 해양세력의 제3지대_한국의 제주도 남단마라도에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항해 선박장거리위치추적(LRIT)센터 총괄기구 건립유치/ 우주위성통신 5GHz 주파수대역과 연동한 +-130dBm으로 세계IT통합기술을 확보하여, 세계해양세력, 세계대륙세력, 세계공대역세력 등을 구축 및 연계망하여, 한국해양영토 독도-마라도 배타적경제수역(EEZ) 200해리 확보, 세계 각국을 우주위성IT통합으로 구축.

세계중수소에너지경제혁명_중수소에너지개발

유엔세계재활기구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한국무상지분21%> 참여/아세안-태평양해역 (필리핀해역) 중수소에너지개발 공동구현에 따른 필리핀-미국-한국-유엔세계재활기구(UNWRO) 에너지동맹 협약체결/필리핀정부, 필리핀해역 13 Seawater 경제특구법안 심의.

조선산업육성을 통한 10만청년일자리고용창출지원은 미국-필리핀-유엔세계재활기구(UNWRO) 3국가간에 체결된 친환경에너지중수소탐광개발과 연계시켜 친환경에너지중수소선박 및 지구해양재난 유엔병원(UNB)적십자구조선 6만5천톤급 다척을수주한다.

침체되어있는 조선산업을 살릴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중수소선박건조를 통해 서해유라시아해역 한국조선소 등과 연계시켜 조선산업육성대책을 마련.

정책순위

7

UNWRO유엔우주화성정착이주 스토리텔링단지

정책분야 | 건설교통

향후 5년 내에 한반도의 환태평양시대 개막

유엔세계재활기구의 세계평화와 세계인권, 세계시장경제물류가 동반된 세계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통일경제지도 바뀐다.

세계중심한반도, 환태평양시대 개막 실현**세계유라시아대륙횡단철도 / 한반도신뢰프로세스 :**

유엔세계재활기구의 UN ESCAP, 아시아횡단철도 선벨트(sun-belt)

TKPR(Trans-Korean Peninsula-Network) 계획(초안)

제3차 환태평양시대의 선벨트(sun-belt) 구상, 유엔세계재활기구_한반도통일경제지도(UEMK) 세계유라시아대륙횡단철도연맹(WFETR)_환태평양시대의 선벨트(sun-belt)를 기초로 한 세계중심의 국익외교와 통일한반도시대 주도, 유엔세계재활기구_한반도통일경제지도(UEMK) 세계유라시아대륙횡단철도연맹(WFETR)_환태평양시대의 선벨트(sun-belt) 대비

국가산업적통일구도_국가기간산업대혁명

국가산업적 통일경제구도는 통일비용 및 이와 관련된 제반 군축산업경제의 기초인 인프라경제로부터 성립되며, 이는 곧 국방경제(군산복합체+재활과학(RS)+국제금융산업)과 복지경제(재활산업(RT)+4T<정보기술(IT)+생명공학(BT)+환경기술(ET) 및 극미세기술(NT)>} 등과 연계된 국가기간산업인 실리콘벨리 형성을 정의한다.

한국건설경제혁명_제2의 중동건설진출

대우건설 매입(의향)후, 한국사회적기업으로 (전액) 환원 :

한국진출기업에 대한 유엔세계재활기구가 P-bond 보증, 제2의 중동건설 진출.

서울용산권역(철도정비창) :

UNWRO유엔가상공간물류세계경제메타버스플랫폼사무국 153층쌍둥이빌딩 유치.

100%외자개발프로젝트

대전권역 :

UNWRO유엔세계식량곡물프로그램플랫폼거래소 및 유엔세계응복합유통물류및세계면세센터유치.
100%외자개발프로젝트

대구(달성군)권역 :

UNWRO유엔우주화성정착이주스토리텔링단지유치. 100%외자개발프로젝트

정책순위

8

세계문화국가건설 실현

정책분야 | 문화관광

한반도미래, 지속가능한 세계문화국가건설 실현

세계중심한반도 한민족상고인류역사재정립

한반도미래, 환태평양시대의 세계중심한반도 한민족상고역사 바로세우기조성.

한반도미래, 지속가능한 세계문화국가건설 실현/인류미래시대의 발자취를 통해 인류공동체가 함께 영위해나갈 세계문명유산보존세계관광단지 터전조성

세계위성유엔TV방송시대개막_세계위성TV채널개막

유엔세계재활기구 산하 198개국 유엔TV방송 한국유치/한국TV방송 통폐합의 대량실직에 대처한 유엔TV방송 및 세계각국방송과 연계

신복지경제국가론

신복지경제국가론 8단계 실천방안

향후 급작스럽게 닥쳐올 한반도통일과 그 이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경제론인프라 구조 대전환의 초기적 단계로써 신복지경제국가론의 극동 플랜을 구현시키고자 유엔세계재활기구(UNWRO)는 세계장애인 복지주의와 세계 인권신장 및 복지경제구현에 대한 「신복지경제국가론 8단계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1단계 : 세계장애인의 인권(ren quan)신장 및 「복지경제에 대한 신사고의 혁명적 대전환」이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이다.

2단계: 2006년12월13일. UN총회에서 결의된 연합국 장애인 권리협약을 준수하며, 유엔세계재활기구(UNWRO)의 UN조직을 한국에 유치토록 하여, 세계 각국의 소외된 계층과 세계장애인 인권 그리고 「재활과학(RS) 산업으로부터 생성되는 세계경제가 결합된 국제협약의 범국가적 복지경제프로젝트」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3단계 : 21세기 과학은 최첨단 세계재활과학(WRS) 산업의 시대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 조직과 복지가 단순 분배의 소비성 개념이 아닌 성장과 재투자자의 순환이 가능한 「복지경제」를 실현될 수 있도록 기존의 복지정책을 전면 제도혁명을 제시함으로써, 「신복지경제국가론」을 추구해야 한다.

4단계: 인간의 손과 발을 대신하여 로봇·무인우주탐사선·심해잠수함·컴퓨터·음성인식장치·비디오 등은 미국 등 선진국들의 국방획득 부분에 대한 실리콘밸리에서 창출되는 군산복합체(국방과학) 분야는 모두 최첨단 재활과학(RS)에서 비롯된 성과물이다.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재활과학의 중요성이 일찍이 부각되었고, 재활과학기술(RST)의 육성을 통해 국방과학 분야는 물론이고,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보다 구체적인 장애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

재활과학기술의 응용으로 자국의 「국가산업경제의 중추적 아젠다인재활과학(RS_Rehabilitation Science)산업으로부터 파생되는 최첨단 우주과학 및 생명공학의 4T(정보기술(IT)+생명공학(BT)+환경 및 극미세기술(NT)) 등과 연계된 국가기반 산업인 실리콘밸리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고부가 가치의 국가경쟁력이 창출되어야 한다. 특히 「재활과학(RS)분야와 접목된 국제금융 프로그램 시스템을 국방분야 사업획득청의 구조 및 제도적 시스템에 접목함으로써, 국방해외프

로젝트금융시스템(OPFs)의 대외군사판매(FMS)지원과 적정 국방비 결정요인에 관한 국제금융과 접목된 FMS 운용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제도적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미국 대학의 교육정책은 세계재활기구(WRO)의 권고에 따라 각 대학에 최첨단과학 산업분야인 「재활과학과」를 개설”하였다.

5단계: 세계무대에서 장애인의 인권신장과 권익보호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이와 함께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대한 통합기능을 부여됨으로써, <복지선진한국>으로 국가신인도를 선진화시켜야 한다.

6단계: 한반도통일 이후의 대양세력에 교두보 방안으로 UN 산하국제해사기구(IMO)를 거점으로 한 국토해양국으로서의 선점이 필연적이다.

UNWRO가 IMO의 국제항해위치추적(LRIT)센터 총괄기구 유치에 대한 제안이 통과되어 1차적으로 한국이 이명박(MB) 정부 초기에 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의 A그룹 이사국이 되었다.

7단계 : 21세기는 <재활과학(RS)산업을 중심으로 하여 미래우주공간 개척을 위한 한국·미국간의 화성 유인탐사 등 우주공간 확보>가 선진국 글로벌기구 G8 진입의 긴요한 단초이다. 이는 곧 위성정보통신시대를 대비한 「5GH 무선주파수 대역 및 자연생태계 주파수인 절대치 +-130dBm 확보」가 관건이다.

미국정부는 현재 퀄컴사(Quallcomm)가 보유한 원천기술의 기종인 제 2.5~3세대 CDMA, TDMA 코드분할의 모바일폰 시대가 종료됨을 예고하고, 「향후 WRC-03에서 5GHz 대역(5.150~5.350 MHz, 5.470~5.725 MHz)을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의

5GHz 주파수 대역인 무선주파수 대역 확보와 자연생태계 주파수인 절대치 +-130dBm을 미국산업의 중심 주파수로 확정」 발표하였다.

유엔세계재활기구(UNWRO)는 재활과학(RS)산업을 통해 재난구조용의 방식으로 제 4(GHz)세대, 제 5(GHz)세대 정보통신 혁명이라 일컫는 5GHz 무선주파수 대역 확보와 자연생태계 주파수인 절대치 +-130dBm를 채택하여 전 세계 공용주파수로 사용권고안을 UN사무국 및 상임이사국에 제출하여, 한국의 중심주파수의 원천기술임을 확보하였다.

상기의 중심주파수가 모바일폰을 비롯한 4T(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환경 및 극미세기술(NT)) 및 정보통신체계와 접목됨이 필연적이므로 이에 파생되는 경제학 가치로 산술해 보면 수치상 형용하기 어렵다.

8단계: 한반도 전쟁 발발시 한국에 유치한 세계재활기구(WRO)의 UN조직의 존재 가치는 외침으로부터 1차 외기권 방어체제의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198개국의 다양한 국제금융 산업과 연계하여 국가적 아젠다로 격상시켜, 한국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한반도통일 구도가 글로벌기구(Organization)해질수록 세계경제가 유연하게 통합운영 될 수 있는 Globalized한 세계글로벌기구의 국가경영에 대한 지식적 사고의 대혁명」(즉, 신통일론에서 제기한 한반도 대혁명의 정의)이 필요하며, 이러한 제반적 요소를 국가산업적·국방경제적·복지경제적 인프라로 구축 또는 재정비 되어야한다

정책순위

10

서해안(전라도권역통합)시대개막

정책분야 | 기타

UNWRO한반도통일경제지도(UEMKP)구축완성

[서해안(전라도권역통합)시대개막]

세계복합물류단지 목포국제항구 세계복합관광신도시 발전프로젝트

목포항-중국상해항 연계

UNWRO유엔세계유라시아대륙횡단철도 선벨트 연계

세계복합물류단지 목포국제항구(목포항구-중국상해항구) 관광신도시 구축 프로젝트.

유엔세계재활기구(UNWRO)는 한반도미래를 위해 UNWRO유엔세계유라시아횡단대륙철도 선 벨트 연계라인인 (목포항구-중국상해항구)를 통해 한반도가 세계중심한반도의 [유엔국가형태]로 구성되어, 세계평화와 한반도평화의 교두보의 중심으로 세계경제복합물류가 한반도해양세력으로 관통하는 세계경제통합과 세계정책으로 세계복합물류단지목포국제항구를 유치하여 세계최대의 세계복합관광신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길이다.

세계식량보급 세계경제물류항중심 목포항

UNWRO유엔세계유라시아대륙횡단철도 선벨트(SUN belt)

해저터널(목포항-중국상해항) 540km 해상해저철도건설 프로젝트 유치

한반도를 유엔세계재활기구(UNWRO)가 지향하는 세계중심한반도 [유엔국가형태]로 전환을 위해 유엔세계재활기구(UNWRO)는 한반도미래당(FKPP <http://www.fkpp.co.kr>)과 긴밀히 협력하고있다. 한반도를 세계중심한반도인 환태평양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UNWRO한반도통일경제지도(UWMKP)]를 완성해 나가고자 [UNWRO유엔세계유라시아대륙횡단철도 선벨트]를 연계하여 세계복합물류단지 목포국제항구(목포항-중국상해항) 구축과 UNWRO유엔세계유라시아횡단대륙철도 선벨트(SUN BELT)의 연장선인 목포항을 세계최대복합물류단지로 확장하고 해저횡단(목포항-중국상해항) 해상해저철도540KM에 대한 연결계획을 세우고 있다. 세계중심한반도의 [유엔국가형태]로 구성되어, 세계평화와 한반도평화교두보의 중심으로 세계경제복합물류가 한반도해양세력을 관통하는 세계경제통합과 세계정책으로 UNWRO유엔세계유라시아대륙횡단철도 선벨트(SUN Belt) 해저횡단(목포항-중국상해항) 해상해저철도연결 540KM 건설프로젝트 유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라남도 목포영산강위치 유엔병원(UNH)과 유엔세계군사대학교 제9대학(세계의과대학) 유치

UNWRO유엔세계군사대학교 제9대학(의과대학) 융복합연계 유엔병원(UNH)과 유엔세계군사대학교 제9대학(세계의과대학) 중심의 세계교육엑스포(EXPO)유치를 위한 세계홍보에이전시 차원의 유엔국제청소년오케스트라오페라하우스 유치

목포항 연계 삼각지대(세월호-평목항)의 포괄적 해상재난방재시스템 세계지구재난방재연구소 유치

삼각지대 (세월호-평목항)의 포괄적 5G해상재난방재인증

GPS위성정보통신체제로 전환, 세계지구재난방재연구소 유치

세계지구재난 SUNBOOK.INFO SYSTEM 항만통합검색시스템구축과 연계시킨 세계지구재난 방재연구소 건립. 세계각국의 이동통신기술이 GPS위성정보통신체제로 전환시킨 세계지구재난 SUNBOOK.INFO SYSTEM 항만통합검색시스템구축이다. 세계지구재난 SUNBOOK.INFO SYSTEM의 구성은 TRUMP'S SPACE X TRUMP'S SPACE 5G-5GHz-5130CODE X 세계위성통신항법시스템 우주그물망체계를 연계시킨 SUNBOOKCAP 통합운용지휘체계시스템을 이용한 원-사이클포털시스템으로 우주권역 및 해양권역을 전지구적인 통합검색시스템. 첫째.세계지구재난방재 시스템방식인 원-사이클 세계지구재난방재계획프로그램, 둘째.세계지구재난 5G방재인증 및 세계지구재난구조 5130Code인증, 셋째.유엔방송(위성방송 DMB/지구재난TV/케이블 TV/SKY/IPTV/FM/인터넷신문) 및 유엔위성TV, 세계지구재난방송, 넷째.SUNBOOKCAP 세계인증 AI인공지능재발굴게임공유플랫폼 등의 세계방송통합인프라구축과 연계된 세계지구재난방재연구소 유치.

서해목포국제항구관광도시 연계

해저도시 <신안 흑산면 가거도-만재도-하태도[상태도]>

삼각벨트섬중심 3억평방미터규모 100%외자개발프로젝트

목포항-중국상해항의 해상철도 100KM 기점으로부터 440KM의 해저터널을 연계시킨, UNWRO유엔서해유라시아대륙횡단철도 선벨트(SUN belt) 건설프로젝트를 유치하여, 해저도시 <신안 흑산면 가거도-만재도-하태도[상태도]> 서해유라시아해역 해저도시 거점 3억평방미터규모의 삼각벨트섬중심에 해저도시개발구축과 목포항구를 세계최대복합물류단지 목포국제항구관광도시로 확장시킨다. 삼각벨트섬중심 개발프로젝트.



No.	정 책
1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실시하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축소하겠습니다!
2	강력 범죄에는 강력 처벌로 정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3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고 미성년자의 범죄를 적극 예방하겠습니다!
4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양심지능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5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올바른 대책을 수립하여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겠습니다!
6	인공지능(AI) 기술과 산업 분야 생태계를 확립하고 관련 산업·기술의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7	국민의 경제적 생애주기 변화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8	한류 문화 콘텐츠 제작 및 확산을 적극 지원하고, 한류를 활용한 관광 서비스를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9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10	한국·일본·대만 및 아세안 회원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거대 경제블록에 대항하는 대규모 경제시장을 형성하겠습니다!

정책순위

1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실시하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축소하겠습니다!

정책분야 | 정치

□ 목 표

-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의 비리와 무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며, 국회의원의 역할과 노력에 비해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너무 과도하며, 이로 인해 국회의원들이 부당한 특권의식을 갖고 쉽게 부조리를 행하며 국민을 안하무인으로 대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국회의원들이 양심적으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도록 강제하겠습니다.
-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특권을 대폭 제한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국민에게 진정으로 봉사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이행방법 등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소환 요건을 갖춘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소환투표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의 직책을 박탈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회의원의 특권을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지원을 대폭 폐지하겠습니다.
- 특히 해외 방문·연수를 전면 폐지하거나 최소화하고, 부득이한 해외 출장시 최소한의 인원과 업무 일정 위주(업무 시간 강제 관광 일정 금지)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업무와 무관한 활동에 대한 혈세 지원을 전면 금지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요건을 엄격히 지정하겠습니다.

정책순위

2

강력 범죄에는 강력 처벌로 정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정책분야 | 사법윤리

□ 목 표

-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 가해를 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형법의 기본 원리이자 사회 구성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 하지만 약자에게 가해진 잔혹한 살해·상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법 감정·양심과 괴리된 형사법 제 및 판결 등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은 정신적 불안과 상처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더해 가해자의 출소 후 보복 등에 대해서도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처지에 놓여 있으며, 국민 생존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피해자의 인권을 말살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가한 범죄에 대해 이에 걸맞는 형벌을 가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부당하게 가해자의 이익을 법 제도로 보호함에 지나지 않아서 보편적 입법 원리의 가장 중대한 근거가 되는 국민의 양심에도 부합하지 않아 이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 강력 범죄에는 강력 처벌을 가함으로써 ‘죄는 누구라도 반드시 그에 걸맞는 처벌을 받는다’라는 형사법제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의와 양심을 드높이며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행방법 등

- 강력 범죄 중에서도 인권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이 약자에 대해 잔악하게 이루어진 살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형 구형을 촉구하고, 사형 선고에 재론의 여지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형 집행을 실천하겠습니다.
- 무분별하고 부적절한 감형 선고의 남발을 제한하겠습니다. 즉, 범죄인이 의도적인 행위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 국민 전체의 양심에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사실상 가한 사안에 대해, 초범·합의·반성·심신미약·공탁 등을 판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자의적 감형이나 집행유예의 선고를 함부로 하지 않도록 감형 사유를 대폭 폐지하고, 오히려 재범, 피해자에 대한 보상·반성이나 가책이 없는 경우, 주취나 정신성 약물에 따른 심신미약의 경우 가중 처벌 원칙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 범죄인의 가해로 인해 명백히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범죄인(가해자)의 상태에 관계없이 피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지도록 하는 양심적인 형사법제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순위

3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고 미성년자의 범죄를 적극 예방하겠습니다!

정책분야 | 사법윤리

□ 목 표

- 형사미성년자(형법 제9조)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스스로 촉법소년임을 내세워 어떠한 공감 받을만한 사연도 전혀 없이 타인에 대한 상해·각종 재물의 손괴·학교폭력 등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면서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상 규제 사항을 위반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사업주에게 상식을 벗어난 일방적인 책임만을 과도하게 부과함으로써 청소년이 스스로 나이를 속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기존의 미성년자 범죄와 관련한 제반 사법체계(민법·형법·소년법·청소년보호법 등)에서는 미성년자 보호에 대한 당위적 시각 또는 기본적인 사회성을 가정·학교 등에서 교육시킬 것을 막연히 전제하고 있을 뿐, 미성년자의 고의적인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의 적절한 교화·사회성 함양·양심역량 회복 등의 근본적 노력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의 고의적 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다양한 손실과 억울함을 일방적으로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취지는, 국가의 미래를 이끌게 될 미성년자는 사회 경험이 적고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성년이 될 때까지 보호할 필요성 때문이겠으나, 미성년자 중 스스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등)임을 인지하면서 타인에게 사기·강박·상해·폭력·재물 등의 손괴 심지어 살인교사 또는 직접 살인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이행방법 등

- 청소년 보호법상 규제 물품 등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책임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미성년자가 스스로 나이를 속이는 등의 행위로 인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피해와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미성년자의 사해 행위로 사업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법정대리인 등이 정당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강제하겠습니다.
- 형법·소년법 등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특례 및 기준 연령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고의로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보호의 특례를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성년자의 사회성 함양·공감능력 향상·준법정신 배양 등을 위해 제반 교육과정에서 양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미성년자가 범법을 저지른 경우가 피해자의 고통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피해자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을 하며, 죄질에 걸맞는 처벌을 받는 등 사회적 위협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교화되지 않고서는 결코 사회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 교화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을 법제화하되 반드시 양심성찰을 수반하는 양심의 자각과 실천에 대한 교육 및 평가가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순위

4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양심지능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분야 | 교육

□ 목 표

- 현재 학교 교육은 입시나 단순 교과 과목의 지도 측면에서 사교육보다 나은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공지능(AI)이 발달함에 따라 단순한 지식의 암기·검색을 위주로 하는 교육 역시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큼. 이를 매일수룩 학교 교육은 학생들의 양심지능 계발을 강화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에 널리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단순 교과 과목의 암기·검색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여 인공지능 활용법을 적극적으로 교육하는 한편 인성의 본질과 양심지능의 계발 방법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킴으로써, 스스로 삶의 방법과 정의를 사고하고 판단하며 인공지능을 창의적이고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배양하겠습니다.

□ 이행방법 등

- 양심의 정확한 개념과 배양, 계발 방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겠습니다.
- 양심의 철학적 분석과 이해, 체험 훈련을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올바른 양심과 사리분별, 민주시민으로서의 판단역량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심노트를 배포하고 그 활용방법을 교육하며, 민주시민의 양심경영 6가지 원칙을 교육하겠습니다.
- 양심의 본체를 직관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허울 좋은 형식적·규범적 인성·도덕 교육을 타파하고, 스스로의 판단과 의지로 사회성과 도덕성을 배양하는 진정한 인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의 다양한 문제 해결 기준이 국민 개개인에 잠재된 보편적 양심에 있음을 자각하게 하여, 타인을 배려하고 역지사지하며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정책순위

5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올바른 대책을 수립하여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정책분야 | 교육

□ 목 표

- ◎ 학생의 자유의사만을 인권으로 보장하고 상대방(동료 학생·교사 등)의 인권 존중은 도외시하는 기괴한 ‘학생인권조례’ 및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권조차 구속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인해, 학생들이 정당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학습권)와 교사가 정당하게 교육할 수 있는 권리(교육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 ◎ 학교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장소인바, 학생들의 권리 역시 다른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교사가 정당한 교육을 시행할 권리를 보장하는 한계 내에서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 ◎ 현재 일부 문제 학생들의 인권 보장에 구속되어 교사가 교육할 수 있는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정상적인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교육현장에서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로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 저하,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책 부족, 교사에 대한 학부모·학생의 폭력 증대, 가해 학생·부모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교사·학생의 심적 부담감 증대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 학교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임을 분명히 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를 방해하는 일부 학생·부모 등의 일탈에 대해 즉시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제반 법·제도를 적극 개선함으로써 학교 교육이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행방법 등

- ◎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폐지 또는 개정함으로써 개인 인권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인권 역시 반드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지도하겠습니다.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지만 교육권(및 학습권)을 정상화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아직 많은바, 추가적인 제도 정비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겠습니다.
- ◎ 학생·학부모가 학교 교육을 방해하거나 교사·학생·그 밖에 학교 임직원에게 인권 침해 폭력 등을 자행하는 경우 즉시 사법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학교폭력을 자행한 학생 또는 이를 교사한 학생은 즉시 해당 교실이나 학교와 격리시키겠습니다.

정책순위

6

인공지능(AI) 기술과 산업 분야 생태계를 확립하고 관련 산업·기술의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정책분야 | 과학기술정보통신

□ 목 표

- 인공지능(AI) 기술이 일상생활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인공지능 활용 분야 확대 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이 적시에 투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 활용의 토대가 될 반도체·전자·정보통신 산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된 산업분야인바, 인공지능 분야에 어떻게 대처하고 투자하느냐에 따라 장래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좌우될 수 있기에, 홍익당은 총력을 기울여 이에 대응하겠습니다.

□ 이행방법 등

- 급격하게 다가올 인공지능 기술을 국민 모두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 인공지능 기술 보급을 주도할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시에 투입하겠습니다.
- 인공지능 시대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생산 분야가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반 지원책을 아낌없이 마련하겠습니다.
- 인공지능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기술 분야(데이터 처리·알고리즘 활용·응용 수학·인공 신경망 고도화 등)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이에 대한 교육 역시 학교에서부터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공지능 기술을 위한 응용 분야뿐만 아니라 그 토대가 되는 수학 등의 기초과학 등에도 끊임없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정책순위

7

국민의 경제적 생애주기 변화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정책분야 | 보건복지

□ 목 표

- 우리 국민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제적 생애주기의 관념이 붕괴됨에 따라 새로운 경제적 생애주기에 대한 대비가 시급히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즉 종래 20~50대까지 경제활동 이후 은퇴하여 벌어들인 소득과 자녀들의 보조로 노후를 보장받는 생활 형태가 가면 갈수록 유지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60~70대까지도 일정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생계 보장이 어려운 한편, 20~30대의 청년층 역시 안정된 직장생활에의 보장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국민의 경제적 생애주기 및 경제활동 양태가 기존의 교과서적인 모습과는 크게 달라지고 있는바, 정당한 복지정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국가와 정부 차원에서 국민이 생계유지에 대한 불안감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행방법 등

- 국민이 변화된 경제 환경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고 최저 생계 유지와 노후에 대한 기획을 할 수 있도록, 변화된 경제적 생애주기에 기초한 경제활동 계획·사례 등을 연구하여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국민이 변화된 경제적 생애주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연구하겠습니다.
- 앞으로는 국민 누구라도 일생에서 한 번 이상은 결국 창업이나 경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시대적 변화를 충분히 인지하여 기존 노사관계 위주의 산업-노동정책에서 탈피하여 1인 1기업·1인 1기술을 모토로 하여 끊임없는 재교육·기술보급·인공지능 활용·창업 지원·창업과 기술 습득을 위한 정보 제공·창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해행위에 대한 보호 등을 중점 정책으로 발굴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정책순위

8

한류 문화 콘텐츠 제작 및 확산을 적극 지원하고, 한류를 활용한 관광 서비스를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정책분야 | 문화관광

□ 목표

- ◎ 제조 분야는 점차 강대국의 견제 및 중국·동남아와 경쟁이 심해지고 있어 새로운 산업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반면 한류를 통한 한국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를 활용한 경제적 부의 창출과 세계 문화 수준의 향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 한국의 문화 역량에 비해 관광 자원과 관광 콘텐츠가 아직 파편화되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관광 선진국에 비해 관광 자원의 활용 역량이 떨어져, 훌륭한 관광 자원·한국의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관광과 관련한 콘텐츠와 스토리 등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경제적으로도 잠재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 ◎ 한류의 힘을 활용해 엔터테인먼트·드라마·영화·식문화 등을 세계에 소개하고 수출하는 국가, 문화가 강한 국가로 변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문화 콘텐츠 비중 강화)
- ◎ 한류의 활성화와 더불어, 한국의 문화재·식문화·첨단기술·역사적 경험·양심적 사회문화·독특한 분위기 등의 1차적 콘텐츠가 창의적 아이디어와 스토리텔링을 결합하여 2차·3차의 관광문화 콘텐츠로 창출되어, 세계인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오고 싶은 나라로 문화·관광 대국으로 만들겠습니다.

□ 이행방법 등

- ◎ 다양한 영역의 문화 콘텐츠 제작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세계 최고의 기술력·가격경쟁력·문화 콘텐츠를 갖춘 세계인이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특히 선비정신·양심문화 등 한국 문화의 근간이 되는 철학·역사 콘텐츠의 제작을 지원하여 세계 최고의 기술력·가격 경쟁력·문화 콘텐츠로 세계인이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나라로 육성하겠습니다.
- ◎ 문화재·식문화·첨단기술·철학·사회문화의 강점을 발굴하여 연결된 브랜드와 스토리로 전달할 수 있도록 관광 서비스를 계발하여 세계 최고의 관광 브랜드를 구축하겠습니다.

- 한국의 철학·선비문화 등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정신적인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세계인들이 한국을 배우러 방문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 관광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정책순위

9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정책분야 | 통일외교통상

□ 목표

- 국내외 경제 환경의 어려움, 국제 사회에서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국가 경제 규모의 확충, 인구 감소에 대한 대안 마련,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에 대한 대응,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북관계 정상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정부가 이념적 차원을 벗어나 남북한과 주변 국가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할 경우, 홍익당은 초당적으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지원하겠습니다.

□ 이행방법 등

- 통일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이념적 차원으로 접근하지 말고 남북한과 주변국가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실리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할 때 조급하게 일정한 성과를 반드시 낼 것을 강요하지 않고, 특정 안전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만남을 지속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임을 설득하겠습니다.
- 정부가 남북관계 정상화 및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경우, 홍익당은 초당적 차원에서 이를 지지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북정상회담 추진 시에도 특정 성과를 달성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한 회담 성사 자체가 중요한 것임을 충분히 납득하고 국민들에게도 이를 설득하겠습니다.

정책순위

10

**한국·일본·대만 및 아세안 회원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거대 경제블록에 대항하는 대규모 경제시장을 형성하겠습니다!**

정책분야 | 통일외교통상

□ 목표

- 현재 미국·중국·EU가 세계 경제의 주된 경제블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2024년 현재 GDP는 각각 약 \$28조·\$18조·\$22조 규모)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약 \$2조 수준의 GDP 규모를 보유하고 있어, 경제의 상당 부분을 주된 경제블록과의 거래에 의존하고 있는바 주된 경제블록의 규제·간섭에 대응하기 위해 엄청난 정치·경제적 역량을 소모해야 하며 국제적 거래조건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어려워 농산물 등을 비교적 불리한 거래 조건으로 수입함으로써 국내 물가 역시 주된 경제블록의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러나 일본·대만·아세안 회원국과의 경제협력이 강화되면 기존 경제블록에 상대할 수 있을만한 거대 경제블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GDP는 각각 약 \$4.5조, \$0.8조, \$3.5조. 일본·대만은 2023년 기준, 아세안은 2021년 기준)
- 물론 한국·일본·대만·아세안 회원국은 기존 경제블록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에, 독자적인 경제블록 형성은 당장 시기상조이며 기존 경제블록과 대립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지리적 거리가 비교적 가깝고 문화적·역사적 유사성과 교역 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이들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국제적 교역조건에서 기존 경제블록에만 일방적으로 좌우되거나 불리한 교역조건을 감수하지 않을 수 있고, 경제 규모를 6~7배로 키움으로써 전 세계적인 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더 나아가 일본·대만·아세안 회원국과의 경제협력이 한층 더 긴밀해지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이들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남북관계 정상화나 통일 등에 있어서 이들 국가들의 지지를 얻기에 수월해질 것입니다.

□ 이행방법 등

- 한국·일본·대만·아세안 회원국 간의 경제협력·상호 교류를 더욱 강화하되, 기존 거대 경제블록을 형성하는 미국·중국·EU와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대상국은 서로 간에 상호 존중에 기초하여 동등한 위치에서 대등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경제·문화적 교류에 있어 기존 수준보다 한층 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을 목표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 대상국 간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장래의 잠재력·국가 브랜드·국제 정세에서 차지하는 특수적 위치 등을 감안하여 그 위상에 걸맞은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경제협력을 선도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율·산업구조와 공급망의 재편 등 당면한 경제적 과제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 모음집

2024년 6월

발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당과)
경기도 과천시 흥촌말로 44(중앙동 2-3)
(02) 3294-8361

편집·인쇄

마음이다 (02) 2272-1977

<비매품>